

2009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Ⅱ)

2009. 10

금 융 위 원 회

총 목 차

(가, 나, 다, 순)

(I 권)

고 승 덕 의원	1
공 성 진 의원	81
권 택 기 의원	119
김 동 철 의원	313
김 영 선 의원	421
김 용 태 의원	541
박 상 돈 의원	717
박 선 숙 의원	783
신 건 의원	801
신 학 용 의원	1003

(II 권)

유 원 일 의원	1
이 사 철 의원	415
이 석 현 의원	551
이 성 남 의원	709

(III 권)

이 성 현 의원	1
이 진 복 의원	157
이 한 구 의원	247
조 경 태 의원	299
조 문 환 의원	631
조 윤 선 의원	963
허 태 열 의원	1029
현 경 병 의원	1075
홍 영 표 의원	1147

요 구 자 료 목 차

(가, 나, 다, 순)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유원일 의원	1-1. 최근 3개년 연도별 금융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내용 및 평가순위표	3
	1-2-A. 최근 3개년 연도별 금융공기업 CEO 연봉내역 및 순위표	48
	1-2-B. 최근 3개년 연도별 직원 평균연봉 및 순위표	49
	1-2-C. 최근 3개년 연도별 금융공기업 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50
	1-2-D. 최근 3개년 연도별 금융공기업 직원 복지 기관별 내역	51
	2-1. 황영기는 1999년 삼성생명 전무로 재직중 사유로 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 조치를 받았음 에도 이후 삼성투신운용(1999년), 삼성증권(2001 년) 사장 등으로 영전하였던바 - 이러한 영전에는 금융기관 임원 선임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징계를 받았더라도 업종이 다르면 관계 없음)이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금융당국 의 유권해석 관련 문서 사본 1부	52
	2-2. 삼성특검 수사 관련 삼성증권 및 관련 임직원의 징계현황 - 징계결정문 및 징계결정 회의록 사본 1부	53
	3-1. 우리나라 주요 일정별 자본시장 개방정책 현황 (시기별 자본시장 개방정책 일정 및 내용)	96
	4.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내용 - 시중은행 통폐합 등 시기별 정책내용	97
	4-2.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현황	104
	4-3.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150
	4-4.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겸업화, 대형화, 전문화 정책추진현황	151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유원일 의원	5. 최근 5년간 금융위 금감원 퇴직임직원의 관련기관 취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내역 - 퇴직후 재취업자 이름, 나이, 직책, 재취업기관, 취 업기관 직책,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내용 등 상세 설명자료 - 재취업기관은 산하 금융기관 외에 법률사무소 등도 상세 제출	343
	6. '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취한 정책	344
	7. '금융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문서 작성경위 및 용도 관련 - 이명박정부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금융위원회가 작 성한 문서 사본 각1부씩 - '금융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문서 사본 1부 - '금융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문서 작성경위 및 실 행내역 - '금융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문서에 나오는 추진사업 책임자 -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금융위원장 및 실무책임자의 선진화회의 참석 내역 - 금융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관련 금융위 주관 회의 일정 및 참석자	345
	8-1. 황영기의 징계내역 - 징계사유, 징계절차 및 규정, 징계결정내용 - 징계결정문	361
	8. 황영기씨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미국 파생상품 투 자손실 관련	367
	1) 황영기, 이종휘, 박해춘 3인이 파생상품 투자검토 시 감독당국의 조치내용 - 예금보험공사의 조치내용, 조치시기, 관련 문서 - 금융위의 조치내용, 조치시기, 관련문서	369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유원일 의원	8-3.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지원금 관련 - 지원 이유, 지원 금액, 지원 시기, 지원 조건	414
이사철 의원	1. 국내 생보사의 상장 추진현황 및 공익기금 조성 진행상황 2-1. 금융회사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현황 2-2. '08년중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휴 면예금 규모와 집행현황 2-3. 휴면예금사용 점검 결과보고서 3. 최근 3년간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현황, 회수계획 4.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현황(부과일시, 상대방, 부과 금액, 사건내용, 납부일시등) 및 과징금 납부현황 5. 국내 금융자격증제도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6. 국내 신용평가지장 현황, 과점체제로 인한 문제점, 대책 7.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계획 8. '08.6월말, '08년말, '09.6월말 기준 금융위 산하 각종 기금들의 국내외 주식, 간접 투자상품, 파생상품 투 자 평가손익 내역 9. 혐의거래보고 접수현황 및 법집행기관 제공·처리현황 10. 헤지펀드, 사모펀드, 국부펀드 등 새로운 상품에 대한 시장전망과 관리대책 11.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업무규정 제17조와 18조에 의해 적발한 내역 일체 12. 산은 민영화 계획, 국회 논의시와 변경된 사항 13-1. 7.30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보고자료 13-2. 7.13일 금융위원장 및 은행장 간담회 자료 14. 저축은행 양극화 심화 대책, 구조개선적립금 조성 현황 및 구조조정 계획 및 진행상황 15. 보험개발원이 개최한 자동차 보험 할증기준 개선 을 위한 공청회 자료 및 자동차 보험할증 기준 개 선에 관한 금융당국의 입장?	417 420 424 426 427 428 435 440 441 443 447 448 449 450 477 492 500 502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이사철 의원	16. M&A시 풋백옵션 개선 계획	530
	17. 마이크로 크레딧 관련	531
	-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추진내용	
	- 소관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수행기관별 사업실적 (최근 3년간 대출현황)	
	- 마이크로 크레딧의 발전을 저해하는 애로사항 및 문제점, 개선 계획	
	18. 고위험 파생상품(FX 마진거래, ELW 등) 관련	535
	- 각 상품별 특징 및 위험성 설명	
	- 각 상품별 08.1.1부터 09.6.30까지 반기별 거래규모, 손익	
	- 각 상품별 증거금율	
	- 각 상품별 불법행위 신고건수(08.1.1 이후)	
	- 금융당국의 고위험 파생상품 손실위험 대비 계획	
	- 파생상품 시장의 비대화와 실물경제회복과의 상관관계와 이유	
	19. 2007년 이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혐의거래 내역 목록	540
	20-1. 설비투자펀드의 조성이유, 총규모, 2009년 사용계획	542
	20-2. 구조조정기금의 조성이유, 총 규모, 2009년 사용계획 및 2009.8월말까지 집행세부내역, 집행을	543
	20-3. 자본확충펀드의 조성이유, 총규모, 2009년 사용계획 및 2009.8월말까지 집행세부내역, 집행을	544
	20-4.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이유, 총규모, 사용계획 및 집행세부내역, 집행을	545
	21. 황영기 KB회장 징계사유 및 형평성 논란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9월3일 징계결정 후)	549
이석현 의원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고용 포함)	553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이석현 의원	2. 2008년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지적사항, 조치내역, 향후 계획	544
	3. 2009년 상임위 현안보고 자료	555
	4. 가장 최근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	556
	5. 최근 3년간 감사원, 자체감사결과보고서	557
	6.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평가결과서, 경영평가보고서 및 자체 심사분석보고서	558
	7. 결산서	633
	8. 영업실적, 재무현황 및 부채현황	634
	9. 환관리 현황 및 환차손 평가액	635
	10.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636
	11. 민원처리결과 통보 현황	637
	12. 각종 계약 발주현황	638
	13.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건별 계약자, 계약 방법, 계약금액 등 포함), 용역결과보고서, 용역별 계약서 사본	640
	14. 최근 2년간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644
	15. 정보통신 보안 관련	645
	- 최근 3년간 보안사건 발생현황 (연도별, 유형별, 건별발생사유, 피해액, 재발방지 대응 방법 등)	
	- 2009년 07월 발생한 일명 디도스(DDos)공격 피해 내역	
	- 보안사고 발생시 유관기관에 통보 및 업무협조 내역	
	- 보안담당조직 및 인력, 예산 운용 현황	
	16. 최근 5년간 퇴직 직원의 유관 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646
	17.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	648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이석현 의원	18. 임직원 인건비 지급현황	649
	19. 최근 5년간 퇴직 직원의 유관 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650
	20.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실제운영 내역 - 복지지원금 지급 현황 - 호텔, 콘도, 골프 등 각종 사회편의시설 회원권 및 이용권 보유현황, 실제 이용실적	651
	21. 최근 5년간 임직원의 국내외 교육 및 연수 현황 (연도별, 종류별) - 참석 대상자 및 인원, 기간, 장소, 교육 및 연수 내용, 비용(세부항목별 구분), 결과 및 실제업무 반영내역 - 교육 및 연수 관련 규정	652
	22. 임직원 해외 출장 현황	669
	23. 최근 5년간 경찰 및 검찰에 의한 임직원의 사법처리 현황	675
	24. 최근 5년간 임직원에 대한 자체 징계 현황	676
	25. 은행들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 MOU 체결현황 및 내용, 은행별 대외채무 현황,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현황, MOU 이행 상황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	677
	26. 1997년 IMF 이후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현황 - 저축은행별, 연도별, 종류별, 투입방법별 - 회수금액	683
이성남 의원	1. 외부위탁 정책연구용역 현황 및 결과보고서(2008. 9월~2009. 9월 현재) : 과제명, 위탁부서 및 수탁 기관, 용역비, 결과보고서 등	711
	2. 금융위소관 각종 위원회 - 위원회 인적사항 : 성명, 나이, 주요학력 및 경력 등 - 운영현황 : 회의 개최현황 및 위원별 출석현황	713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이성남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사본 및 회의에 제출된 각종 보고서 사본 - 2009년도 예산 및 2010년도 예산안 - 2008년 2월 이후 위원 교체현황 및 사유 	
	3. 2010년도 예산안 설명서 및 2009년 예산 대비표	773
	4. 2009년 증선위 안건 제출	7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호, 20호, 21호, 76호, 106호, 보고 17호, 보고 22호, 보고 23호, 173호, 219호 	
	4.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관련	7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법률 제58조(자료의 제출)에 의해 금융위와 증선위가 요구한 자료 현황 - 동 법률 제61조(금융위원회등의 명령권등) 제2항에 의해 금융위가 증선위, 금감원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집행 정지한 현황 - 동 법률 제61조 제3항에 의해 증선위가 금감원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집행 정지한 현황 - 동 법률 제65조(자료협조)에 의해 기획재정부, 금융통화위원회와 상호 자료 요청한 현황 - 동 법률 제65조의2(관계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1항에 의해 금융위원장의 조사 의뢰 및 자료요청 현황 - 동 법률 제65조의2 제2항에 의한 금융위의 협조 의뢰 현황 	
	5. 2005년 이후 금융위 직원들의 불법행위(구체적인 행위 표기) 및 처리현황(사법처리현황도 표기할 것)	776
	6. 2005년 이후 금융위 직원 징계 현황	777

유 원 일 의원

1-1. 최근 3개년 연도별 금융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내용 및 평가순위표

- ☐ 경영평가단(기획재정부)이 작성한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및
보도자료 별도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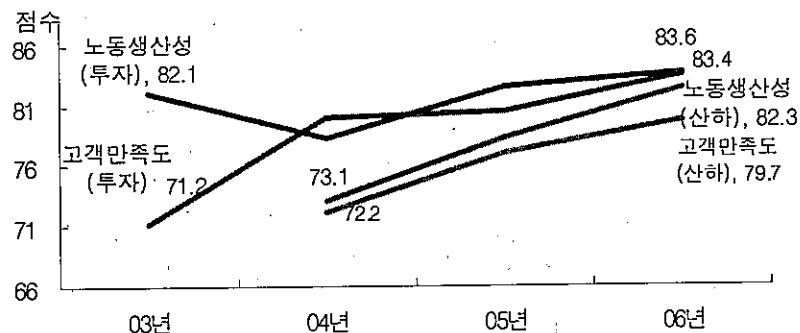
공공기관 경영혁신이 경영성과 개선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으로 가시화

◇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

* 투자기관 평균 : ('04) 4.2단계 → ('05) 4.8단계 → ('06) 5.1단계

* 산하기관 평균 : ('04) 2.5단계 → ('05) 3.3단계 → ('06) 4.3단계

◇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등 경영성과지표가 지난 4년간 지속개선



◇ 금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그간 공공기관이 추진해온 경영혁신 노력이 대국민 점점 서비스 증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① 기획예산처는 '07.6.20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의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확정

-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과 정부산하기관경영평가단은 '07.2~6월중 14개 정부투자기관과 75개 정부산하기관의 '06년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

* 금년도 평가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에 따라 기존 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 체제로 실시하는 마지막 평가이며, 내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구분 실시

②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음

(상세결과는 <붙임1> 참조)

① 14개 정부투자기관의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전년수준

	'06년(A)	'05년(B)	증감(A-B)
최고(점)	83.5	83.4	+0.1
최저(점)	69.3	70.5	-1.2
평균(점)	77.8	77.0	+0.8

② 기관별 평가결과 (순위 · 성과급 지급률 등)

기 관 명	2006년		
	순위	점수(A)	성과급(%)
한국도로공사	1	83.5	500.0
한국조폐공사	2	83.4	499.2
한국관광공사	3	83.2	495.0
한국석유공사	4	80.4	435.8
한국전력공사	5	78.9	404.2
농수산물유통공사	6	78.5	394.5
한국수자원공사	7	78.3	390.1
한국토지공사	8	77.4	371.0
대한주택공사	9	77.3	369.2
대한광업진흥공사	10	76.6	355.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76.2	346.6
한국철도공사	12	73.8	296.3
한국농촌공사	13	72.7	272.6
대한석탄공사	14	69.3	200.0

③ 정부산하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음

(상세결과는 <붙임2> 참조)

- ① 75개 기관을 8개 유형으로 구분한 후 해당 유형내에서 평가
→ 평균점수는 72.3점으로 '05년 평가보다 소폭 상승

	'06년(A)	'05년(B)	증감(A-B)
▪ 평균(점)	72.3	68.9	+3.4
▪ 최고(점)	84.5 (한국정보사회진흥원)	87.8 (에너지관리공단)	△3.4
▪ 최저(점)	52.8 (한국주택금융공사)	50.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2.7

* 점수 상승기관(47개) > 하락기관(25개), 신규기관(3개)

② 8개 유형별 최상위·하위기관 및 성과급

유형(기관수)	최상위(1위)기관			최하위기관		
	기관명	점수	성과급(%)	기관명	점수	성과급(%)
①검사·검증(11개)	한국전기안전공사	80.7	181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63.0	113
②금융·수익(7개)	대한주택보증(주)	80.3	180	한국마사회	69.3	119
③문화·국민생활(10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79.7	18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62.0	112
④산업진흥(13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84.4	184	광해방지사업단	59.9	110
⑤연수·교육·훈련(5개)	한국청소년수련원	81.0	181	한국청소년상담원	59.5	110
⑥연구·개발·지원(6개)	한국학술진흥재단	80.4	180	요업기술원	57.4	107
⑦건설·시설관리(8개)	한국철도시설공단	81.0	181	부산항만공사	62.3	112
⑧연기금·운용(15개)	기술신용보증기금	80.5	180	한국주택금융공사	52.8	103

④ 그동안 정부가 지속 강조해 온 경영혁신·고객만족경영이 확산되어 대국민 서비스 개선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

- 금년도 경영평가결과 발굴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의 다양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들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기관별 상세 우수사례는 <붙임3> 참고

<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우수사례 >

① 한국도로공사

- (기존) 출퇴근 시간대 및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지정체 심각
 - (개편) 고속도로 지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
 - IC 설치 등 시설개량, 신호체계 개선, 영업인력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톨게이트 시간당 처리차량이 전년대비 6.5% 향상
 - 연휴기간 교통혼잡정보 종합DB 구축, 교통혼잡캘린더 제작·배포로 고속도로 이용의 효율성 제고
- * 서울~부산간 30분, 서울~목포간 40분 단축

② 한국조폐공사

- (기존) 전자상거래 발달 등으로 주 사업인 화폐의 매출액이 줄어드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경영상 위기에 직면
- (개편) 비전을 ‘세계 최고의 보안제품 생산기업’으로 바꾸고 지속적 경영혁신을 추진
 - 홀로그램·은선 등 첨단 위변조 방지장치가 적용된 세계 최고수준의 새은행권을 차질없이 제조·공급
 - 전자여권 및 전자주민증 사업에 적극 진출하기 위한 첨단 보안신분증 생산 인프라 구축

③ 한국관광공사

- (기존) 국내관광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저조하여 국제관광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
- (개편) 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 전개
 - 한국의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소개하는 ‘구석구석 캠페인’을 추진하여 관광 신상품 개발 역량을 강화
 - 국내 최초 내비게이션 기반의 관광전문 전자지도를 개발하여 전국의 관광정보서비스 제공

<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우수사례 >

① 한국전기안전공사(점사·검증유형 1위)

- (기존) 관행적으로 해오던 정부 위탁업무만 수행했을 뿐, 국민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를 개발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노력은 소홀
- (개편) 국민 불편사항 발생시 24시간 대기중인 직원이 즉시 출동하여 무상으로 응급 지원하는 고충처리제(Speed-Call) 도입

② 대한주택보증(주)(금융·수익유형 1위)

- (기존) 고객이 관할 지점을 방문하여 보증서류를 작성하고, 보증서 수령을 위해 재방문하는 등 보증이용 절차가 복잡
- (개편) 영업점 직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무방문 보증서비스’ 실시

③ 한국정보문화진흥원(문화·국민생활유형 1위)

- (기존) 고객 요구파악이 부족하여 통신중계서비스(TRS)의 이용활성화가 미흡

* 통신중계서비스 : 청각이나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비장애인과의 전화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 (개편) 청각장애인 맞춤서비스인 온라인 메신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

* 통신중계서비스 월 평균 이용건 수 '05년 대비 81.89% 증가한 2,321건 기록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문화·국민생활유형 2위)

- (기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항생제·주사제 처방율과 제왕절개 분만율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소지

- (개편) 모든 의료기관의 항생제·주사제 처방율과 제왕절개 분만율을 인터넷을 통해 전면 공개

* 공개결과 항생제처방률($\Delta 3.3\%$ p), 주사제 처방률($\Delta 2.8\%$ p)과 제왕절개 분만율($\Delta 0.9\%$ p)이 점차 감소

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산업진흥유형 1위)

- (기존) 기술력은 있으나 영세한 중소 IT벤처기업들이 사업 착수후 대금입금 시점까지 자금난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

- (개편) 중소기업체들의 시급하고 민감한 자금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계약서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계약대금 대출보증제도'를 도입

⑥ 에너지관리공단(산업진흥유형 2위)

- (기존) 에너지사용량 신고업무를 지자체가 담당하여 빈번한 담당자 교체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오류발생 등의 문제 발생

- (개선) 신고업무의 주체를 지자체→ 공단으로 이관하고, One-Stop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이 직접 인터넷에서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도록 개선

⑦ 한국청소년수련원(연수·교육훈련유형 1위)

- (기존) 우수한 시설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영역이 다각화되지 못하였다는 한계
- (개편) 소외계층에 대한 수련기회 확대, 글로벌 빌리지의 운영을 통한 국제적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타 수련기관과는 차별화된 영역을 확대

⑧ 한국학술진흥재단(학술·연구지원유형 1위)

- (기존) 구성원의 전문성과 핵심역량 제고 등 인적 자원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미흡
- (개편) 1부서 1학습조직화를 추진하여 구성원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해 사회에 환원

⑨ 한국철도시설공단(건설·시설관리유형 1위)

- (기존) 국가 철도망 전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미비
- (개편) 역사상 최초로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를 DB화하여 국가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대 마련

⑩ 기술보증기금(연·기금운용유형 1위)

- (기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미흡
- (개편) 인터넷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보증서를 전송하는 'On-line 접수제도'와 '전자보증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보증업무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는 휴대폰 문자서비스 운영

⑤ 향후 계획

- 기획예산처는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관련 유공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장관표창 수여
 - * 투자기관 : (기관장·임원) 기본연봉의 0~200%, (직원) 월기본급의 200~500%
 - * 산하기관 : (기관장·임원) 기준연봉의 20~100%, (직원) 월기본급의 100~200%
- 금년 7월중 피평가기관들을 대상으로 경영실적평가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한편,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07.4)을 계기로 경영평가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
 - 현행 단년도 실적위주 평가에서 기관의 설립목적에 충실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사업계획 수립, 실행과정의 노력·행위 등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재설계를 추진중
 - 이 과정에서 해외선진사례 검토, 피평가기관·관련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

〈붙임1〉 정부투자기관 2006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1. 기관 평가결과

- ① 14개 정부투자기관의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전년수준

	'06년(A)	'05년(B)	증감(A-B)
최고(점)	83.5	83.4	+0.1
최저(점)	69.3	70.5	-1.2
평균(점)	77.8	77.0	+0.8

② 부문별 평가결과

- 경영혁신, 고객만족도, 생산성 등 전반적인 성과가 향상

* 경영혁신수준(평균) : ('05) 4.8단계 → ('06) 5.1단계 (+0.3)

* 고객만족도 향상(평균) : ('05) 80.4점 → ('06) 83.4점(+3.0)

* 노동생산성(평균) : ('05) 82.5점 → ('06) 83.6점 (+1.08)

- 대부분 정부투자기관이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수행

* 조폐(24년만에 새 화폐발행), 수공(홍수시 과학적 방류량 산정으로 홍수피해 최소화), 도공(정체구간 집중투자로 평균통행시간 단축), 주공·토공(행복도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 연봉제·팀제·성과관리 등 경영관리 제도도 전반적으로 향상

▪ 특히, 인건비 과다인상 사례가 대폭 축소

* 인건비 정부지침 위반 기관 수 : ('04) 5 → ('05) 1개 → ('06) 1개

③ 기관별 평가결과

기 관 명	2006년		2005년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한국도로공사	1	83.5	3	79.9	3.6
한국조폐공사	2	83.4	5	78.7	4.7
한국관광공사	3	83.2	8	76.5	6.7
한국석유공사	4	80.4	7	76.6	3.8
한국전력공사	5	78.9	2	82.6	△3.7
농수산물유통공사	6	78.5	10	75.8	2.7
한국수자원공사	7	78.3	11	74.5	3.8
한국토지공사	8	77.4	1	83.4	△6.0
대한주택공사	9	77.3	6	77	0.3
대한광업진흥공사	10	76.6	12	74.1	2.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76.2	4	79.5	△3.3
한국철도공사	12	73.8	14	70.5	3.3
한국농촌공사	13	72.7	9	75.9	△3.2
대한석탄공사	14	69.3	13	73.1	△3.8

2. 시장경영계약이행실적 평가결과

- ① 대체로 기관평가 결과와 유사하나, 수자원공사·철도공사는 기관 평가결과보다 사장 평가결과가 우수

* 수자원공사는 기관 7위/사장 3위, 철도공사는 기관 12위/사장 7위,
'05년대비 수자원공사·관광공사·철도공사는 평가결과가 대폭개선

- ② 각기관별 사장 평가결과

기 관 명	2006년		2005년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한국도로공사	1	85.1	3	80.7	4.4
한국관광공사	2	84.7	8	79.4	5.3
한국수자원공사	3	81.3	12	75.6	5.7
한국전력공사	4	81.0	2	81.8	△0.8
한국조폐공사	5	78.7	5	80.0	△1.3
농수산물유통공사	6	76.6	10	78.1	△1.5
한국철도공사	7	76.0	14	74.2	1.8
한국석유공사	8	76.0	6	80.0	△4.0
한국토지공사	9	75.9	1	84.4	△8.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74.8	4	80.2	△5.4
대한주택공사	11	74.4	9	79.2	△4.8
한국농촌공사	12	72.6	7	79.7	△7.1
대한광업진흥공사	13	72.0	13	75.4	△3.4
대한석탄공사	14	66.0	11	76.5	△10.5

〈붙임2〉 정부산하기관 2006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1. 평가결과 개요

① 지속적 경영혁신 노력으로 평균점수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3.4점)

	'06년(A)	'05년(B)	증감(A-B)
평균(점)	72.3	68.9	+3.4
최고(점)	84.4 (한국정보사회진흥원)	87.8 (에너지관리공단)	△3.4
최저(점)	52.8 (한국주택금융공사)	50.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2.7

② 유형별로는 「학술·연구지원」 유형을 제외한 7개 유형의 평균점수가 개선

기관유형	'06평균(A)	'05평균(B)	증감(A-B)
금융·수익(7)	75.1	71.1	4.0
연·기금운용(15)	73.2	69.0	4.2
학술·연구지원(6)	73.1	73.5	△0.4
산업진흥(13)	72.5	69.2	3.3
검사·검증(11)	72.0	68.9	3.1
건설·시설관리(8)	71.2	66.7	4.5
문화·국민생활(10)	71.2	67.8	3.4
연수·교육훈련(5)	69.3	65.6	3.7
전체 (75개)	72.3	68.9	3.4

2. 기관별 평가결과

① 검사·검증유형(11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05년도 평가결과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한국전기안전공사	1	80.7	1	79.3	1.4
한국가스안전공사	2	77.6	2	79.1	△1.5
선박검사기술협회	3	77.0	3	77.4	△0.4
한국석유품질관리원	4	76.2	5	74.3	1.9
한국전파진흥원	5	75.8	4	74.8	1.0
축산물등급판정소	6	74.0	8	66.8	7.2
교통안전공단	7	70.1	6	69.6	0.5
한국소방검정공사	8	68.6	12	53.1	15.5
산업기술시험원	9	64.9	7	66.8	△1.9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0	63.8	9	66.1	△2.3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1	63.0	4	67.3	△4.3

② 금융·수익유형(7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05년도 평가결과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대한주택보증(주)	1	80.3	3	76.3	4.0
한국지역난방공사	2	79.5	1	80.9	△1.4
한국전력거래소	3	75.9	6	72.3	3.6
한국방송광고공사	4	74.6	9	65.1	9.5
한국감정원	5	73.4	8	69.4	4.0
대한지적공사	6	73.0	2	77.8	△4.8
한국마사회	7	69.3	7	70.1	△0.8

③ 문화·국민생활유형(10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05년도 평가결과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	79.7	1	82.1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78.4	2	74.5	3.9
국민건강보험공단	3	78.1	7	69.9	8.2
국제방송교류재단	4	70.2	6	71.1	△0.9
한국소비자원	5	70.0	5	71.2	△1.2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6	69.7	4	72.5	△2.8
국립공원관리공단	7	69.4	9	68.8	0.6
독립기념관	8	67.3	11	64.4	2.9
한국과학문화재단	9	66.7	3	73.5	△6.8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0	62.0	10	66.4	△4.4

④ 산업진흥유형(13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05년도 평가결과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	84.4	2	82.9	1.5
에너지관리공단	2	83.6	1	87.8	△4.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3	78.2	4	73.6	4.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	76.1	3	80.9	△4.8
한국산업단지공단	5	72.9	11	65.6	7.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6	72.7	8	70.0	2.7
한국환경자원공사	7	72.0	6	70.8	1.2
한국인터넷진흥원	8	71.3	7	70.1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	69.8	5	71.4	△1.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0	69.0	10	66.7	2.3
한국디자인진흥원	11	68.1	15	60.8	7.3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2	64.9	12	62.6	2.3
광해방지사업단	13	59.9	13	61.5	△1.6

⑤ 연수 · 교육훈련유형(5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05년도 평가결과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한국청소년수련원	1	81.0	1	72.2	8.8
한국산업인력공단	2	76.8	3	68.3	8.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	67.6	4	62.3	5.3
한국노동교육원	4	61.8	5	55.3	6.5
한국청소년상담원	5	59.5	-	-	-

⑥ 학술 · 연구지원유형(6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05년도 평가결과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한국학술진흥재단	1	80.4	3	68.5	11.9
한국과학재단	2	80.1	1	84.2	△4.1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3	79.5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72.7	4	68.1	4.6
한국산업기술평가원	5	68.7	2	80.4	△11.7
요업기술원	6	57.4	10	65.5	△8.1

⑦ 건설 · 시설관리유형(8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05년도 평가결과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한국철도시설공단	1	81.0	1	80.0	1.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	75.4	2	77.1	△1.7
산재의료관리원	3	74.7	8	55.7	19.0
환경관리공단	4	73.4	3	69.4	4.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	71.0	5	66.7	4.3
인천항만공사	6	67.6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64.0	7	57.5	6.5
부산항만공사	8	62.3	6	60.1	2.2

8 연 · 기금운용유형(15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05년도 평가결과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기술신용보증기금	1	80.5	11	66.6	13.9
신용보증기금	2	79.9	12	66.1	13.8
한국수출보험공사	3	79.8	1	84.9	△5.1
한국자산관리공사	4	78.4	2	77.1	1.3
예금보험공사	5	78.4	3	75.9	2.5
정보통신연구진흥원	6	78.0	4	74.3	3.7
한국산업안전공단	7	75.6	7	70.5	5.1
근로복지공단	8	74.0	8	69.3	4.7
국민연금관리공단	9	73.6	6	70.9	2.7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0	72.5	5	72.0	0.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1	70.1	9	68.8	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2	69.9	16	56.1	13.8
국민체육진흥공단	13	68.5	14	60.6	7.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4	65.9	13	63.2	2.7
한국주택금융공사	15	52.8	10	68.8	△16.0

3. 평가결과 주요내용

① 종합경영부문

① 경영혁신, 고객만족도,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향상

- * 경영혁신수준(평균) : ('05) 3.3단계 → ('06) 4.3단계 (+1.0)
- * 고객만족개선도(평균) : ('05) 77.0점 → ('06) 79.7점 (+2.7)
- * 노동생산성(평균) : ('05) 78.2점 → ('06) 82.3점 (+4.1)

② 전반적으로 이사회 활성화 및 경영 투명성 제고 노력 개선

- 이사회 심의·전제기능 강화
 - * 회의안건의 사전배포·설명, 경영현안 수시설명, 수정의결비율 증가
- 경영공시 항목확대, 정보공개요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담부서·담당자 지정

② 주요사업부문

① 다수 기관이 핵심 주력기능을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단이 개발한 직종별 직업능력표준을 활용
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추진체계 재설계

②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개선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가동원자력의 노후화, 핵테러 위협 등 경영
환경 변화를 감안, 핵심주력기능 설정하고 현안관리체계 구축·운영

③ 경영관리부문

① 신규사업 발굴, 해외사업 등 추진을 통해 자체수익을 확대하는 등 재무관리 지표 개선

- (대한지적공사) 바닷가 실태조사·관리사업, 군부대 자산관리 체계 구축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해외사업 추진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지원사업, 컨설팅사업, 지역 산업인력양성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허가·특허지원, 지역식품산업체 지원, 온라인교육 등 중장기 수입다변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

② 인건비, 관리업무비 등 경영관리 지표 개선 노력은 소폭상승

- 계량인건비(평균) : ('05) 72.9점 → ('06) 73.04점 (+0.14)

〈붙임3〉 주요 경영실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1. 정부투자기관

① 차별화된 고속도로 서비스 개발 (한국도로공사)

① 고속도로 지정체 획기적 개선

-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고속도로의 지정체가 심각하고, 명절 등 연휴기간의 특정시간대·특정노선에 교통량이 집중하는 등 문제
 - * 판교IC의 출퇴근 통행속도 : 시속 14.25km
 - * '05년도 명절연휴기간 교통량의 43%가 정부선에 집중
- 수도권 고속도로 톨게이트 18개차로 등 지정체 구간 위주로 하이패스* 확대, 판교 등 23개 IC 집중개량 및 부가차로 신설
 - * 달리는 차 안에서 무선 또는 적외선 통신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지불하는 최첨단 전자요금징수시스템
- '고속도로 교통혼잡 Calendar'를 개발하여, 과거 3개년의 교통정보를 분석하여 혼잡구간·시간·정도 등을 인터넷과 리플릿을 통해 제공
- 추진결과, 고속도로 지정체가 획기적으로 개선됨
 - 판교IC 출퇴근 통행속도 3배 증가 : 14.25km/h → 41.54km/h
 - '06년도 휴가철 및 추석연휴 교통량 분산으로 통행시간 단축 (서울~부산간 30분, 서서울~목포간 40분 단축)

② 차별화된 고속도로 서비스 개발

-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 : 30~50원/ℓ ('06.8월)
 - * 도공(임대료 인하), 정유사(공급가격 인하), 주유소(서비스 개선)
- ⇒ 고객(연간 245억원 유류비 절감)과 주유소(판매량 20% 증가)간 상생 달성
- 청각장애인을 위한 세계 최초의 3D 수화(手話) 교통정보 인터넷방송 (Hi-아바타) 실시
- ⇒ 사회적 약자의 고속도로 교통정보 접근성 강화(일평균 8,000회 접속)
- 무하차 Toll Drive Service 운영
 - * 톨게이트에서 고객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통행료 수납 이외의 용무(전자카드 충전 등)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민원처리 프로세스
- ⇒ 평균 민원처리시간 60% 단축(5분 → 2분)

② 세계 최고의 보안제품 생산기업으로 도약 (한국조폐공사)

① 비전재설정 및 목표 구체화

- 단순히 은행권 제조사라는 전통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보안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비전을 ‘세계 최고의 보안제품 생산기업’으로 재설정
- ‘매출액 5천억원 달성, 핵심기술 5건 개발, 부패 Zero 추진’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

② 조직 및 업무프로세스 혁신

- 사무직, 기술직의 직계를 폐지하여 벽없는 조직을 만들었으며, 고객, 품질, 효율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팀제를 도입하는 등 조직혁신을 단행
- 제품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고 과학적 문제해결 방법을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6시그마 혁신기법을 도입

③ 서비스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새 은행권 제조·공급을 완벽한 품질로 짧은 기간내에 완수
- 향후 매출액의 40%이상을 차지하게 될 전자여권 등 ID제품 사업에 적극 진출하기 위해 첨단 보안 신분증 생산인프라 구축

④ 조직문화 혁신

-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형 혁신기구 ‘화백회의’를 공기업 최초로 도입
- 장기 해외 마케팅 체험연수 등을 통해 구성원의 혁신역량을 강화

※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포브스 품질경영 대상, 기술혁신대상 수상, 4년 연속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대통령상 금상 수상 등 14개 분야 기관표창, 창사이래 최대인 3,315억원의 매출액, 400억원의 영업이익 달성

③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관광산업의 육성(한국관광공사)

① 한국의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소개하는 ‘구석구석 캠페인’ 전개

- 부산다대포, 전남 순천만, 한강 선유도공원, 대관령 풍력발전소 등 9개 지자체의 12개 관광지를 발굴·소개
 - 전남 순천만의 경우 소개되기 전보다 2-3배의 관광객이 증가, 한강선유도공원도 캠페인이 시작된 후 방문객이 59%증가
-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카페를 운영, 네티즌들의 생생한 국내여행정보를 공유
- ‘내 삶에 쉼표, 자녀에게 느낌표!’ 라는 슬로건의 내나라 여행박람회 개최(148개의 업체 및 지자체 참여)

② 국내 최초 내비게이션 기반의 관광전문 전자지도 개발

- SK폰 내비게이션 네이트드라이브 및 자동차 내비게이션 만도맵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전국의 관광정보서비스 제공

③ 1330 관광안내 전화서비스 운영

- 내국인 및 외국인 대상 전화 관광안내 및 통역서비스 기능을 영어·중국어·일본어로 24시간 제공

④ 관광 투자유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

- 국제관광투자 컨퍼런스인 APTIC 2006(Asia Pacific Tourism Investment Conference 2006)을 개최하는 등 관광투자유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 지자체 관광개발 프로젝트 및 제주 중문단지 투자유치를 성사

⑤ 고객만족경영시스템 고도화

- 고객의 소리(VOC) 처리시간을 '05년 19.45시간에서 '06년 1.99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

2. 정부산하기관

① 고객의 눈으로, 고객의 말씀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Ⅰ 전기안전 긴급출동 고충처리제도(Speed-Call) 도입

- 그간 정부위탁업무(주거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만을 수행했을뿐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하는 생활서비스를 개발하고 편의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소홀한 측면이 있었음
- 전문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전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직접 해결해 주는 것이라는데 착안하여 24시간 대기중인 직원이 즉시 출동하여 무상으로 응급 지원을 실시하는 고충처리제도(Speed-Call) 도입
 - * '05.1월 제주지역에서 최초 시범실시 후 '06년부터 강원영서지역으로 확대, '07년에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저소득층 전기설비로 확대 시행중
- 시범실시 이후 제주지역 고객만족도조사 93.2점(평균보다 10점 이상 상회), 설문조사 결과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100% 응답

Ⅱ 검사업무 리콜(Recall)제도 도입

- 검사·점검기관으로는 최초로 고객이 검사결과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내부 감사시 판정오류가 규명된 사항에 대해 다시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업무 리콜(Recall)제도 도입
 - '05년 리콜실적 5건에 이어 '06년에는 대상업무 확대와 홍보노력을 통해 50건으로 대폭 확대
- ※ 고객만족도지수 76.1점('04년) → 82.5점('06년),
청렴도지수 8.62점('04년) → 9.03점('06년)으로 향상

② 고객과 윈-윈(Win-Win)하는 협력적 동반자관계 구축(대한주택보증)

① 주택사업자 및 분양계약자 부담 경감을 위한 분양보증료 인하

- 보증손실 감축 노력 등 지속적인 경영혁신의 결과로 최근 5년간 대규모 흑자를 실현함에 따라 경영성과를 고객 및 국민에게 환원하고자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보증료를 인하('06.4월)

종 전	개 선	보증실적('06.4.12)	종전 보증료	개선후 보증료	차액
0.31% ~0.64%	0.25% ~0.50%	331,616억원	2,820억원	2,257억원	56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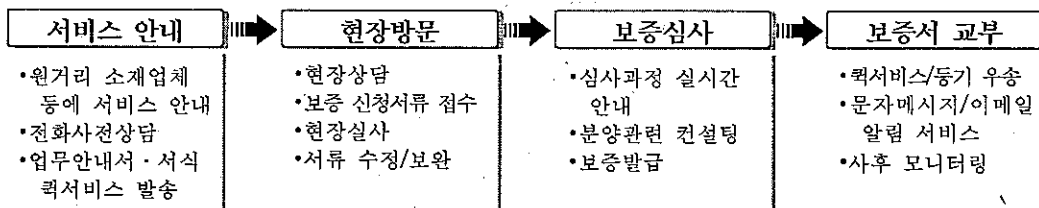
* '06년중 14만세대 563억원의 보증료 인하효과 발생

- 주택사업자의 보증료 부담 경감 및 분양가 인하로 분양계약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경영성과 환원을 통하여 고객과 회사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강화

주택사업자	주택건설사업비 최대 0.14% 절감 효과 (사업비 1천억원 기준, 1.4억원 절감)
분양계약자	주택분양가 최대 105만원 인하 효과 (분양가 3억원 기준)

② 무방문 보증(ONE CALL, ALL GUARANTEE)

- 영업점 직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무방문 보증서비스” 실시('06.7)



- 신속한 보증서 발급과 보증심사의 내실화로 경쟁력이 제고되고, 찾아가는 보증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도가 향상됨

* 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90.3점 → 90.9점(+0.6)

③ 고객이 중심에 있는 창조적 사업혁신 (한국정보문화진흥원)

Ⅰ 청각, 언어장애 고객중심의 통신중계서비스 개선

- 청각이나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비장애인과 전화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도록 지원해주는 통신중계서비스(TRS)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고객중심적인 서비스혁신의 필요성 증대
- 고객접점에 있는 통신중계사를 활용한 고객모니터링 결과, 대다수 청각장애인이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다는 점을 파악, 이와 연계한 서비스를 개발

Ⅱ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한 자유로운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 중계서비스 중계 및 운영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고객접점 담당자 회의(6.23) 및 실태조사(9.27) 등을 통해 대부분의 청각, 언어장애 고객이 즐겨찾는 네이트온 서비스와 연계를 추진
-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통해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민간기업과 합의함으로서 청각 및 언어장애 고객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 개발

Ⅲ 주요 성과

- 통신중계서비스 월 평균 이용건 수 '05년 대비 81.89% 증가(2,321건)

④ 의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신장, 선택권 제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Ⅰ 항생제·주사제처방률, 제왕절개분만을 전면 공개

-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높은 항생제·주사제 처방률과 제왕절개분만을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함
 - * '05년에는 처방률이 낮은 긍정적인 의료기관만을 공개하였으나, '06년에는 모든 의료기관을 공개함
- 인터넷을 통하여 내가 다니는 의료기관의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및 제왕절개분만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 선택에 도움을 줌
 - * 국민 조회건수가 ('05)9만회 → ('06)50만회로 567% 증가
-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이 공개 전·후 비교에서 크게 낮아졌으며, 제왕절개분만률도 점차 감소하고 있음

구분	공개 전		공개 후	증감
항생제처방률	28.4%	→	25.1%	3.3%p↓
주사제처방률	26.0%	→	23.2%	2.8%p↓
제왕절개분만율	36.7% ('02년)	→	35.8%	0.9%p↓

Ⅱ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진료비 확인서비스' 실시

-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지불한 진료비가 적정하게 부담되었는지 확인 신청하는 경우 의료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전문적으로 심사·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국민 권리찾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내부의 업무시스템을 신속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결과, 고액진료건에 대한 진료비 확인신청이 급증하고 있음
 - * ('04) 2,894건 → ('05) 4,159건 → ('06) 7,559건 접수('05년대비 81.8%↑)
- '06년도에는 2,670건에 대하여 총 21억 2천만원의 잘못된 진료비를 확인하여 국민에게 돌려주었으며, 향후 국민권익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추진할 계획임

⑤ 중소 IT 벤처기업의 협력적 동반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① 중소기업 계약대금 대출 보증

- 기술력은 있으나 영세한 중소 IT 벤처기업들이 사업착수 후 사업대금 입금 시점까지 자금난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
-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서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계약대금 대출보증제도'를 도입
 - 소프트웨어 공제조합과 정보사회진흥원과의 협약으로 매출채권 (계약서 등)을 담보로 계약금액의 85%까지 시중은행보다 저리로 대출서비스 제공
- '06년 제도 도입 후 한해 동안 약 10억원의 대출서비스 완료

② 사업비 집행정보 실시간 제공

- 사업비 집행정보가 주사업자에게만 제공됨에 따라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기업체들은 사업비가 언제 입금되고 집행되는지 알 수 없는 문제 발생
 - 사업비 집행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를 통해 사업비 집행시 전체 컨소시엄 참여기업에게 문자메세지 및 e-Mail로 관련 정보를 자동발송
 - 집행금액, 입금계좌, 집행일자 등을 통보받게 되어 중소기업은 신속한 자금정보를 통해 원활한 자금계획 수립이 가능해짐
- * '06년 SMS(문자서비스) 660건제공, 사업비 집행여부 문의 전년 대비 82% 감소

※ 고객만족도지수 74.3점('05.9년) → 86.5점('06.12)

⑥ 에너지사용량 신고업무의 획기적 개선(에너지관리공단)

① 에너지사용량 신고업무 개요

- 연간 2,000toe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당해 연도 에너지사용량을 해당 지역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함
 - ⇒ 신고내용은 지자체에서 취합하여 공단으로 이관되고 전산화 및 오류점검 과정을 거쳐 국내 에너지사용량 통계로 활용됨
- 지자체의 경우 담당자의 교체가 빈번하고 전문성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
 - 기업 입장에서는 수기 작성방식으로 인하여 자료작성 및 신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자료 제출 후에도 수많은 추가 요청자료에 대응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② 프로세스 개선 : 신고업무의 주체를 지자체 → 공단으로 이관

- 고객은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추가 요청 사항을 공단에 내던 이원화된 불편함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전문성이 높은 공단 직원과 직접 관련 업무를 상담하게 되어 빠른 신고서 작성이 가능해졌음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여 변경된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함

③ 고객서비스 개선 : One-stop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을 통해 업무절차를 분석하고, One-stop 전자민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이 직접 인터넷에서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도록 개선

④ 주요성과

- 에너지사용량 통계 구축 시기가 244일 → 142일로 단축
- 공단 지사의 12명의 인력이 절감되어 핵심사업으로 전환

⑦ 전문성과 핵심역량 중심의 지식조직 구축(한국학술진흥재단)

① 정부산하기관 최초 전체 보직에 대한 직위공모제 실시

- 내부 직위공모 자격을 2급 이상 간부에서 3급 이상 일반직원으로 확대
 - 3급 직위공모 보직비율이 '05년 10%에서 '06년 45%로 현격히 증가
 - * 공공부문의 모범 혁신사례로 평가
 - 독일 기센대 박사출신의 4급 직원을 연구사업조정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 중심의 발탁인사 시행
- 지식정보센터장, 국제교류팀장, 정책홍보팀장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3개 직위는 외부 직위공모 실시

② 지식조직화를 통한 지식경영 구현

- 지식정보 전문가를 영입하고, 지식경영의 허브 역할을 하는 지식정보센터를 설치·운영
- 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초빙, 인사조직·연구기획·재무회계·경영정보시스템 등 4과목을 개설하여 자체 MBA 운영
- 1부서 1학습조직화를 추진하여 총 23개 학습조직을 구성하고 136회 학습활동을 실시하여 구성원의 학습역량 강화
- 그룹웨어 및 지식관리시스템(KMS)를 활성화하여 학습 및 교육결과 지식의 공유 및 확산 촉진

③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지식환원 : '방과후 학교' 운영

- 학술 및 교육관련 전문기관으로서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
- 소외지역 중학교(경기도 안성중학교)와 협약체결, 관련 전공 석박사 22명이 참가하여 논술·영어·수학·과학 등 강의

⑧ 창의적 조직문화 혁신운동 전개 (한국철도시설공단)

① 국가철도망 확충 및 시설관리 효율화

- 철도 100년 역사 최초로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DB화하여 국가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경부선 전구간 전철화, 전국의 모든 열차운행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철도교통관제센터 설립, 의정부~동두천 복선전철화사업 개통 등으로 수도권 등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

② 철도산업의 시너지 창출

- '05년 중국 수투선 감리용역에 이어 '06년 무한~광주여객전용선의 감리용역을 수주하여 공단이 보유한 철도의 기술역량을 입증 받았고 '미래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의 시범노선 구축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 창출

③ 설계VE, ERP 등을 통한 업무혁신

- 6시그마, 설계 VE, 시공공법 개선 등을 통해 업무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6,700억원 상당의 재무효과를 달성
- 공단 전 업무분야를 통합한 빅뱅방식의 ERP를 구축하여 Paperless office 실현, 650개 건설현장과 실시간 업무공유시스템 구축

④ 조직 및 인사혁신

- '06.1월 기능중심 조직을 공단 사업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 중심조직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직렬폐지·승진과 승격 분리·경력개발제도(CDP) 도입 등 성과와 능력중심의 신인사제도 실현

공공조지협적세죽집금내출 보증

-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서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② **고객이 피부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대폭 개선**
 중소기업 계약대금 대출보증제도를 도입

- * 소액보증기업은 보증서 발급까지 2~3회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줄여
- '06년 제1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제도 도입 후 보충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보증 또는 기술평가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②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즉시 고객에게 통보**

- ③ **보** 집행금액, 입금계좌, 집행일자 등을 통보받게 되어 중소기업은
 증신속한 자금정보를 통해 원활한 자금계획 수립이 가능해짐

- ※ 기업은 보증지원 외에도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으로 선정
 * 고객만족도지수 74.3점('05.9년) → 86.5점('06.12)
 * 기술평가에 의한 벤처·INNO-BIZ 선정기업개 : ('05년) 4,301 → ('06년) 8,441

⑥ **붙임4** >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평가제표 (지관리공단)

11 정부투자기관 2006년 경영실적평가 평가지표

○ 부문	건설 부문	서비스 부문	기타 부문	제조 부문	서비스 부문	기타 부문	건설 부문	서비스 부문	기타 부문
종합경영부문	15	15	30	13	17	30	10	20	30
주요사업부문	15	20	35	17	18	35	20	25	35
경영관리부문	10	25	35	10	25	35	10	25	35
합계	40	60	100	40	60	100	40	60	100

대상자원의 경우, 도공, 조공, 교체 작업, 펄집, KOTRA, 농지차, 수공, 토공, 철도(6개) 농유공, 관광 (5개) 많아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

② 장부류와 세관에 작성된 영계와 세행실적도 평가하여 자료작성 및 신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자료 제출 후에도 수많은 추가 요청자료에 지표별양 대응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지표명 <개발지표산식>	평가방법	가중치
가. 책임경영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20>	10
② 프로세스 개선배구전조합무력과주체를 지자체등급평단으로 4이 판	다. 고객만족경영 실천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6
○ 고객은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추가 요청 사항을 공단에 내던 아(15)화 된 혁신경영 가. 혁신 리더십 및 비전과 전략 9등급평가 7	불편함을 덜게 된 혁신수요패성되었으며 전문성이 높음 공단 직원과		
직접 관련 업무를 상담한 것 같고 빠른 신고서 작성이 가능해졌음 윤리경영 가. 윤리경영 실천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15			7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제정하여 관련 경관 프로세스를 시스템화 함 조직 경영성과 기관 종합평가의 결과 반영 9등급평가 8			<50>

100

③ 고객서비스 개선 : One-stop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③ 정부산하기관 2006년 경영실적평가지표

-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을 통해 업무절차를 분석하고, One-stop 전자민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이 직접 인터넷에서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도록 개선

④ 주요성과

- 에너지사용량 통계 구축 시기가 244일 → 142일로 단축
- 공단 지사의 12명의 인력이 절감되어 핵심사업으로 전환

구 분	유 형 분 류	부문 가중치			계량어부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계 량	비계량
기본가중치		34	40	26	35	65
수익추구 성격이 강한 기관	(1) 검사·검증	34	40	26	35	65
	(2) 금융·수익	34	40	26	35	65
	(3) 문화·국민생활	39	35	26	30	70
산업진흥 등 공익성 기관	(4) 산업진흥	39	35	26	30	70
	(5) 연수·교육훈련	34	35	31	30	70
	(6) 학술·연구 지원	34	40	26	30	70
투자시설관리	(7) 건설·시설관리	29	40	31	35	65
별도의 평가시스템 운용	(8) 연·기금 운용	34	35	31	35	65
	일부 ¹⁾	34	40	26	35	65

〈붙임5〉 경영평가단 구성

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50명)

< 총괄반 >

- 단장 박완규(중앙대, 재정학), 총괄간사 신완선(성균관대, 산업공학) · 박재하(금융연구원) 계량간사 정민근(안진회계) 등 11인

< 비계량반 >

- (인사조직관리팀) 팀장 정진호(노동연구원, 노동경제) 등
- (재무예산관리팀) 팀장 서영호(경희대, 경영) 등
- (주요사업1,2,3팀) 팀장 박순애(서울대, 행정) 등

< 계량반 >

- 팀장 고종권(한양대, 회계), 간사 안숙찬(덕성여대, 회계) 등

2.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105명)

< 종합경영반 >

- 단장 송희준(이화여대, 정책), 총괄간사 조택(이화여대, 행정) 등

< 주요사업반 >

- 최종원(서울대, 정책), 김재호(에너지연구원, 정책) 등

< 경영관리반 >

- 김호섭(아주대, 행정), 김창수(중앙대, 경영) 등

< 계량반 >

- 김완희(경원대, 회계), 신현걸(가톨릭대, 경영) 등

공기업 · 준정부기관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08. 6

기 획 재 정 부

① 공기업1(14개)

분류	기관명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점수	점수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우수 (2개)	한국전력공사	80.0	84.6	500.0	100.0	200.0
	대한광업진흥공사	79.8	77.4	497.0	99.0	144.7
양호 (6개)	한국철도공사	79.6	74.9	494.6	98.2	125.9
	한국석유공사	79.4	73.6	490.8	96.9	115.4
	한국토지공사	78.0	74.0	470.0	90.0	118.7
	한국수자원공사	76.4	78.5	446.2	82.1	152.9
	한국관광공사	76.2	77.5	442.0	80.7	145.2
	대한주택공사	75.7	74.7	435.3	78.4	124.4
보통 (5개)	한국공항공사	72.9	73.6	391.8	63.9	115.3
	한국도로공사	72.6	73.9	387.0	62.3	117.9
	한국조폐공사	71.4	76.1	369.3	56.4	134.5
	인천국제공항공사	71.1	70.5	364.6	54.9	92.2
	한국가스공사	70.9	69.4	361.3	53.8	83.7
부진 (1개)	대한석탄공사	60.2	58.5	200.0	-	-

② 공기업2(10개)

분류	기관명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점수	점수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우수 (2개)	한국지역난방공사	76.9	75.1	500.0	100.0	200.0
	부산항만공사	75.0	70.1	453.9	81.6	137.1
양호 (4개)	한국감정원	72.6	66.0	398.1	59.2	85.7
	인천항만공사	72.4	68.8	393.2	57.3	120.7
	한국마사회	71.6	67.4	373.9	49.5	102.9
	산재의료관리원	70.3	65.3	344.8	37.9	76.1
보통 (3개)	대한주택보증(주)	69.6	72.8	328.3	31.3	171.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69.5	68.4	325.2	30.1	115.0
	한국방송광고공사	67.8	62.8	285.6	14.2	44.3
부진 (1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6.3	59.3	250.0	-	-

③ 검사·검증(12개)

분류	기관명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점수	점수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우수 (2개)	한국가스안전공사	78.6	76.3	200.0	100.0	98.1
	한국전기안전공사	77.4	76.7	192.7	94.2	100.0
양호 (4개)	대한지적공사	75.7	72.1	181.9	85.5	80.1
	한국전파진흥원	75.2	65.4	178.5	82.8	50.8
	선박안전기술공단	73.9	67.2	169.9	75.9	58.7
	한국석유품질관리원	73.1	70.8	165.2	72.1	74.4
보통 (4개)	축산물등급판정소	70.7	69.5	149.5	59.6	68.5
	교통안전공단	70.5	66.2	148.2	58.6	54.6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68.5	63.1	136.1	48.9	4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6.5	58.2	122.9	38.3	20.0
부진 (2개)	한국소방검정공사	66.1	63.2	120.3	36.3	41.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62.9	61.4	100.0	20.0	33.9

④ 문화·국민생활(15개)

분류	기관명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점수	점수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우수 (2개)	국민건강보험공단	80.5	76.1	200.0	100.0	84.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78.5	74.2	188.7	90.9	77.5
양호 (5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8.1	80.6	186.8	89.4	100.0
	한국고용정보원	73.2	65.7	160.1	68.0	47.3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71.9	70.8	153.3	62.6	65.5
	국제방송교류재단	71.3	63.8	150.0	60.0	40.4
	한국산업안전공단	70.6	70.6	146.1	56.9	64.5
보통 (5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68.5	69.1	134.4	47.5	59.3
	한국우편사업지원단	68.0	67.5	131.9	45.5	53.6
	국립공원관리공단	67.5	61.3	129.2	43.3	31.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6.0	65.9	121.1	36.9	47.9
	한국소비자원	64.7	61.2	113.8	31.1	31.3
부진 (3개)	한국과학문화재단	64.4	60.1	112.1	29.7	27.2
	독립기념관	62.8	58.0	103.8	23.0	20.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62.1	63.2	100.0	20.0	38.3

⑤ 산업진흥1(11개)

분류	기관명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점수	점수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우수 (2개)	에너지관리공단	81.8	76.4	200.0	100.0	89.9
	한국철도시설공단	78.0	79.3	184.3	87.5	100.0
양호 (3개)	농수산물유통공사	77.4	78.0	445.4	81.8	188.5
	한국농촌공사	77.3	75.9	443.6	81.2	170.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6.9	78.3	438.6	79.5	191.7
보통 (4개)	한국산업단지공단	74.6	75.4	170.2	76.2	86.6
	한국전력거래소	72.4	72.5	161.0	68.8	76.1
	한국환경자원공사	68.7	72.0	145.3	56.3	74.3
	환경관리공단	68.2	63.8	143.3	54.6	45.7
부진 (2개)	우정사업진흥회	62.3	60.9	118.7	34.9	35.4
	증권예탁결제원	57.8	56.5	100.0	20.0	20.0

⑥ 산업진흥2(15개)

분류	기관명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점수	점수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우수 (2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79.3	76.3	200.0	100.0	10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76.4	70.3	186.0	88.8	81.6
양호 (5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76.3	72.8	185.9	88.8	89.3
	한국인터넷진흥원	73.7	69.1	173.6	78.9	77.9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72.9	65.6	169.8	75.8	67.0
	한국디자인진흥원	71.9	66.3	165.1	72.1	69.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71.4	73.0	162.6	70.1	89.8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70.1	62.3	156.4	65.1	56.9
보통 (5개)	광해방지사업단	70.1	68.6	156.4	65.1	76.2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69.9	70.3	155.4	64.3	8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7.6	61.7	144.6	55.7	55.0
	한국환경기술진흥원	63.9	59.5	127.0	41.6	48.1
	한국산업기술재단	63.6	60.0	125.4	40.3	49.9
부진 (3개)	영화진흥위원회	62.9	60.7	121.9	37.5	51.8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58.2	50.4	100.0	20.0	20.0

7 교육훈련·연구지원(11개)

분류	기관명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점수	점수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우수 (2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81.3	80.5	200.0	100.0	100.0
	한국과학재단	80.1	75.3	193.3	94.7	82.6
양호 (4개)	한국학술진흥재단	76.4	74.2	173.6	78.9	79.0
	한국산업인력공단	74.3	71.6	162.5	70.0	70.6
	요업기술원	70.8	65.4	144.0	55.2	49.9
	한국청소년수련원	70.0	68.5	140.1	52.1	60.3
보통 (3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68.2	67.6	130.3	44.2	57.2
	한국산업기술평가원	65.6	59.7	116.7	33.4	31.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65.0	60.0	113.5	30.8	32.2
부진 (2개)	한국청소년상담원	63.4	56.3	104.9	24.0	20.0
	한국노동교육원	62.5	60.1	100.0	20.0	32.5

8 연·기금운용(13개)

분류	기관명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점수	점수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우수 (2개)	한국수출보험공사	81.4	74.8	200.0	100.0	84.0
	기술신용보증기금	81.3	80.7	199.4	99.5	100.0
양호 (5개)	사학연금관리공단	80.7	70.5	197.0	97.6	72.1
	신용보증기금	79.2	77.7	190.1	92.1	91.9
	예금보험공사	78.0	71.3	185.1	88.1	74.1
	정보통신연구진흥원	77.5	72.1	182.9	86.3	76.5
	국민연금관리공단	76.1	69.9	176.8	81.4	70.5
보통 (5개)	근로복지공단	73.1	68.4	163.7	71.0	66.3
	한국주택금융공사	70.7	63.5	153.2	62.6	52.7
	국민체육진흥공단	70.2	66.1	151.3	61.0	60.0
	한국자산관리공사	70.0	67.0	150.2	60.1	62.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69.5	61.5	148.2	58.6	47.3
부진 (1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4	51.6	100.0	20.0	20.0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09. 6

기 획 재 정 부

1. 평가등급별 성과급 지급기준

① 직원 (전년도 월기본급 또는 기준월봉 기준, %)

구분		S	A	B	C	D	E
공기업	· 종전 투자기관(11개)	400	352	304	256	208	200
	· 이외 기관(13개)	400	360	320	280	250	250
준정부 기관	· 종전 투자기관(3개)	400	352	304	256	208	200
	· 이외 기관(73개)	160	144	128	112	100	100

② 상임이사 (전년도 기본연봉 기준, %)

구분	S	A	B	C	D	E
공기업(24개)	80	64	48	32	16	0
준정부기관(76개)	48	38.4	28.8	19.2	9.6	0
· 7개 금융형 기관	80	64	48	32	16	0

③ 기관장 (전년도 기본연봉 기준, %)

구분	S	A	B	C	D	E
공기업(24개)	160	128	96	64	32	0
준정부기관(76개)	48	38.4	28.8	19.2	9.6	0
· 7개 금융형 기관	80	64	48	32	16	0

2. 기관별 평가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

1] 공기업

평가유형	기관명	평가등급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기관장 평가수점 ¹	기관장 평가비수점 ²
SOC (14개)	한국수자원공사	A	352.0	64.0	96.0	128.0
	한국전력공사	A	352.0	64.0	64.0	128.0
	한국도로공사	B	304.0	48.0	64.0	96.0
	한국지역난방공사	B	320.0	48.0	96.0	96.0
	한국철도공사	B	304.0	48.0		96.0
	한국토지공사	B	304.0	48.0	32.0	96.0
	대한주택공사	C	256.0	32.0	32.0	64.0
	부산항만공사	C	280.0	32.0	64.0	64.0
	인천국제공항공사	C	280.0	32.0	32.0	64.0
	인천항만공사	C	280.0	32.0	64.0	64.0
	한국가스공사	C	280.0	32.0		64.0
	한국공항공사	C	280.0	32.0	64.0	64.0
	한국석유공사	C	256.0	32.0	32.0	64.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D	250.0	16.0		32.0
서비스 진흥제조 (10개)	한국광물자원공사	A	352.0	64.0	96.0	128.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B	320.0	48.0		96.0
	한국감정원	B	320.0	48.0	32.0	96.0
	한국관광공사	B	304.0	48.0	64.0	96.0
	한국마사회	B	320.0	48.0	64.0	96.0
	한국조폐공사	B	304.0	48.0	64.0	96.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C	280.0	32.0		64.0
	한국산재의료원	C	280.0	32.0	0.0	64.0
	대한석탄공사	D	208.0	16.0	0.0	32.0
	한국방송광고공사	D	250.0	16.0	0.0	32.0

* **음영**처리된 기관은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으로 기관장 성과급 산출시 기관 평가점수를 활용

* 주1)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는 현직기관장

* 주2) 경영계획서작성지침 시행전 퇴임기관장('08.6.10일 이전 퇴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 현직기관장('08.10.1일 이후 임명),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기준일 전 퇴임기관장('08.6.10~'09.3.31일 퇴임)

② 준정부기관

평가유형	기관명	평가등급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기관장 평가수점 ¹	기관장 평가비수점 ²
검사검증 (6개)	대한지적공사	B	128.0	28.8	19.2	28.8
	한국가스안전공사	B	128.0	28.8		28.8
	한국전기안전공사	B	128.0	28.8		28.8
	교통안전공단	C	112.0	19.2	19.2	19.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D	100.0	9.6	9.6	9.6
	한국전파진흥원	D	100.0	9.6	9.6	9.6
문화 국민생활 (9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	144.0	38.4		38.4
	국민건강보험공단	A	144.0	38.4	19.2	38.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B	128.0	28.8	19.2	28.8
	국제방송교류재단	C	112.0	19.2	9.6	19.2
	도로교통공단	C	112.0	19.2	9.6	19.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C	112.0	19.2	9.6	19.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C	112.0	19.2	9.6	19.2
	국립공원관리공단	D	100.0	9.6	9.6	9.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D	100.0	9.6	0.0	9.6
산업진흥1 (10개)	한국농어촌공사	A	352.0	38.4	28.8	38.4
	농수산물유통공사	B	304.0	28.8	19.2	28.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B	304.0	28.8	28.8	28.8
	에너지관리공단	B	128.0	28.8	19.2	28.8
	한국산업단지공단	C	112.0	19.2	19.2	19.2
	한국예탁결제원	C	112.0	32.0	16.0	32.0
	한국전력거래소	C	112.0	19.2	9.6	19.2
	한국철도시설공단	C	112.0	19.2	19.2	19.2
	한국환경자원공사	C	112.0	19.2	9.6	19.2
	환경관리공단	C	112.0	19.2	9.6	19.2

* 음영처리된 기관은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으로 기관장 성과급 산출시 기관 평가점수를 활용

* 주1)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는 현직기관장

* 주2) 경영계획서작성지침 시행전 퇴임기관장('08.6.10일 이전 퇴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 현직기관장('08.10.1일 이후 임명),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기준일 전 퇴임기관장('08.6.10~'09.3.

평가유형	기관명	평가등급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기관장 평가수점 ¹	기관장 평가비수점 ²
산업진흥2 (6개)	한국광해관리공단	B	128.0	28.8	19.2	28.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B	128.0	28.8	9.6	28.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	112.0	19.2	9.6	19.2
	한국정보사회진흥원	C	112.0	19.2	0.0	19.2
	한국디자인진흥원	D	100.0	9.6		9.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D	100.0	9.6		9.6
교육훈련 연구지원 (6개)	한국산업인력공단	A	144.0	38.4	19.2	38.4
	한국과학재단	B	128.0	28.8		28.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B	128.0	28.8	19.2	28.8
	한국학술진흥재단	B	128.0	28.8		28.8
	한국산업기술평가원	C	112.0	19.2	9.6	19.2
	한국세라믹기술원	D	100.0	9.6		9.6
연기금 운용 (14개)	근로복지공단	A	144.0	38.4	19.2	38.4
	기술보증기금	A	144.0	64.0	48.0	64.0
	신용보증기금	A	144.0	64.0	32.0	64.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B	128.0	28.8	9.6	28.8
	국민연금공단	B	128.0	28.8	19.2	28.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B	128.0	28.8	19.2	28.8
	국민체육진흥공단	B	128.0	28.8	9.6	28.8
	예금보험공사	B	128.0	48.0	32.0	48.0
	한국수출보험공사	B	128.0	48.0	48.0	48.0
	한국자산관리공사	B	128.0	48.0	32.0	48.0
	한국주택금융공사	B	128.0	48.0	48.0	48.0
	정보통신연구진흥원	C	112.0	19.2	9.6	19.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D	100.0	9.6		9.6
	영화진흥위원회	E	100.0	0.0	0.0	0.0

* 음영처리된 기관은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으로 기관장 성과급 산출시 기관 평가점수를 활용

* 주1)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는 현직기관장

* 주2) 경영계획서작성지침 시행전 퇴임기관장('08.6.10일 이전 퇴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 현직기관장('08.10.1일 이후 임명),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기준일 전 퇴임기관장('08.6.10~'09.3.

평가유형	기관명	평가등급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기관장 평가수점 ¹	기관장 평가비수점 ²
중소형 기관 (25개)	독립기념관	A	144.0	38.4	19.2	38.4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A	144.0	38.4	19.2	38.4
	한국과학창의재단	A	144.0	38.4	28.8	38.4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A	144.0	38.4	19.2	38.4
	한국산업기술재단	A	144.0	38.4	9.6	38.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A	144.0	38.4	19.2	38.4
	한국정보보호진흥원	A	144.0	38.4	19.2	38.4
	한국환경기술진흥원	A	144.0	38.4	28.8	38.4
	선박안전기술공단	B	128.0	28.8	19.2	28.8
	한국고용정보원	B	128.0	28.8	19.2	28.8
	한국소비자원	B	128.0	28.8	0.0	28.8
	한국송강기안전관리원	B	128.0	28.8		28.8
	한국시설안전공단	B	128.0	28.8	9.6	28.8
	한국우편물류지원단	B	128.0	28.8	19.2	28.8
	한국인터넷진흥원	B	128.0	28.8	9.6	28.8
	한국청소년수련원	B	128.0	28.8	0.0	28.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B	128.0	28.8	9.6	28.8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C	112.0	19.2		19.2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C	112.0	19.2		19.2
	한국원자력문화재단	C	112.0	19.2		19.2
	축산물등급판정소	D	100.0	9.6	0.0	9.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D	100.0	9.6		9.6
	한국석유관리원	D	100.0	9.6	9.6	9.6
	한국우편사업지원단	D	100.0	9.6		9.6
	한국청소년상담원	D	100.0	9.6	9.6	9.6

* **음영**처리된 기관은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으로 기관장 성과급 산출시 기관 평가점수를 활용

* 주1)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는 현직기관장

* 주2) 경영계획서작성지침 시행전 퇴임기관장('08.6.10일 이전 퇴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 현직기관장('08.10.1일 이후 임명),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기준일 전 퇴임기관장('08.6.10~'09.3)

1-2-A. 최근 3개년 연도별 금융공기업 CEO 연봉 내역 및 순위표

□ 금융공기업 CEO 연봉내역

(단위 : 백만원)

기관명	'06년	'07년	'08년
한국거래소	648	720	797
산은캐피탈(주)	369	531	580
중소기업은행	723	558	572
기술보증기금	365	425	452
신용보증기금	376	427	451
한국산업은행	742	612	424
코스콤	367	402	411
한국기업데이터(주)	340	399	348
예금보험공사	290	294	292
한국자산관리공사	296	293	292
(주)기은캐피탈	276	285	285
산은자산운용(주)	275	285	282
한국주택금융공사	411	325	247
한국예탁결제원	393	468	210
(주)아이비케이시스템	179	191	194
한국자산신탁	181	194	187
기은신용정보(주)	188	194	174
(주)정리금융공사	129	123	124

* 자료출처 : 공공기관 창의경영시스템(<http://www.alio.go.kr>)

1-2-B. 최근 3개년 연도별 직원 평균연봉 및 순위표

□ 금융공기업 직원 평균연봉

(단위 : 백만원)

기관명	'06년	'07년	'08년
한국거래소	90	100	97
한국산업은행	91	93	93
한국예탁결제원	88	97	90
중소기업은행	79	85	86
산은캐피탈(주)	79	89	85
코스콤	90	92	84
한국주택금융공사	71	72	74
(주)정리금융공사	71	73	73
신용보증기금	66	70	72
기술보증기금	68	72	71
산은자산운용(주)	74	69	70
예금보험공사	65	68	70
(주)기은캐피탈	72	72	70
한국자산신탁	59	68	70
한국자산관리공사	62	65	68
한국기업데이터(주)	66	65	65
기은신용정보(주)	50	53	49
(주)아이비케이시스템	43	42	44

* 자료출처 : 공공기관 창의경영시스템(<http://www.alio.go.kr>)

1-2-C. 최근 3개년 연도별 금융공기업 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 금융공기업 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기관명	'06년		'07년		'08년	
	기관장	직원	기관장	직원	기관장	직원
기술보증기금	28	1	50	2	60	3
기은신용정보	-	-	-	-	-	-
산은자산운용	-	-	-	-	-	-
산은캐피탈	-	-	-	-	-	-
신용보증기금	26	1	49	2	55	3
IBK 시스템	-	-	-	-	-	-
예금보험공사	33	2	31	2	14	2
정리금융공사	-	-	-	-	-	-
기은캐피탈	-	-	-	-	-	-
중소기업은행	-	-	-	-	242	9
한국예탁결제원	25	5	-	-	12	4
한국기업데이터	-	-	-	-	-	-
한국산업은행	-	-	-	-	-	-
자산관리공사	35	2	32	2	7	1
한국자산신탁	-	-	-	-	-	-
주택금융공사	31	1	13	-	32	2
코스콤	-	-	-	-	-	-
한국거래소	-	-	-	-	-	-

* 자료출처 : 공공기관 창의경영시스템(<http://www.alio.go.kr>)

1-2-D. 최근 3개년 연도별 금융공기업 직원 복지 기관별 내역

□ 금융공기업 복리후생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06년			'07년			'08년		
	사내 ¹⁾ 복지 기금	주택 ²⁾ 자금	학자금 ³⁾	사내 복지 기금	주택 자금	학자금	사내 복지 기금	주택 자금	학자금
한국산업은행	3,000	650	-	14,500	290	-	14,500	416	-
중소기업은행	25,000	1,407	6,767	30,000	974	7,871	30,000	1,930	8,683
예금보험공사	600	-	64	1,308	-	56	1,508	-	145
자산관리공사	330	445	644	3,697	1,222	679	3,380	910	1,070
주택금융공사	219	770	59	379	905	104	415	983	166
신용보증기금	-	4,513	370	-	2,802	596	-	2,736	1,056
기술보증기금	-	428	282	-	532	272	-	290	322
한국거래소	-	8,061	-	3,600	3,343	-	-	3,912	-
예탁결제원	1,600	400	35	2,500	320	18	-	350	26
산은캐피탈	-	-	-	-	-	-	-	-	-
산은자산	-	-	32	-	60	35	-	-	41
기은캐피탈	-	-	-	-	-	-	-	-	-
기은신용	-	-	-	20	-	-	50	-	-
IBK 시스템	59	-	-	160	-	-	166	-	-
정리금융공사	-	-	37	-	-	13	-	-	39
코스콤	800	798	-	1,000	250	-	2,740	753	-
한국자산신탁	669	230	64	700	520	19	837	730	27
한국기업데이터	-	305	-	-	195	8	-	100	8

1) 사내복지기금 : 기관에서 출연한 연도별 금액

2) 주택자금 : 전체 대출금액

3) 학자금 : 전체 대출금액

* 자료출처 : 공공기관 창의경영시스템(<http://www.alio.go.kr>)

2-1. 황영기는 1999년 삼성생명 전무로 재직중 사유로 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상당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후 삼성투신운용(1999년), 삼성증권(2001년) 사장 등으로 영전하였던바

- 이러한 영전에는 금융기관 임원 선임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징계를 받았더라도 업종이 다르면 관계 없음)이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관련 문서 사본 1부

□ 황영기씨가 「보험업법」에 따라 제재를 받은 것은 1999.12월 이고, 삼성증권 사장으로 옮긴 것은 2001.6월인바

- 당시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문책경고 상당”의 제제는 증권회사 임원의 자격제한 사유가 되지 않았음

□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임원) 및 “면직”(직원)을 받은 경우만 임원 자격제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증권거래법 §33②v)

- 그 이하의 제재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원 자격제한의 효과가 없었기 때문

□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을 금융당국이 ‘유권해석’ 했었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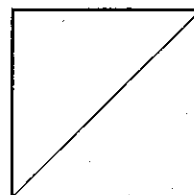
※ 한편, 황영기씨가 삼성투신운용 사장으로 옮긴 것(1999.8월)과 위 제제조치(1999.12월)과의 시기상 전후관계로 볼 때, 당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관해서는 유권해석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보여짐.

2-2. 삼성특검 수사 관련 삼성증권 및 관련 임직원의 징계현황

- 징계결정문 및 징계결정 회의록 사본 1부

☐ 불임 자료 1)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決 年 月 日	2009. 6. 3. (第 10 次)	

삼성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金融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陳 棟 洙
提出年月日	2009. 6. 3.

1. 의결주문

삼성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삼성증권(주)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임직원에게 대하여 문책조치를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붙임>

- 구 증권거래법 제53조(검사)
- 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6(금융위원회의 조치)

나. 관계부서 협의

-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2009. 3. 5.) 심의필
-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별지>

삼성증권(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임원에 대한 조치요구

- [redacted]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 계좌개설신청서의 부당폐기 관련 감독자·지시자

☐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 [redacted] : 감봉3월
 - 계좌개설신청서의 부당폐기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1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redacted]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1월 상당)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REDACTED] : 정직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퇴직
자 위법·부당사항(정직1월 상당)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1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1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REDACTED]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1월 상당)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1월 상당)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1월 상당)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REDACTED]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1월 상당)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1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1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REDACTED]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1월 상당)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REDACTED]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1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REDACTED]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1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정직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REDACTED]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REDACTED] : 감봉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
- [REDACTED] : 감봉1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추종자
- [REDACTED] : 감봉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추종자
- [REDACTED] : 감봉1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추종자
- [REDACTED]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1월 상당)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추종자
- [REDACTED]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1월 상당)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추종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추종자
 - * 혐의거래보고 의무 미이행 관련 행위자
- [REDACTED] : 감봉3월
-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관련 추종자

2. 조치사유

(1) 금융실명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동법 부칙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법 시행 후 최초 거래가 있을 때 실명확인을 해야 하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실명거래의 확인)에 의하면 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의 실명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 [redacted] 은

1993.6.3.~1993.7.20. 기간 중 개설된 [redacted] 명의계좌 등 4개 계좌에 대한 금융실명제 실시(1993.8.12.) 이후 최초 거래 시의 실명확인 과정에서 [redacted] (2005년 사망) 등의 요청을 받고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하였으며,

1993.12.20.~2007.9.20. 기간 중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152개 계좌(총 입금액 : [redacted])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redacted] 명의계좌 등 14개 계좌에 대하여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하였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138개 계좌에 대하여는 계좌명의인 본인 확인 없이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등 16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 은

1998.2.10.~2000.1.6. 기간 중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14개 계좌(총 입금액 : 14억 90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 없이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등 4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 는

2000.3.31.~2002.7.31. 기간 중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24개 계좌(총 입금액 : 54억 46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redacted] 명의계좌 등 4개 계좌에 대하여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하였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20개 계좌에 대하여는 계좌명의인 본인 확인 없이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등 3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은

2003.4.4.~2005.12.22. 기간 중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19개 계좌(총 입금액 : 86억 67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redacted] 명의계좌에 대하여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redacted] 등이 제공한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하였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18개 계좌에 대하여는 계좌명의인 본인 확인 없이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등 3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은

2006.3.2.~2007.1.2. 기간 중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11개 계좌(총 입금액 : 67억 22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 없이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등 4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은

2003.4.15.~2007.10.10. 기간 중 [redacted]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64개 계좌
(총 입금액 : 657억 10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 확인 없이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
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등 4명, [redacted] 등 5명, [redacted]
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고,

- [redacted]의 지시에 따라 [redacted]
[redacted] 등으로부터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을 받은 후
[redacted] 명의계좌는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실명확
인을 하였고, 또 다른 [redacted] 명의계좌에 대하여는 실명확인증
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에
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은

2005.4.28.~2007.4.6. 기간 중 [redacted]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13개 계좌(총 입금액
: 88억 35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redacted] 명의계좌 등 9개
계좌에 대하여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redacted]
등이 제공한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하였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4개 계좌에 대하여는 계좌명의인 본인 확인 없이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redacted] 등 2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은 2004.4.8.~2004.11.19. 기간 중 [redacted]
[redacted]의 지시에 따라 [redacted] 명의계좌 등 35개 계좌를 실명확인
절차 없이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개설해 준 사실이 있음

○ [redacted]는

1993.12.14.~2000.11.28. 기간 중 [redacted]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51개 계좌(총 입금액 : 25억 38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 없이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등 4명, [redacted] 등 3명, [redacted] 등 3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은

1999.4.23.~2001.9.10. 기간 중 [redacted]
[redacted]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11개 계좌(총 입금액 : 14억 5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redacted] 명의계좌 등 2개 계좌에 대하여 [redacted] 등이 제공한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하였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9개 계좌에 대하여는 계좌명의인 본인 확인 없이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등 2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는

1999.8.5.~2006.3.6. 기간 중 [redacted]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38개 계좌(총 입금액 : 135억 47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 없이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등 6명, [redacted] 등 2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는

2006.8.3.~2007.4.5. 기간 중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3개 계좌(총 입금액 : 36억 87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 없이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는

1998.9.15.~2000.2.16. 기간 중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20개 계좌(총 입금액 : 36억 30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 없이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등 5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은

2000.9.4.~2002.3.19. 기간 중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7개 계좌(총 입금액 : 10억 61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 없이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은

2002.5.27.~2003.8.27. 기간 중 [redacted] [redacted]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4개 계좌(총 입금액 : 15억 77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 없이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에게 지시하여 계좌를 개설해 준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은

2004.9.23.~2006.12.1. 기간 중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7개 계좌(총 입금액 : 41억 59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 없이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등 4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은

2004.7.14.~2007.4.6. 기간 중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22개 계좌(총 입금액 : 201억 6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 없이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등 3명, [REDACTED] 등 4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은

1997.4.9.~2001.5.11. 기간 중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22개 계좌(총 입금액 : 12억 40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REDACTED] 명의계좌에 대하여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REDACTED] 등이 제공한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하였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21개 계좌에 대하여는 계좌명의인 본인 확인 없이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등 7

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 은

2001.9.6.~2005.12.19. 기간 중 삼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12개 계좌(총 입금액 :
48억 7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REDACTED] 명의계좌 등 3개
계좌에 대하여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REDACTED]
등이 제공한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하였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9개 계좌에 대하여는 계좌명의인 본인 확인 없이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REDACTED] 등 2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 는

2006.1.3.~2007.1.2. 기간 중 [REDACTED]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12개 계좌(총 입금액
: 52억 76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 없이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 은

2003.4.28.~2005.1.19. 기간 중 [REDACTED]
[REDACTED]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9개 계좌(총 입금액 : 15억
59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REDACTED] 명의계좌에 대하여 계좌
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REDACTED] 등이 제공한 실명확
인증표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하였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8개
계좌에 대하여는 계좌명의인 본인 확인 없이 실명확인증표 사본

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등 3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 은

2005.3.15.~2007.4.6. 기간 중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15개 계좌(총 입금액 : 96억 6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 없이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등 3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 은

2001.9.6.~2002.10.17. 기간 중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4개 계좌(총 입금액 : 4억 50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준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 은

1998.8.19.~2001.9.14. 기간 중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22개 계좌(총 입금액 : 21억 31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REDACTED] 명의계좌에 대하여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하였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21개 계좌에 대하여는 계좌명의인 본인 확인 없이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REDACTED] 등 7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은

2004.8.25.~2006.12.22. 기간 중 [REDACTED]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15개 계좌(총
입금액 : 130억 46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REDACTED] 명의계좌
등 11개 계좌에 대하여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실
명확인을 하였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4개 계좌에 대하여는 계
좌명의인 본인 확인 없이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
해 주도록 [REDACTED]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은

2001.4.30.~2006.11.17. 기간 중 [REDACTED]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21개 계좌(총
입금액 : 50억 75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REDACTED] 명의계좌에
대하여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REDACTED] 등이 제공
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하였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20개 계좌에 대하여는 계좌명의인 본인 확
인 없이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REDACTED] 등 5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은

2007.4.6.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2개 계좌(총 입금액 : 15억 60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 없이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는

2001.2.12.~2001.7.25. 기간 중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16개 계좌(총 입금액 : 17억 65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 없이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고,

- [REDACTED]은 [REDACTED]의 지시에 따라 [REDACTED] 등으로부터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을 받은 후 [REDACTED] 명의계좌 등 13개 계좌는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하였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3개 계좌에 대하여는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개설해 주도록 [REDACTED]등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은

2001.9.5.~2003.9.22. 기간 중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12개 계좌(총 입금액 : 23억 21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 없이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고,

- [REDACTED]은 [REDACTED]의 지시에 따라 [REDACTED]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 은

2005.12.14.~2007.2.22. 기간 중 [redacted]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11개 계좌(총
입금액 : 103억 39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redacted] 명의계좌
등 4개 계좌에 대하여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 없이 [redacted]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실명확인
을 하였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7개 계좌에 대하여는 계좌명의인
본인 확인 없이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등 3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 은

1998.3.9.~2003.9.22. 기간 중 [redacted] 등
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21개 계좌(총 입금액 : 24
억 66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
인 없이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
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등 3명, [redacted]
[redacted], [redacted]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고,

- [redacted] 은 [redacted]의 지시에 따라 [redacted]
[redacted] 등으로부터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을
받은 후 [redacted] 명의계좌 등 9개 계좌에 대하여 계좌명의인 본
인 확인 없이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redacted] 등 3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고,

- [redacted] 는 [redacted]의 지시에 따라 [redacted]
[redacted]를 방문하여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을 받은 후 [redacted] 명의
계좌는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하였고,

■■■■ 명의를계좌 등 4개 계좌에 대하여는 계좌명의인 본인 확인 없이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개설해 주도록 같은 지점 직원 ■■■■ 등 2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 은

2003.5.13.~2006.12.22. 기간 중 ■■■■ 등의 요청을 받고 ■■■■ 명의계좌 등 20개 계좌(총 입금액 : 93억 88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 없이 ■■■■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 등 4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 은

2003.9.23.~2005.12.29. 기간 중 ■■■■ 등의 요청을 받고 ■■■■ 명의계좌 등 6개 계좌(총 입금액 : 57억 58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 명의계좌에 대하여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하였고, ■■■■ 명의계좌 등 5개 계좌에 대하여는 계좌명의인 본인 확인 없이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 ■■■■ 등 2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 은

2006.8.3. 및 2006.11.16. ■■■■의 요청을 받고 ■■■■ 명의계좌와 ■■■■ 명의계좌(총 입금액 : 6억 9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 명의계좌에 대하여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하였고, ■■■■ 명의계좌에 대

하여는 계좌명의인 본인 확인 없이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은

1999.7.13.~2003.9.22. 기간 중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12개 계좌(총 입금액 : 17억 80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 없이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등 6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은

2001.9.6.~2004.8.23. 기간 중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5개 계좌(총 입금액 : 7억 83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REDACTED] 명의계좌 등 2개 계좌에 대하여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하였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3개 계좌에 대하여는 계좌명의인 본인 확인 없이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등 2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은

2006.3.3.~2006.12.7. 기간 중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5개 계좌(총 입금액 : 15억 16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 없이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등 2명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redacted]는

2003.6.25.~2006.12.7. 기간 중 [redacted]
[redacted] 등의 요청을 받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12개 계좌(총
입금액 : 88억 67백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 없이 [redacted] 등이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
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redacted]
[redacted]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고,

- [redacted]은 [redacted]의 지시에 따라 [redacted]를 방
문하여 [redacted]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redacted] 명의계좌 등 7개 계좌를 실명확인 절차 없이 개설해 준
사실이 있고,

- [redacted]은 [redacted]의 지시에 따라 [redacted]을 방문
하여 [redacted] 등으로부터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을 받은 후 [redacted]
명의계좌 등 3개 계좌는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하였고, [redacted] 명의계좌 등 2개 계좌는 실명확인증표 사본만
으로 개설해 주도록 [redacted]에게 지시한 사실
이 있으며,

○ [redacted]은

2000.2.11. 및 2000.2.16. [redacted]의 요청을
받고 [redacted]명의계좌 및 [redacted] 명의계좌(총 입금액 : 1억 80백
만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 없이

■가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 등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 ■는

2006.6.23. ■의 요청을 받고 ■ 명의계좌(입금액 : 2억원)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 제공한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 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 제1항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2) 계좌개설신청서의 부당폐기

□ 구 「증권거래법」 제54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투기거래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4-1조(목적 등) 제1항에 의하면 이 편(제4편 영업행위준칙)의 규정은 증권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법 제54조 등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4-46조(기록보관) 제1항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별표18>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3년 이상(계약서 등 권리·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무 및 사실관계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 삼성증권(주)는 2007.11월~12월 기간 중 권리·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기록물인 계좌개설신청서 43만개를 고객과의 거래가 지속되고 있어 권리·의무가 종료되지 않고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폐기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 구 「증권거래법」 제54조
2.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4-1조 제1항
3.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4-46조 제1항

<붙임1>

협의를거래보고의무 미이행 사항

1. 지적내용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금융기관 등의 협의거래보고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금액)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거래금액이 2천만원(2004.1.20. 이전에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삼성증권(주) [redacted] 등 직원 31명은

계좌명의인이 아닌 [redacted] 등의 요청에 의해 입출금, 매매주문 등을 수행하면서

고액의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서로 다른 여러 계좌에서 일시에 합산 인출한 현금 등을 [redacted] 을 방문하여 전달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를 부탁받는 등

2001년~2007년 기간중 [redacted] 명의계좌 등 613개 계좌에서 2,799회 (총 거래금액 : 6,482억원)에 걸쳐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단위 : 개, 회, 억원)

영업점	행위자	기 간	계좌수	횟수	거래금액
■■■■■	■■■■■	2001.12. 4.~2007.12.24	139	668	1,701
■■■■■	■■■■■	2002. 2.16.~2002.12. 3.	5	10	19
■■■■■	■■■■■	2004. 6.15.~2006. 3. 3.	18	59	187
■■■■■	■■■■■	2006. 3. 2.~2007.10. 5.	11	33	106

영업점	행위자	기 간	계좌수	횟수	거래금액
■■■■■	■■■■■	2003. 4.15.~2005. 1. 7.	43	79	500
■■■■■	■■■■■	2005. 1.19.~2007.11.30.	32	135	514
■■■	■■■■■	2001.12. 5.~2003. 4.15.	29	121	254
■■■■■	■■■■■	2001.12.19.~2006. 6.29.	55	183	336
■■■	■■■■■	2006. 8. 3.~2007.10. 5.	19	86	164
■■■■■	■■■■■	2001.12.28.~2002. 5.15.	16	27	35
■■■■■	■■■■■	2002. 5.27.~2003. 9.23.	20	41	62
■■■■■	■■■■■	2004.11.24.~2007.10. 4.	28	66	82
■■■■■	■■■■■	2004. 7. 8.~2007. 6.15.	28	80	71
■■■■■	■■■■■	2002. 3.19.~2006. 1. 4.	11	26	109
■■■■■	■■■■■	2006. 8.29.~2006.12.27.	2	4	2
■■■■■	■■■■■	2003. 2.17.~2005. 2. 2.	42	109	160
■■■■■	■■■■■	2005. 3.10.~2007.11.30.	43	125	317
■■■■■	■■■■■	2001.11.28.~2003. 1.24.	26	95	146
■■■	■■■■■	2001.12.24.~2003. 1.29.	14	31	42
■■■	■■■■■	2004. 8.30.~2007.10. 8.	9	40	92
■■■■■	■■■■■	2001.12.10.~2006.12.13.	30	112	178
■■■	■■■■■	2001.12. 6.~2004.12.16.	27	87	217
■■■■■	■■■■■	2001.11.28.~2004.12.17.	33	126	141
■■■■■	■■■■■	2005. 3. 3.~2007.10. 5.	29	96	202
■■■	■■■■■	2002. 9.23.~2007. 2.15.	38	142	413
■■■■■	■■■■■	2002.12.20.~2005.12.26.	18	45	61
■■■	■■■■■	2006. 4. 5.~2007.10. 5.	12	17	35
■■■■■	■■■■■	2001.11.29.~2004. 6.14.	34	124	228
■■■■■	■■■■■	2006. 3. 3.~2006.12.22.	5	13	83
■■■	■■■■■	2002. 6. 4.~2003. 9.22.	5	13	16
■■■	■■■■■	2003. 6.25.~2004. 7.15.	6	6	11
■■■	■■■■■	2001.11.28.~2007.12.24.	613*	2,799	6,482

* 계좌수의 단순합계는 827개이나, 214개 계좌는 여타 행위자의 계좌와 중복

2. 조치내용

- 혐의거래보고의무 위반자 31명의 위반행위는 실명확인의를무를 위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혐의거래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양정은 '견책', 실명확인의를무 위반에 대한 조치 양정은 '정직' 또는 '감봉'에 해당되나, 두 개의 위반행위가 동일 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조치의 가중 없이 더 중한 '정직' 또는 '감봉'으로 조치함(「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9조 제2항)

<붙임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부칙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① 금융기관은 종전의
긴급명령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
자산"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전까지 실명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실명거래의 확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실지명의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로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

나.~다. (생략)

2.~5. (생략)

【구 증권거래법】

제53조(검사) ①~④ (생략)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의견서를 심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회사가 그 업무집행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임원의 해임요구, 직원의 면직요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⑥~⑦ (생략)

제54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투기거래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
2. 고객예탁금 및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증권회사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4. 증권회사의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
5.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증권업을 영위함에 있어 감독에 필요한 신고·보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6 (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53조제5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기타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3.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경고 또는 주의요구
4. 직원의 정직·감봉·주의·경고 또는 주의요구
5. 경영 또는 업무방법의 개선요구 또는 권고
6. 변상 또는 시정요구
7. 법 위반으로 인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8. 각서징구
9. 법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10.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11. 기타 금융위원회가 법 및 영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4-1조(목적 등) ① 이 편의 규정은 증권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영업 행위를 함에 있어 법 제52조·제54조, 제54조의4, 영 제35조의11·제36조의3·제37조·제37조의4 및 법시행규칙 제14조·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생략)

제4-46(기록보관) ① 증권회사는 <별표18>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3년이상(계약서등 권리·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무 및 사실관계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규정등에서 보관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증권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할 기록이 사후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사시 3영업일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생략)

<별표18> 기록유지보관사항

1. 영업에 관한 사항

- ① 고객의 일반정보(제4-15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기록
 - 고객이 다수의 계좌, 유가증권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기록으로 대체가능
- ② 고객의 주문기록(주문일로부터 1년간 보관)
 - 고객별 유가증권거래 및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주문정보(종목, 주문호가, 시기, 호가종류, 주문접수자 등)
- ③ 고객의 예탁재산 출납기록
 - 고객별 예탁재산 종류별로 입출고(금), 출납기록, 시기
- ④ 고객예탁재산 보관기록 (생략)
- ⑤ 고객의 매매거래 기록 (생략)
- ⑥ 광고에 관한 사항 (생략)
- ⑦ 약관을 포함한 대고객 제공 문서(서신, 안내문, 투자권유문서 등을 포함) (생략)
- ⑧ 조사분석자료등에 관한 기록 (생략)
- ⑨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관련 (생략)

2. 재무활동에 관한 사항 (생략)

3. 내부통제활동등에 관한 사항 (생략)

4. 기 타 (생략)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

제5조(제제대상 위법·부당행위)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제의 대상으로 한다.

- 1.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2.~7. (생략)

(붙임2)

제10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9. 6. 3.)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9년 6월 3일(수) 14:30~16:15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창 용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임 승 태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09년도 제9차 금융위 회의록 보고

☐ 2009년도 제9차 금융위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안 제121호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 임명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122호 「실무금융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예산배
정안」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
명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123호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
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124호 「000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125호 「000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저축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08년 1월 도입된 과징금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126호 「000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
치안」부터 제132호 「000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
치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
원 금융투자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동 건은 000과 관련하여 1993년부터 000차원에서 실명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위법행위를 주도한 임원들은 사법처리가 되
었고 000증권 등 기관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등 제재를 부과한
다는 점, 대부분의 조치 대상자들이 조직내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실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치로 향후 3년간(정칙은
4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 신분상 제재에 대한 제척기간이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과태료의 제척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경과기간 종료 후 5년을 기
준으로 조치내용을 구분하는데 의견이 모아짐

⇒ 각각 수정 의결함*

- * '정직3월 및 정직3월 상당'에 해당하는 행위자와 '감봉3월 및 감봉3월 상당'에 해당하는 추종자 중 실명확인 의무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행위자는 '정직1월 및 정직1월 상당'으로, 추종자는 '감봉1월 및 감봉1월 상당'으로 수정의결

□ 의안 제133호 「000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34호 「000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서비스국장 및 자산운용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불완전판매에 대해 누구보다 책임이 있는 000 및 000에게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3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1항의 조치감경규정을 적용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 각각 수정 의결함*

- * 000에 대한 조치 요구를 '감봉3개월 상당'→'정직3개월 상당'으로, 000에 대한 조치 요구를 '감봉1개월'→'감봉3개월'로 수정 의결

□ 의안 제135호 「000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136호 「(가칭)맥쿼리삼천리자산운용(주)의 금융투

자업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후 회사의 경영권은 어느쪽에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인가일로부터 5년간은 맥쿼리측에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이후 서로에게 부여된 지분매수권 행사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137호 『000(주)의 000위반 관련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증선위에서 보류되었던 관련 보고안전과 함께 추후 회의시 병합 심의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짐

⇒ 보류함

3) 보고안전 심의

- 보고안전 제55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공자위의 민간위원 중 금융전문가에 관한 자격요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수정 접수함*

- * 공자위의 민간위원 중 금융전문가에 관한 자격요건을 보다 명확히하는 것으로 수정 접수

□ 보고안건 제56호 『2009년도 1/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 결과 보고』를 서면 보고함

⇒ 원안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09년도 금융위원회 제10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3-1. 우리나라 주요 일정별 자본시장 개방정책 현황 (시기별 자본시장 개방정책 일정 및 내용)

< 자본시장 대외개방 >

- ☐ '81.1월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 당시 간접투자로 제한
- ☐ '88년 이후 직접투자 및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진출 허용 등 점진적 개방

< 주식투자 >

- ☐ '92.1월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 ☐ '98.5월 외국인 투자한도 폐지(공공적 법인 제외)
- ☐ '98.7월 비상장주식 투자 자유화

< 증권산업 >

- ☐ '81.1월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 '84.7월 국내증권회사의 해외사무소 및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사무소 설립 허용
- ☐ '91.7월 해외사무소 및 국내사무소의 영업점으로 전환 허용
- ☐ '91.1월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외국증권업자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 허용

4.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내용
- 시중은행 통폐합 등 시기별 정책내용

☐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구조조정 추진 실적을 첨부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은행 구조조정 추진 실적

은행 구조조정 추진 실적

가. 제1단계 은행구조조정

◇ 기본 방향 ◇

- ◇ '97년말 기준 BIS비율 8% 미달 은행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
 - 회생가능한 은행은 철저한 자구노력 및 손실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정상화 추진
 - 회생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정상화 소요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은 합병,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리
- ◇ 서울·제일은행은 매각주관사를 선정하여 민영화 추진

'97년말 기준 BIS비율 8%미달 은행(12개은행)

- '97년말 BIS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은행*에 대해 경영 정상화계획을 징구한 후

* 경영개선권고(BIS 6~8%) : 조흥, 상업, 한일, 외환, 충청, 경기

* 경영개선요구(BIS 6%미달) : 동화, 동남, 대동, 평화, 강원, 충북

- 국내외 민간전문가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 정부는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건의를 토대로 은행별 경영정상화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98.6.29)

□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된 동화 등 5개 은행은 우량 은행에 계약이전방식으로 정리

* 동화→신한, 동남→주택, 대동→국민, 경기→한미, 충청→하나

○ 5개 인수은행에 대하여 정리은행의 순자산부족분에 대하여는 예보에서 출연 등의 방식으로 11.0조원 지원

□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조흥 등 7개 조건부승인 은행에 대해서는 합병, 외자유치 등을 통해 정상화 추진

○ 상업·한일은행은 자율합병후 예보에서 3.3조원 출자

○ 조흥은행은 강원은행(자율합병) 및 충북은행(합병명령)과의 합병후 예보에서 2.7조원 출자

1.1.1.1.1.1. ○ 외환은행은 외자유치를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

○ 평화은행은 예보가 2,200억원을 출자하여 정상화 추진

'97년말 기준 BIS비율 8%초과 은행(13개은행)

□ '97년말 기준 BIS비율이 8%를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경영진단 및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 제주은행은 경영개선 요구('98.4.24), 부산·경남·장기신용은행은 경영개선 권고('98.10.16)

□ 하나·보람은행 및 국민·장기신용은행은 자율합병

해외매각 추진 은행(제일·서울은행)

□ 부실급증 및 유동성 위기에 처한 제일·서울은행에 대해서는

○ IMF와 합의('98.1)하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해외매각 추진

* '98.1월 제일·서울은행에 각각 1.5조원 출자

○ 제일·서울은행의 매각을 위하여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양 은행에 대한 원매자를 물색

□ 제일은행은 Newbridge와 양해각서(MOU) 체결('98.12.31) 후 예보가 매각협상을 진행하여 매각 완료('99.12.23)

○ 협상과정에서 영업력 유지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후 BIS비율 10% 수준을 유지하도록 예보 등에서 증자(4.2조원), 부실채권 매입(0.9조원) 등 5.1조원 지원('99.6)

□ 서울은행은 도이치은행과 구조개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구조개선작업을 추진('00.4.14)

○ '99.2월 홍콩상하이 은행(HSBC)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각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당초 MOU 약속이행이 어렵게 된 HSBC의 협상종료 요청으로 협상 종료('99.8.31)

○ 동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후 BIS비율 10%수준을 유지하도록 예보 등에서 증자(3.3조원), 부실채권매입(1.2조원) 등 4.5조원 지원('99.9)

나. 제2단계 은행구조조정

◇ 기본 방향 ◇

- ◇ 잠재부실요인 조기정리를 통한 건전성 회복과 은행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
- ◇ 잠재손실 반영시 BIS비율 8% 미달은행 및 공적자금 투입 은행들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정상화를 추진
 -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은행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에 따라 정상화 추진
 - 그렇지 못한 은행들에 대하여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 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방식 등을 통하여 정상화 추진
- ◇ 우량은행의 경우는 합병 등 구조조정 추진시 자본확충, 부실채권 정리 및 자회사 설립 인허가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구조조정 촉진 유도

경영평가 대상은행(6개은행)

- 잠재손실 전액반영시 '00.6말 기준 BIS비율이 8%에 미달하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6개은행(한빛, 조흥, 외환, 평화, 광주, 제주)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00.9.30)
 - * 서울은행은 도이치은행과 자문계약을 체결 별도의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점을 감안, 경영개선계획 제출 대상은행에서 제외하되 향후 제출은행들과 함께 구조조정 추진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동 계획의 적정성 및 은행의 독자생존 가능 여부를 평가('00.10)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조흥·외환은행은 승인, 한빛·평화·광주·제주는 불승인 조치('00.11.8)

1.1.1.1.1.2.

- 1.1.1.1.1.3. □ 한빛 등 4개 불승인은행과 추가적으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남은행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 경영합리화 계획 등이 포함된 수정 경영개선계획을 승인('00.12.18)

* 우리금융지주회사(한빛, 평화, 경남, 광주), 신한금융지주회사(제주)

-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한빛, 평화, 경남, 광주, 제주, 서울은행에 대하여 완전감자후 예보에서 출자 및 출연

- '02.4.9 조흥, 한빛, 외환, 경남, 광주은행에 대하여 적기 시정조치를 해제

-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후 경영개선요구 조치 해제('02.6.14)

* 서울은행은 이행기간이 '02년말 완료 예정, 평화은행은 한빛은행과 합병('01.12)

금융지주회사 설립

-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를 편입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기능재편을 통해 국제 경쟁력 제고 추진

- 잠재부실 반영시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은행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안 발표('00.7)

- 한빛·평화·광주·경남은행, 하나로종금의 5개 자회사 및 한빛증권 등 9개 손자회사로 구성된 **우리금융지주회사 설립**('01.3.27)
- 평화은행은 은행업을 한빛은행으로 분할합병한 후 우리신용카드로 전환('01.12.31)하고 한빛은행 신용카드부문을 양수('02.1.31)
- 우리금융지주 및 광주·경남은행은 IT·신용카드의 통합 등 은행부문 기능재편 원칙에 합의('02.6.29)하고 기능재편 추진중

□ 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설립('01.8.31)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주은행을 동 지주회사에 편입('02.5.10)

우량은행 등의 합병

□ 우량은행간 자율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

-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01.11.1),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합병('02.12.1),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합병('06.4.1)

<은행구조조정 추진실적>

금융권별	'97년말 총기관수 (A)	구 조 조 정 현 황					신설등	현재 기관수
		인가취소	합병	해산·파산, 영업이전 등	계 (B)	비중 (B/A)		
은행	33	5	11 ¹⁾	-	16	48.5	1	18 ²⁾

주 1) 하나[(하나+보람)+서울], 조흥(조흥+충북+강원), 농협(농협+축협), 우리[한빛(상업+한일)+평화], 신설 국민[국민(국민+장기신용)+주택], 신한(신한+조흥)

2) 우리금융지주회사 편입 3개은행(우리,경남,광주) 신한금융지주회사 편입 3개은행(신한,제주,조흥) 감안시 15개

4-2)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현황

□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2008. 8

금 융 위 원 회

目 次

I. 금융중심지추진 정책의 필요성 및 현황

II. 금융중심지정책 추진 방향 및 기본과제

III. 주요 분야별 추진 과제

1.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 제고

2. 금융인프라 선진화

3. 자산운용시장 육성

4. 금융회사등의 집적 여건 조성

1. 우리나라 금융 현황

□ 지난 10년간 우리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가 심화

- 주식시장의 경우 거래 및 자금조달 규모 등 측면에서 세계 10위권 수준

국내 주식시장 규모비교('07년)

	시가총액	거래대금	상장기업수	조달금액
규모 (세계순위)	1.1조달러 (14)	2조달러 (9)	1,757개 (9)	169억달러 (10)

- 채권시장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육성노력에 힘입어 발행규모 증대 및 시장구조의 고도화*가 진행

* 10년 이상 장기국채 발행비중: '03. 23.5% → '06. 34.3% → '07. 38.3%

채권발행규모 추이

단위 : 조원

	'98말	'00말	'02말	'04말	'06말	'07말
전체채권	406	468	600	711	942	982 (2.4)
국채	61	72	99	178	258	274 (4.5)
통안증권	51	67	83	143	158	150 (2.9)
회사채	123	145	156	133	158	190 (1.5)
은행채	44	49	83	112	169	210 (4.8)
기타 ¹⁾	127	135	179	145	199	158 (1.2)

주: 1) 특수채, 지방채 등 2) ()내는 '98년 대비 '07년 발행 잔액 비율임

- 외환시장은 거래규모와 상품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변동성이 감소하는 등 시장의 심도가 제고되었으며 파생상품시장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거래규모를 기록하는 등 괄목하게 성장

* 외환시장 일평균 거래규모: ('98) 40억달러 → ('07) 465억달러, 11.6배

** 파생상품시장: 주가지수 옵션 세계 1위, 주가지수 선물 세계 8위 (장내거래 기준)

□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도 빠르게 개선

- 은행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양적인 성장('99말 대비 총자산 113%증가)과 재무구조의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짐

* 은행 ROA : (FY07) 1.10% [미국 0.92%, 일본 0.58%, 영국 0.75%]

** 은행 BIS비율 : (FY07) 12.28% [미국 12.23%, 영국 12.05%]

- 증권 및 자산운용업은 주식시장의 활황 및 투자저변 확대 등에 힘입어 제반 재무 지표가 개선

* 증권사 ROE: (FY01) 5.41 → (FY07) 15.40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FY01) 208.4 → (FY07) 550.8

** 자산운용사 ROA: (FY03) 10.1 → (FY07) 37.5

- 보험업도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꾸준히 실적 및 건전성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손보사 ROA: (FY02) 0.95 → (FY07) 2.65

국내 보험산업의 건전성 추이

단위 : %

	생보산업			손보산업		
	'03.3말	'05.3말	'08.3말	'03.3말	'05.3말	'08.3말
지급여력비율	226	230	240	234	290	288
부실자산비율	16.6	5.0	2.7 ¹⁾	9.6	8.1	4.9 ¹⁾

주: 1) '07말 기준

2. 금융중심지 추진 필요성

◆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첨단화와 더불어 서비스업(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필요

- 금융중심지(금융허브) 구축은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생산성 제고에 기여

(1) 금융산업의 성장동력화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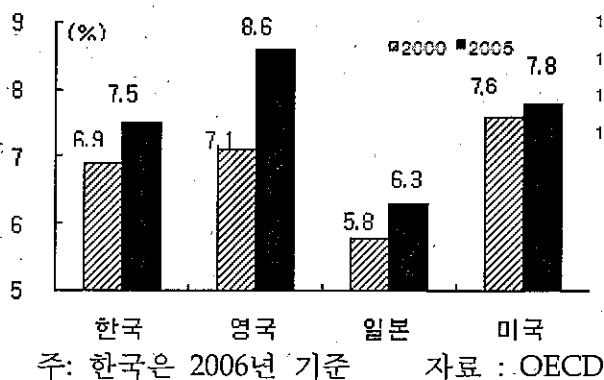
□ 우리나라 금융업의 성장기여 여력 충분

- 우리나라는 금융업 부가가치*/GDP비중('00년 6.9%→'06년 7.5%)과 GDP 성장 기여율('00~'05년 평균 8.2%)이 상승 추세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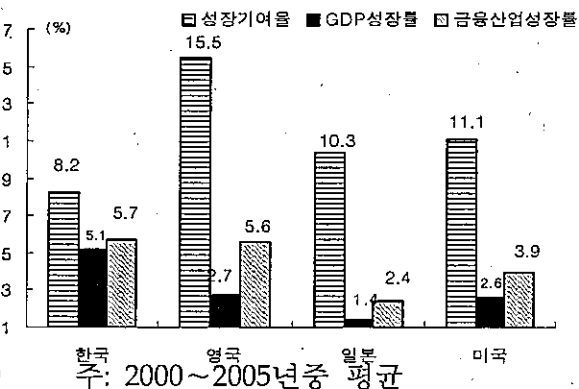
* 피용자보수+고정자산소모+순기타생산세+영업잉여

- 영국('05년 GDP비중 8.6%, '00~'05년 성장기여율 15.5%), 미국(GDP비중 7.8%, '00~'05년 성장기여율 11.1%)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아 경제가 발전할수록 금융업의 성장기여 여력이 충분

금융산업 부가가치의 GDP대비 비중



금융산업의 GDP성장 기여율



□ 고용창출에 기여

- 금융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06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

* 총취업자중 금융업 비중: '97. 3.7%→'05. 3.26%→ '06. 3.40%→ '07. 3.45%(미국 4.47%('07년), 영국 4.02%('05년), 일본 2.43%('06년))

- 금융산업은 임금수준이 여타 산업에 비해 높아 고급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음

※ 영국은 '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도입 이후 금융시장과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런던지역의 금융부문 종사자가 '99년 29만명에서 '06년 34만명으로 17% 증가

영국의 금융서비스부문 고용현황

단위: 천명

	'99	'01	'03	'04	'05	'06
영국	1,075	1,064	1,085	1,079	1,064	1,071
런던	294	311	311	316	325	338

□ 고부가가치 창출

- 금융산업 부가가치율(부가가치액/총투입액)은 여타 산업보다 높은 수준이며 '00년 65.7%→ '06년 71.1%로 부가가치율 상승

산업별 부가가치율 추이

단위: %

	한국		일본 (05)	영국 (05)	미국 (05)
	(00)	(06)			
제조업	24.4	22.1	34.2	35.5	34.9
서비스업	58.2	57.2	68.2	54.6	60.5
금융업	65.7	71.1	76.3	51.0	56.7
전 산업	40.5	38.5	55.0	49.6	54.4

자료 : OECD

(2)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금융중심지 추진 필요성

- 금융중심지가 구축되면 국내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의 생산성이 제고되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자본, 금융기관, 인력, 정보의 집적 또는 밀집(clustering)에 따른 경쟁의 증대와 함께 생산요소의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의 감소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촉진

3. 금융중심지 추진 정책의 경과 및 평가

- ◆ 우리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① 우리의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혁하고, ② 글로벌플레이어들의 국내진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

- 이와 같은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금융중심지(금융허브)」는 효과적인 정책 아젠다이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음

* 「금융중심지(금융허브)」라는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법·제도 등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에 맞게 전면적으로 혁신

- 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중심지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

- ① '03년 12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 1단계 전략('04~'07년)에 따라 금융허브 기반 구축 추진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09.2월 시행), 외환자유화('09년 조기완료), 금융전문대학원 설립('06.3), 한국투자공사 출범('05.7) 등 추진

* 1단계(~'07): 금융허브 기반 구축

2단계('08~'10): 특화금융허브 완성(자산운용 등 선도금융시장)

3단계('11~'15): 홍콩·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

- ②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라는 정책 기조 정립하에 추진전략을 설정

②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도 있었으나 개선·보완의 여지도 있음

① 규제완화에 대한 시장의 체감도 부진

- * KDI 설문조사('07.2) 결과, 금융허브달성 가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경직적 규제 감독 시스템」(43%)을 지적

②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의 상당부분은 제도적인 과제로서 실제 이행에 옮기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

- * 자본시장 발전, 금융업의 성장,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입 등의 가시적인 성과는 상당한 시일을 요함.

③ 금융의 국제화·증권화를 이끌 수 있는 전문인력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

④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은 적극 추진되고 있는 반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미흡

- * 최근 일부 금융회사들이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진출지역이 제한적이고 국제화를 추진하는 체계나 전문성이 부족

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으로 자본시장관련 규제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은행 및 보험사 관련 규제의 개선은 미흡

⑥ 금융중심지 정책의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 동력이 미약

⇒ 최근, 금융허브정책의 기본법인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08.3)

4. 우리나라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

①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열세) 시가총액, 자산운용수탁고 등에 있어 허브경쟁국인 홍콩과 싱가포르의 50% 미만 수준에 불과

* 시가총액('07.12, 단위:억불): (한국) 11,226 (홍콩) 26,544 (싱가포르) 5,392
자산운용수탁고('07, 단위:억불): (한국) 3,300 (홍콩) 8,184 (싱가포르, '06) 5,810

○ 금융연관비율*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

* 금융자산잔액/명목GNI('07.말): (한국) 8.88% (미국) 10.25% (일본) 11.92%

○ 우리나라 금융개방도*는 2006년말 124%로 미국(198%), 영국(760%), 일본(451%) 등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금융개방도 = 자본유출입 잔액/명목GDP

② (영세한 규모)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부문에서 글로벌 선진 금융회사와 비교시 아직 영세한 수준

* 총자산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현황

- 4대 은행: 미국의 13% 내외
- 5대 증권사: 미국 5대 투자은행의 1.3%

○ 각 업권별로 수익구조도 전통적인 이자수익(은행, 81%), 위탁매매수수료(증권, 68%) 등에 과다 의존하고 국내(97%)에 편중

* 국내은행 해외자산 비중: ('07) 3.1%

- 반면, UBS(스) 90%, Deutsche Bank(독) 79%, Citi(미) 43%

③ (경쟁력) 금감위·금감원의 「세계 10대 금융강국」 조사('07.10)에 따르면 우리의 금융경쟁력은 OECD 30개국 중 18위에 해당

* 세계 10대 금융강국(OECD기준): 미국,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호주,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 우리의 경우 금융시장 규모*(9위)나, 성숙도**(11위)는 상위권이나

* 은행산업 · 자본시장 · 보험산업 규모

** GDP중 금융산업비중, 금융연관비율, GDP 대비 시가총액비중

-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감독역량*(21위), 금융산업의 국제화**(25위) 측면에서는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 세계적인 금융강국의 조기진입을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 금융서비스 개선 및 금융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

* 화폐가치 안정성, 금융자유 및 투명성, 책임성 지수, 금융전문인력

** TNI(TransNationality Index), 금융개방도, 글로벌 100대금융회사 수

※ $TNI = [(해외자산/총자산) + (해외수익/총수익) + (해외인력/총인력)] \times 100/3$

- (금융회사 및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2008년 스위스 IMD('08.5.15일 발표)의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중 국내금융부문에서 우리나라는 31위('07년)에서 40위로 하락

④ (금융허브 경쟁력) 마스터카드가 투자환경(규제·삶의 질), 입지여건, 금융규모 등을 평가한 도시경쟁력 순위(08.6)에서 서울은 홍콩, 싱가포르 등에 이어 2년 연속 9위(50개 도시)로 평가

- 반면, '08. 3월 영국 「City of London」 이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를 발표하였는바, 전세계 59개 조사대상 도시 중 서울을 51위로 평가

* 전세계 금융기관 경영자 대상 설문조사와 다른 기관이 발표한 지수(노동생산성, MBA 랭킹, 삶의 질, 규제, 세율, 임대료 등)를 통해 산출

II

금융중심지정책 추진 방향 및 기본과제

1. 정책 비전, 목표 및 전략

비 전	국민소득 4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금융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목 표	<2010년> 자산운용의 규모 확충 및 국제화, 글로벌플레이어의 출현 및 국내금융시장 진입 여건 개선		⇒	<2015년> 자산운용시장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 금융중심지 조성
전 략	혁신	인프라	개방	특화
	기존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	인력양성, 금융클러스터 조성 등 금융 산업발전 기반 구축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해외 진출 촉진, 외국금융회사 국내 진입 유도	비교우위산업인 자산운용산업 육성에 특화
원 칙	시장·민간 주도 (규제 개혁)		네트워크 강화 (중앙-지방, 관계부처간, 해외)	기반시설 마련 (금융클러스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추진과제	①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 제고 ○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감독 서비스 구축 ○ 금융산업 제도 개선 ○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② 금융인프라 선진화 ○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 외환시장의 제도 개선 ○ 금융전문인력 양성	
	③ 자산운용시장 육성 ○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 자본시장의 국제화 ○ 채권시장 고도화 ○ 지역특화금융수요개발		④ 금융회사 집적 여건 조성 ○ 금융회사 등 집적 및 외국회사의 국내 진입 지원 ○ 경영 환경 개선 ○ 영어 사용환경 조성	

2. 금융중심지정책의 목표 설정

(1)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로의 발전 여건 및 전략

- 우리나라의 환경은 금융중심지 발전에 유리한 여건은 아님
 - 우리나라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지 않고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은 등 금융인력 및 자금 등의 집적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 또한 대륙법계국가로서 "규정중심"의 금융감독체계를 갖고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감독이 어려운 측면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특화된 전략을 택한다면 금융중심지 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전략적 선도 분야를 선정·발전시킴으로써 선도 금융시장이 타 금융시장 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금융중심지가 조성되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

* 아일랜드 더블린의 경우 국제금융센터 입주기업의 1/4이 보험자 산운용업의 발전으로 "보험업"도 발전

(2) 자산 운용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

- 우리나라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특화 금융중심지를 조성
 - 국내 금융산업 특성의 측면
 - 연기금 및 외환보유고 등 풍부한 자산운용 수요, 상대적으로 실물경제 기반이 강한 점을 적극 활용

-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잠재력에 비해 자산운용업의 발전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는 점도 고려 요인

○ 자산운용업의 특성 측면

- 자산운용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스템리스크가 적어 규제완화 등에 따른 부작용이 적음
- 외국자산운용사의 국내진입에 대한 저항감도 작음

○ 선도산업으로서 갖춰야 할 파급효과 측면

- 자산운용업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등 전체 금융산업 발전을 선도
- 여타 금융업종에 비해 시설투자 부담이 적고 이동성(mobility)이 높아 외국기관 유치도 상대적으로 용이
-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자산운용업의 기반이 강화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 조성

□ 나라마다 전반적인 여건은 다르므로 여건이 유사한 나라들 중 우리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점을 벤치마킹해나갈 필요

- 호주는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규모 및 자산운용 규모(퇴직연금 등)가 크고 인접국가를 잇는 지정학적 위치 등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
- 룩셈부르크는 법인세·소득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반면 자유로운 외환거래 등으로 자산운용중심지를 조성
- 아일랜드는 자산운용업의 back office에 특화하는 전략 사용

3. 추진 과제

[1]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 제고

- ◇ 금융업종사자는 금융중심지 달성 가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경직적 규제 감독 시스템」(43%)을 지적('07.2월 KDI 설문조사)
- ◇ 금융중심지 구현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도 중요

□ 우리 경제력을 토대로 금융산업 규모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금융 혁신 지속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감독 체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토대를 마련
- 소유구조, 업무범위 등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로 금융 글로벌플레이어(Global Player) 출현의 기반 조성

[2] 금융인프라 선진화

- ◇ 금융전문인력 수준이 질적으로 미흡하며 금융의 점업화·전문화 시대에 따라 금융전문인력이 추가로 부족할 가능성
- ◇ 금융활동의 기초가 되는 외환제도·자본시장 제도 개선 필요

□ 자본시장 인프라, 외환제도 개혁, 금융전문인력양성 등 금융산업 발전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를 국제수준으로 향상

[3] 자산운용시장 육성

◇ 비교우위가 있는 자산운용업에 특화하여 금융산업전반을 견인함으로써 금융중심지 달성에 기여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2009년)과 함께 자산운용시장이 선도 금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자산운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
- 연관효과가 높은 채권·파생상품 등 관련 시장의 발전을 병행 추진

[4] 금융회사 집적 여건 조성

◇ 그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은 금융 클러스터 등이 조성되지 않아 역량이 분산된 데 일부 기인

- 금융중심지달성을 위해서는 대외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므로 단순한 금융발전정책보다는 새로운 측면의 접근이 필요

□ 해외 금융회사 및 해외전문금융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를 지정

- 금융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생활·경영환경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

□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조세행정의 합리성, 회계·법률 인프라 등 사업 환경의 편의성에 중점

-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출입국 제도 개선을 통한 고급인력 유치, 영어사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

4. 향후 미래상

① 금융산업을 新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민소득 4만불 달성에 기여

- GDP 대비 금융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중 : 21% → 30%이상

* 금융·보험업, 법률·회계·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부동산 서비스업, 기타 사업서비스업 등

② 아시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회사 출현

- 활발한 인수·합병 통해 대형 금융회사가 출현하고 경영권 시장 활성화로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성도 제고

- 은행지주회사 외에 금융투자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등 다양한 지주회사 출현으로 금융산업 시너지 극대화

③ 글로벌 금융회사가 활발하게 영업하는 금융중심지 정착

-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금융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로서의 여건 개선

- 글로벌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등 해외 우수 금융회사들을 적극 유치해 한국을 '금융산업의 전시장'으로 자리매김

④ 해외기업 상장 유치, 기업가치 증대 등을 통해 아시아 자본시장을 선도

* 아시아 주요국 증시 시가총액('07말, 십억불)

: 동경(4,330), 상해(3,694), 홍콩(2,654), 한국(1,122), 대만(664)

- 자산운용시장을 육성하여 수탁고 『500조원 시대』 달성

I.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 제고

(1) 수요자 중심의 금융 규제 개혁 및 금융 감독 서비스 구축

1. 수요자 중심의 금융 규제 개혁

□ 규제당국이 주도하였던 이전의 금융규제개혁과 달리 수요자(민간)가 주도하는 금융규제개혁 추진

- 민간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약 300여건의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

*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약 1,400여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금융업계·협회·연구원 등을 통해 총 477건의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취합('08. 3~5월)

□ 규제개선사항 중 법률 제·개정사항은 '08년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 제·개정과 연계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경우에도 가급적 '09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을 완료

2. 금융감독당국(금융감독원)의 인적쇄신 및 감독역량 강화

□ 외부 전문인력 충원 강화

- 외부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영입하여 감독·검사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감독대응능력 강화

- 금융환경 및 감독수요 변화에 맞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외부 전문인력 채용을 더욱 확대

- 2012년도까지 감독전문인력 대비 외부전문인력 비중을 25%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 잘하는 금융감독기구」 위상 정립

□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된 승진·보수제도의 내실화

- 인사시스템 전반(채용, 이동, 승진, 평가)에 대한 진단을 완료하고 성과에 기초한 인사시스템으로 개편
- BSC(조직성과관리제) 평가결과를 종합근무평정(조직업무 실적 평가)에 적극 반영('08년도 100% 반영)

□ 금융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기관으로 전면 조직개편

- 본부제 조직 도입 및 감독·검사부서의 통합으로 One-Stop 금융감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중복의 해소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

□ 외국 금융규제당국과의 협력 증진

- 외국감독당국과의 네트워크 및 주요 국제기구 참여 확대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제고

3. 금융회사 중심의 감독서비스 구축

□ 감독 패러다임 전환(원칙중심 ← 규정중심)

- 국가별 법체계 및 규제문화가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국·호주 등 주요국의 운영사례를 조사('08년 중)

*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의뢰

○ 조사결과를 토대로 원칙 중심 규제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대상을 금융권역별로 적극 발굴하여 추진('09~'10년)

- 원칙중심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 쌍방향 의견수렴을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규제준수와 관련된 모범규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제시

* 예시1) 주식투자한도 등 자산운용관련 개별적 규제

→ 자산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되 리스크 총량은 엄격히 감독

* 예시2)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영업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해 창구지도를 하는 관행 타파

□ 취약부문 중심, 서면·전산 검사 활성화

○ 현장검사방식의 종합검사를 매년 10%이상 축소*하고 리스크평가 중심의 서면검사로 점차 전환('08~'09년)

* 종합검사 계획 : ('08년) 60건 → ('09년) 50건 → ('10년) 40건

- 리스크 평가결과에 의한 검사 운영방안 마련('08. 1/4분기)

- 금융위규정 및 매뉴얼 개정 등('08~'09년)

○ 위법부당행위는 금융회사의 자체규율시스템이 처리토록 하고 금감원은 자체규율시스템 등의 운영실태 점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검사패러다임 전환

□ 공정위와의 중복규제 조정

○ 금융당국과 공정위간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협약안을 이행

[2]

금융산업 제도 개선

1. 은행 소유 규제의 합리적 개선

□ 미국, EU 등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산업자본과 관련된 은행소유규제(4%)가 지나치게 엄격

* (미국)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25%이상 또는 5% 이상 소유+ 사실상지배” 금지(다만, FRB는 일반적으로 10% 까지는 지배적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산업자본이 10% 까지는 소유 가능)

(영국·독일 등) 개별적 적격성 심사(사전적 소유제한 없음)

□ 금산결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현행 은행소유규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 ① 이해상충 가능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연기금 및 PEF 등에 대해서는 산업자본 판단기준을 완화
- ②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 ③ 규제완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및 자금고화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감독당국의 사전·사후 감독 강화

※ 시행방법·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08.9월중으로 확정된 후 '08년 국회에서 관련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

2.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 증권·보험중심의 글로벌 금융그룹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또는 손자회사) 지배 허용 검토

*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8년중)할 예정

○ 다만,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에 따른 私金庫化 등 부작용 방지 방안* 마련

* 순환출자 등의 해소를 통해 현재의 복잡한 계열회사간 출자구조를 단순·투명화하고, 금융-비금융 자회사간 중요 내부거래(material transaction)를 엄격히 통제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방안 마련

○ 임원 겸직 허용, 정보공유 범위 확대 등 지주회사 내 시너지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 예금보험제도 개편

□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기금제 및 차등보험료율제 등을 포함한 예금보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금보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추진

* 예금자보호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08년중)

(3)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1.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

- ☐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영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영업범위를 확대 추진
 -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업무 허용
 -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 허용 등
- ☐ 인터넷 및 CD, ATM 등을 통해 영업을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추진

2. 금융상품개발·판매의 자율성 확대

- ☐ 자본시장통합법위 예의 비추에 금융권역별 상품개발 관련 자율성 확대를 추진
 - 보험 상품개발의 신속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신고상품 구분 기준을 마련
 - 신고상품 이외 상품은 모두 자율상품화 하는 negative 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율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검증 절차를 폐지
 - *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08.3/4)하여 국회제출('08년)
 - 보험업법 개정 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09년)

- * (현행) 사후제출상품(90%), 사전신고상품(10%) : 모두 3단계 절차 (선임계리사 → 보험개발원 → 금감원) 절차 이행
- (개선) 자율상품(75~85%) : 회사내부 검증 절차만 거치고 자율 판매
- 신고상품(15~25%) : 현행 체계 유지

- 금융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서로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편익을 대폭 제고하기 위해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 추진

3.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절차 단순화

- 은행의 해외영업 진출절차 간소화(사전협의 →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부적격 국가로의 진출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전협의)

*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08.3/4)하여 국회제출('08년말)

-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시 자회사 주식소유한도 완화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08.6)

□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친화적 지원체계 구축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자문 서비스 제공

* 해외 진출을 위한 외국 금융시장의 법규, 제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을 통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08.6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중 설립 예정)

4.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 유도

□ 시장경쟁에 의한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전문화 유도

- 다양한 금융업무 겸영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선진 금융투자회사(IB)가 추구하는 영업모델 채택을 유도

-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단위를 세분화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여 진입을 활성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08. 8월) 및 시행('09. 2월)

5.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한 투자은행(IB) 육성

□ 산업은행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여 민영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08년)

-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산은의 기업금융 부문(CB)과 투자은행(IB) 기능을 연결한 기업금융중심 투자은행(CIB : Corporate Investment Bank) 체제 구축

* Deutsche Bank도 '95년 본격적인 CIB 체제를 도입, 공격적인 M&A를 통하여 5년 만에 세계 상위권 투자은행(Top tier IB House)으로 발전

- 산업은행과 자회사*를 연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 대우증권(39.1%), 산은캐피탈(99.9%), 산은자산운용(64.3%)

- 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 제출 추진('08.9)

□ 산업은행 지분 49%를 다양한 방식(상장 전 투자유치[Pre-IPO Investment], 상장, 블록세일 등)으로 매각(~'10년)

* 2009년부터 매각과정이 시작되도록 하고 2010년까지 정부지분 49%까지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 새정부 임기 내 지배지분 매각을 추진하여 산업은행 민영화를 완료

□ 민영화 추진 관련 보완조치 방안 병행 검토

- 매각가치 극대화를 위해 선진화된 지배구조 구축 등 경영의 자율성 확대

- 민영화 추진에 따른 산업은행 발행 대외채권의 신용도 확보 방안 강구

* 기존 대외채무의 경우 해외투자자의 조기상환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정부보증 등 추진

6. KIC[한국투자공사] 투자 활성화

☐ 위탁 규모의 확대

- 공적자금의 추가위탁을 통해 운용규모를 확대

☐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 투자대상 자산을 KIC법이 허용하는 PEF,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신흥시장국 투자도 허용
- 한국은행의 경우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범위내에서 다양성 허용 추진

☐ 운용역량 제고 및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

- 직접투자 비중 확대, 투자자산 다양화 등에 대비하여 국내외 우수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 추진
- 운용부문 인력에 대해서는 보수체계를 운용성과에 연계한 인센티브중심의 보수체계로 변경

II. 금융인프라 선진화

(1)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1. 전자증권제도 도입

- ☐ 비용 절감과 증권거래의 투명성 증대 등을 위해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

* 전자증권법제정안 국회 제출 : '08년 12월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및 전자증권제도시행 : '09~'11년

2. 상장·퇴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 ☐ 상장요건을 다원화하여 기업 및 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이 상장선택 요건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상장요건을 도입

* 맞춤형 상장제도 등 시행 : '09년

- ☐ 퇴출사유 발생시 기업 내용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도입

3. 신용정보·평가제도 개선

- ☐ 신용정보 인프라를 개선(공정적인 신용정보*를 확충)

* 고용·산재보험 납부실적, 사업장정보, 수출입 실적, 정부조달실적, 전력·가스사용량 등

- ☐ 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신용정보 사용 동의방식 다양화, 신용정보 사용범위 확대 등

- ☐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장치 마련 및 감독규정 정비

*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08년 정기국회 제출 예정

1. 외환거래 자유화

□ 외환거래의 편의성 제고

- 신고가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신고기관도 외국환 은행으로 하향조정하여 외환거래시 편의를 제고
- 해외투자자와 같이 변동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변경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사후보고제 도입

□ 비은행 금융회사에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09.2)을 지원하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국제업무역량 제고

□ 제2단계 자유화 계획 주요조치 조기이행

- 당초 '09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제2단계 자유화 계획('06년 발표) 중 주요조치를 조기추진('08년중)
 -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폐지는 기추진
 - *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완료('08.5월)
 - 외국환 업무취급 자유화·신고면제 대상 자본거래 범위 확대 등은 12월 규정개정시 반영

□ 수요자 중심의 규정으로 개편

- 일반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체계를 개편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기술

2. 원화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

☐ 원화에 대한 국제적 수요제고

- 원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국제적 신인도 제고
- 국제거래에서 외국인의 원화 보유 및 결제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외국환 거래규정」상 규제를 완화

* 경상거래·장내 증권거래시 결제 등은 허용하고 있으나, 비거주자간 장외 증권매매 결제 등은 불가능

☐ 원화국제화 로드맵 작성

- 우리 외환시장의 성장속도와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정도를 고려하여 원화국제화 장기 로드맵을 마련

* 원화국제화의 예상효과를 검토하고자 KIEP와 공동연구 진행중

[3] 금융전문인력 양성

1. 금융인력양성 기초 인프라 정비

☐ 금융인력양성협의체 구성

- 금융인력의 수요자인 금융회사의 요구사항이 공급자인 양성기관에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교육기관, 정부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09년중)

☐ 금융업 핵심 표준직무 개발

- 금융인력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인프라가 되는 금융업 핵심 표준직무를 개발하여 금융인력의 수급계획 수립과 교육 훈련 수요 파악 등에 활용('08년)

☐ 금융인력 교육과정 개선

- 금융업 핵심 표준직무를 기초로 금융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정부가 인증(accreditation)하는 제도 도입을 지속 검토('09년~)

2. 금융인력양성기관 개선

☐ KAIST 금융전문대학원 등의 운영 개선('08년~)

- 산학협동·맞춤형 단기과정 등 금융회사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공급하도록 유도

☐ 금융교육·연수기관의 교육수준 제고 및 역할 정립('08년~)

- 시장의 통합화·겸업화 등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내용의 도입 필요

☐ 국제수준의 현장금융인력 양성체제 확립('08년~)

- 현장 전문인력 양성의 민간경쟁의 활성화를 유도
- 경쟁력 있는 민간 금융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유도

3. 체계적인 금융소비자교육 실시

☐ 일반국민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향상을 위해 대상별로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 초중등학생에서부터 군인, 일반인까지 체계적인 교육 유도

☐ 금융 교육 총괄 추진체제 구축

- 기존 '금융교육추진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금융위·금감원·협회·유관부처 담당자들로 '금융교육 전담팀'을 구성하여 금융교육을 총괄하여 추진

Ⅲ. 자산운용시장 육성

[1]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1. 자산운용업의 전문화 유도 및 경쟁력 제고

□ 자본금요건을 세분화·완화하여 특정분야에 특화하는 전문자산운용회사의 진입 활성화

○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등 운용대상자산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화

○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자기자본요건 대폭 완화

□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활성화

○ 자산운용사 해외법인 설립시 절차간소화(사전협의→ 사후보고)

* 자통법에 기 반영, 09.2월 시행 예정

2. 은행·보험사의 자산운용시장 참여 활성화

□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 확대

○ 은행이 자회사를 통한 금융겸업화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회사 출자한도를 확대

*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08.3/4)하고, 은행법 개정안 국회제출('08년말까지)

□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방식을 변경

- 자회사 소유규제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사 건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

*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08.3/4)하여 국회제출('08년중)

□ 보험사의 파생상품 투자 범위 확대

-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유형을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율성 제고

* 다만, 총액한도 규제(총자산 3%)를 유지하여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한 건전성 훼손을 방지

*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08.3/4)하여 국회제출('08년중)

3. 헤지펀드의 도입

□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및 금융회사의 투자·위험관리 기법 선진화 등을 위해 헤지펀드를 단계적으로 도입

-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시장과 감독당국의 적응능력을 감안하여 '09년말까지 적격투자자 대상 헤지펀드 도입 추진

※ 이후 제도도입 추이를 보아가며 헤지펀드 투자자 범위를 확대 [소수(50인미만) 일반투자자(Non-qualified Investor)에게 허용] 하고, 최종적으로는 PEF를 헤지펀드와 통합하여 일원화 추진

4. 펀드 판매 채널의 확대

□ 펀드 판매채널 확대 및 판매중개회사(Financial Planner) 허용

- 판매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펀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수

산업협동조합에도 펀드 판매를 허용

* 금융투자업 규정 제정('08년 하반기)

- 보험대리점 등 일반법인에 대한 펀드판매 허용('09)

5. 퇴직연금의 활성화

- 퇴직연금제도 유연화 및 선진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08년 하반기 국회제출)

- 제도형태 다양화·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합리화·담보대출 요건 완화 등 제도유연화, 연금계리제도 도입 등 제도선진화 추진

- 퇴직연금제도 적용확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08년 하반기 국회제출)

- 4인 이하 사업장 및 자영인에 대한 적용확대, 신설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화 등을 검토

- 퇴직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지속 검토

- 퇴직연금 선택 근로자 세제혜택 부여 등 세제 개선 사항 지속 검토

- 퇴직연금 예금보호 적용 검토

- 퇴직연금의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검토*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시 민관합동 TF에서 논의할 계획

1. 외국기업 상장 유치 활성화

- ☐ 상장 외국기업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기한(현재 45일)을 연장하여 외국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추진('08년 하반기)
 - 자통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현행 45일에서 60일로 연장
- ☐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공시언어 차이로 인한 불편을 해소('09년~계속)
 - 국내 투자자의 이해부족 및 번역오류 등에 대비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

2. 아시아 신흥국가 거래소 설립 지원 및 IT시스템 수출

- ☐ 교육 및 자문, 시스템개발 등을 통해 캄보디아('09), 라오스('10) 등에 대한 아시아 신흥국가의 거래소 설립을 지원하여 한국형 증시모델 보급 및 연계망 확보
- ☐ 말레이시아('08) 등 신흥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시스템 수출 추진

3. 해외 거래소와 선물시장 연계 추진

- ☐ 거래시간 확대, 해외 투자자의 시장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미국의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KOSPI200 선물의 연계 추진('09년 하반기)
- ☐ 규정 정비 및 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 후 유럽의 선물거래소(Eurex)와 파생상품 연계거래 추진('10년 이후)

4. 다양한 파생상품 도입 추진

- ☐ 다양한 투자·헤지 상품 공급을 통한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해 돈육('08.7), 석유제품('09.하) 등 선물상품의 기초 자산 확대
- ☐ 주식 이외에 귀금속·자원·곡물 등 실물자산 등을 추적하는 신종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추진('09.하반기)

(3)

채권시장 고도화

1. 합성 CDO 발행 허용

- ☐ 고수익채권 보유자가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성 CDO*발행 허용(자산유동화법 개정안 국회 제출 : '08.11)

* 합성CDO(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 신용파생계약(CDS)와 유동화증권(CDO)이 결합된 상품
- 자산의 이전 없이 자산의 신용위험만 분리, SPC에 이전하고 SPC는 담보자산과 CDS 프리미엄을 기초로 합성CDO를 발행

2. 회사채 정보 집적 인프라 구축

- ☐ 고수익채권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채권의 부도율, 회수율관련 정보 집적 인프라 구축('08.하반기~'09.상반기)
 - 정보 생성기관으로부터 부도율, 회수율 산출을 위한 기초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3.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 콜거래 비중 축소 및 RP시장 활성화

- 무담보 콜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RP 시장을 보완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

☐ CP(기업어음) 발행 · 유통 관련 인프라 개선

- CP의 유통성을 제고하여 기업자금 조달 원활화를 지원하고 발행정보 관리를 통해 투자자 보호 강화

☐ CD(양도성정기예금) 금리 안정화

- CD에 대한 다각적인 수요기반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CD금리 안정화 유도

4. 채권시장 국제화

☐ 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의 적용대상 확대

- 현재 국채·통안채 투자시에만 가능한 옴니버스 계좌 설치를 향후 회사채까지 적용범위를 확대
- 현재 ICSD*만이 옴니버스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개설주체를 여타 국제보관기관까지 확대

* ICSD(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 국제예탁결제기구)는 고객(외국인투자자)을 위하여 투자국에 자기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 자금 등을 관리하는데 이경우의 계좌를 통합계좌(Ominbus Account)라고 지칭.

□ 채권장외매매시 원화 결제 허용

○ 외국인들이 원화표시 채권을 장외거래하는 경우 원화로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

- 거래 일방이 ICSD인 경우 비거주자유원계정(비거주자의 해외용 원화계정)을 통한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

※ '07년에 신규로 도입된 음니버스 계좌제도의 정착추이를 감안하여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시 추가적 규제완화 추진

[4]

지역 특화 금융 수요 개발

1.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

□ 투자자본 확충

-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IB 기능 강화를 유도하여 구조조정시장 진출 및 투자 확대 유도
- 사모투자펀드·기업구조조정회사 등이 구조조정 시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2. 동북아 개발 금융 참여 강화

□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및 EDCF·ADB 협조융자·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통해 동북아 개발 금융지원에 적극 참여('08. 6~'10년)

- 수출입은행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협력 증진을 위해 국가별 금융지원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체결, JBIC 등과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 공동 진출방안 모색
- 산업은행은 금융주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동북아 개발금융에 국내외 상업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

3. 선박금융 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선박관련 협조융자 지원 확대

- 직접대출과 대외채무보증의 혼합지원을 통한 금융경쟁력 제고
- 우량 해운업체에 대한 외항선박 구매자금 지원 강화

- 금융자문 및 주선(financial arranger) 기능 수행을 위한
선사 및 금융기관과의 networking 강화

□ 선박 이행성보증 시장의 선도적 역할 지속

- 시장수요 등을 감안한 적정 보증료를 적용
- 국내조선소의 해외현지법인이 수주한 선박에 대한 이행성
보증 적극 지원

IV. 금융회사등의 집적 여건 조성

(1) 금융회사등 집적 및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지원

1.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 지정

- 금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금융중심지 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를 지정('08)

* 지자체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작성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선행 절차를 진행한 후 신청('08.11)

- 지정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의 발전가능성, 국내외 금융회사 유치가능성, 계획의 현실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중점 고려

2.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 조성 지원

- 금융 및 관련 서비스 업종 회사의 금융클러스터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에 입주하는 회사 및 외국인에 대한 지원 방안 시행('09~)

- 금융클러스터가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금융클러스터 내의 생활·경영환경 개선을 추진

* 금융클러스터 지정 평가시 세제·건축 등 측면의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 의료·교육서비스 지원 등 지자체의 금융클러스터 지원 의지 및 방안의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

-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자체의 금융클러스터 조성을 지원

3. 금융중심지 지원 센터 설립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및 금융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금융감독원에 설치('08.9월중)

○ KOTRA Invest Korea 등 유사·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

□ 지원센터는 금융중심지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추진실적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는 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One-stop 서비스 제공) 국내외 금융회사들의 국내외 진출입과 관련한 상담, 인허가·승인 등 애로사항을 단일창구로 접수하여 One-stop으로 처리

○ (금융환경개선) 외국금융사 등이 제기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국제적 정합성 및 경쟁력 제고

○ (수요자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 다양한 대화채널 운영, 지원센터 전용 웹사이트 운영, 영문자료 서비스 확대 등

○ (국내사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외국감독당국과의 MOU 체결 확대,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적극 활용, 전용웹사이트를 통한 진출대상 국가정보 제공 등

4. 금융전문인력의 출입국 편의성 제고

□ 해외 고급 금융전문인력 유치에 위한 제도 개선

- 고급 금융인력이 고용계약 없이 입국·구직할 수 있는 비자 신설
 - (예) 세계 500대 기업(「Forbes」誌 또는 「Fortune」誌 기준)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세계 300위권 대학(「The Times」 등 기준) 졸업자(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 글로벌 우수인재에 대한 영주비자 발급
 - (예) 최근 세계 우수 금융기업에서 경영간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외 고급 금융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취업활동 지원

- 전문직 취업비자(E-7) 발급요건 완화
 - '근무경력 2년 이상 학사'에서 '현장실습 또는 근무경력 1년 이상 학사'로 요건을 완화
 - * 현재 금융분야 전문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상 "특정활동(E-7)" 자격을 부여 중
- "특정활동(E-7)" 자격 금융분야 전문인력 체류기간 연장(1~2년 → 3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개정)
 - 취업비자 발급 시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고용계약 기간과 연계하여 연장

□ 해외 고급 금융전문인력의 체류 환경 개선

- 금융인력 배우자의 동반비자를 국내에서 즉시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등 취업절차 개선

1. 세율 하향 조정

- ☐ 국가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 하에서 경쟁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는 법인세율을 유지

* 법인세율(%) : 일본 30, 한국 25(10년 20), 대만 25(10년 17.5), 중국 25, 싱가포르 18, 홍콩 16.5

- 낮은 세율 적용구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법인세 부담 경감

2. 금융 관련 세제 합리화

- ☐ 금융관련 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발굴 및 해소 추진

(예) 신탁재산에 지급되는 채권이자 원천징수 폐지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08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09년부터 시행할 예정

3. 조세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 ☐ 불필요한 세무조사기간 연장 최소화

- 실질적인 독립성이 보장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하여 모든 조사기간 연장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 ☐ 납세자불평통합관리시스템 도입('08)을 통해 외국인 납세자의 세무애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세정에 피드백

- 추가 보완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시스템을 운영함과 동시에 시스템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통한 발전방향 모색

□ 외국 기업의 조세행정 이해증진 노력

- 외국계기업 초청 간담회를 통한 세무안내 및 애로사항 수집 해결
- 세무당국이 영문홈페이지 운영 및 책자 등 영문정보제공 확대
- 외국인 전담창구 운영 및 확대
 -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

4. 법률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률시장개방 추진

□ 외국법자문사제도 도입

-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외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법 자문사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 로펌이 국내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미 FTA 합의내용 중 1단계 개방 반영)

- 외국법자문사법률 제정안 입법 재추진('08년 하반기)

□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을 통해 한·미 FTA 협상에서 합의된 일정에 맞춰 추가 개방

- * 한·미 FTA 협상에서 합의된 2·3단계 개방 내용

- 제2단계 개방(협정 발효 후 2년 이내)

- 국내법률사무와 외국법자문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한 공동 수임, 사무처리 및 수익분배를 허용

- 제3단계 개방(협정 발효 후 5년 이내)

-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간 조인트벤처 합작사업체 형성 허용
- 일정한 요건 아래 위 합작사업체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5. 회계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 및 회계시장 개방 추진

☐ 금융회사 등이 글로벌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경쟁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을 제고

○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결합재무제표 폐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축소 등 회계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

* 관련 법령 정비('08년 하반기), 희망기업에 대해 국제회계기준 도입 허용('09년), 모든 상장기업에 국제회계기준 도입('10년 ~)

☐ 회계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보다 나은 품질의 회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

○ 한·미FTA 협정내용을 반영하여 외국회계법인(공인회계사)의 업무범위, 관리감독 방안을 포함한 공인회계사법 개정('08년 하반기)

[3]

금융 회사 종사자의 영어 사용 환경 조성

1. 금융법령을 영문으로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한 금융법령 영문서비스 제공

○ 금융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예산 및 역할을 분담하여 영문화사업 실시

- 영문 법령, 영문 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으로 홍보*하고 수시로 Update 실시

* 영문 금융감독규정(41개)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현재 게시 중이고, 영문 법령(94개)은 '08.7월부터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

☐ 「외국환 거래규정」 영문판을 작성하여 배포

*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시 반영(09년)

2. 외국 금융기관·종사자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영어서비스제공 강화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영어 서비스 제공

- 외국인 주거환경 및 교육여건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영어로 자문·상담
- 고충처리 간담회 등을 영어로 개최(정례화)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 지속 추진

3. 영어 라디오 방송 확대

※ 지자체 중심으로 방송국을 운영, 지역별로 특화된 외국인 유치 인프라 마련

☐ 수도권·부산권·광주권 주파수 확보

- 거주 및 방문 외국인이 집중된 수도권·부산권 및 광주권은 금년중 우선 추진
- 기존 방송국의 허가제원 조정, 전파월경 차단 등을 통해 광역단위별로 영어FM방송용 신규 주파수 확보

※ FM주파수 대역은 88~108MHz(20MHz대역, 100채널)인데, 이미 허가한 방송국은 319국으로 기존 방송국 조정 없이는 주파수 확보가 어려움

☐ 기타지역 주파수 확보

- 대구, 대전 등 나머지 지역은 정밀 시뮬레이션과 TFT 구성·운영을 통해 가용 주파수를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4-3.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가. 추진 현황

□ 법령 제·개정 등 산은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기 마련

- 정책금융공사법 제정(09.3월), 산은법 개정(09.4월) 및 시행령 제·개정(09.5월) 등 관련법령 정비(모두 09.6.1일 시행)

□ 산은지주사 및 공사 설립을 위한 산은 분할방안 마련(09.7월)

- 산은의 원활한 민영화 및 공사의 정책금융 업무 수행능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어진 재산을 합리적으로 안분

□ 09.10월중 산은 지주사, 정책금융공사 설립을 목표로 하여주 총의결(9.23일) 등 후속작업 추진중

나. 향후 계획

□ 금년 중으로 산은의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 정책금융공사의 원활한 설립·운영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 추진

□ 산은 민영화는 정책금융공사의 정책금융업무 수행 능력, 국내외 시장여건, 매각가치 극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

* 2014. 5월 이전까지 최초 지분 매각 의무화(산은법 부칙 제4조)

4-4.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겸업화, 대형화, 전문화 정책추진현황

□ 동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여 우리 자본시장이 동북아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있는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투자자 보호를 선진화 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을 단일의 법률로 통합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규율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취급과 설계를 허용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1) 증권, 선물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을 법령에서 일일이 열거하던 그간의 규율방식을 폐지하고,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

(2)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의 범위도 '계량화 가능한 모든 위험'으로 확대하여 모든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과 파생결합증권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함

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이 법상 금융투자업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있어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1)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업은 모든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으로 하되 그 기능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6개로 구분함

(2) 은행, 보험사 등이 집합투자증권, 투자성있는 예금 또는 투자성있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으로 규율하여 투자자를 보호함(다만, 이미 관련 금융법상 집합투자규제와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하여 인가는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건전성 규제는 적용하지 않음)

(3)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 법률상 펀드에 대해서는 공모 펀드 및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규율과 펀드에 대한 규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를 보호함

다. 금융투자회사가 6가지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화되고 겸업화된 투자은행의 출현 기반을 마련함

(1) 금융투자회사는 각각의 금융투자업별 진입요건을 갖추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 6개 금융투자업을 모두 겸영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파악·평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두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이해상충 가

능성을 해소한 후 거래하도록 함

- (3)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업간(예; 투자매매업과 집합투자업 등)에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 공간등의 공동 이용 제한 등을 부과함

라.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

- (1) 부수업무(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영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2) 투자권유대행자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투자권유대행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투자권유대행자에게 적용함
- (3)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위탁매매 계좌의 현금을 타 계좌로 송금하거나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와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의 업무 범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
- (4) 집합투자업자가 민법, 상법 등 현행법상 설립가능한 모든 집합투자기구(Vehicle)를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조합, 투자유한회사 등을 집합투자기구에 추가함
- (5) 집합투자업과 관련하여 펀드 종류별 투자 대상자산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자산에 대하여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를 허용하며 사모펀드에 대하여 수익자총회 개최의무 등 규제를 완화함

라. 투자권유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선진화 함

- (1) 투자자를 위험 감수능력(전문성, 보유자산 규모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 규제를 집중 적용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함
- (2)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 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의무 불이행시 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며 원본결손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도록 함
- (3)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 제도'를 도입함
- (4)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 권유를 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여 장외파생상품과 같이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권유하지 못하도록 함
- (5) 투자자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요청받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제도'를 도입하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함
- (6)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를 도입

마. 공시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 (1) 상장기업의 5%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보유 상황 및 보유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식등 대량보유보고 제도(5% Rule)의 적용대상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정부, 정부기금, 증권금융 등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장의 정보 효율성을 높임
- (2)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공모할 경우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적용 대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집합투자증권, 은행채,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 은행채 등의 발행자 정보를 투자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 기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1) 실효성이 크게 감소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등 직접투자 제한을 폐지하되 선진국 수준의 내부통제 장치를 도입
- (2) 상장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채널을 거래소로 일원화하여 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함
- (3) 증권신고서제도의 수리제도를 폐지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신속한 증권발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 (4)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규제 대상 증권의 범위와 내부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대상 증권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함
- (5) 현물과 선물간의 시세조종, 파생결합증권과 그 기초자산간의 시세조종 등 연계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함

사. 기타 법률의 통합과정에서 관련된 제도를 정비함

-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명칭을 한국거래소로 변경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칭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함
- (2) 자율규제기관(협회)의 기능별 재편을 위하여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단일의 '금융투자협회'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조문을 마련함(협회간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져 기능별 재편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 (3) 집합투자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폐지하여 투자자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증권신고서 제출시 투자설명서(기존의 사업설명서)로 일원화함
- (4) 현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변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제도를 투자일임·자문업자에게도 적용하여 건전 경영을 유도
- (5)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에 대하여 법률 시행되기 6개월전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재인가·등록을 받도록 함

(6)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로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함

(7) 법 위반시 형벌 수준을 은행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 전화 : 02-2110-2438~9
- 팩스 : 02-503-9265
- 이메일 : wjchoi@mofe.go.kr

※ 동법 제정(안)과 상세한 설명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fe.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축조 설명자료

2006. 6. 30

재 정 경 제 부

I. 제정안의 구성

□ 10개 편, 420개 조항으로 구성

편	장	내용	세부 내용
제1편 총칙	-	총칙	○ 목적, 정의규정 : 금융상품, 금융업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인가 및 등록	○ 인가·등록 요건 및 절차
	제2장	지배구조	○ 대주주변경 승인 ○ 사외이사, 감사 ○ 내부통제장치, 준법감시인 ○ 소수주주권
	제3장	건전 경영 유지	○ 자기자본 규제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 회계처리 ○ 경영공시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공통영업행위 규제 - 투자권유규제 - 손실보전 금지, 손해배상책임 등 ○ 업자별 영업행위규제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발행공시	○ 증권신고서
	제2장	M&A 관련제도	○ 공개매수, 5%Rule 등
	제3장	유통공시	○ 정기공시, 수시공시
	제4~5장	상장법인 특례 등	○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재무관리 등 ○ 장외거래, 외국인의 장외매매 제한
제4편 불공정 거래의 규제	제1~2장	불공정거래 규제	○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금지
	제3장	공매도등 부정거래	○ 포괄적 사기금지, 공매도 금지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10장	집합투자기구	○ 정의,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 기관 등
제6편 한국거래소	제1~6장	한국거래소	○ 조직, 시장개설 ○ 시장감시, 분쟁조정 등
제7편 관계기관	제1~5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5장	금감위의 집행	○ 금감위의 명령, 검사 및 처분 ○ 금감위의 조사, 과징금
제9편 보칙	제1~2장		○ 위법행위의 신고, 종금사·자금중개회사, 투자성있는 예금·보험 특례
제10편 벌칙	-	형벌 규정	○ 형벌, 과태료, 양벌규정

II. 축조 설명

<제1편 총칙>

☐ 법의 목적

-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 금융투자업 육성과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 제고

☐ 국외 적용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법을 적용함을 명시

☐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을 부담하면서 금전 등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갖게 되는 권리”
- 금융투자상품은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

☐ 증권의 정의

- 금융투자상품 중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

☐ 파생상품의 정의

- 파생상품을 선도, 옵션, 스왑으로 규정하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지를 기준으로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

☐ 금융투자업의 정의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으로 정의

☐ 기타 정의 조항

- 법 전체에서 활용될 용어(대주주, 투자권유, 전문/일반투자자, 모집, 매출, 인수 등)를 정의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의 인가 요건, 절차 규정
-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의 등록 요건 및 절차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 ☐ 대주주 변경시 금감위의 사전 승인 제도
- ☐ 금융투자회사 임원, 사외이사 및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설치
- ☐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 ☐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제3장 건전경영 유지

- ☐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 및 경영공시 규정
-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공통영업행위 규칙

- 신의성실의무, 이해상충 방지 의무, 商號 규제
-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범위, 부수업무 범위
- 이해상충 관리체제(internal control system) 및 정보교류 차단(Chinese wall) 장치
- 투자권유 규제
 - 적합성 원칙, Know-your-customer-rule
 - 설명의무,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부당권유 금지(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 등)
 - 투자권유대행자(introducing broker) 제도
- 정보제공 금지, 손실보전 금지
- 약관 규제, 투자광고 규제, 수수료 규제

□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임의매매 금지, 이해상충 행위 규제, 예탁금의 별도예치 등
-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선관주의 의무, 자산운용제한, 이해상충 행위 규제 등
-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계약체결 규제, 이해상충 행위 규제 등
-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신탁재산의 제한,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구분, 신탁재산의 운용 제한, 이해상충 행위 규제 등

<제3편 증권발행과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 ☐ 증권 공모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은행채,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확대하여 투자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

제2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 ☐ 공개매수제도
-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5%rule)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제한
- ☐ 합병등 신고

제3장 상장법인의 공시

- ☐ 상장법인의 수시공시와 정기공시 의무

※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의무를 거래소로 일원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기존 : 거래소와 금감위에 신고)

제4장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감사, 주주총회, 소수주주권, 집중투표 특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 ☐ 재무관련 특례

-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 주식매수선택권, 일반공모증자, 우리사주조합원

제5장 보칙

-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등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임원등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 당해 법인과 계약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를 내부자에 포함

제2장 시세조종

-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조종, 시세고정 등의 금지

※ 현물과 선물,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간 연계 시세조종의 금지 신설

제3장 부정거래 행위 등

- 일반적 사기금지 조항
- 공매도 제한

※ 증권선물거래소 업무규정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이관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 행사, 재산의 분리보관 등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투자신탁

○ 신탁계약의 체결, 수익증권, 수익자 총회 등

☐ 회사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 집합투자기구의 포괄화에 따라 새롭게 포함된 집합투자기구

- 설립, 주식(지분증권), 정관, 이사(업무집행사원), 주주총회
(사원총회)

☐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 집합투자기구의 포괄화에 따라 새롭게 포함된 집합투자기구

- 설립, 업무집행조합원, 조합원 총회 등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 환매청구의 방법과 절차, 가격, 수수료 등

제5장 평가 및 회계

-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회계처리 등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 신탁업자의 보관관리, 업무제한 등

제7장 관계회사

- ☐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등

제8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칙, 은행에 대한 특칙,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등

* 보험회사가 투자성있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의 적용하도록 함

제9장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 ☐ PEF에 대한 규정

제10장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 ☐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제6편 한국거래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명칭을 변경

제1장 총칙

☐ 설립

제2장 조직 등

☐ 자본금, 정관, 업무, 임원,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제3장 시장

☐ 시장의 개설, 회원,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등

☐ 공시규정, 업무규정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규정 등

제5장 소유등에 대한 규제

☐ 주식소유의 제한, 거래소가의 상장 및 상장폐지 승인

제6장 감독 등

☐ 보고와 검사, 거래소 규정의 승인, 긴급사태시의 처분, 시장
효율화 위원회

<제7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제1장 증권금융

제2장 한국금융투자협회*

*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통합하여 단일의 협회를 설립

☐ 설립, 회원, 업무, 정관 및 규정, 분쟁의 자율조정 등

제3장 한국예탁결제원*

* 명칭을 증권예탁결제원에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

☐ 설립, 업무, 정관, 예탁관련제도 등

제4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5장 금융투자관계단체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 명령권, 승인사항, 보고사항

제2장 검사

☐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검사

제3장 처분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처분(인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

☐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게 대한 처분(해임요구, 경고 등)

제4장 조사 등

☐ 금감위의 범위반등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조사

☐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제5장 과징금

-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9편 보칙>

제1장 위법행위의 신고 등

- ☐ 위법행위 신고자의 보호, 외국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 ☐ 재정부, 금감위의 권한 위탁,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 투자성 있는 예금과 보험에 대한 특례 : 은행과 보험사가 동 상품을 취급함에 있어 이 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

제2장 종합금융회사 등

- ☐ 종금사의 업무, 인가사항, 영업행위 규제
- ☐ 자금중개회사 및 금융기관의 단기금융 업무

<제10편 벌칙>

- ☐ 형벌, 과태료, 과징금 (징역과 벌금을 은행법 수준으로 통일)

<부칙>

- ☐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1년 6월 (일괄 재인가·등록 및 협회통합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 ☐ 다른 법률의 개정
 - 타부처 소관 집합투자업과 펀드에 대해 이법을 원칙 적용하기 위하여 타부처 법률을 일괄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2006. 6. 30

재 정 경 제 부

목 차

I. 제정 필요성

1.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 부진
2.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의 발전 미흡
3. 자본시장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II. 제정의 기본 방향

III.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1. 현황
2.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 가.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
 -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나. 증권, 파생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 (1) 증권
 - (2) 장외 파생상품
 - (3) 장내 파생상품

IV. 기능별 규율(Functional Regulation) 체제의 도입

1. 현황
 - <참고 1> 현행 금융법상 금융투자회사의 진입 규제
 - <참고 2> 현행 금융법상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규제
 - <참고 3> 현행 금융법상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규제
2. 기능별 규율 체제로의 전환

가.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방안

(1) '금융투자업'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참고 4>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금융업의 모습

(2) '금융투자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3) '투자자'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나. 기능별 규율을 위한 金融業규제 개편

(1) 진입규제의 개편

<참고 5> 인가단위에 따른 인가·등록 신청 예시

(2) 건전성규제의 개편

(3) 영업행위 규제의 개편

다. 집합투자업(펀드운용, 펀드규제)에 대한 기능별 규율

<참고 6> 현행 금융법상 집합투자기구(Vehicle) 규제

라. 국외 금융투자업자(Cross-border supply)의 규제

V. 업무범위의 확대

1.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2.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3.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4. '투자권유대행자 제도' 도입을 통한 판매망 확충

5. 집합투자업의 업무 확대

(1) 집합투자기구(Vehicle)의 확대

(2) 집합투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3) 펀드종류별 투자대상 자산제한 폐지

(4)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5)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한 제한 폐지

(6) 펀드에 대한 환매금지 규제 완화

6. 외국환업무의 범위 확대

VI.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1.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부분 해소
2. 「투자권유 규제」의 도입
 - 가. 설명의무의 도입
 - 나. 적합성 원칙의 도입
 - 다.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의 규제 도입
3. 투자광고 규제의 도입
4.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도입
5. 발행 공시규제의 적용범위 확대

VII. 기타 법률 통합과 관련된 사항

1. 법률의 통합 범위
2.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지배구조의 통일적 규율
 - <참고 8> 통합대상 금융투자업별 임원의 결격사유 비교
 - <참고 9> 통합대상 금융투자업별 사외이사관련 규정 비교
 - <참고 10> 통합대상 금융투자업별 감사위원회관련 규정 비교
 - <참고 11> 통합대상 금융투자업별 내부통제기준 등 규정 비교
 - <참고 12> 통합대상 금융투자업별 소수주주권 요건 비교
3. 자율규제 체제의 개편
4. 통합법의 題名
 - <참고 13> 주요국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 통합법의 명칭
5.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규율 방안
6. 증권선물거래소법의 통합
7. 금융투자회사의 商號 규제 방안
8. 통합법의 시행시기
9.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재인가·등록 시기
10. 통합법의 구성

VIII. 기타 자본시장 관련 제도개선 사항

1.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 일임매매 제한 제도의 개선
2. 금융투자상품의 발행과 유통관련 제도 개선
 - 가. 발행공시 제도의 개선
 - 나. 유통공시(수시공시) 제도의 개선
 - 다. 5% Rule(주식등 대량보유보고제도)의 개선
3. 불공정 거래 규제의 강화
 - 가. 내부자거래 금지(미공개 중요정보 이행 금지) 제도 강화
 - 나.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증권의 범위 확대
 - 다. 현선 연계 시세조정 규제의 강화

IX. 벌칙의 개편

1. 현황 및 개편 필요성
2. 개편 방안
 - (1) 형벌 체계의 단순화
 - (2) 벌금형 과태료 전환(법무부 추진과제)
 - (3) 관련 법령상 벌칙의 통합

X. 기본방안 발표('06.2)이후 새롭게 추가된 사항

1. 포괄주의 규율체제 관련
 - (1) 투자성 있는 예금 및 보험상품의 통합법 적용 방안
 - (2) 전통적 보험계약의 금융투자상품 제외방안
 - (3) 양도성 예금증서와 기업어음의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2. 기능별 규율체제 관련

- (1) 타부처 소관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 방안
- (2) 새롭게 금융투자업으로 포섭된 업무의 규율방안
- (3) 개인연금·연금신탁의 금융투자업 규율 방안
- (4) 은행, 보험사 등에 대한 고객예탁금 별도 예치 의무 적용
- (5) 일괄 재인가·등록대상 금융투자회사의 범위
- (6) ELS 등 추가연계 파생결합증권 발행의 규율방안
- (7) 통합법의 역외적용 방안

3. 업무범위 확대 관련

- (1) 은행과 보험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무 범위
- (2) 간접투자의 개념 변경
- (3) '간접투자'의 명칭 변경
- (4) '자산보관관리업'의 명칭 변경

4. 기타 사항

- (1) 임직원 등의 증권·선물 투자제한 개편
- (2)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 도입
- (3) 금융투자회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마련
- (4) 대주주 변경 승인제도를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적용
- (5)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칭 변경

XI.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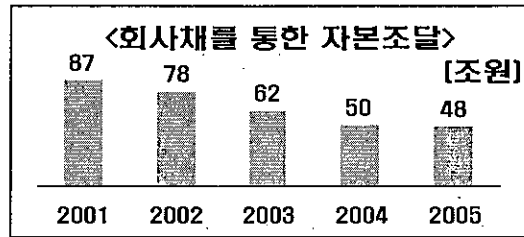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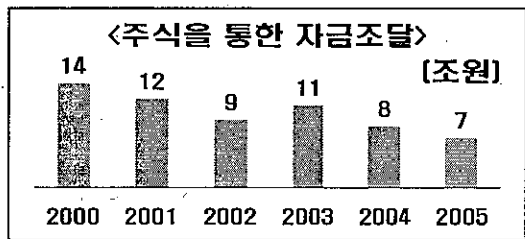
1. 선진 투자은행과 동등한 업무영역 확보 가능
2.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3.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설계·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참고 14> 통합법 제정으로 취급가능한 금융투자상품(예시)
4. 대형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
5. 통합법 제정에 따른 규제 혁신
<참고 15> 통합법 제정에 따른 주요 규제완화 목록(예시)

I. 제정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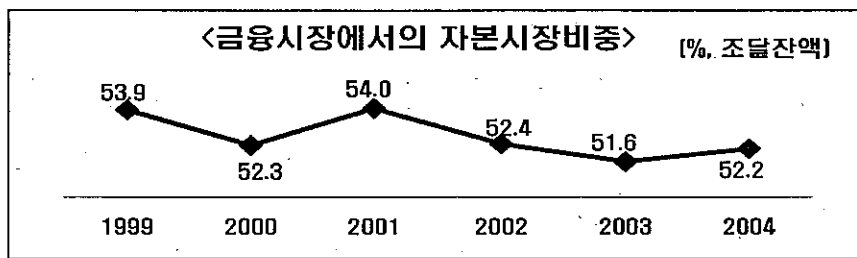
◇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이 미흡하여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Big Bang)이 필요한 시점

1.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 부진

□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위축 ⇒ 자본시장이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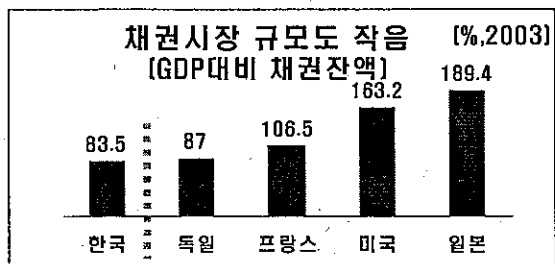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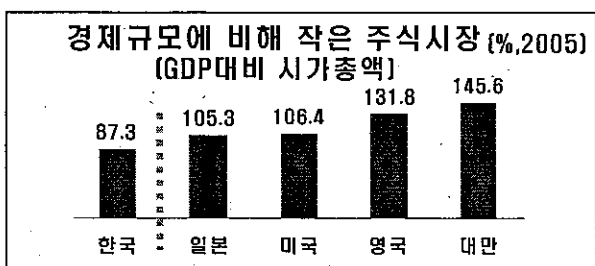


○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



* 전체 자금조달 잔액중 주식과 장기채권 비중(출처 : 한은 자금순환표)

□ 자본시장은 실물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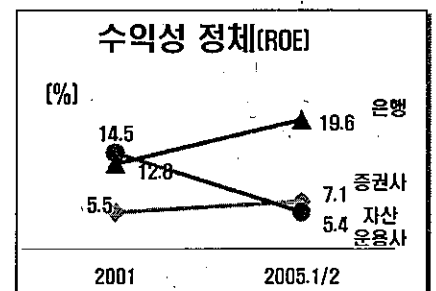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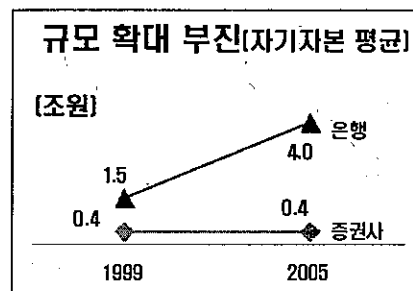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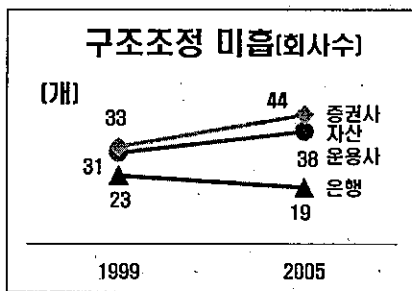


2.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의 발전 미흡

□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이 미흡하여 금융시장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산업간 불균형도 심화

○ 간접금융시장(은행)은 구조조정, 겸업화·대형화, 수익성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왔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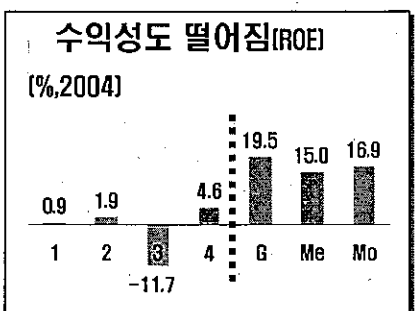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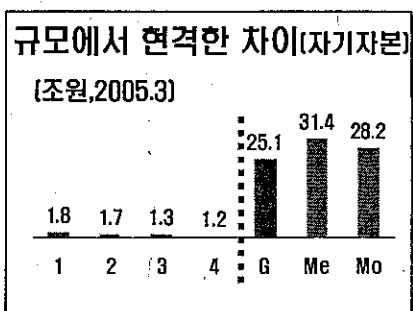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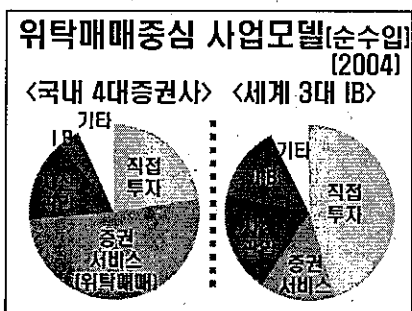
-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은 그간 구조조정이 부진했고 대형화·겸업화와 수익성 개선도 이루지 못함



○ 선진 투자은행(IB)과 비교시 질적·양적으로 경쟁력이 크게 미흡

- 국내 증권사는 증권서비스(위탁매매) 위주의 영업모델로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자기매매(Principal Investment)를 균형있게 영위하는 외국 투자은행과 큰 차이

- 규모 측면에서는 외국 투자은행의 1/20 수준(자기자본 기준)에 불과하고 수익성도 크게 낮음



* 1, 2, 3, 4 는 자기자본 규모 국내 4대 증권사, G(Goldman Sachs), Me(Merrill Lynch), Mo(Morgan Stanley)

3. 자본시장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자본시장’과 ‘관련 금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①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

⇒ 금융회사가 다르면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여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과 투자자 보호의 공백 발생

②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가 법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음

⇒ 창의적인 신종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거나 취급(판매, 중개)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금융혁신이 어려움

③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겸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

⇒ 다양한 금융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투자은행에 비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한계

*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증권 서비스(Securities service), 직접투자(Principal Investment) 등

④ 선진화되고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

⇒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저하

II. 제정의 기본 방향

자본시장의 규제 개혁 + 투자자 보호의 강화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률의 규율대상으로 포괄
 - 금융투자회사의 취급가능 상품과 투자자 보호 규율의 대상을 대폭 확대

기능별 규율 체제 도입

-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각각 재분류
- 취급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
 - 금융기능 =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상품 + 투자자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

업무범위의 확대

- 모든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 허용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 모든 부수 업무의 영위 허용
- 투자권유대행자 제도의 도입
- 금융투자업 관련 모든 외국원업무 허용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 투자 권유 규제 도입
 - 설명의무 신설, 적합성원칙 도입 등
- 이해상충 방지체제 마련
- 발행공시의 적용 범위 확대
 - 은행채,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등

Ⅲ.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1. 현 황

- 현행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열거하여 제한하고 있는 체제
 -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수익증권, 주식연계증권(ELS) 등 21개가 열거되어 있음
 - 파생상품은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으로 그 기초자산을 4가지로 열거하고 있음
- 금융투자상품으로 열거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의 취급이 허용되고 투자자 보호 규율이 적용되므로
 - 증권회사가 특정 신종 금융상품을 설계하거나 매매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전적으로 불확실하여 금융혁신의 발현을 제약하고
 - 신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하여 규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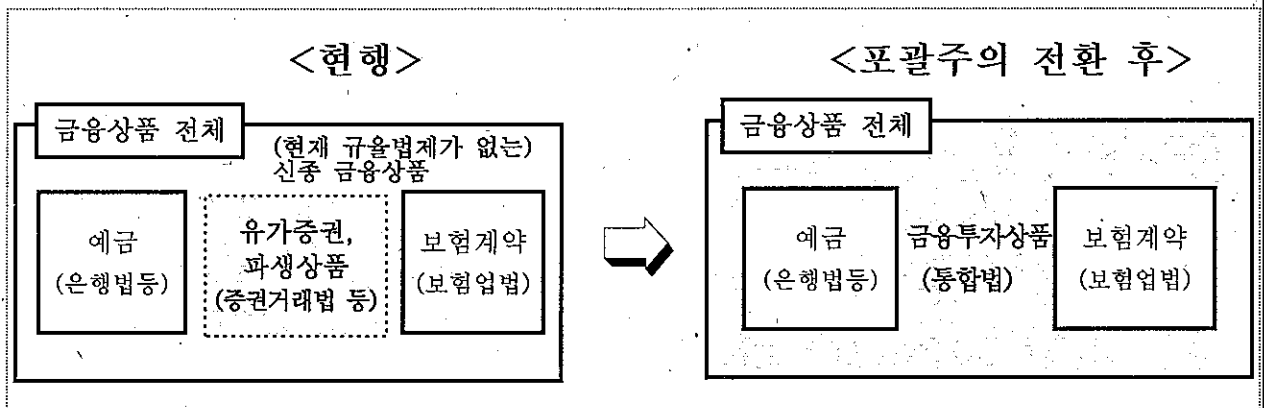
* 최근 증권거래법령에 추가 열거된 신종금융상품의 예 : 주식 워런트(ELW, '02년), 주식연계증권(ELS, '03년), 파생결합증권('05년)

2.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기본 방향>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정의

- 열거하지 않고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동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금융투자회사 취급허용, 투자자 보호규율 적용)



이렇게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을 금융상품의 특성(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 장외 파생상품, 장내 파생상품으로 분류한 후

- 각각의 개념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포괄주의로 전환

추상적 정의만으로 개념을 규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 일부 금융상품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후, 마지막에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채택(예시적 열거주의가 가미된 포괄주의)

가.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안)

- ①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을 부담하면서 ②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③ 거래상대방에게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

①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

- 투자한 원본 금액이 회수 금액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을 투자성으로 정의

- 원본 보장여부는 '원본 손실이 발행하는 상품 구조', 유통과정상의 가치변화(시장위험)등 포괄하여 판단

※ 전통적 예금 등 원본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 원본과 회수금액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명확화

- 지급 받은 자가 소비하는 금액(보험사의 위험보험료 등)등을 원본에서 제외 ⇒ 전통적 보험상품이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 발행자가 도산할 경우의 회수불능 금액, 중도 해지로 인한 수수료, 세금 등을 회수금액에 포함 ⇒ 모든 금융상품이 투자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히 함

② 이익 획득/손실 회피 목적

- 원본손실가능성이 있더라도 이익획득/손실회피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 가치변동이 있는 실물자산을 '소비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등

③ 현재 또는 장래에 금전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

- 금융투자상품을 '계약상의 권리'로 정의하여 투자성을 가진 실물자산 등이 금융투자상품이 아님을 명백히 함
- 현재에 금전등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는 증권에, 장래에 금전등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는 파생계약(선도)에 해당

※ 이러한 기준에 따라 투자성있는 예금(원본손실을 갖도록 설계된 파생결합예금 등), 투자성있는 보험(보험료중 투자되는 금액이 보험금보다 작은 변액보험 등) 등이 새롭게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됨

나. 증권, 파생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 ‘금융투자상품’을 상품의 특성에 따라 증권, 파생상품으로 분류한 뒤,

○ 각각 추상적으로 정의함으로써 포괄주의를 완성

□ ‘금융투자상품’을 그 특성에 따라 증권, 파생상품으로 분류

○ 원본 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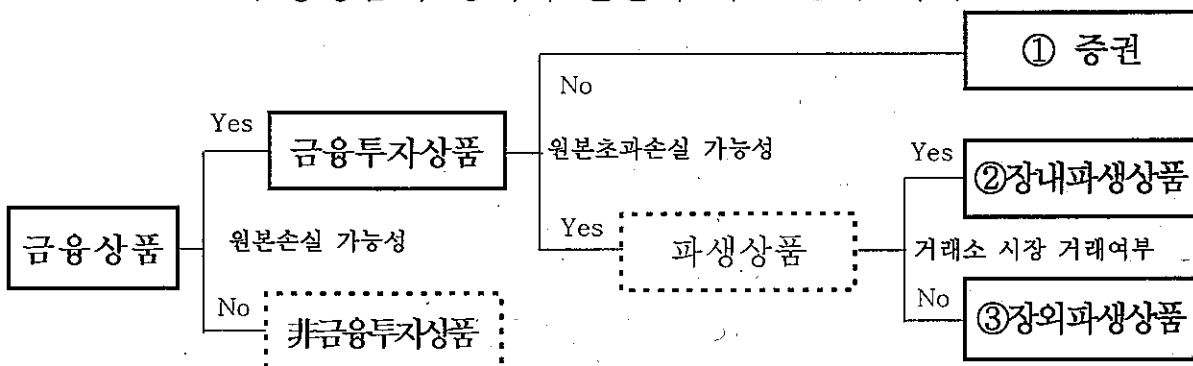
- 원본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 원본을 초과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파생상품」으로 분류

※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기준 : “금융투자상품의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외에 추가 지급의무가 없을 것”

○ 파생상품은 증권선물거래소등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여부에 따라 「②장내파생상품」과 「③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

<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체계>



(1) 증 권

- ◇ 주식, 사채등과 같은 전통적인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등 넓은 개념을 도입하고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 ◇ 집합투자증권(CIS), 구조화증권(Structured Product)과 같은 신종 증권은 투자계약, 파생결합증권과 같이 새로운 추상적 개념을 도입하여 포괄주의로 전환

① 전통적 증권 개념의 포괄주의 전환

- 주식, 사채, 특수채 등 전통적 유가증권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 국채, 지방채, 주식, 신주인수권, DR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

<전통적 유가증권의 포괄주의 전환 방안>

분류	포괄적 정의	포함되는 금융상품
채무증권	채무를 표시하는 것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일부 기업어음 등
지분증권	출자지분을 표시하는 것	주식, 신주인수권, 특별법인의 출자증권, 상법상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민법상 조합의 출자지분 등
수익증권	수익권을 표시하는 것	신탁 수익증권,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
증권예탁증권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의 발행 국가 밖에서 발행하는 증권	국내 증권예탁증권(KDR), 외국 증권예탁증권(GDR, ADR 등)

② 신종 증권을 포괄하기 위한 개념 마련

○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개념을 도입하여 '타인의 노력에 의해 수익이 결정되는' 모든 증권을 통합법상 증권으로 포괄

- 미국의 Howey기준*을 원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로 정의

*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을 정의하기 위해 미국 판례에서 형성한 기준 (① 이익을 기대하여 ② 공동사업에 ③ 금전등을 투자하고 ④ 타인의 노력의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

-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수익증권 등 전통적인 증권과 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증권뿐만 아니라 현행 자산운용업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비정형 간접투자의 지분*까지 포괄

* 예)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Netizen Fund에 대한 지분, 상법상 익명조합·민법상 조합을 활용한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지분

○ 파생결합증권(Securitized Derivatives)* 개념을 통해 타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외생적 지표에 의해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을 통합법상 증권으로 포괄

* 싱가포르 증권선물법 제2조 "유가증권" 개념을 원용 : "(d) 기초자산의 가격 등의 등락에 의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계약 또는 차액계약상의 권리"

-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의 계약상 권리로 정의

* 주가연계증권(ELS), 신용연계증권(CLN), 재해연계증권(CAT bond), 펀드연계증권(Fund Linked Note) 등 구조화 증권이 포괄대상

-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의 범위를 최광의로 넓게 정의*하여 증권의 포괄범위를 넓힘(시행령)

* 예)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평가가 가능한 것

(2) 장외 파생상품

- ☐ 파생상품을 선도, 옵션, 스왑으로 구분하고 그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

- ☐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개념을 최광의로 규정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기초자산으로 파생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허용함

※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개념과 동일하게 규정

(3) 장내 파생상품

- ☐ 파생상품 중 증권선물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을 장내 파생상품으로 정의

- 파생상품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상장가능한 장내 파생상품의 범위도 확대

IV. 기능별 규율(Functional Regulation) 체제의 도입

1. 현 황

◇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령체제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기관별 규율 체제(Institutional regulation)

□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부동산투자회사·선박운용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기 법률이 존재하여

○ 각 금융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를 열거하고 있음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상 금융투자업>

법률	금융회사	영위가능한 금융투자업
증권거래법	증권회사	매매업, 인수업, 매출업, 위탁매매업, 중개업, 대리업, 매매위탁의 중개·주선·대리업, 모집·매출의 주선업
선물거래법	선물회사	선물거래업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회사	중개업, 매매업, 인수업, 할인, 투자, 어음관리계좌업무
	자금중개회사	자금중개업
신탁업법	신탁회사	신탁업, 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자산운용업법	은행, 보험 등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투자자문사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사	투자일임업
	자산운용사	투자신탁·투자회사 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 기능
	수탁회사	투자신탁재산의 수탁업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자산관리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관리·운용업
	자산보관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보관업
부동산투자회사(REITs)법	자산관리회사	위탁관리REITs, CrREITs 자산의 투자·운용
	자산보관기관	위탁관리REITs와 CrREITs의 자산보관업
선박투자회사법	선박운용회사	선박투자회사 자산의 운용
	자산보관회사	선박투자회사 자산의 보관
중기창업지원법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산업발전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벤처육성특별법	창투자, 일반인 등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부품소재특별법	창투자, 상장법인등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금융사업자	신기술투자조합자금의 관리·운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사업자, 투자자 등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자산의 운용
	자산관리자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자금·자산의 보관·관리

- 각 법률은 규정된 금융업에 대해 독자적인 업규제(진입·건전성·영업행위규제)를 두고 있어 금융회사별로 상이한 규율이 적용

① 진입규제 측면

- 진입규제 방식은 허가제, 인가제, 등록제 등으로 다양하나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절차(예; 자산운용사→허가, 부동산투자회사→인가)를 요구하는 등 체계적이지 않음
- 진입규제 요건도 금융회사 별로 상이
 - 물적 설비 요건, 주요출자자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선박운용회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임원의 결격요건은 대부분 회사에 적용되나 투자일임회사, 투자자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 사업부문과 고유부문의 구분 요건은 신탁회사에만 적용되고 증권·선물·자산운용·투자일임·투자자문·선박운용·부동산투자·창투·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일부 조합형 펀드*의 경우 별도의 진입규제 적용없이 법령에서 규정한 자**는 당연히 자산운용업(펀드운용)이나 신탁업(펀드재산의 수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창투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등
 - ** 창투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KAMCO, 정부기금, 상법상 유한회사, 일반인등
- 진입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금감위, 건교부(부동산투자회사), 해수부(선박운용회사), 산자부(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중기청(창투사)으로 분산되어 있음

② 건전성 규제 측면 (자기자본규제비율,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경영공시 의무 등)

- 자기자본규제 비율은 대부분의 회사에는 적용되나 기업구조조정투자·부동산투자·선박운용·창업투자·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 대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규제도 대부분의 회사에는 적용되나 기업구조조정투자·신탁·종합금융·선박운용·창업투자회사에는 규정이 없음
- 분기별로 재무상황을 공시할 의무는 증권·자산운용회사등에는 적용되나 기업구조조정투자·종합금융·부동산투자·선박운용·창업투자·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 건전성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도 금감위, 건교부(부동산투자회사), 해수부(선박운용회사), 산자부(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중기청(창투자)으로 분산되어 있음

③ 영업행위 규제 측면 (적합성 원칙, 상품 설명의무, 선행매매·허위 사실유포 금지, 광고·약관규제 등)

-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의무(적합성 원칙)는 투자 일임회사에만 규정되어 있음
- 상품 설명의무는 선물·자산운용·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적용되나 증권·투자자문·투자일임·기업구조조정투자·신탁·종합금융·선박투자·창업투자·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 * 투자자문·투자일임·선박투자회사에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존재
-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자산운용사에만 적용됨
- 손실부담·이익보전 금지는 증권·선물·자산운용회사등에는 적용되나 기업구조조정투자·신탁·종금·창업투자회사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선행매매·허위사실 유포 금지는 증권·투자일임·투자자문회사에만 적용되고 선물·기업구조조정투자·신탁·종합금융·선박운용·부동산투자·창업투자·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 광고 규제는 자산운용회사에만 적용되고 약관 규제는 자산운용·신탁회사에만 적용되고 있음
- 간접투자재산 분리·보관 의무는 자산운용회사에는 적용되나 창업투자·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도 금감위, 건교부(부동산투자회사), 해수부(선박운용회사), 산자부(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중기청(창투사)으로 분산되어 있음

⇒ 금융투자회사별로 상이한 규율이 적용됨에 따라 규제 차이(Regulatory arbitrage)과 투자자 보호의 공백 발생

규제
임
진
의
사
회
자
투
자
금
상
업
금
행
위
고
1
1
참
고

[illegible]

※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상의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는 업규제(자산운용업자 규제를 두지 않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따르도록 함(vehicle만 규정))

현행 금융법상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규제

[illegible]

3>참고<행법상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규제 (투자권유 관련)

[illegible]

2. 기능별 규율 체제로의 전환

<기본 방향>

◇ 현행 기관별 규율체제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Functional regulation)로 전환

- ①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고객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
- ② 금융투자상품(증권·파생상품),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고객(전문, 일반 투자자)을 기준으로 금융기능*을 분류

* 예)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의 '중개업'

- ③ '금융기능'에 대하여 업규제(진입 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

- 영위주체(금융회사)를 불문하고 금융기능이 동일하면 동일한 진입·건전성·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 금융기능의 특성에 따라 업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

⇒ 기능별 규율의 적용으로 규제 차이(Regulatory arbitrage)이 사라져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업간의 형평성 제고

- 동일한 금융기능의 상대방인 투자자는 동일한 투자자 보호 법제를 적용
- 동일한 금융기능을 영위하는 한 영위 주체를 불문하고 동일한 규율을 적용

가.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방안

(1) '금융투자업'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정의 가능

- 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 ⇒ 투자매매(dealing)업
- ②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 ⇒ 투자중개(arranging deals)업
- ③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모아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 ⇒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업
- ④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 ⇒ 투자자문업
- ⑤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대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 ⇒ 투자일임업
- ⑥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수탁하는 업 ⇒ 신탁업

- 이에 따라 현재 다수의 법률에 산재해 있는 금융투자업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이 구분됨

<현행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에 규정된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분류>

법명	회사명	규정된 금융투자업	금융 기능
증권거래법	증권회사	매매업, 인수업, 매출업	①투자매매업
	증권회사	위탁매매업, 중개업, 대리업, 매매위탁의 중개·주선·대리업, 모집·매출의 주선업	②투자중개업
선물거래법	선물회사	선물거래업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	중개업,	①투자매매업
		매매업, 인수업	
	자금중개회사	어음관리계좌업무 자금중개업	수신업 자금중개업
신탁업법	신탁회사	신탁업, 개인연금신탁업, 연금신탁업	⑥신탁업
자산운용업법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①투자매매업 또는 ②중개업
	투자자문사	투자자문업	⑤투자자문업
	투자일임사	투자일임업	④투자일임업
	자산운용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③집합투자업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	
	-	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 기능	⑥신탁업
	수탁회사	투자신탁재산의 수탁업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자산관리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관리·운용업	③집합투자업
	자산보관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보관업	⑥신탁업
부동산투자회사(REITs)법	자산관리회사	위탁관리REITs 자산의 투자·운용	③집합투자업
		CrREITs 자산의 투자·운용	
선박투자회사법	자산보관기관	위탁관리REITs와 CrREITs 자산보관업	⑥신탁업
	선박운용회사	선박투자회사 자산의 운용	③집합투자업
중기창업지원법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회사 자산의 보관	⑥신탁업
	자산보관회사	선박투자회사 자산의 운용	
산업발전법	CRC 등	창투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③집합투자업
벤처육성특별법	창투자, 일반인 등	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부품소재특별법	창투자, 상장법인 등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투자조합자금의 관리·운용	
문화산업진흥법	문화사업자 투자자 등	문화산업전문회사 자산의 운용	⑥신탁업
	자산관리자	문화산업전문회사 자산의 보관·관리	

<참고 4>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금융업의 모습

통합 前(현행)		통합 後(기능별 분류)		
금융업		금융업	정의	전업단위
(방카슈랑스) 은행업	보험업	보험계약 체결·이행업	보험계약의 체결(인수)과 계약상 의 무를 이행하는 업무	보험업 (종전과 동일)
	상호저축 은행업	여수신업	예금계약을 통해 금전을 수취 하여 지급보증 등 신용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지급하는 업무	은행업 (종전과 동일)
	신협			
	(어음관리계좌)			
(채권인수) 은행, 보험사, 자산 운용사 (펀드판매)	선물업	종금업	①투자 매매업	금융 투자업
증권업			②투자 중개업	
은행 보험사 부동산·선박 투자회사 등	자산 운용 업	투자 일임업	③집합 투자업	
			④투자 일임업	
			⑤투자 자문업	
은행, 증권, 보험사	신탁업	⑥신탁업	특정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자의 특정의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업무	

(2) '금융투자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 금융투자상품을 위험의 크기를 기준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

① 증권

- 금융투자상품 중 추가지급 의무가 없이 최대 투자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

② 장내 파생상품

- 선도, 옵션, 스왑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

③ 장외 파생상품

- 선도, 옵션, 스왑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장내 파생상품이 아닌 것

□ 장외 파생상품은 위험의 크기가 크므로 증권이나 장내 파생상품에 비해 강화된 투자자 보호규제를 적용

(3) '투자자'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 투자위험 감수능력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

○ 투자 위험의 감수능력은 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에 의해 구분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구분기준을 마련(시행령)

- 국가, 중앙은행,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 상장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고,

- 비상장법인은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인은 순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전문투자자 자격을 인정

○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갖춘 자가 일반투자자 대우를 원하고 금융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 일반투자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

※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대우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 보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므로 도입하지 않음

○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고객을 항상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의무 부과

나. 기능별 규율을 위한 金融業규제 개편

◇ 금융기관별로 크게 상이한 업규제(진입·건전성·영업행위 규제)를
금융기능*별로 통일

* 투자자+금융상품+금융업 → 예)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의 '중개업'

(1) 진입규제의 개편

‘금융기관’별 인가체제에서 ‘금융기능’별 인가체제로의 전환

- ① 동일한 금융기능(금융투자업+금융투자상품+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가요건이 적용되도록 금융기능별로 진입 요건을 마련
- ② ‘금융투자회사’는 필요한 인가단위를 추가함으로써 업역을
확장하도록 함(add on 방식)

각 금융기능별로 투자자가 노출되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인가제와 등록제를 적용

(ㄱ) 고객과 직접 채권채무관계를 가지거나(투자매매업),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에 대해
서는 인가제를 채택

(ㄴ)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지 않는 금융투자업(투자일임업, 투자
자문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채택

- 등록제의 경우, 집행과정에서 사실상의 인·허가제로 운영되지
않도록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진입요건(예: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은 적용하지 않고 등록처리기한(2개월)을 법률에 명시

전반적인 진입요건은 외국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현행보다 완화
하되, 금융기능의 특성을 반영하여 진입요건의 수준을 차등화

- ① (금융투자업의 특성) 인가제를 채택한 금융투자업의 진입요건*은
등록제를 채택한 금융투자업에 비해 엄격하게 설정

* 객관적인 요건만을 요구하는 등록제와 달리 인가당국의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는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 등)도 추가

- 인가제 內에서도 고객과 채권채무관계를 갖는 금융투자업
(투자매매업)에 대해서는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금융투자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에 비해 강화된 요건을 설정함

- ②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취급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위험크기에 따라

- 장외파생상품 등 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인가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투자상품에 비하여 강화된 진입요건을 설정

- ③ (투자자의 특성) 고객의 위험감수능력의 크기에 따라

-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보다 강화된 진입요건을 설정

⇒ 금융기능별 진입요건의 수준(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

- 금융투자업 : ①투자매매업>②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신탁업 >③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금융투자상품 : ①장외 파생상품>②장내 파생상품·증권
- 투 자 자 : ①일반투자자>②전문투자자

※ 적용례) 일반투자자 상대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의 인가 요건이 가장
강하고, 전문투자자 상대의 채권 투자자문업의 인가요건이 가장 약함

인가 단위는 적절한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특정 영역에 전문화된
금융투자회사의 진입을 허용 (예: 인수업, 채권·주식 전문중개업 등)

진입요건 중 주요요건은 진입 이후에도 계속 충족해야하는
유지요건으로 규정하여 진입시 적격성이 지속되도록 함

<참고 5> 인가 단위에 따른 인가·등록 신청 예시

인가·등록 신청서

1. 인가·등록 신청 대상

금융투자업	취급대상 금융투자상품	고객인 투자자
<input type="checkbox"/> 투자매매업	<input type="checkbox"/> 증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투자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수업	<input type="checkbox"/> 채권	<input type="checkbox"/> 전문투자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식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증권	
	<input type="checkbox"/> 장내파생상품	
	<input type="checkbox"/> 장외파생상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투자중개업	<input type="checkbox"/> 증권	<input type="checkbox"/> 일반투자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채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문투자자
	<input type="checkbox"/> 주식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증권	
	<input type="checkbox"/> 장내파생상품	
	<input type="checkbox"/> 장외파생상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집합투자업	<input type="checkbox"/> 재산적 가치있는 모든 대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투자자
	<input type="checkbox"/> (단종) 부동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문투자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종) 선박	
	<input type="checkbox"/> (단종) 창업자	
	<input type="checkbox"/> (단종) 부실기업	
	<input type="checkbox"/> (단종) 신기술사업자	
	<input type="checkbox"/> (단종) 사회기반시설	
	<input type="checkbox"/> (단종) 부품소재기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투자일임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증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투자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내파생상품	<input type="checkbox"/> 전문투자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외파생상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투자자문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증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투자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내파생상품	<input type="checkbox"/> 전문투자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외파생상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탁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투자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증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문투자자
	<input type="checkbox"/> 금전채권	
	<input type="checkbox"/> 동산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지상권 등	
	<input type="checkbox"/> 무체재산권	

(2) 건전성규제의 개편

다음의 건전성 규제 장치를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적용

- 자기자본 규제 : 금융투자회사가 노출된 위험에 대해 적절한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기준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 대주주의 영향력에 의한 금융투자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예방
- 경영공시 : 금융투자회사의 분기, 반기, 연간 경영상황과 재무상황을 공시하도록 함
- 경영건전성 기준 :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유동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

각 금융기능별로 고객의 위험 노출 수준에 따라서 금감위는 건전성 규제의 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함

- (1) 고객과 직접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에 대해서는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
- (2)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
- (3)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지 않는 금융투자업(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3) 영업행위 규제 개편

6개 금융투자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 규제’와 금융투자업별 고유특성을 반영한 ‘업별 규제’를 마련

① (공통 영업행위 규제)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를 상대로 영업을 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지켜야할 규율을 규정

- 신의성실의무, 금융상품 설명의무, 손실보전 금지등 규제는 모든 금융투자회사에게 확대 적용하고
-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할 의무(know-your-customer-rule), 원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unsolicited call)등 선진 규제를 도입

<주요 공통 영업행위 규제의 정비 내용>

규제 명칭	주요 내용	비고
신의성실의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업을 수행할 것	확대
투자자의 구분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	신설
know-your-customer-rule	○ 투자자 특성(투자목적, 재산상태 등)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파악한 후 서면 확인을 받을 것	신설
적합성 원칙	○투자권유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적합하도록 함	확대
설명 의무	○투자권유시 금융상품의 내용, 위험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서면 확인받도록 함 ○설명 의무 미이행으로 손해발생시 금융투자회사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원본손실액을 배상액으로 추정	확대 신설
부당권유 규제	○손실부담의 약속 금지 ○이익 보장 약속 금지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전화 등에 의한 투자권유 금지(unsolicited call 규제)	확대 확대 신설
약관 규제	○약관의 제정·변경시 금감위 보고 및 공시 의무화	확대
광고 규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투자광고 금지 ○금융상품의 위험등 투자광고 필수 포함내용 규정	신설 확대

② (금융투자업별 영업행위 규제) 6개 금융투자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각기 특성에 맞는 별도의 규율*을 마련

* 예) 자기계약의 금지(투자매매업자), 임의매매 금지(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재산의 자산운용제한(집합투자업자), 금전대여 금지(투자자문·일임업자),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구분(신탁업자)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에 대하여 차등화된 행위규제 적용

○ 전문투자자는 위험 감수 능력이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규제는 일반투자자에게 집중

(1)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rule은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

(2)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는 규제(적합성의 원칙)은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함

(3) 투자권유시 금융상품의 내용·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는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하고 전문투자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다. 집합투자업(펀드운용, 펀드 규제)에 대한 기능별 규율

(1) 현 황

□ 자산운용업과 펀드에 대한 일반법인 자산운용업법외의 법률로서 펀드운용업과 펀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10개*가 존재

○ 각 간접투자기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기능별로 분류하면 투자회사(Mutual Fund)와 조합(Partnership)으로 구분 가능

* 자산운용업법 이외의 법률상 간접투자기구

법명	Vehicle명칭	운용 대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법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개발사업, 임대차, 부동산관련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구조조정 기업이 매각하는 부동산
선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	선박의 취득, 대선 등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회사에 대한 투자
중기창업지원법	창업투자조합	창업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산업발전법	기업구조조정 조합	구조조정 대상기업 투자·인수·매각, 구조조정대상기업 매각자산 매입, 부실채권 매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	SOC사업시행자의 주식·채권 취득, 대출 등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부품소재기업지원 특별법	부품소재조합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상품의 생산·유통·소비등, 문화상품의 관리·운용·처분
여신전문 금융업법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 해당 법률상의 펀드운용업자와 펀드에 대한 규제 수준이 미흡하여 규제차익과 투자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

○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펀드’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투자자 보호규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

○ 자산운용업법상 펀드와 ‘동일한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규제차익이 발생

<개별 법상 단종 자산운용업 현황>

		건교부	해수부	산자부		중기청		문화 관광부	예산처	재정부
펀드명		부동산 투자회사	선박투 자회사	CRC 조합	부품소재 조합	창투 조합	벤처투자 조합, 개인조합	문화산업 전문회사	SOC펀드	신기술 투자조합
집합 투자업 규제	진입규제*	×	×	×	×	×	×	×	○	×
	펀드 운용자	자산관리 회사	선박운 용회사	CRC,기 금,캠코	창투사,금 융기관등	창투사	누구나	문화사업자, 투자자등	간투법상 자산운용사	신기술 금융업자
	건전성 규제*	×	×	×	×	×	×	×	○	×
	영업행위 규제*	×	×	×	×	×	×	×	○	×
감독권(진입규제 및 기타 규제)		주:건교부 (부:금감위)	해수부 (금감위)	금감위 (산자부)	×	중기청	중기청	×	금감위	금감위
펀드 규제	설립규제	인가	인가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
	재산분리 보관	○	○	×	×	×	×	○	○	×
	공시 등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	×	○	×
감독권 (설립규제 등)		건교부 (금감위 통보)	해수부 (금감위 통보)	금감위	산자부	중기청	중기청	문화 관광부	금감위 (예산처 협의)	×

*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 기준

① 자산운용업자로서의 규제 현황

- (펀드 운용자) 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mutual fund) · 투자신탁, SOC투융자회사의 펀드 운용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로 한정하는 반면
 - 기업구조조정 · 부동산 · 선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창투 · 기업구조조정 · 신기술투자 · 벤처투자조합은 펀드운용자로서의 적격요건(진입규제)이 없거나 미흡
- (건전성 규제) 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사, SOC펀드의 자산운용사 등의 경우에는 위험대비 자기자본규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경영공시 등이 적용되나
 - 기업구조조정 · 부동산 · 선박·문화펀드, 창투 · 기업구조조정 · 벤처투자 · 신기술투자 조합은 동 규제가 없거나 미흡
- (영업행위 규제) 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손실부담 금지 등이 적용되나
 - SOC펀드, 기업구조조정 · 부동산 · 선박·문화펀드, 창투 · 기업구조조정 · 벤처투자 · 신기술투자 조합은 동 규제가 없거나 미흡

② 펀드에 대한 규제 현황

- (펀드 설립) 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기구, 기타 투자조합은 등록제인 반면
 - 부동산투자·선박투자회사는 인가제로서 규율이 지나치게 강하고, 신기술조합의 경우에는 등록제도 없음
- (재산 분리보관) 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기구, SOC투융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선박·문화펀드는 투자재산을 별도의 수탁회사에 맡겨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 창투·기업구조조정·신기술투자·벤처투자 등은 고유재산과 별도 구분하지 않고 있음
- (외부 감사) 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기구에만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고
 - SOC투융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선박·문화펀드, 창투·기업구조조정·신기술투자·벤처투자조합 등은 규정이 없음
- (자산운용 공시) 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기구의 경우 3월에 1회이상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고 수시공시의무도 부담하나
 - 부동산투자·선박투자회사에는 수시공시 의무가 없고 벤처투자·신기술투자조합 등은 공시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2) 개선 방안 (부처협의 중)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 펀드운용업과 펀드에 대해서도 통합법을 원칙 적용

- 다만,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공모펀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해당 부처의 산업 정책적 측면의 예외를 인정하고 주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인정

① 타부처 소관 '공모 펀드'에 대해 통합법상 집합투자업 규제, 펀드 규제를 원칙 적용하고

-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작으므로 통합법상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개별 법상 규제는 적용)

- 공모와 사모의 구분은 통합법상 기준(청약의 권유를 받는자의 수가 50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름

② (집합투자업 규제) 개별 법률상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통합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 인가를 받도록 함

- * 인가요건은 단종 집합투자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종합 집합투자업자에 비해 완화(예; 자기자본 등)

- 집합투자업자 인가시 금감위는 소관부처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주무부장관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검사권, 금감위에 대한 조치요구권 및 이에 대한 금감위의 조치의무 인정

○ 통합법상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법상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

- (건전성 규제) 집합투자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통합법상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되,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회사(창투사, CRC,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 (영업행위 규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영업행위 규제는 모두 적용하여 투자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함

③ (펀드 규제) 개별 법률상 공모 펀드는 금감위에 등록함으로써 설립하도록 함

○ 펀드 설립 등록시 금감위는 소관부처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주무부장관의 펀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검사권, 금감위에 대한 조치요구권 및 이에 대한 금감위의 조치 의무 인정

○ 펀드의 재산을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펀드에 대한 외부 감사·공시 등을 의무화

④ (특례 인정) 다만, 투자자 보호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정책적 특례*는 해당법에서 규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펀드별로 특화된 투자대상 자산 규제, 조합 설립시 최저 납입출자금액 규제, 조합원수 규제, 펀드에 대한 동일인 주식소유 제한 등

〈참고 6〉 현행 금융법상 간접투자기구(Vehicle) 규제

[illegible]

라. 국외 금융투자업자(Cross-border supply)의 규제

(1) 현황

□ 현행 금융관련 법률은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금융업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 모든 경우에 금융업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

※ 일부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거주자를 상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Cross-border supply)하고 있음

예) 국내 청유사를 상대로 한 해외 상품파생업자의 油價파생거래, 국내 기업의 해외 IPO시 해외 증권사의 발행주선 행위 등

□ 금융투자업자의 소재(presence)를 불문하고 국내에 동일한 효과를 미치는 금융업은 동일하게 규율되어야 하므로 Cross-border-Supply에 대한 규제 내용을 명확하게 하되

- 그 범위는 외국입법례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함으로써 외국 업자의 부담과 감독당국의 집행 부담을 완화

(2) 개선 방안

□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도록 하되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① 전문투자자 중 법인만을 상대방으로 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②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행위를 하지 않고 거주자의 주문에 따라 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영국,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투자권유(solicitation)가 없을 경우 인가를 받지 않고 cross-border-supply를 허용

V. 업무범위의 확대

1.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1) 현 황

□ 현행 법령체계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금융투자업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 금융투자업 상호간에는 겸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겸업화·대형화된 금융회사(투자은행; IB)의 출현에 걸림돌

(2) 개선 방안

기능별로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에 대해서 상호간 겸영을 허용

※ 영국, 호주, 미국, 홍콩 등 선진 입법례에서도 금융투자업간 겸업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

- 다만, 겸영에 따른 투자자와 업자간, 투자자간 이해상충 가능성은 이해상충 방지체계(Chinese wall 등)를 통해 방지 가능

⇒ 투자매매(인수),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신탁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종합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

*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선진 투자은행은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직접투자(Principal Investment), 증권서비스(Securities Services)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종합적으로 영위

2.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1) 현 황

□ 현행 금융법은 금융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를 사전에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어

* 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인가받은 금융업에 부수되는 업무(예: 증권업의 부수업무는 유가증권의 평가업무, 보호예수업무 등이 있음)

○ 부수 업무의 확대를 위해서는 매번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업무 확대가 적시성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개선 방안

□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를 법률에 사전에 열거(열거주의 체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의 취급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체제(Negative 체제)로 전환

○ 금융투자회사는 부수업무 개시 7일 전에 감독당국에 부수업무 개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감독당국은 부수업무가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또는 투자자 보호, 시장 질서에 문제를 야기할 경우 부수업무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3.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1) 현 황

- ☐ 현재 증권회사 등은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CD/ATM, CMS, 타행환, 전자금융, 지방은행 등), 어음교환시스템 등 11개 시스템

- 증권계좌를 통해 투자(위탁매매, 수익증권), 결제(신용카드, 지로납부, 자동이체 등), 송금(계좌이체), 수시 입출금(CD/ATM)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종합계좌(CMA)의 운영이 불가능

- ☐ 현재 일부 증권사가 은행과 펌뱅킹(firm banking) 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에게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자금이체, CD/ATM 입출금 등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입출금·자금이체 등에 제한* 존재

* 계좌이체가 영업시간내로 제한되고 ATM/CD를 통한 입금, 은행 창구 출금, 카드·지로결제, 급여이체 등이 불가능

(2) 개선 방안

- ☐ 금융투자회사가 결제·송금·수시입출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

-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 대표금융기관의 업무 :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 범위이내에서 수행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투자자를 위한 자금이체업무,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3)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방안

- ①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다중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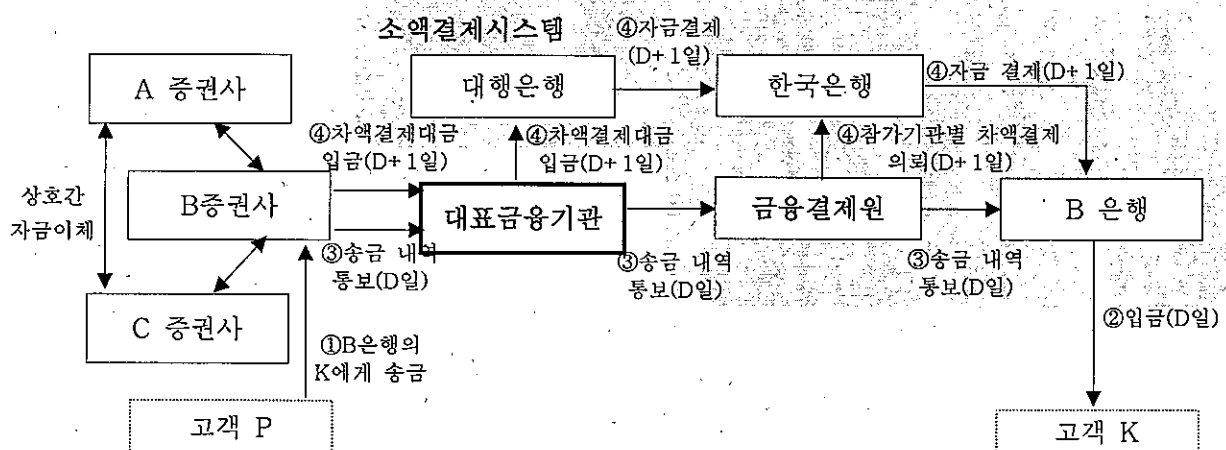
<법령에 반영된 안전성 담보장치>

- (1단계) 금융투자회사의 중개계좌(위탁매매)내의 현금만(고객예탁금)을 대상으로 함 ⇒ 증권 가치변동 리스크를 원천 차단
- (2단계) 대표 금융기관을 통해 참여 ⇒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결제불능시 대표금융기관이 결제 책임을 부담
- (3단계) 소액결제망에 참여 하는 대표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은행 수준의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도록 함
- (4단계) 대표금융기관에 대해 대표금융기관을 한은법/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보아,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참가방식 관련 안전성 담보 장치(예)>

- (5단계) 대표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행은행에 대해 결제한도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예치하도록 하고 대행은행은 그 중 한은이 정하는 수준의 담보물을 한은에 예치
- (6단계) 대표금융기관은 대행은행을 통해 결제 ⇒ 만일 대표금융기관이 유동성 부족시 대행은행이 지원
- (7단계) 개별 금융투자회사와 대표금융기관은 한은이 정하는 결제한도(순채무액)의 범위내에서만 결제
- (8단계) 개별 금융투자회사는 결제한도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물(국채 등 안전자산)을 대표금융기관에 예치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참여방식의 구조>



※ 구체적인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은 금융업권간 협의 사항임

4. '투자권유대행자 제도' 도입을 통한 판매망 확충

(1) 현 황

-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기관의 점포를 방문해야 하므로 투자자의 불편 초래

* 영업점('05.6월,개) : 1,528(증권), 18(선물), 6,479(은행), 7,025(생보·손보)

(2) 개선 방안

-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보다 다양한 경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대행자(Introducing Broker)제도를 도입

- 투자권유대행자는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사실상 중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

- 투자권유대행자에게 증권관련 자격증 등 전문지식을 갖추 것을 요구

- 판매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상품의 내용·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손해배상책임의무를 지도록 하는 등 '투자권유 규제'를 모두 적용하여 불완전 판매를 예방

- 판매권유시 자기 명의·계산에 의한 판매를 금지하고 투자권유대행자임을 고지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

- 투자권유대행자는 업무를 위탁한 금융투자회사가 관리하도록 하고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게도 배상 책임 부과

※ 현재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수익증권 판매권유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판매 권유자에 대하여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권유 규제(자격, 영업행위 규제 등)를 강화 (위반시 제재도 가능, 금융투자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병과 가능)

5. 집합투자업의 업무 확대

(1) 집합투자기구(Vehicle)의 확대

☐ 현 황

- 현행법상 간접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주식회사(Mutual Fund), 합자회사(PEF)로 한정되어
- 다양한 Vehicle의 활용이 곤란하고 규정되지 않은 간접투자기구를 이용한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 규율이 미흡

☐ 개선 방안

- 민법, 상법 등 현행법상 설립가능한 모든 Vehicle을 집합투자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추가되는 집합투자기구 : 유한회사, 합자회사(공모포함), 상법상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

※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어 활용될 수 없으므로 제외

(2) 집합투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 현 황

- 간접투자 대상자산을 증권, 선물,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어음, 보험금지급청구권, 어업권, 광업권 등으로 열거

☐ 개선 방안

- 집합투자 대상 자산을 열거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예; 지적재산권 등)'을 집합투자 대상자산으로 정의

(3) 펀드종류별 투자대상 자산제한 폐지

□ 현 황

- 주로 투자하는 자산에 따라 펀드 종류를 증권펀드·파생상품펀드·부동산펀드·실물펀드·단기금융펀드(MMF)·재간접펀드·특별자산펀드 등 7종류로 구분하도록 의무화하고
- 펀드의 종류별로 운용대상 자산을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는 펀드의 개발이 곤란

< 펀드의 종류별 운용대상 자산 규제 현황 >

구 분	증권펀드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MMF	재간접펀드	특별자산펀드
투자증권	○	○	○	○	○	○	○
파생상품	○	○	○	○	×	○	○
부 동 산	×	×	○	×	×	×	×
실물자산	×	×	×	○	×	×	×
특별자산	×	×	×	×	×	×	○

- ※ ①증권펀드: 펀드자산의 40%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
- ②파생상품펀드: 펀드자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장내·외 파생상품에 투자
- ③부동산펀드: 펀드자산을 부동산에 투자
- ④실물펀드: 펀드자산을 실물자산에 투자
- ⑤단기금융펀드(MMF): 펀드자산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 ⑥재간접펀드(FoF): 펀드자산의 50%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
- ⑦특별자산펀드: 펀드자산을 특별자산에 투자
- ※ 실물자산: 금·곡물·석유 등 물품(commodity) 및 이를 가공한 물품 등
- 특별자산: PEF지분·보험금지급청구권·금융기관의 금전채권·어음·신탁 수익권·(영화 등)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권 등

□ 개선 방안

- 현행 7종류의 펀드구분을 4종류로 재분류하고, 펀드 종류별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을 없앴으로써 MMF를 제외한 모든 펀드가 다양한 투자대상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 자산(펀드자산의 50%초과 투자자산)을 기준으로 증권펀드·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단기금융펀드(MMF)로 구분
 - 각 펀드별 주요 투자대상 자산에 해당 기초자산 관련 파생상품을 포함시킴으로써 파생상품펀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 실물펀드와 특별자산펀드를 통합 → 특별자산펀드
 - 재간접펀드는 운용대상 자산의 유형상 증권펀드에 해당
- 또한, 주요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펀드(혼합자산펀드)를 신설

<펀드 종류구분 개선방안>

구 분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MMF	혼합자산펀드
증 권	○	○	○	○	○
파생상품	○	○	○	×	○
부 동 산	○	○	○	×	○
실물자산	○	○	○	×	○
특별자산	○	○	○	×	○

(4)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 현 황

- 소수의 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그 동안의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규제가 남아있음

*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등 일부 규제완화

□ 개선 방안

- 공모펀드와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으므로 수익자총회 개최,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의 자산 운용회사 감시의무 등의 규제는 적용하지 않음

구 분	공모펀드(현행)	사모펀드(현행)	사모펀드(개선)
금감위 등록	적용	적용	적용
자산운용회사만 운용가능	적용	적용	적용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위탁의무	적용	적용	적용
수익자 평등원칙 준수 의무(매입·환매 기준가격, 수익권·주권 동등원칙 등)	적용	적용	적용
자산평가(시가평가 원칙)	적용	적용	적용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적용	면제	현행과 같음
판매 보수·수수료 한도	있음	없음	현행과 같음
자산운용 규제(동일종목 투자 한도 등)	적용	면제	현행과 같음
회계감사 의무	적용	면제	현행과 같음
약관(정관) 공시 의무	적용	면제	현행과 같음
자산운용보고서·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보고서 작성 및 제공의무	적용	면제	현행과 같음
수익자총회 개최의무	적용	적용	면제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의 감시의무*	적용	적용	면제

* 자산운용업자의 운용지시(행위)의 법령·약관(정관)·투자설명서 위반여부 확인의무,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기준가격 산출의 적정성 확인의무 등

(5)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한 제한 폐지

□ 현 황

- 펀드별 자산운용방법을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어 다양한 운용방법의 활용이 곤란

* 취득·매각, 대여(투자증권), 관리·개량·개발·임대(부동산)

□ 개선 방안

- 자산운용방법을 법령에서 열거하지 않고 '자산을 기초로 하여 이익을 창출시키는 일련의 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 부동산 분양권 취득, 선박 관리·대선·개량 등 가능

(6) 펀드에 대한 환매금지 규제 완화

□ 현 황

-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실물간접투자기구는 환매금지형으로만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간접투자재산 중 일부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환매가 금지되는 과도한 규제

□ 개선 방안

- 펀드의 운용대상자산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어 어느 펀드나 부동산·실물 등에 대한 투자가 자유로워지므로 환매금지 여부는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 부동산, 실물 등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의 유동성(환금성)을 감안

6. 외국환업무의 범위 확대

(1) 현 황

□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금융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 증권회사 : 외화증권 매매(인수, 위탁매매 포함), 고객의 투자자금 환전, 일부 외환파생거래(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등 별도 진입요건 충족 필요)

선물회사 : 고객의 투자자금 환전, 환위험 헷지를 위한 선물환거래

자산운용사 : 외화증권 매매(인수, 위탁매매 포함), 고객의 투자자금 환전

○ 인가받은 금융투자업과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간에 괴리가 존재

- 국내 금융법에서 허용된 금융투자업이라 하더라도 이를 모두 외화로 취급할 수 없고

- 특히, 자산운용업자에게는 원화로는 허용되지 않는 증권 투자 매매업(인수업 포함)과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을 허용하고 있는 문제점

○ 외국환 업무(業)와 고유재산의 운용을 위한 외국환 거래(자본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열거하고 있어

-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적정한 헷지거래가 어려움

※ 예) 증권사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증권거래와 관련한 선물환거래는 허용되나 거주자간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한 선물환거래는 허용되지 않음

(2) 개선 방안

□ 금융투자업의 범위 확대에 따라 외국환 업무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업무확대 효과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 ① 통합법에서 허용된 금융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수되는 외국환 업무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서의 외국환 업무 범위에 포함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두 허용
- ② 아울러 고유재산의 자산운용(헷지, 투자)을 위해 행하는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절차를 준수하는 한 허용

<외국환 업무 및 외국환 거래의 확대 방안>

대상 행위	확대 방안
금융투자업 측면 (외국환 업무)	①인가받은 원화 금융투자업은 외화로도 취급 허용 ②인가받은 금융투자업관련 고객에 대한 환전업무 허용
고유재산의 자산운용 측면 (외국환 거래)	○ 고유재산의 운용(투자, 헷지)목적의 자본거래를 모두 허용 (외국환거래법상 관련 절차는 준수) * 예) 파생상품의 매매·중개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자도 고유재산의 자산운용목적으로 선물환, 외환스왑등 외환파생거래 가능

⇒ 통합법 제정과 함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반영

VI.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1. 현재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부분 해소

가. 현황 및 문제점

□ 경제적 실질이 금융투자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 다수 존재

① 장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업의 경우,

- 증권회사가 파생상품의 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규제가 일부 존재(증권거래법)*하나

* 진입규제(자기자본 1천억원이상 등), 건전성 규제(총·위험액 제한 등), 일부 영업행위규제(거래상대방 제한, 위험 설명의무 등) 적용

- 은행, 보험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경우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이 미흡

② 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기구(Vehicle; 투자신탁, 투자회사, 합자회사)이외의 vehicle을 이용하는 비정형간접투자*의 경우

*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등 vehicle을 이용한 간접투자

- 자산운용업법상의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대한 공시규제도 적용되지 않음*

* '05.3월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법상 익명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포함하여 일부 문제 해결

나. 개선 방안

① 장외 파생상품 매매 · 중개업이 금융투자업에 포함되므로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규제(진입규제, 영업행위규제, 건전성 규제)가 적용

※ 예) 외환증거금 거래(FX margin trading) 등 각종 증거금 거래 등과 같이 투자자보호 규율이 없었던 영역을 보완

② 비정형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 우리 민 · 상법상 인정되는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기구가 허용되어 자산운용업법상 투자자 보호규제(예; 등록의무, 투자재산의 별도 보관 · 관리 의무, 투자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를 적용

* 유한회사, 상법상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 등 민 · 상법상 가능한 모든 vehicle

- 다수인이 공동으로 투자한 후 수익을 나누는 계약인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이 증권 개념에 포함됨으로써 비정형 간접 투자계약도 증권에 해당되어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

- ①공모시 ‘발행공시 규제’가 적용하고, ②판매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해당)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도 적용

2. 「투자권유 규제」의 도입

가. 설명 의무의 도입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여야 함
 - 형식적 설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도록 하고
 - 투자자를 오도(misleading)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중요사항의 설명에 허위나 누락이 없도록 할 것을 의무화함
 - * 현재는 선물·자산운용·부동산투자회사에만 설명의무가 존재하나 투자자문·투자일임·선박투자회사에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만 존재하고 증권사, 신탁회사, 창투사 등에는 설명의무가 없음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분석능력이 없는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전문투자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 입법례; 英(COB 5.4.2G, 5.4.3R), 호주(FSRA 941A, 1013D), 싱가포르(SFA 128), 홍콩(SFO 168(e),(g)), 日(금판법 3조), 美(SEC Rule 9b-1)
 - * 참고 : COB(Code of Business, FSA, 영국 금융청), 호주 FSRA(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싱가포르 SFA(Securities and Futures Act), 홍콩 SFP(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日 금판법(금융상품의 판매등에 관한 법률), 美 SEC Rule(증권거래위원회 규칙)
- 설명의무 미이행, 중요 사항 설명의 허위·누락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금융투자회사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검토(일본의 「금융상품의 판매등에 관한 법률」 입법례)
 - 이 경우, 투자자의 원본 결손액*을 금융투자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함으로써 투자자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함
 - * 투자자가 금융상품 투자로 지급한 또는 지급할 금전의 총액에서 투자자가 금융상품으로부터 취득한 또는 취득할 금전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
 - 손해액의 추정 규정으로 인해 손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책임이 금융업자에게 전가되는 효과

나. 적합성 원칙의 도입

-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하여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Rule' 도입하고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하고
- 'Know-Your-Customer-Rule'과 적합성의 원칙은 위험감수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함

※ 입법례; 英(COB 5.3.5), 호주(FSRA 945A), 싱가포르(SFA 123), 홍콩(SFO 168.(d)), 日(금판법 7조, 證法 43조), 獨(證法 31조)

다.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의 규제 도입

-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규제
 -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투자권유는 투자자의 사생활과 평온한 삶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 자택 또는 회사로의 방문, 전화, 길거리에서 고객 행위 등 실시간대화에 의한 투자권유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함

※ 입법례; 영국(FSA 56), 호주(FSRA 992A, 992AA)

- 동 규제는 위험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

※ 투자성있는 보험계약, 증권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3. 투자광고 규제 도입

□ 금융투자회사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광고 규제를 도입

※ 입법례; 英(FSA 57조)(COB 3.8.8R), 호주(FSRA 1018A), 싱가포르(SFA 123.(b)), 홍콩(SFO 109.(1).(a)), 獨(證法 36b조(1),(2))

○ 투자권유와 투자광고를 구분하기 위해

- 투자권유를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을 권유하는 행위로 정의함으로써 불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의제

* 광고가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이 적용되어 광고가 사실상 불가능해 짐

○ 광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

-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 아울러 광고에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무인가 업자,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투자업자 아닌 자가 금융투자업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

○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회사(협회, 발행자 등 포함)만 할 수 있도록 규정

4.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도입

(1) 현 황

□ 이해상충은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이나 타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 단일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나 특히, 복수의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발생가능성이 커짐

(1) 단일의 금융투자업 영위시 이해상충 발생 양태

- 투자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① 고유계정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② 제3의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발생

(2) 복수의 금융투자업의 겸영시 이해상충 발생 양태

- 특정 금융투자업의 투자자 이익을 희생하여 ① 타 금융투자업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② 타 금융투자업의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 발생

(2) 개선 방안

□ 선진 입법례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상충 방지체제를 마련

※ 입법례; 英(COB 2.4)(COB 5.3.5), 호주(FSRA 945A), 싱가포르(SFA 123.(k)), 홍콩(SFO 168.(2).(h)), 日(證法 32조②), 獨(證法 31조(1).2, 32조(1), 33조(1).2.)

① 이해상충 행위의 금지

- (단일의 금융투자업 영위시) 투자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이나 타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하여 금지시킴
 - (투자매매업) 투자자의 매수·매도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자기계산으로 매수·매도하는 행위(선행매매) 등
 - (투자중개업)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등
 - (집합투자·투자일임·자문·신탁업)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자 재산의 매도·매수의사를 결정한 후, 이의 실행 전에 자기계산으로 매도·매수하는 행위 등
- (복수의 금융투자업 영위시) 특정 금융투자업의 투자자 이익을 희생하여 타 금융투자업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 금융투자업의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킴
 - 인수한 증권을 투자자재산(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으로 매수하게 하는 행위
 - 투자자재산간 거래하는 행위 등

② 이해상충 관리시스템의 구축 의무

-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내부 관리(internal controls)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 상시적으로 이해상충의 발생할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평가하며 내부 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

③ 내부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해상충을 파악한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그 내용을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도록(disclosure) 의무화하고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낮춘 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함

④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금융투자업간에는 정보교류 차단 장치(chinese wall)를 의무화

- 투자매매업과 집합투자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업간에 대하여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큰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 임원(대표이사와 감사 제외)과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며
- 이해상충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무공간과 전산설비의 공동 이용을 금지함

5. 발행 공시규제의 적용범위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증권의 발행임에도 불구하고 발행 공시 규제(유가증권신고서)가 적용되지 않는 증권이 다수 존재

- 은행채, 간접투자증권, 주택저당증권(MBS) 등 수익증권, 국가가 매출하는 유가증권 등은 일반적 사채와 경제적 실질이 같음에도 발행공시 의무가 면제되어 발행자의 정보가 공시되지 않음

(2) 개선 방향

□ 발행공시 규제(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 적용 대상 증권을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증권으로 확대

- 발행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증권은 발행주체가 국가에 준하는 채권(국채, 지방채, 특별한 법률에 의해 당연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사채)으로 한정
- 은행채,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를 폐지하는 방안 검토

* 집합투자기구 등록시 투자설명서 제공의무를 폐지하여 부담을 완화

※ 발행공시 확대로 발행분담금이 증가하므로 발행분담요율(주권; 1.8bp, 사채권; 5~9bp)을 낮추는 방안 검토

※ 발행공시 규제와 투자권유 규제(설명 의무)와의 관계

	발행공시 규제	설명 의무
적용 단계	금융상품의 발행단계	금융상품의 판매단계
정보제공 대상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	현재화된 특정 투자자
방법	비대면적인 방법	대면적 방법
수단	서면	서면, 대화, 통신 등
대상 금융상품	증권	모든 금융투자상품

VII. 기타 법률 통합과 관련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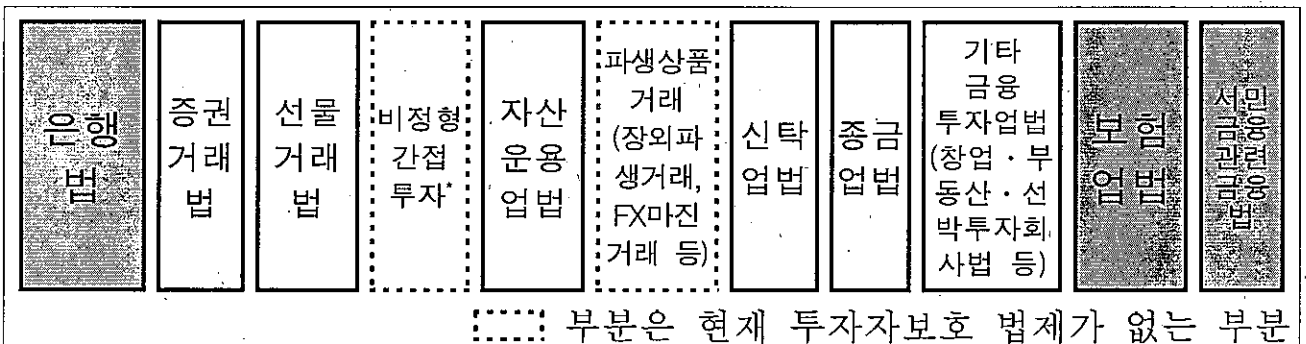
1. 법률의 통합 범위

-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제외한,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16개 법률*)중 7개 법률을 통합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증권선물거래소법(이상 폐지), 여신전문금융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상 일부 개정)

- 현재 규율법제가 없는 영역(비정형 간접투자, 파생금융상품)도 통합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여 규제 공백을 없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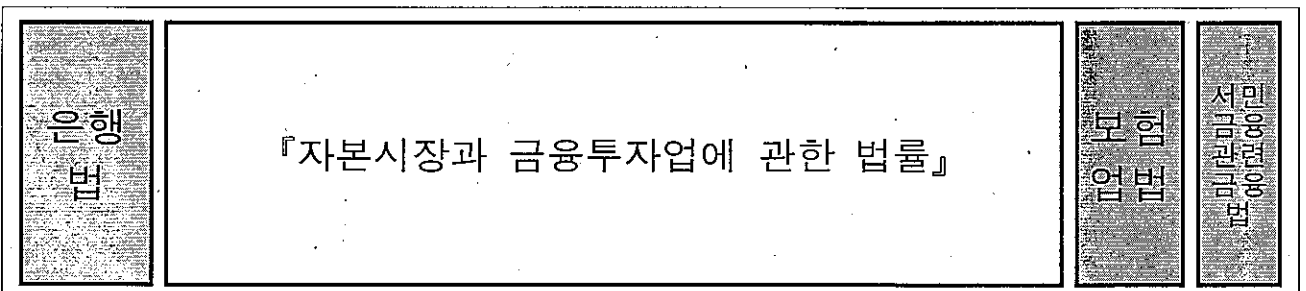
<현행 금융법 체계>



* 비정형 간접투자 : 상법상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 유한회사 등 현행 간접투자관련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는 vehicle을 이용한 간접투자

↓ 통합

<통합 후 금융법 체계>



2.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지배구조의 통일적 규율

(1) 현황 및 문제점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법 등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마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의 내용이 상이*하고

* 임원의 결격요건, 사외이사의 개념, 감사위원회의 요건,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법률마다 상이

○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산업발전법 등 법률에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이 미비

<금융법상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

- 대주주(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범위
- 임원의 결격요건
-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
- 감사위원회 설치
- 상근감사의 설치의무
-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2) 개선 방안

□ 증권거래법상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통일적으로 적용함

○ (대주주 개념) 실질 지배력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최대주주, 주요주주로 구분

-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한 지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질 지배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 그 지분율이 최대가 되거나 또는 10%이상이 되는 경우 그 본인을 각각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정의

※ 증권·선물·자산운용회사에는 기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 중이므로 신탁회사에 대해서 확대되는 효과

- (임원 결격요건) '퇴임·퇴직한 자로서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권고 등을 받았을 것으로 금감위가 통보한 자'를 임원 결격사유로서 모든 금융투자회사로 확대 적용

- (사외이사) 사외이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외이사 선임비율**, 후보추천위원회***, 결격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

*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써 이법에 의해 선임되는 자

** 전체 이사총수의 과반수

*** 사외이사가 과반수일 것 등

※ 사외이사 개념은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새로 도입되고 사외이사 선임 비율·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 결격사유는 신탁회사에 새로 도입

- (감사위원회) 상근 감사위원의 결격요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감사위원회의 대표를 사외이사로 의무화함

※ 신탁회사에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고 비상장 증권·선물·집합투자 회사에는 감사위원회 대표의 사외이사선임 의무가 새롭게 도입됨

- (감사) 모든 금융투자회사에게 상근감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결격요건을 마련(상근 감사위원의 결격요건을 준용)

- (내부통제, 준법감시인) 모든 금융투자회사에게 적용

※ 신탁업법과 선물거래법에 준법감시인이 새로 설치되는 효과

- (소수주주권)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지분율 요건을 증권거래법 수준으로 완화함

<참고 8> 통합대상 금융투자업별 임원의 결격사유 비교

통합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금법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
금치산자	금치산자	금치산자	금치산자	금치산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 실행 또는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금고이상 실행 또는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금고이상 실행 또는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금고이상 실행 또는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금고이상 실행 또는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금고이상 실행 또는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있는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있는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있는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있는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있는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있는자
이 법등에 의해 영업 허가 인가가 취소된 회사의 임직원 이었던 자로서 최소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 법등에 의해 영업 허가 인가가 취소된 회사의 임직원 이었던 자로서 최소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 법등에 의해 영업 허가 인가가 취소된 회사의 임직원 이었던 자로서 최소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 법등에 의해 영업 허가 인가가 취소된 회사의 임직원 이었던 자로서 최소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 법등에 의해 영업 허가 인가가 취소된 회사의 임직원 이었던 자로서 최소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 법등에 의해 영업 허가 인가가 취소된 회사의 임직원 이었던 자로서 최소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 법등에 의해 해임·면직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않은자	이 법등에 의해 해임·면직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않은자	이 법등에 의해 해임·면직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않은자	이 법등에 의해 해임·면직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않은자	이 법등에 의해 해임·면직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않은자	이 법등에 의해 해임·면직된 후 3년이 경과 하지 않은자
재직중이었다면 해임·면직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으로서 통보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재직중이었다면 해임·면직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으로서 통보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	-	-	-

<참고 9> 통합대상 금융투자업별 사외이사관련 규정 비교

통합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법	신탁업법	종금법
사외이사 개념	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서 이법에 의해 선임되는 자	-	-	-	-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사외이사 선임의무	3인이상, 전체이사 총수의 과반수	3인이상, 전체이사 총수의 과반수	-	3인이상, 전체이사 총수의 과반수	-	3인이상, 전체이사 총수의 과반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설치의무화, 사외이사가 총위원이 과반수	설치의무화, 사외이사가 총위원이 과반수	-	설치의무화, 사외이사가 총위원이 과반수	-	설치의무화, 사외이사가 총위원이 과반수
	선임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중 선임하도록 함	선임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중 선임하도록 함	-	선임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중 선임하도록 함	-	선임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중 선임하도록 함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추천시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추천시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추천시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	-
사외이사 요건 (결격요건)	최대주주	최대주주	-	최대주주	-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주요주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주요주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주요주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당해 회사와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자	당해 회사와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자	-	당해 회사와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자	-	당해 회사와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자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쟁·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자	경쟁·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자	-	경쟁·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자	-	경쟁·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자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기타 충실한 직무이행이 곤란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자	기타 충실한 직무이행이 곤란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자	-	기타 충실한 직무이행이 곤란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자	-	기타 충실한 직무이행이 곤란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자

<참고 10> 통합대상 금융투자업별 감사위원회관련 규정 비교

통합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법	신탁업법	종금법
설치 의무 회사	자산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자산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	자산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	모든 종금사
감사위원회 요건	총 위원 2/3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총 위원 2/3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	총 위원 2/3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	총 위원 2/3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위원중 1인은 회계/재무 전문가 일 것	위원중 1인은 회계/재무 전문가 일 것	-	위원중 1인은 회계/재무 전문가 일 것	-	위원중 1인은 회계/재무 전문가 일 것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u>상장법인인 증권회사의</u>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	<u>상장법인인 자산운용회사의</u>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요건 (결격요건)	주요주주	주요주주	-	주요주주	-	-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	-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	-

<참고 11> 통합대상 금융투자업별 내부통제기준 등 규정 비교

	통합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법	신탁법	종금법
내부 통제 기준의 개념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
준법 감시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	-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	-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
	임면시 이사회 결의 의무화(외국 금융회사의 국내니점은 제외)	임면시 이사회 결의 의무화(외국 금융회사의 국내니점은 제외)	-	임면시 이사회 결의 의무화(외국 금융회사의 국내니점은 제외)	-	임면시 이사회 결의 의무화(외국 금융회사의 국내니점은 제외)
준법 감시인 자격 요건	금융기관 10년 이상 경력	금융기관 10년 이상 경력	-	금융기관 10년 이상 경력	-	금융기관 2년 이상 경력
	금융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원/전임 강사로 5년 이상 경력	금융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원/전임 강사로 5년 이상 경력	-	금융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원/전임 강사로 5년 이상 경력	-	금융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원/전임 강사로 2년 이상 경력
	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경력	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경력	-	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경력	-	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2년 이상 경력
	정부등 5년 이상 근무자로서 퇴임후 5년 이상 경과	정부등 5년 이상 근무자로서 퇴임후 5년 이상 경과	-	정부등 5년 이상 근무자로서 퇴임후 5년 이상 경과	-	정부등 2년 이상 근무자로서 퇴임후 2년 이상 경과
준법 감시인 결격 요건	인원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인원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인원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인원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법령위반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요구 이상을 받지 않았을 것	최근 5년간 법령위반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주의경고 이상을 받지 않았을 것	-	최근 5년간 법령위반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주의경고 이상을 받지 않았을 것	-	최근 3년간 법령위반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주의경고 이상을 받지 않았을 것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준법 감시인 담당하는 직무	회사의 고유재산운용	회사의 고유재산운용	-	회사의 고유재산운용	-	회사의 고유재산운용
	금융투자업 과부수업무	증권업 무와 부수업무	-	간접투자 재산운용업무, 간접투자 증권판매업무 부수업무	-	종합금융업
	경영업무	경영업무	-	경영업무	-	경영업무

<참고 12> 통합대상 금융투자업별 소수주주권 요건 비교

(단위: %)

통합법		증권 거래법	선물 거래법	자산 운용법	신탁법	종금법
이사·감사 · 청산인 해임청구권 (상법 §385, §539)	0.250 (0.125)	0.250 (0.125)	3	0.250 (0.125)	3	0.250 (0.125)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상법 §402)	0.0250 (0.0125)	0.0250 (0.0125)	1	0.0250 (0.0125)	1	0.250 (0.125)
주주제안권 (상법 §363의2)	0.5 (0.25)	0.5 (0.25)	3	0.5 (0.25)	3	0.5 (0.25)
대표소송권 (상법 §403)	0.05	0.05	1	0.05	1	0.05
회계장부 열람권 (상법 §466)	0.5 (0.25)	0.5 (0.25)	3	0.5 (0.25)	3	0.5 (0.25)
업무재산상태 검사청구권/ 임시주총 소집청구권 (상법 §366, §467)	1.5 (0.75)	1.5 (0.75)	3	1.5 (0.75)	3	1.5 (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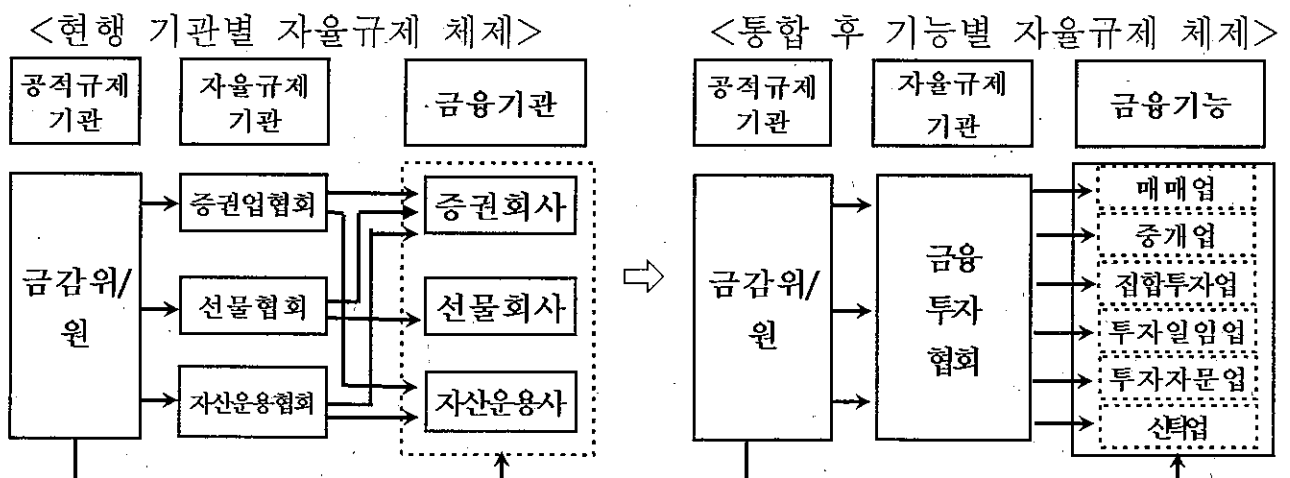
※ 괄호안은 대형 금융회사인 경우(자본금이 1천억원이상인 자산운용사·증권사, 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종금사) ⇒ 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규모를 정할 규정할 계획

3. 자율규제 체제의 개편

- 통합법 제정으로 기능별 자율규제체가 도입되고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현행 금융기관별 자율규제* 체제를 재검토할 필요

* 회원간 영업질서 유지, 영업관련 분쟁의 자율조정, 전문인력 운용관리등

- 금융투자업 상호간에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전업주의를 전제로 하던 복수 자율규제기관 체제의 필요성이 감소
- 동시에 공적규제가 기능별 체제가 됨에 따라 자율규제도 금융 기능별로 수행할 필요
 -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경우, 동일한 금융기능(예; 매매업)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을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및 선물협회가 중복적으로 수행하여 불필요한 부담 발생
- 현 단계에서 통합법 시안에는 '단일 협회(한국금융투자협회)(안)'으로 하고
 - 정부안 확정시까지 회원사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개편안이 마련되면 이를 반영



4. 통합법의 題名

□ 통합법은 금융업법인 동시에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시장규제 법률(One set 규제)

- 業법으로서의 특징과 시장 규제법으로서의 특성을 적절히 표현하는 명칭을 선정할 필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참고 13> 주요국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 통합법의 명칭

- 영국
 - 금융서비스와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 호주
 - 금융서비스 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
- 싱가포르
 -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 홍콩
 -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 일본
 - 금융상품거래법

5.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규율 방안

(1) 현황

□ 현행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상 종합금융회사와 자금중개회사는 금융투자업이 아닌 금융업*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 금융투자업이 아닌 금융업을 규율하는 규정의 통합방안과 통합법 제정 이후의 해당 금융업에 대한 규율방안을 마련할 필요

* ① 종금사는 유가증권 매매, 중개, 인수, 투자 등 금융투자업뿐만 아니라 어음관리계좌 등 수신 업무도 수행하고 있고 ② 자금중개회사는 금융기관간 자금거래를 중개

(2) 검토 방안

□ 종합금융회사법은 모두 통합의 대상으로 하여 통합과 동시에 종합금융회사법을 폐지하고

- 종금사와 자금중개회사의 업무 중 금융투자업이 아닌 업무를 규율하는 조항은 통합법의 보칙으로 이관하여 규정

- 종금사의 업무범위, 영업행위 규제, 건전성 규제 등 종금법상 관련 규제를 모두 이관하고 자금중개회사 관련 규정도 이관

□ 종합금융회사의 업태는 통합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 인정되 원할 경우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종금사는 한불, 금호 2개사 존재

□ 자금중개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채권의 투자중개업'으로 한정

* 현재 자금중개회사는 한국자금중개와 서울외국환중개 2개사 존재

6. 증권선물거래소법의 통합

(1) 기본 방향

□ 통합법은 금융업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도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장내시장의 운영주체를 규율하는 법률도 통합대상으로 함

○ 통합법은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 금융업관련 규율의
통합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증권거래법)과 선물시장(선물거래법)
도 통합 대상이므로

- 이러한 ‘시장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통합대상으로 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

(2) 기대 효과

□ 개념이 크게 확대될 통합법상 금융상품의 정의 규정이 증권
선물거래소 편에도 통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과 선물시장에 상장
가능한 금융상품의 범위도 동시에 크게 확대되는 효과

※ 신종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이 확대됨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등

7. 금융투자회사의 商號 규제 방안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호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호 규제는 계속 유지

○ 특정 금융업자가 영위하는 금융업의 내용을 투자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 정당한 금융업자가 아닌 자의 투자자 오도(misleading)를 방지하는 효과

□ 기능별 규율체제가 도입되고 금융투자업간의 상호 겸영이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 모든 금융투자회사의 상호에 '투자'라는 문자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 예) ○○투자증권회사, △△투자자산운용 등

○ 인가받지 않은 자에 대해 금융투자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

* 증권, 파생,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 투자신탁 등 현행 금융업자의 명칭으로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심

8. 통합법의 시행 시기

- ☐ 시장참가자와 감독당국이 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시행시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
 - 감독당국의 경우, 현재 금융기관별 칸막이식 감독기준 등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 시장 참가자의 경우에도 기능별 규율에 따른 새로운 인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물적·인적 설비의 개편, 자기자본 조정 등 변경이 필요

9.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재인가·등록 시기

- ☐ 통합법은 금융투자업의 분류체계, 포괄범위가 개편되고 각 금융기능별로 적용되는 규제의 내용이 새로워지므로
 - 기존 금융회사에 대해 통합법을 무리없이 적용하기 위해 법 시행 전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과 향후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일괄 재인가·등록하도록 할 필요
- ☐ 법시행전 6개월 동안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일괄 재인가·등록 기간으로 규정하여 운용
 - 재인가·등록시기 영위하던 금융투자회사 중 일부는 새로운 인가·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 동 기간 중 새로운 인가·등록요건에 맞춰 자본확충 등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함

9. 통합법의 구성

□ 총 10편 420개의 조문으로 구성

※ 음영부분이 통합부분이고 나머지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이관

편	장	내용	세부 내용
제1편 총칙	-	총칙	○ 목적, 정의규정 : 금융상품, 금융업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인가 및 등록	○ 인가·등록 요건 및 절차
	제2장	지배구조	○ 대주주변경 승인 ○ 사외이사, 감사 ○ 내부통제장치, 준법감시인 ○ 소수주주권
	제3장	건전 경영 유지	○ 자기자본 규제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 회계처리 ○ 경영공시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공통영업행위 규제 - 투자권유규제 - 손실보전 금지, 손해배상책임 등 ○ 업자별 영업행위규제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발행공시	○ 증권신고서
	제2장	M&A 관련제도	○ 공개매수, 5%Rule 등
	제3장	유통공시	○ 정기공시, 수시공시
	제4~5장	상장법인 특례 등	○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재무관리 등 ○ 장외거래, 외국인의 장외매매 제한
제4편 불공정 거래의 규제	제1~2장	불공정거래 규제	○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금지
	제3장	공매도등 부정거래	○ 포괄적 사기금지, 공매도 금지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10장	집합투자기구	○ 정의,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 기관 등
제6편 한국거래소	제1~6장	한국거래소	○ 조직, 시장개설 ○ 시장감시, 분쟁조정 등
제7편 관계기관	제1~5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5장	금감위의 집행	○ 금감위의 명령, 검사 및 처분 ○ 금감위의 조사, 과징금
제9편 보칙	제1~2장		○ 위법행위의 신고, 중금사·자금중개 회사, 투자성있는 예금·보험 특례
제10편 벌칙	-	형벌 규정	○ 형벌, 과태료, 양벌규정

VIII. 기타 자본시장 관련 제도개선 사항

1.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 일임매매 제한 제도의 개선

(1) 현황

- ☐ 증권사는 고객의 증권 또는 선물의 위탁매매에 대해 가격, 수량, 매매시기에 한하여 10종목까지 일임받아 거래할 수 있고
 - 증권·선물의 종류(주식/선물/옵션), 종목, 매매구분(매수/매도)과 방법(현금/신용거래)은 고객이 직접 결정하여 주문하여야 함
 - 증권사 등이 일임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함(익월 10일까지)
 -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 규제가 과도하고 비현실적이어서 투자자와의 분쟁이 많이 발생
 - * '02~04년중 금감원 증권부문 전체 분쟁조정 신청건수 중 일임매매관련 분쟁비중이 30% 이상을 차지

(2) 개선 방안

- ☐ 일임매매 제도는 폐지하고 투자일임업으로 흡수하여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일임업 등록을 할 경우 일임매매를 할 수 있음
 - 금융투자회사는 수량, 가격, 매매시기뿐만 아니라 종류, 종목, 매도/매수여부, 매매방법까지도 일임받아 거래 가능
 - 다만, 과당매매 등 부당권유, 이해상충 문제는 투자일임업에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부당권유 규제, 이해상충 규제)를 통해 규제

2. 금융투자상품의 발행과 유통관련 제도 개선

가. 발행공시 제도의 개선

(1) 사업설명서(prospectus) 교부 의무화

□ (현황) 증권사의 공모발행시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문서인 '사업설명서(prospectus)'를 투자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 (개선) 사업설명서는 투자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초적인 서류이므로 교부를 의무화하여 발행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 다만,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위험감수능력이 충분하므로 현행과 같이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사업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발행자의 부담을 완화함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례에서도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음

(2)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제시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화

□ (현황) 기재사항의 누락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일 때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허위기제의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배상책임이 과도한 측면

○ (개선)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제의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시에만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배상책임 부담을 완화

※ 미국 등 주요국의 입법례도 중요성(materiality)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판례와 통설도 모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된다는 입장

나. 유통공시(수시공시) 제도의 개선

(1) 수시공시 채널을 거래소로 일원화

□ (현황) 기업의 경영상황이나 장래계획에 대해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하는 수시공시 업무의 주관이 금감위와 거래소로 이원화되어 있어

○ 기업은 수시공시 사항 발생시 금감위와 거래소가 정한 서로 다른 서식에 따라 금감위와 거래소에 이중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불편 존재

□ (개선) 수시공시 주관기관*을 거래소로 단일화하여 기업들이 거래소에만 공시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공시부담을 경감

* 공시관련 규정 마련, 공시시스템 운영 등

(2) 수시공시 유보제도의 도입

□ (현황) 수시공시 사유 발생시 무조건 공시의무가 발생되고 위반시 형벌과 행정제재를 받게 됨

○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기업의 비밀유지의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 인정이 되지 않는 문제

□ (개선) 기업 경영상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비교衡量하여 공시를 유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시행령)

다. 5% Rule*(주식등 대량보유보고제도)의 개선

*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한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 보유상황 등을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1) 보고 주체 확대

□ (현황) 현재 국가, 지자체, 정부기금, 증권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5%Rule에 따른 보고를 면제해주고 있음

□ (개선) 보고 주체를 불문하고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대량지분 보유정보를 공시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임

※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입법례에서도 보고주체를 불문하고 예외없이 적용하고 있음

○ 다만,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한을 기관투자자에 준하여 장기로 설정

(2) 발행회사에 대한 통보 의무화

□ (현황) 주식등 대량 보유자는 5일 이내에 금감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 회사에 대해서는 통보의무가 없음

□ (개선) 금감위등에 보고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도 통보하도록 하여 공시시스템을 매번 확인하지 않아도 대량보유 사실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함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한 통보의무 존재

3. 불공정 거래 규제의 강화

가. 내부자거래 금지(미공개 중요정보 이행 금지) 제도* 강화

* 기업의 임직원·주요주주등 내부자가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

(1) 내부자거래 금지대상 증권 범위의 확대

☐ (현행) 현재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한하여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 (개선) 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확대되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하게 되므로

○ 발행주체를 당해 회사로 한정하지 않고 당해 법인과 관련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종 증권*도 포함함

* 기초자산(주식 등)의 발행회사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신종 증권의 거래를 할 수 있으나 현재 규정으로는 처벌 불가

(2) 내부자 범위의 확대

☐ (현행) 당해 법인의 임직원,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을 내부자로 규정

☐ (개선)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당해 법인과 계약체결을 교섭중인 자(그 임직원 포함)등도 내부자로 추가

* 예) 당해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실사를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내부자로 규제할 필요

나.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증권의 범위 확대

* 법인의 내부자가 당해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법인이 해당이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현황)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증권을 주식관련 증권*으로 한정하고 있음

* 주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서, 이익참가부사채, 주식과 관련된 교환사채, 주권을 기초로한 선물거래

□ (개선) 대상 증권을 모든 증권으로 확대하여 주식과 관련성을 불문하고, 발행회사를 당해 법인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신종증권도 포함하는 등 내부자 거래 금지 규제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규정

※ 일본의 입법례도 주식관련 증권뿐만아니라 사채도 대상으로 함

다. 현선 연계 시세조종 규제의 강화

□ (현황) 선물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현물의 시세를 조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반대 방향의 현선 연계 시세조종 등은 규제 근거가 없음

□ (개선) 선물과 현물 양방향간 현선 연계 시세조종을 금지하고

○ 파생결합증권과 기초자산인 증권간 양방향 연계 시세조종 금지 규정도 마련

* 규제대상 시세조종 행위의 변화

<현 행>

이익 목적 시장	시세조종 시장(장내)
선물	현물
-	-
-	-
-	-

⇒

<개 선>

이익 목적 시장	시세조종 시장(장내)
선물	현물
현물	선물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인 증권
기초자산인 증권	파생결합증권

IX. 벌칙의 개편

1. 현황 및 개편 필요성

- ☐ 통합대상 법률상 형벌(징역, 벌금) 체계는 타 금융법에 비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음

<관련 법률상 형벌 입법례>

구분	통합관련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행정형벌	10년, 2천만원	-	-	10년, 5천만원 (7년, 4천만원)	-
	5년, 3천만원	5년, 2억원	5년, 2억원	5년, 3천만원	-
	3년, 2천만원	3년, 1억원	3년, 1억원	3년, 2천만원	3년, 2억원
	2년, 1천만원	-	-	-	2년, 1억 5천만원
	1년, 5백만원	1년, 3천만원 (6월, 1천만원)	1년, 3천만원	1년, 1천만원	-
	5백만원 벌금	-	-	-	1억원 벌금

-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금융법과 비교할 때 벌금형이 낮아 자유형(징역형)과의 균형이 맞지 않음

- ☐ 과태료도 1천만원과 5백만원으로서 타 금융법에 비해 낮음

<관련 법령상 과태료 입법례>

구분	통합대상 법률	금융지주 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과태료	1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2억원
	5백만원	1천만원	1천만원	5백만원	1억원

⇒ 7개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형벌(징역형, 벌금형) 및 과태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통합

2. 개편 방안

(1) 형벌 체계의 단순화

□ 통합법상 형벌을 타 금융법의 입법례와 같이 형벌 4단계, 과태료 2단계로 단순화함

○ 이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의 입법례를 감안하여 재산형의 수준을 자유형의 수준에 맞춰 상향 조정

<형벌 수준 단순화 방안>

현행		통합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삭제>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벌금***	↙	<삭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10년형의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1년 또는 3년으로 조정

***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1년 또는 5천만원이하 과태료로 조정

(2)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법무부 추진과제)

□ 법무부의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등 추진방안(‘05.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사항

-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안 제199조 제2항) 위반 ⇒ ‘1년이하 벌금 등’을 ‘5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
- 협회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안 제337조) 위반 ⇒ ‘2백만원 이하 벌금’을 ‘5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

○ 의결권관련 서류·장부의 작성 및 비치(공시)의무 위반사항

-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행사시 기록·유지의무(안 제83조제7항)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을 ‘5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의결권행사 공시의무(안 제83조제8항, 제107조제7항)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을 ‘5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

○ 단순한 보고 불이행 및 보고서 부실기재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및 경영공시 의무(안 제33조제1항·제2항)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을 ‘5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
- 경미한 약관내용 변경시 사후 금감위 보고의무(안 제55조제1항 단서) 위반 ⇒ ‘5백만원 이하 벌금’을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

(3) 관련 법령상 벌칙의 통합

가. 통합 기준

①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불공정 거래로서 형법상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 또는 이에 준하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②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미인가 영업, 각종 공시의무 위반행위로서 다수의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큰 위법행위
- 임의매매, 대주주와의 부당거래행위 등

③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이해상충 행위금지 등) 위반 등

④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각종 신고·보고의무 위반행위 등

나. 벌칙의 신설

①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신설에 따른 벌칙 신설

- 외국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의 자산 보유 및 파산시 채무의 우선변제 의무(안 제64조제2항·제3항), 금융투자업의 재위탁 금지 위반(안 제42조제4항) 위반 ⇒ 1년이하의 징역
- 투자권유시 설명의무(안 제46조, 제51조제5항) 위반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수업무 영위시 금감위 신고의무 위반(안 제41조제1항)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투자권유대행자제도 도입에 따른 벌칙 신설

- 금감위 등록의무(안 제50조제2항) 위반, 등록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투자권유 대행(안 제51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 금융투자업자 대리 금지 위반,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등을 수취(안 제51조제2항제1호·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재위탁(안 제51조제2항제3호), 사전 고지 의무 등(안 제51조제3항)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③ 증권의 발행·유통 규제 신설에 따른 벌칙 신설

- 공개대수신고서·대량보유보고서 등 사본의 발행인 송부의무(안 제128조, 제141조) 위반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공매도의 제한규정(안 제195조) 위반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은행의 상장법인 부도사실 거래소 통보의무(안 제154조제5항) 위반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다. 벌칙의 폐지

① 발행인 등록 의무(증권거래법 제3조) 폐지에 따른 벌칙폐지

② 금융투자업 통합에 따른 제도 폐지 또는 형평성 해소

○ 증권거래법 관련

- 금감위의 증권업협회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및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제168조)에 위반

○ 선물거래법 관련

- 선물거래소 비회원의 선물거래 금지규정(제23조)
- 선물협회의 업무규정 제개정시 금감위 보고의무(제77조제2항)
- 선물업자의 책임준비금 적립의무(제50조제1항·제2항)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임원의 영리법인 겸직 제한(제15조제2항)
- 금감위의 준비금 적립명령(제104조제2항)
-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등의 성과보수 제한규정(제177조)

○ 신탁업법

- 신탁재산 회계감사인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금지 의무(제12조의2제3항)
- 신탁회사의 이익배당시 준비금 적립의무(제21조)

X. 기본방안 발표('06.2월)이후 새롭게 추가된 사항

1. 포괄주의 규율체제 관련

(1) 투자성 있는 예금 및 보험상품의 통합법 적용 방안

① 투자성있는 예금*과 투자성있는 보험**에 대한 통합법 적용 원칙

* 원본손실이 발생하는 파생결합예금, 환율변동 리스크가 있는 외화예금 등

** 원본손실이 발생하는 변액보험, 환율변동 리스크가 있는 보험상품 등

- 예금이나 보험의 외형을 가지더라도 원본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면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아 통합법상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함(동일 기능, 동일 규율의 원칙)

※ 일본의 자본시장 통합법(금융상품거래법)의 입법례에서도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예금과 보험을 통합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② 투자성있는 예금과 투자성있는 보험상품에 대해 예금과 보험상품으로서의 고유성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 예금이 투자성을 가질 경우 예금의 성질을 잃는 것으로 보되 보험상품은 투자성을 가지더라도 보험계약의 성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봄

- (1) 예금은 ‘원본이상을 돌려줄 것’을 핵심적 개념으로 하므로 원본손실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었다면 더 이상 예금으로 볼 수 없음

⇒ 금융투자상품(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되어 통합법상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고 예금자 보호 등 예금관련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 (2) 보험상품은 ‘원본이상을 반드시 돌려 줄 것’을 개념으로 하지 않으므로 투자성을 갖는 경우에도 보험상품의 속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봄

⇒ 금융투자상품(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어 통합법상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지만 보험회사만 취급 가능

③ 투자성있는 예금과 투자성있는 보험에 대한 통합법 적용 범위

- 은행과 보험사가 투자성있는 예금과 투자성있는 보험을 취급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으로 보아 통합법을 적용하되,

-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일부 영업행위 규제*만 적용함으로써 규제 부담을 최소화함

* Know-your-customer-rule. 설명의무, 설명의무 위반시 배상책임, 적합성 원칙, 의사에 반하는 투자권유 금지 등

- 법률에서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줌으로써 인가 부담을 완화하고

-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에 의해 적정한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합법상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2) 전통적 예금과 보험계약의 금융투자상품 제외 방안

□ 투자성을 갖지 않는 전통적 예금과 보험계약이 투자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원본'의 개념과 '회수금액'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 ⇒ 시행령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함

* 보험계약의 보험료 전액을 원본으로 볼 경우, 전통적 보험의 경우에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될 가능성

○ (원본) 소비되는 금액(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사업비 등)은 원본에서 제외하고, 특별계정으로 투자되는 금액만을 원본으로 포함하여

- 전통적 보험상품이 투자성을 갖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 투자되는 보험료에 비해 지급받는 보험금이 작은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됨을 명확히 함

○ (회수금액) 중도해지수수료, 세금 등을 포함하여 회수금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 전통적 예금, 전통적 보험 등을 중도에 해지함으로써 입게 되는 원본손실은 투자성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함

(3) 양도성 예금증서와 기업어음의 금융투자상품 규율 방안

□ 양도성 예금증서(CD)

- 원본 손실가능성이 있어 이론적으로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나, 만기가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함
- 양도성 예금증서는 만기가 짧아 금리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이 극히 미미한 점을 감안

※ 개념상으로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므로 명시적 배제 규정을 둠

□ 기업어음(CP)

- 기업어음은 그동안 증권으로 규제받아 왔으므로 계속 금융투자상품으로 봄
- 다만, 현행 발행주체, 금액, 신용등급 요건을 폐지하여 적정한 형식*을 갖춘 모든 CP를 금융투자상품(증권)으로 봄

* 조폐공사가 발행한 용지를 사용하여 발행된 경우 등

2. 기능별 규율체제 관련

(1) 타부처 소관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 방안

□ 현황

- 개별법상 소관 펀드에 대한 통합법상 집합투자업자 규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작은 사모 펀드(창투조합·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 통합법상 투자자 보호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 '05년말 현재 창투조합 3.4조원, 벤처투자조합 0.2조원

□ 개선방안

- 개별법상 단종 펀드 중, 전문투자자만으로 구성된 사모 펀드에 대해서는 통합법상 집합투자업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 일반 투자자를 투자자로 포함하는 펀드에 대해서만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

·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 펀드의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실익이 작은 점을 고려

※ 이에 따라 사모가 대부분인 벤처캐피탈등의 경우에는 통합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2) 새롭게 금융투자업으로 포섭된 업무의 규율 방안

□ 현황

- 은행·보험사 등이 영위하던 업무 중, 금융투자업의 속성을 가짐에도 그간 금융투자업으로 규율을 받지 않았던 업무가 존재하여 투자자 보호의 공백 발생

<그간 금융투자업규제가 없었던 영역>

- 은행이 투자성있는 예금을 판매하고, 보험사가 투자성있는 보험을 판매하는 업무 (⇒증권 투자매매업·중개업에 해당)
-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받고 원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업무 (⇒파생상품 매매·중개업에 해당)
-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가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업무 (⇒증권 투자매매업·중개업에 해당)

<그간 외국환 업무로만 규제되었던 영역>

- 금융회사가 외화 증권을 매매·중개하는 업(⇒증권 투자매매업·중개업에 해당)
-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받고 외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업무 (⇒ 파생상품 매매·중개업에 해당)

□ 개선 방안

○ 동 업무가 금융투자업이 해당됨에 명백하므로 투자자 보호의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으로 규율함(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 다만, 은행과 보험사 등 비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규제만을 적용하여 부담을 최소화

- (진입규제) 법률에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하거나 인가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

* 투자성있는 예금이나 투자성있는 보험계약을 판매·중개하는 업무

- (건전성 규제) 은행법과 보험업법에 따라 고유한 건전성 규제(BIS비율, 지급여력비율)를 받고 있으므로 적용하지 않음

-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규제이므로 투자매매업·중개업관련 영업행위 규제*는 적용

*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Know-your-customer-rule,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장외 파생상품에 한정), 고객예탁금 별도 예치의무 등

○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 규제를 원칙적 적용 (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3) 개인연금·연금신탁의 금융투자업 규율 방안

□ 현황

- 현행 신탁업법은 원본보전을 원칙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연금·연금신탁 등 일부 신탁업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을 허용하고 있음

□ 개선 방안

- 연금신탁 또는 개인연금신탁은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아 금융투자업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 연금신탁은 신탁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원금 보전을 특별히 허용한 특징을 존중하고
 - 원본이 보장되므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
- 다만,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을 경우, 신탁업자가 아닌 자도 취급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 신탁업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법에 별도의 업규제를 마련
- ※ 다만, 2010년까지만 원본보전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므로('05.11월 금융규제 개혁방안) 그 이후에는 금융투자업(신탁업)으로 규율

(4) 은행, 보험사 등에 대한 고객예탁금 별도 예치 의무 적용

□ 현황

- 그간 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등이 투자매매업·중개업을 겸영*할 경우, 증권회사의 경우와 달리 고객예탁금**의 별도 예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 예) 은행·보험·자산운용사가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 수익증권 판매시 투자자금은 즉시 펀드에 편입되지 않고 편입가격
확정을 위해 약 1일간 은행·보험사가 보유한 후에 편입하게 됨

- 만약의 경우 금융회사 도산시 고객예탁금이 파산재단에 포함
되어 투자자가 Default risk에 노출되고, 대량 환매시 유동
성 위험도 존재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음

□ 개선 방안

- (기본 원칙) 은행·보험·자산운용사 등에 대해서도 고객
예탁금 별도 예치 의무를 부과
- 동 제도의 취지는 고객 예탁금을 금융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부터 분리하여 보관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써
투자매매업·중개업의 핵심적 투자자 보호규제

○ (별도 예치의 방법) 은행·보험사의 고유계정과 '독립된 계정'에 별도 보관하도록 하되

- 보관대상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증권금융 또는 신탁계정 ; 자사 신탁계정에도 보관 가능)

※ 자산운용업자는 금융투자회사이므로 증권금융에 의무 예치하도록 함

(5) 일괄 재인가·등록대상 금융투자회사의 범위

□ 통합법 시행시 기존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을 일괄 재인가·등록 받도록 할 계획인바,

○ 은행·보험사·종금사 등 겸영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 금융투자회사와는 달리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일괄 재인가·등록기간에 금감위에 '신고'만 하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

- 금감위가 일정기간 내에 반려하지 않으면 인가·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운용

(6) ELS 등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 발행의 규율 방안

□ 주가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금융투자업으로 보아
현행과 같이 금융투자회사만 할 수 있도록 함

※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여타 증권 발행은 '자금조달' 목적으로
보아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음

○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라기보다
금융투자상품에 해당*

* 일반적으로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경향

○ 원본손실가능성이 크므로 금융투자업 감독을 받는 자만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

※ 현제도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은 현제도 증권사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 참고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를
인수인으로 하여 발행할 경우에는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수 있음 ⇒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하여 판매하게 되므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기 때문임

□ 다만, 파생결합증권 중 주식과 연계되지 않은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음

※ 주식과 연계되지 않은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현행 증권
거래법상 발행주체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7) 통합법의 역외적용

□ 현황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 금융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 존재
- 역외적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 또는 불법적인 Cross-border supply 등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 지 불확실성 존재

□ 개선방안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통합법을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통합법에 둬

※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규정 존재

- 영국은 금융통합법(FSMA2000)의 명문규정을 통해, 미국은 판례를 통해 금융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음

※ 역외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감독기관간 정보 교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금융실명법’이 개정되었음(‘06.3월)

3. 업무범위 확대 관련

(1) 은행과 보험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무 범위

- 은행·보험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경우, 현재 허용되어 있는 금융투자업무는 통합법 시행이후에도 겸영을 계속 허용(stand still 원칙)

<통합법상 겸영이 허용될 금융투자업무>

금융투자업	허용되는 업무
투자매매업	(은행) 투자성있는 예금 판매업, 국공채 창구판매업·매매업, RP 매매업, 수익증권 판매업,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보험) 투자성있는 보험 판매업, 수익증권 판매업 (종금사) 증권업,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투자중개업	(은행) 국공채 창구판매업·매매업, 수익증권 판매업, 장외 파생상품* 중개업, (보험) 수익증권 판매업, (종금사) 증권업, 외환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자금중개사) 채권중개,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집합투자업	(은행) 집합투자업(투자신탁), (보험) 집합투자업(변액보험), (종금사)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종금사) 투자자문업
신탁업	(은행) 신탁업, (보험) 신탁업, (종금사) 신탁업

- 파생상품매매 또는 중개업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 통합법에서 기초자산의 개념이 넓어짐에 따라 새롭게 허용되는 모든 파생상품의 취급도 허용됨

(2) 간접투자의 개념 변경

□ 현황

- 현행 간접투자의 개념은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집합(Pooling)한다는 본질적 특성 및 국제기준(CI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과 달리 1인 단독 펀드도 포함하고 있고
- 투자자가 자산의 운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투자자가 운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과의 관계가 모호

□ 개선방안

- 현행 ‘간접투자’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정의
 - “①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모아서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③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으로서 ④ 투자자가 일상적인 운용권을 갖지 아니하는 것”
 - 이를 통해 간접투자의 개념에서 1인 사모펀드를 제외하고, 간접투자시 투자자가 일상적인 운용권을 갖지 않음을 명시
- ※ 1인 사모펀드가 제외됨에 따라 신규 또는 추가 설정분은 투자일임업 또는 신탁업으로 영위 가능

(3) '간접투자'의 명칭 변경

□ 현황

- 현행 '간접투자'라는 용어는 직접투자가 아닌 모든 투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 투자자가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일임, 신탁업 등도 '간접투자'로 오해될 수 있어 개념의 혼란 발생

□ 개선방안

- 명칭을 '집합투자업'으로 변경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집합(Pooling)하여 운용한 후 그 손익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킨다'는 개념에 부합
- 외국의 입법례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Collective Investment Scheme; CIS)와도 가장 부합

(4) '자산보관관리업'의 명칭 변경

- 통합법 초안이 기존 신탁업을 '자산보관관리업'으로 정의함에 따라 소극적 '보관·관리'만 허용되고 신탁업에 내재된 재산 '운용'기능이 제한되는 것으로 일부 오해가 발생

- 따라서, 명칭을 현행대로 '신탁업'으로 환원

4. 기타 사항

(1) 임직원 등의 증권·선물 투자제한 개편

□ 현황

- 현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은 증권·선물의 직접 투자가 금지되어 있고 증권저축을 통해서만 허용되어 있으나 선행 매매등 불공정 거래 방지에 미흡

- 증권저축은 일반 위탁매매 계좌와 동일*하게 운용 가능하여 사실상 자기매매가 허용되어 있는 상황

* 다만, 월급여액의 50%이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음

- 거래내역 보고등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

□ 개선 방안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의 직접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 하되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여 불공정 행위를 규제

- 자기명의로 1인 1계좌만 허용하고 매매내역을 소속 금융투자 회사에 정기적으로 통지 ⇒ 위반시 형벌 등 제재 부과

※ 미국, 일본, 영국, 홍콩 등 외국에서도 임직원 자기매매는 원칙 허용 하되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여 규제하고 있음

(2)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 제도 도입

□ 현황

- 투자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계속하여 증권, 선물 등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여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음

□ 개선 방안

-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Solicitation against will) 금지제도’를 도입
- 동 규제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적용함

(3) 금융투자회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마련

□ 현황

- 금융투자회사 내부의 위법행위 등을 알게된 자가 위법사실을 금감위에 신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음

□ 개선 방안

- 현행 불공정 거래를 신고자 보호제도를 감안하여 금융투자회사의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보호장치를 마련

*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유지, 불이익 대우 금지

(4) 대주주 변경 승인제도를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적용

□ 현황

-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증권업, 자산운용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대주주 변경시 금감위 사전 승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 개선 방안

- (기본 방향) 투자일임사, 투자자문사, 신탁회사에 대해서도 대주주 변경시 적격성심사를 의무화
 - 대주주의 적격성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고 이는 금융투자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될 필요
 - 설립시에는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므로 설립이후에도 동 요건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심사 요건) 금융투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만을 심사

*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위법사실이 없을 것 등

(5)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칭 변경

□ 현황

- 통합법 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이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도 대폭 확대

⇒ 기존 명칭은 넓어진 업무범위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

□ 개선방안

- 업무범위를 증권 또는 선물로 한정하지 않는 명칭으로 변경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명칭을 ‘한국거래소’로 변경
 -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칭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

XI. 기대효과

1. 선진 투자은행과 동등한 업무영역 확보 가능

□ 통합법 제정으로 금융투자업의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 금융투자회사도 선진 투자은행과 동일한 영업모델 (business model) 선택 가능

- 선진 투자은행은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직접투자(Principal Investment), 증권서비스(Securities Services)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 업무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측면에서도 모든 신종 증권과 모든 기초자산에 근거한 신종파생상품을 설계·취급 가능

<통합법 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업무영역 변화>

	직접투자		기업금융		증권서비스	자산 관리			
	매매	투자	인수	자문	중개	자문	일임	집합투자	신탁
전통적 증권			종금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전통적 파생상품					선물회사(선물)				
신종증권									
신종 파생상품									



	직접투자		기업금융		증권서비스	자산 관리			
	매매	투자	인수	자문	중개	자문	일임	집합투자	신탁
전통적 증권	금융투자회사								
전통적 파생상품									
신종증권									
신종 파생상품									

2.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 다양한 금융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투자은행 업무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회사내에서 수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가능

① 증권업+선물업의 시너지 효과 ⇒ 종합 증권서비스 가능

- (현행) 증권사는 유가증권의 매매·중개업 영위가 가능하고
선물회사는 선물의 중개업만 영위 가능

⇒ (개선) 모든 금융투자상품(증권·선물·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매매·중개업 영위가 가능하여 종합 증권서비스 가능

②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직접투자(principal investment)의 시너지 효과

- (현행) M&A 또는 Project Financing 주선시, 주선을 하는 자(증권사)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어 투자자를 탐색하는데 비용이 상승하고 Deal에 장시간이 소요

⇒ (개선) M&A등 주선 등 기업금융 업무시 자산관리를 통해 조달한 자금(사모펀드)이나 고유재산(금융상품판매 자금)등을 직접 투자(브릿지 금융 등)할 수 있음

③ 다양한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업 겸영의 시너지 효과

- (현행) 각기 다른 금융회사가 ELS등 설계·판매, 간투증권판매, 일임형 랩, 특정금전신탁, 자산운용을 단편적으로 영위함에 따라 종합서비스가 어렵고 자산관리서비스간 불필요한 경쟁 발생

⇒ (개선)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화 증권, 각종 집합투자상품, 일임형 랩, 특정금전신탁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직접 설계하여 제공하는 '종합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가능

3.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설계·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의 취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영업시 필요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설계·운용할 수 있게 되어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

- 기업금융(IB) 업무시, 전통적 주식·채권 외에도 각종 파생기법을 활용한 신종 증권의 설계*지원 및 인수(underwriting)가 가능해져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기능이 크게 강화

* 예) 환율, 복수의 지표, 주가 등에 연계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채권

- 자산관리 업무시, 투자자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파생결합증권, 다양한 집합투자상품, 파생상품 등을 설계하여 서비스가능

- 높은 수익을 제공하면서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펀드 연계증권(fund linked note)등 신종 금융상품의 개발이 가능

* 예) 펀드연계증권 : 벤치마크의 대상이 되는 특정펀드에 일부를 투자하여 동 펀드의 수익과 연계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증권

- 파생상품을 통해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위험회피(헷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

* 예) 날씨파생상품 : 특정일의 강설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파생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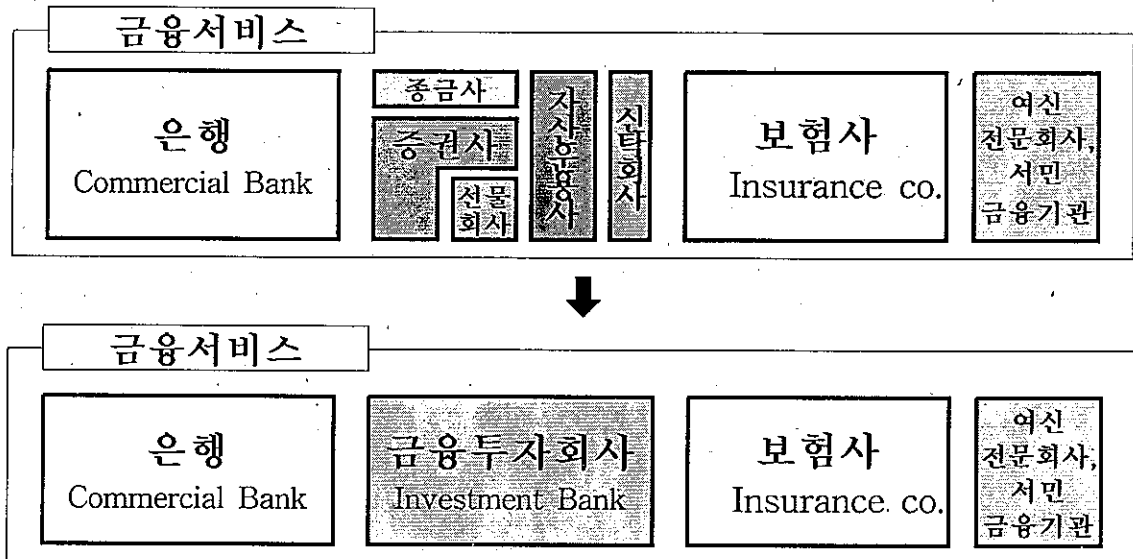
<참고 14> 통합법 제정으로 취급가능한 금융투자상품(예시)

종류	명칭	내용
파생결합 증권 (구조화 상품)	역변동 금리증권 (inverse floater)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를 차감함으로써 금리가 오르면 낮은 수익을, 금리가 내리면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증권
	이중지표증권 (예; CMT증권)	두개의 지표에 연계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증권(예; CMT(Constant Maturity Treasury Index) 증권은 지표가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2개로서 이자는 보통 '장기금리-단기금리+a'로 정해짐, 장단기 금리차가 커질 수록 수익이 커지는 특징)
	Range accrual 증권	사전에 정해진 특정 범위내에 지표가 머문 기간에 따라 수익을 결정하는 증권
	디지털옵션 결합증권	특정 지표에 연계하되 수익을 비연속적으로 지급하는 증권(예; 주가가 8%이상 상승시 6%의 금리제공, 8%이하 상승시 2% 금리 제공)
	신용연계증권 (Credit Linked note)	증권의 기초자산의 신용 사건(수준)에 연계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증권
	펀드연계증권 (Fund linked note)	특정 펀드의 수익률에 연계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증권(CPPI기법(Constant Proportion Portfolio Insurance; 수익률에 따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간 배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원본보존 전략)을 이용하여 원금을 보장하는 경우 많음)
	재해연계증권 (CAT bond)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의 규모와 연계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증권
투자계약 증권 (집합투자)	합자회사 형태의 공모펀드	무한책임사원(GP)와, 유한책임사원(LP)로 이루어진 합자회사를 이용하여 투자자금을 공모하는 펀드
	익명조합 형태의 공모펀드	상법상 익명조합의 형태를 통해 투자자금을 공모하는 펀드
	혼합자산펀드	증권, 부동산, 실물, 파생상품 등 다양한 대상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펀드
장외 파생상품	재해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지진 등 재해를 대비하여 일정금액의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재해발생시 사전에 정해진 지표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는 파생계약
	범죄발생율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범죄발생율등 지표에 연계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파생계약(경비업체등이 헷지 목적으로 사용가능)
	날씨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강수량, 강설량 등의 지표와 연계하여 금전등을 지급받는 파생계약

4. 대형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

-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화와 함께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대형화가 가능해져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

<통합법 제정에 따른 금융업의 체제 변화>



- 투자은행 업무에 있어 필수적인 직접 투자(Principal Investment)를 할 수 있는 고유 재산 확보 가능
- 기업금융(IB), 직접 투자, 자산관리, 증권서비스 등 각 업무영역의 고객(투자자) 정보를 공유하여 영업기회 확대
- 운용자산 규모 확대에 따라 집합투자, 증권거래(trading)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
- 후선 관리부서(back office)와 전산설비 등을 공유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등 운용 효율성 제고 가능

5. 통합법 제정에 따른 규제 혁신

- 현재 300여개의 자본시장 관련 규제 중 40%정도를 폐지·완화

현행 규제	개편			개편 후
	폐지	완화	신설	
300여건	120여건	10여건	10여건	190여건

<참고 15> 통합법 제정에 따른 주요 규제완화 목록(예시)

현행	통합법
1. 모든 금융투자회사 공통	
<input type="checkbox"/> 겸영의 제한 ○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간 원 칙적 겸영금지 * 증권거래법 51조, 간투법 제14조	< 폐지 > ○ 인가·등록 요건을 갖추면 모든 금융투자업무의 겸영 허용
<input type="checkbox"/> 취급 대상금융상품 제한(열거주의) ○ 증권, 선물, 간접투자 대상의 범위를 법령으로서 제한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선물거래법 제2조, 간투법 제2조제1호	< 폐지 > ○ 포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투자성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허용하고 기초자산도 가능한 넓게 규정
<input type="checkbox"/> 투자업 진입방식은 허가제 위주 ○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은 허가주의, 신탁업 인가주의 채택 * 증권거래법 제28조, 선물거래법 제37조 제1항, 간투법 제4조, 신탁업법 제3조	< 완화 > ○ 허가제보다 완화된 인가제·등록 제로 전환하여 진입규제를 완화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업 진입 심사절차 ○ 진입심사시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청자의 권익 보호가 미흡 * 증권거래법 제31조, 선물거래법 제37조, 간투법 제6조	< 완화 > ○ 인가의 투명·공정·객관성 확보 규정 마련 및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할 것을 명시 ○ 신청이 있는 후로부터 인가까지의 기간(예; 최대 3월)을 규정

<p><input type="checkbox"/> 부수업무의 제한</p> <p>○금감위 인가업무 또는 법정 부수 업무등을 제외하고 증권회사, 자산 운용회사 등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제한</p> <p>* 증권거래법 제51조제1항, 간투법 제14조</p>	<p>< 완화 ></p> <p>○투자자 보호·경영 건전성 저해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감위 신고를 거쳐 모든 부수업무의 영위 허용(Negative System)</p>
<p><input type="checkbox"/> 상호의 규제 (positive 방식)</p> <p>○증권회사 등의 경우 일정한 상호의 사용이 의무화</p> <p>* 증권거래법 제62조, 간투법 제7조</p>	<p>< 완화 ></p> <p>○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를 규정하는 Negative 방식으로 전환</p>
<p>2. 증권회사 관련</p>	
<p><input type="checkbox"/> 일임매매의 규제</p> <p>○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 위탁시 수량·가격 및 매매시기에 한정하여 증권회사의 일임매매거래 허용하여 고객과의 분쟁이 빈발</p> <p>* 증권거래법 제107조제1항</p>	<p>< 폐지 ></p> <p>○일임매매 규제를 폐지하고, 투자일임업으로 규율하여 종류, 종목, 매수·매도여부,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일임할 수 있도록 함</p>
<p><input type="checkbox"/> 일임매매관련 부당행위 규제</p> <p>○증권회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일임매매의 위탁을 받는 등 부당행위 제한</p> <p>* 증권거래법 제107조제2항</p>	<p>< 폐지 ></p> <p>○일임매매규제 폐지로 인한 삭제</p>

<input type="checkbox"/> 일임매매 보고방법 ○증권회사의 일임매매시 서면계약 체결의무, 금감위 및 거래소 보고의무 등 일임매매 방법 규제 (증권거래법 제107조제3항)	< 폐지 > ○일임매매규제 폐지로 인한 삭제
3. 선물회사 관련	
<input type="checkbox"/> 선물일임거래 ○고객으로부터 선물거래 위탁시 수량·가격 및 매매시기에 한정하여 증권회사의 일임매매거래 허용하여 고객과의 분쟁이 빈발 * 선물거래법 제48조제2항	< 폐지 > ○일임매매 규제를 폐지하고, 투자일임업으로 규율하여 종류, 종목, 매수·매도여부,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일임할 수 있도록 함
<input type="checkbox"/>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탁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선물업자의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 선물거래법 제50조	< 완화 > ○금융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규제로 일원화하여 규제를 완화
4. 자산운용회사 관련	
<input type="checkbox"/> 간접투자대상 자산 ○투자가능한 자산을 투자증권, 실물자산 등으로 열거 * 자산운용업법 제2조	< 완화 > ○집합투자 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으로 포괄화

<p><input type="checkbox"/> 간접투자기구 형태의 열거</p> <p>○ 투자신탁, 주식회사, 합자회사로 한정</p> <p>* 자산운용업법 제2조</p>	<p>< 폐지 ></p> <p>○ 민·상법상 설립가능한 모든 형태를 허용하여 집합투자기구를 포괄화</p> <p>* 주식회사, 합자회사외에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유한회사등을 새로 허용</p>
<p><input type="checkbox"/> 간접투자증권의 종류 열거</p> <p>○ 수익증권, 주식((mutual fund), 출자지분으로 한정</p> <p>* 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3호</p>	<p>< 폐지 ></p> <p>○ 집합투자기구의 포괄화에 따라 간투증권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폐지</p>
<p><input type="checkbox"/> 자산운용사 고유재산 운용제한</p> <p>○ 자산운용회사는 고유재산을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외화자산의 취득 등에 운용 금지</p> <p>* 간투법 제16조</p>	<p>< 폐지 ></p> <p>○ 고유재산 운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경영의 자율성 제고</p>
<p><input type="checkbox"/> 환매금지 규제</p> <p>○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실물간접투자기구는 환매금지형만 운용</p> <p>* 자산운용업법 제143조</p>	<p>< 폐지 ></p> <p>○ 환매금지형 여부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허용</p>

<p><input type="checkbox"/> 펀드운용방법 제한</p> <p>○ 펀드별 운용방법*을 법률에 열거</p> <p>* 취득·매각, 대여(투자증권), 관리·개량·개발·임대(부동산)</p> <p>* 자산운용업 제90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등</p>	<p>< 폐지 ></p> <p>○ 펀드가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운용방법을 열거하는 방식 폐지</p> <p>* '자산을 기초로 하여 이익을 창출시키는 일련의 행위 등'으로 규정</p>
<p><input type="checkbox"/> 투자자문·일임업 대상자산</p> <p>○ 투자자문·일임업 대상 자산의 범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p> <p>* 투자증권, 금융파생상품, 수익증권등</p> <p>* 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4조</p>	<p>< 완화 ></p> <p>○ 투자자문·일임 자산 범위를 모든 금융투자상품과 기타 자산으로 확대</p>
<p><input type="checkbox"/> 투자설명서 제공의무</p> <p>○ 간접투자기구 등록시 투자설명서를 판매회사에 제공하도록 함</p> <p>* 자산운용업법 제56조</p>	<p>< 폐지 ></p> <p>○ 동 의무는 폐지하되</p> <p>-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시 투자설명서로 대체</p>
<p>5. 신탁회사 관련</p>	
<p><input type="checkbox"/> 고유재산 운용 제한</p> <p>○ 신탁업자의 고유자금은 공사채, 부동산 등에 한하여 운용가능</p> <p>* 신탁업법 제15조</p>	<p>< 완화 ></p> <p>○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의 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부동산신탁은 현행 유지)</p>

<input type="checkbox"/> 준비금 적립의무 ○ 신탁회사의 이익배당시 준비금 적립의무 * 신탁업법 제21조	< 완화 > ○ 금융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규제 로 일원화(통합법안 제50조)
6. 외국환업무 영위 관련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회사 외국환업무 열거 ○ 금융투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를 한정적으로 열거 * 외국환거래법 제8조, 동시행령 제14조	< 완화 > ○ 허용된 금융투자업 영위에 부수 되는 외국환 업무를 모두 허용
7. 증권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사항(증권시장, 상장법인등 규제)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 ○ 비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을 모집· 매출하고자 하는 경우나 주권상 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 위원회 등록 의무화 * 증권거래법 제3조	< 폐지 > ○ 발행공시제도와 중복되고 기업공 개를 강제할 필요성이 감소하였으 므로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 폐지 ※ '05.11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 방안에 포함하여 기 발표
<input type="checkbox"/> 발행인 등록관련 각종서류 제출 ○ 금감위에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한 회사 개황, 재산상황 등 금 감위가 정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 * 증권거래법 제4조	< 폐지 > ○ 발행인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관 련규정 삭제 ※ '05.11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 방안에 포함하여 기 발표

<p><input type="checkbox"/>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자격</p> <p>○증권회사로 제한</p> <p>* 증권거래법 제21조제5항</p>	<p>< 폐지 ></p> <p>○증권사로 제한하지 않는 외국 입법례를 감안하여 폐지</p> <p>※ '05.12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 방안에 포함하여 기 발표</p>
<p><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신고서등 허위기재시 배상책임</p> <p>○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에 대해 서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에 대해 서만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허위기재의 경우에는 중요한 사 항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음</p> <p>* 증권거래법 제14조제1항</p>	<p>< 완화 ></p> <p>○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허위 의 기재에 대해서도 중요한 (materiality) 사항의 허위기재로 한정하여 배상책임 부담을 완화</p>
<p><input type="checkbox"/> 사업설명서 단순교부자의 배상 책임</p> <p>○사업설명서 단순 교부자도 손해 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p> <p>* 증권거래법 제14조제1항</p>	<p>< 폐지 ></p> <p>○사업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기로 함에 따라 창구직원 등 단순교부 자는 배상책임자에서 제외</p>
<p><input type="checkbox"/>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일</p> <p>○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에 따른 배상책임 금액은 변론종결 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p> <p>* 증권거래법 제15조</p>	<p>< 완화 ></p> <p>○손해배상의 실질에 맞도록 손해 배상 청구시점으로 변경</p>

<p><input type="checkbox"/> 공개매수의 적용범위</p> <p>○ 해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주식등의 매수시 동 거래를 장외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 공개매수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음</p> <p>*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p>	<p>< 완화 ></p> <p>○ 외국증권시장도 장내시장으로 보아 공개매수의무 적용대상에 불포함됨을 명확화</p>
<p><input type="checkbox"/> 수시 공시의 기관</p> <p>○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이 중요한 사항이 발행한 경우 대한 금감위 및 거래소 신고·공시하도록 의무화</p> <p>* 증권거래법 제186조</p>	<p>< 완화 ></p> <p>○ 수시공시 대상 기관을 거래소로 일원화하여 상장법인의 중복공시에 따른 공시부담 경감</p>
<p><input type="checkbox"/> 무조건적인 공시의무 발생</p> <p>○ 법령상 수시공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예외없이 공시 의무발생</p> <p>* 증권거래법 제186조제1항</p>	<p>< 완화 ></p> <p>○ 기업경영의 비밀유지 등을 고려하여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정하여(대통령령) 기업의 이익을 보호</p>
<p><input type="checkbox"/> 합병시 사전 금감위 등록제도</p> <p>○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의 금감위 사전등록 의무화</p> <p>* 증권거래법 제190조</p>	<p>< 폐지 ></p> <p>○ 발행인 등록제도의 폐지됨에 따라 동 제도도 동시에 폐지</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2006. 6.

재 정 경 제 부

< 목 차 >

I.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1. 금융투자상품의 포괄화
2. 금융투자상품과 예금
3. 금융투자상품과 보험상품
4.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5.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은행·보험과의 형평성

II. 기능별 규율체제

1.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2.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기능별 규율
3. 기존 신탁업에 대한 고려

III. 업무범위의 확대

1. 증권업 및 자산운용업간 겸영 허용
2.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이용 관련

IV. 투자자 보호 강화

V. 기타 사항

<참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청회 경과

1. 금융투자상품의 포괄화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1)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에 찬성(다수 의견)</p> <p>□ 포괄주의 도입은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기능별 규율체계의 적용에 필요하며, 상품 열거에 따른 감독의 공백을 방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임</p>	
<p>(2) 포괄주의에 따라 규제범위가 불명확함(일부 의견)</p> <p>□ 포괄주의에는 찬성하나, 포괄주의 도입시 그 규제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음</p>	<p>□ 「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의 예시적 열거주의를 병행하여 채택함으로써 규제범위를 명확히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3가지로 분류(안 제3조제2항) ○ 증권의 경우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6가지로 구분(안 제4조제2항) ○ 각각에 해당하는 증권을 구체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적으로 예시(채무증권의 경우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CP등)하여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조화시킴(안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
□ ‘위험관리’라는 정의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라고 보아야 하며, ‘외생적 지표’에 의한 상품이 ‘위험관리’를 위한 것 일 때 투자상품과 보험상품의 구분이 모호해짐	➔ ‘위험 관리 목적’은 금융투자상품 정의에서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삭제 하고, ‘이익 획득·손실 회피 목적’만 존치함
□ 원본손실을 사후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회손실을 포함할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수 있음	□ 원본 손실 가능성(투자성)은 회수 금액이 원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기회손실은 원본손실에 포함되지 않음(안 제3조제1항)

2. 금융투자상품과 예금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 주가연계예금(ELD)은 금융투자상품인지 예금상품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현재까지 판매된 주가연계예금(ELD)은 모두 원본보장이 되는 상품으로써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음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가연계예금(ELD)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아 규제를 적용하면 은행 규제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제정안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향후 파생결합예금이 원본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된다면 이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고 더 이상 예금(최소한 원본 이상을 돌려받는 상품)으로 볼 수 없음(관련 전문가의 견해) ○ 따라서 투자성 있는 파생결합예금은 금융투자상품(파생결합증권)으로 규율됨 □ 중복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함 ○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know-your-customer-rule, 공시의무 등(안 제394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성예금증서(CD)는 그 단기상품성을 감안하면 금융투자상품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함 	<p>➡ 양도성예금증서(CD)는 이론적으로는 국채 등과 마찬가지로 시장위험에 따른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만, 만기가 짧아 금리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미미하므로 정책적으로 금융투자</p>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상품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3조제1항)</p> <p>* 미국에서도 만기가 9월을 초과하지 않는 예금증서는 연방은행규제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되므로 증권거래법상 증권이 아니라고 봄(Marine Bank 판례)</p>

4. 금융투자상품과 보험상품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input type="checkbox"/> 보장성보험(예 : 자동차보험)은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함</p> <p>○ 보험의 위험보장은 보장기간 종료에 따라 소비되는 것이므로 투자로 볼 수 없음</p> <p>○ 보장성보험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 수 있음</p>	<p>➡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의 판단 기준인 '원본'과 '회수금액'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안 제3조제1항)</p> <p><input type="checkbox"/> 소비되는 금액(위험보험료 등)을 원본에서 제외하고, 중도해지수수료 등을 회수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장성 보험이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p>
<p><input type="checkbox"/> 변액보험은 실적배당 상품이지만 감독규정에 의하여 원본이 보장되므로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p>	<p>➡ 변액보험의 보험료는 위험보험료, 사업비 및 특별계정(투자운용되는 부분)으로 구분되는 바,</p>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말아야 함</p> <p>□ 설혹 변액보험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보험상품이므로 보험회사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함</p> <p>○ 금융투자회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보험업의 고유업무영역을 침해함</p> <p>□ 변액상품에 대한 이중규제로 보험시장의 위축이 우려되고, 변액보험상품의 증가 추세에 따라 이중규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p> <p>○ 변액보험에 대한 모집행위 규제</p>	<p>변액보험의 원본을 특별계정을 통해 투자되는 금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투자성 존부를 판단함 (안 제3조제1항)</p> <p>○ 특별계정에 편입된 금액과 향후 지급받을 보험금 총액을 비교하여 원본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됨</p> <p>○ 이 기준에 의하면 현재까지 판매된 변액보험은 거의 대부분 투자성이 없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음</p> <p>□ 변액보험이 투자성을 가지더라도 보험계약으로서의 성질은 유지되므로 금융투자업자는 변액보험을 취급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만이 취급 가능함</p> <p>➡ 중복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함</p> <p>○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know-your-customer-rule, 공시의무</p>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등 제반 규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통합법을 준용해야 한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만 준용되어야 함</p> <p>○ 특히, 보험영업 관행상 가택방문 영업이 많은데 통합법상 불청권유 금지와 관련해 보험설계사에 의한 영업이 원천 봉쇄될 수 있음</p>	<p>등(안 제394조제2항)</p> <p>➡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규제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이므로 변액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음(안 제48조 및 안 제394조제2항)</p>
<p>□ 보험회사가 날씨관련 파생상품을 이미 취급하고 있으므로 보험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p> <p>○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로 장외파생상품과 파생보험상품간 경쟁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불리하게 될 소지가 있음</p> <p>□ 금융투자회사가 날씨 관련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데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함</p>	<p>□ 파생상품과 보험상품은 양자간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할 것이므로 보험사의 보험상품은 파생상품 규제를 받지 않을 것임</p> <p>○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보험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이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양자가 같이 발전하고 있음</p> <p>➡ 「제정안」은 시행까지 충분한 유예기간(공포후 1년 6월 경과 시 시행)을 두고 시행될 예정임(안 부칙 제1조)</p>

4.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은 동일한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있고 경제적 기능이 동일하므로 동일한 상품으로 보아야 함</p> <p>○ ELS와 ELW는 증권이기 보다는 파생상품으로 보아야 함</p>	<p>□ 증권과 파생상품은 원본 초과손실 가능성을 측면에서 구분되므로</p> <p>○ 최대손실이 원본으로 한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은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p> <p>* 원본초과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을 구분하는 것은 미국의 Commodity Exchange Act 등 최근의 일반적인 금융관련 입법례이고 「제정안」도 동일한 기준을 두고 있음(안 제4조제1항)</p> <p>○ 파생결합증권인 ELS와 ELW는 최대 손실이 금융상품 구입비용(원본)으로 한정되므로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p>

5.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은행·보험과의 형평성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 겸영 허용으로 은행, 보험업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p>	<p>□ 「제정안」은 그간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왔던 금융투자업간의 겸영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은행과 보험업계에 대해 역차별 등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p>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취급 범위가 증권업무외에 파생업무까지 확대됨에 따라 파생업무 취급에 있어서 은행 및 보험회사의 상대적 불이익 발생이 가능함. 은행 및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파생업무의 범위를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함</p>	<p>□ 은행 및 보험회사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금융투자업은 「제정안」 시행 이후에도 계속 허용될 것임</p> <p>○ 특히,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포괄화됨에 따라 은행 등도 금융투자회사와 동일하게 모든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됨</p>
<p>□ 은행도 금융투자업의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과 금융투자업간의 규제차익 방지 필요</p>	<p>□ 은행에게 새로운 금융투자업의 영위를 허용하는 문제는 Universal Banking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임</p>
<p>□ 2월 17일 발표자료의 내용을 볼 때 금융투자회사가 브릿지론을 통해 직접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는 직접금융을 허용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은행의 영업기반을 잠식할 수 있음</p>	<p>□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 업무는 현재 증권회사 신용공여 수준으로 한정할 것임(안 제71조)</p> <p>○ 유가증권 청약자금 대출, 유가증권 매입자금 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에 한정하여 허용</p>



기능별 규율체제

1.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1) 기능별 규율체제에 도입에 찬성 (다수 의견)</p> <p>□ 은행과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 금융투자업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취급할 경우 통합법상 투자자보호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p> <p>○ 일본 금융상품거래법도 동법상 판매권유규제를 은행법 및 보험업법에 준용하고 있음</p> <p>(2) 기능별 규율체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일부 의견)</p> <p>□ 업별 규제에 더한 기능별 규제로 결국 매트릭스 체제의 과잉규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p> <p>○ 동일규제가 동일한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다른 규제일 수도 있는데, 여러 규제가 상호 적용될 때 업계에 규제의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p>	<p>→ 은행법과 보험업법에서 겸영을 허용할 경우, 겸영 금융투자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 규제(영업행위규제)만을 적용하여 은행과 보험회사의 부담을 최소화</p> <p>○ (진입규제) 현재 영위업무를 신고만 하도록 하고 새로운 인가를 요구하지 않음(안 부</p>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칙 제9조제4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성규제) 은행법과 보험업법에 따라 BIS비율, 지급여력 비율과 같은 고유한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건전성규제는 적용하지 않음(안 제30조) ○ (지배구조) 은행법과 보험업법상의 지배구조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지배구조 규제는 적용하지 않음(안 제22조) ○ (행위규제) ○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know-your-customer-rule, 공시의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안 제394조)
<p>□ 자산운용회사가 자체 직판시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으로 보아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함</p>	<p>□ 집합투자증권의 직판은 증권 의 매매업·중개업에 해당하므로 기능별 규율을 적용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p> <p>○ 아울러 「제정안」은 자산운용회사 직판시에도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p>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 통합법의 기본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금융규제의 일관성, 효율성, 안정성을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방향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같은 방향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p>	<p>□ 동 「제정안」은 자본시장의 규율체제를 개편할 필요성과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우선 추진되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경과를 보아가면서 전체 금융법의 통합 여부가 검토될 것임 ○ 참고로 보험업법은 현재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p>□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등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획일적인 규제는 무리임. 규모가 작은 회사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음</p>	<p>➡ 다음의 지배구조 규제는 대규모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함. (안 제24조 및 제2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안 제25조) ○ 감사위원회 설치(안 제26조) ○ 상근감사 선임(안 제27조) ○ 소수주주권(안 제29조)
<p>□ 투자자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 때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p>	<p>□ 외국의 입법례를 감안하여 투자위험의 감수능력(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시행령에서 구분기준을 마련할 계획(안 제9조제5항)</p> <p><시행령안 예시></p>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등 기관투자자, 상장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로 인정 ○ 비상장법인은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문투자자 자격을 인정하고 ○ 개인은 순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투자자 자격을 인정

2.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기능별 규율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 기업구조조정조합 등 타부처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업 포섭에는 찬성</p> <p>○ 다만 그 기구간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가 되도록 해야 함</p>	<p>➡ 공청회에서 논의내용을 감안하여 단종 펀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 법상 집합투자업 규율을 적용 (관계부처 협의중)</p> <p>○ 개별법상 단종 펀드에 대해서도 ‘공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정안」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되,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적용배제(안 제196조</p>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 규제 : 진입·건전성·영업행위 규제를 적용(겸영업자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는 적용하지 않음) - 펀드 규제 : 펀드 등록, 재산의 분리보관등 「제정안」의 규제를 적용. 다만, 해당법상의 산업정책적 특례는 계속 적용 ○ 감독권자 :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에 대한 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하되, 소관부처에 부수적 감독권을 부여(안 부칙 제35조 제1항 내지 제9항)

3. 기존 신탁업에 대한 고려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input type="checkbox"/> 신탁업법을 폐지할 경우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일반 민사신탁에 대한 보완입법 필요</p> <p>○ 부동산신탁이나 유언신탁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명확</p>	<p><input type="checkbox"/> 「제정안」은 현행 신탁업법상 신탁업의 정의와 업무범위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으므로 대체입법 불필요(안 제6조제7항, 안 제96조 내지 제110조)</p> <p>○ 신탁업은 그 목적과 신탁자산을 불문하고 원본이 보전되지</p>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하지 않음</p>	<p>않는 신탁 수익권이라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이므로 금융투자업에 해당함</p>
<p><input type="checkbox"/> 원본이 보장되는 연금·개인연금 신탁상품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탁업법 폐지시 처리방안이 필요함</p>	<p><input type="checkbox"/> 개인연금신탁 등 원본이 보장되므로 금융투자상품은 아니지만 현행과 동일하게 신탁업자만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안」에 마련(안 제97조 제3항, 제104조제7호)</p> <p>※ 원본보장 특례 기간이 만료(2010년)되면 금융투자업(신탁업)으로 규율</p>
<p><input type="checkbox"/> 「제정안」 시행시 은행 신탁업의 위축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p> <p>○ 신탁업이 통합법에서 규율되더라도 기존 은행의 신탁업무가 축소되지 않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함</p>	<p><input type="checkbox"/> 은행은 기존의 신탁업을 「제정안」에 따라 그대로 영위할 수 있으므로 은행의 기존 신탁업무가 축소되거나 위축되지는 않을 것임</p>



업무범위의 확대

1. 증권업 및 자산운용업간 겸영 허용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1) 겸영을 허용하고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p> <p>□ 지나친 Chiness wall 규제는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p> <p>○ Chiness wall 구축과 관련해 조직 분리, 겸직 제한 등을 너무 엄격히 할 경우 경영상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p> <p>(2) 겸영을 허용하되 엄격한 이해상충 규제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p> <p>□ 운용업의 독립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상위 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p> <p>○ 매매정보 교류행위, 임직원 겸직 행위, 전산설비 공동이용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Chiness</p>	<p>➔ 겸영을 허용하되, 이해상충 방지를 자율규제, 말기는 선진국과 달리 법령에서 직접 규제함으로써 이해상충 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적용</p> <p>□ 금융투자업자에게 일반적인 이해상충 행위 금지 의무 부과(안 제37조)</p> <p>○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금융투자업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p> <p>□ 이해상충 관리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안 제43조)</p> <p>○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해상충을 평가·파악하도록 함</p> <p>○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알리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줄일 수 없으면 거</p>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wall 구축 필요	<p>래를 중단하도록 함</p> <p><input type="checkbox"/> 정보교류 차단(Chiness wall) 의무 부과(안 제44조)</p> <p>○ 투자매매업과 집합투자업과 같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업무간 겸영시에</p> <p>- 매매정보 제공행위 금지, 임직원 겸직 제한, 전산설비 공동이용행위 제한</p> <p><input type="checkbox"/> 구체적인 이해상충 행위(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p> <p>○ 선행매매(front running) 금지, 과당매매(churnning) 금지, 인수관련 부당행위 금지, 특정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도모행위 등(안 제70조, 제82조, 제92조, 제103조)</p> <p>○ 동 금지 위반에 대하여는 형벌 적용(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안 제416조)</p> <p><input type="checkbox"/> 외국에서도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예는 없음</p>
<p>(3) 겸영 허용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p> <p><input type="checkbox"/> 자산운용업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 신뢰수준이 낮고 이해상충방지체계가 성</p>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숙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in-house 형태의 겸영허용은 투자자 보호에 역행할 수 있음</p> <p>○ 현재 글로벌 대형 운용사들(피델리티, 뱅가드 등)은 모두 독립 운용사임</p>	<p>○ 외국에서도 실제 겸영하고 있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고</p> <p>○ 정부는 겸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뿐이고</p> <p>- 실제 겸영을 할 것인지 여부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비용과 겸영에 따르는 시너지 효과를 비교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임</p>

2.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이용 관련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1) 소액결제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p> <p>□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소액결제 허용은 당연한 일이며, 수표발행이나 여수신 업무와 같은 은행의 고유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님</p> <p>○ 신용위험 등을 감안하지 않고 특정한 업종의 금융기관은 모두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용할 수 없도록</p>	<p>⇒ 공청회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투자업자의 중개계좌내 현금상태인 고객예탁금만을 대상 (안 제323조제1항제9호) 2. 증권금융을 통한 간접참가 방식(개별 업자의 결제불능시 대표금융기관이 결제책임 부담)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결제업무에 관해 논의가 되는 부분은 어떤 금융기관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지급결제업'의 논의가 아님 ○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결제수단이 다양화된 세상에는 지급결제를 폭넓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임 <p>(2) 소액결제 참여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p>	<p>(안 제323조제1항제9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자금이체업무를 영위하는 증권금융을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보아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부과(안 제323조제3항) 4. 금감위가 증권금융에 대해 은행 수준의 건전성 감독을 실시(안 제330조제2항) 5. 증권금융은 대행은행을 통해 결제(대표금융기관 결제불능시 대행은행이 결제책임 부담) 6. 한은이 정하는 결제한도(순채무액)의 범위내에서만 결제 7. 개별 금융투자업자는 결제한도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증권금융에 예치 8. 증권금융에 대해 한은이 정하는 수준(결제한도의 30%정도)의 담보물 예치의무 부과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 증권회사의 소액결제 허용과 관련하여 투자자산의 가격변동이 커짐에 따라 시장 리스크가 증가하고, 대표금융기관의 과도한 부하로 유동성리스크가 증가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p> <p>○ 핵심예금이 은행권에서 이탈해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수 있음. 서민 금융비용의 상승이 우려됨</p>	<p>□ 위탁매매계좌내의 현금만을 소액결제 대상으로 하므로 투자자산의 가격변동리스크는 전이되지 않음</p> <p>○ 아울러, 금융투자회사는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결제한도(순채무액)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를 대표금융기관에 예치하므로 유동성 리스크의 우려도 크지 않음</p> <p>○ 자본시장에 공급된 자금은 기업의 자금조달에 활용되므로 경제내의 여유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전하는 효과</p>
<p>□ 소액결제는 은행업의 고유한 업무로서 전업주의 유지를 위해 증권회사에 허용하는 것은 곤란함</p>	<p>□ 소액결제시스템은 은행의 독점 업무라기 보다 금융의 인프라로 보아야 하고 어느 범위까지 참여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시스템의 안정성만 담보되는 방안을 전제로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전향적으로 접근하여야 함</p>
<p>□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은행은 산업자본 유입이 금지되나 증권회사는 사실상 허용되고 있으므로 소액결제 허용이 산업자본의 금</p>	<p>□ 투자자가 자기 소유의 예탁금을 타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금산분리 문제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p>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융업 진출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p>	<p>○ 고객예탁금은 은행예금과 달리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분하거나 운용할 수 없으므로 산업자본의 소유에 의한 폐해가 가능성은 없음</p>
<p>□ 통합법이 왜 꼭 지금 소액결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p>	<p>□ 현재도 은행의 가상 연계계좌를 통해 투자자에게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시간이나 수수료 측면에서 불편함이 있음</p> <p>○ 따라서 금융투자회사의 계좌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좀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임</p>

IV

투자자 보호 강화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 판매권유 규제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계약 해지(cooling-off)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p> <p>* cooling-off 제도 투자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일정기간내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p>	<p>□ 계약해지에 따른 법적 안정성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p> <p>○ 금융투자상품은 그 거래의 특성이 대량적·반복적·정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야 함</p>
<p>□ 판매권유 위반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여 투자자의 구제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나, 대상규제의 구체성과 명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p>	<p>□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추정규정 마련하였음(안 제47조)</p> <p>□ 부당권유 등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규정하였음(안 제63조)</p>
<p>□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금융투자회사에게 전환하여 투자자에게는 유리한 것으로 보이나, 배상소송의 남발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대비책이 필요함</p>	<p>□ 「제정안」은 불법행위(설명 의무 위반)에 의한 투자자 손해액에 한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음(안 제47조제2항)</p> <p>○ 금융투자업자의 위법행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p>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투자자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 소송이 남발될 우려는 적은 것으로 판단</p> <p>○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투자자 보호가 담보될 수록 배상책임 우려는 줄어든 것임</p>
<p>□ 금번 도입되는 ‘Know-Your-Customer-Rule’과 관련해 현재도 상세한 고객정보를 요구하여 창구에서 고객과의 마찰이 있으므로</p> <p>○ 새로운 형태의 업무 Flow 보다는 기존에 증권회사 등에서 징구하던 투자목적기재서 및 고객확인서 등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p>	<p>□ ‘Know-Your-Customer-Rule’은 투자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임</p> <p>○ 신규제도가 구체적 시행과정에서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현행 투자목적기재서 등을 정비·운용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할 예정임</p>
<p>□ 「제정안」은 사업설명서의 교부 의무를 두고 있는데 경제적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p>	<p>□ 투자설명서 의무교부 제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써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음</p> <p>* 미국 33년 증권법 제5조,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5조, 싱가포르 증권선물법 제240조도 투자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음</p>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안」은 「일반투자자」에 한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전자메일」로도 교부(안 제117조제1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낭비의 염려는 없을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안」이 공급자 위주로 짜여 있어 일반 금융소비자가 어떻게 상품정보를 얻어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문제에 대한 방안이 부족하다고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도 협회 등에서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제공하거나 투자자문업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의 명목하에 과도한 비용의 실효성 없는 규제 도입은 반대하며,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투자자의 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투자자 보호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안」을 만들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자본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 □ 「제정안」은 입법과정에서 규제의 적정성에 심사를 받게 될 것이므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우려는 많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경제부를 포함한 정부 각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부처내에 ‘규제심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총리실 산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p> <p>○ 법제처 협의 및 국회 심사 과정을 통해서도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임</p>
<p>□ 펀드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제도 도입은 재검토가 필요함. 펀드는 현재도 신탁약관, 투자설명서를 통해 투자자보호를 기하고 있음</p>	<p>□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펀드 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음</p> <p>○ 다만, 일부 중복 문제를 고려하여 신탁약관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설명서 제도는 증권신고서 제도로 흡수 통합함(안 제112조 및 안 제197조)</p> <p>○ 또한, 펀드등록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펀드등록제도와 증권신고서 제도를 연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p>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input type="checkbox"/> 포괄주의 도입이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확대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기관내, 정부내 의견조율이 반드시 필요함</p> <p>○ 포괄주의로 인한 다양한 상품개발로 효율적인 감독기능의 행사가 중요한 일이 될 것임</p> <p>○ 통합법은 포괄주의와 겸영으로 위험의 확충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고 감독과 관련한 이슈가 많음에도 감독당국의 의견제시가 안되는 것 같음</p> <p>○ 감독 쪽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됨</p>	<p><input type="checkbox"/> 정부는 정부내 또는 금융감독기관과 「제정안」 작업에서 수시로 의견조율을 하며 많은 연구와 준비작업을 함께 하여왔음</p> <p>○ 금융감독당국은 「제정안」을 위한 재정경제부의 ‘자본시장통합TF’에 직접 참여하여 공동작업을 하고 있음</p> <p>○ 금융감독원은 동 법의 제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시장통합 TF’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정부와 활발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음</p> <p>○ 「제정안」은 그 시행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전에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의와 준비과정이 필수적이므로 「제정안」이 원활하게 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인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음</p>
<p><input type="checkbox"/> 포괄주의 규제전환의 실질화는</p>	<p><input type="checkbox"/> 재경부와 감독당국은 「제정</p>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감독당국의 운용자세에 상당부분 의존함</p> <p>○ 원칙적으로 자유화된 부수업무 신고가 실질적인 신고절차로 운용될 필요가 있음</p>	<p>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투명한 업무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갈 것임</p> <p>○ 특히, 예측가능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해 나갈 것임</p>
<p>□ 포괄주의, 겸영확대 등으로 통합법의 적용대상이 증가하게 되면 감독의 범위가 넓어지고 금융투자업자의 준수사항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p> <p>○ 금융감독기관 및 자율규제기구의 감독기능 향상이 필요하며, 사후 감독뿐 아니라 사전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no action letter나 이와 유사한 자발적 사전점검(예측) 기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p>	<p>□ 금감위는 현재 증권 분야를 포함한 모든 금융감독법규 관련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에 의거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시행 중임</p> <p>○ 금감위의 동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 비조치의견서는 사법적인 판단까지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에 근거할 필요는 없음</p> <p>* 미국 SEC의 『No-Action-Letter』 제도도 법률상 근거는 두지 않고 SEC 내부규칙에 의해 운영됨</p> <p>* 일본 금융청의 『법령적용 사전확인제도』의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는 없으며 금융청 내부규칙에 의함</p>
<p>□ 기능별로 자율규제기관을 구분</p>	<p>□ 기능별 규율체제가 도입되고</p>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 운영할 필요가 있음</p> <p>○ 협회 통합문제와 관련해 자본조달은 거래소, 위험관리는 선물협회로 나누어 위험관리를 감독하기 위한 사전적 감독체계가 필요</p> <p>○ 기능별로 구분해 증권은 증권업협회, 파생상품은 선물협회가 담당하도록 선물협회 존속이 필요</p>	<p>검영이 허용됨에 따라 자율규제도 금융기능별로 수행될 필요가 생김</p> <p>○ 「제정안」은 현행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금융투자협회'로 단일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안 부칙 제3조)</p> <p>○ 향후 각 금융투자업자 및 각 협회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개편안이 마련되면 「제정안」에 이를 반영할 예정임</p>
<p>□ 영국의 FSMA와 같이 은행, 증권, 보험을 하나로 통합하여 경쟁력 강화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함</p>	<p>□ 관련 법률의 통합작업은 자본시장에서 필요성과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자본시장 관련법률의 통합작업을 먼저 추진한 것임</p> <p>○ 은행, 보험을 포함하는 전체 금융법 통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될 것임</p> <p>※ 영국의 경우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통합(1986년)이후 전체 금융법 통합까지 14년이 소요된 바 있음</p>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제도의 변화가 줄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준비가 필요함</p>	<p>□ 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제정안」 시행까지 상당한 유예기간 (공포후 1년6월)을 두었음(안 부칙 제1조)</p>
<p>□ 대형 IB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가 너무 앞서가서는 안될 것임</p>	<p>□ 「제정안」은 투자자 보호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법적 제약을 철폐함으로써 업계의 선택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임</p> <p>○ 또한 「제정안」은 특정 분야의 특화된 전문 금융투자회사의 탄생할 수 있도록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있음(안 제12조제1항)</p>
<p>□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바뀌어야 우리 자본시장이 발전할 것으로 봄</p>	<p>□ 「제정안」은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도입(안 제3조, 제4조), 부수업무의 사전적 제약 철폐(안 제41조제1항) 등을 통해 네가티브체제로의 전환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음</p>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회사의 기능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은행의 금융기능 위축등 부작용으로 상쇄되어 금융시스템 전체적인 효율성 제고 효과는 의문시됨	<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은 특정업권의 독점영역이 아니라 우리 금융의 인프라이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은행의 장기적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임 ※ BASEL II의 시행에 따라 은행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을 자본시장에서 적절하게 증권화하지 않으면 자기자본 규제비율을 맞추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한미 FTA 협상 진행결과에 따라 시장만 열어 놓으면 외국계 IB만 유리한 것 아닌지 우려됨	<input type="checkbox"/>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지식 습득능력과 우월한 판매망을 감안할 때,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빠르게 외국 금융기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규제체제에 안주하여서는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한미 FTA를 고려하여 「제정안」이 먼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듦	<input type="checkbox"/> 국내 금융시장은 대부분 개방을 한 상황이어서 동법 제정안에 의해 새롭게 개방되는 분야는 많지 않음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 상업적 주제 방식을 통해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은 이미 자유화되어 있음</p> <p>○ 국경간 공급방식(Cross-border supply)의 진출은 제정안에 의하여 새롭게 허용되는 부분은 없음</p> <p>○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규율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이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부분에서는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빠르게 경쟁력을 갖추나갈 수 있을 것임</p>
<p>□ 수시공시의 거래소 일원화 문제와 관련해 비상장 금융투자회사 등의 사모발행에 관해서도 거래소가 수시공시를 담당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임</p>	<p>□ 수시공시는 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의무사항임(비상장법인은 해당사항 없음)</p> <p>○ 수시공시 일원화는 금감위와 거래소 양쪽에 공시하여야 하는 상장법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등 주요국에서도 거래소가 담당하고 있음</p>
<p>□ 파생상품 시장에서 포괄주의는 거의 모든 상품 출현을 가능케</p>	<p>□ 파생상품에 대한 로드맵은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계획과 관</p>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함. 자본시장 발전은 곧 파생상품 발전이고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의 중추임. 차제에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함</p>	<p>련하여 현재 마련중임</p>
<p><input type="checkbox"/> 은행, 보험업권 이외에 의견 수렴이 안되는 업권이 있는지 살펴야 함</p>	<p><input type="checkbox"/> 부동산신탁회사, 증권유관기관 등 은행·보험 이외의 권역으로부터도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이후에도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해나갈 것임</p>
<p><input type="checkbox"/> 추상적 총론적으로 생각할 때 사모펀드를 모두 라이선스 받도록 하는 것은 금융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봄</p>	<p><input type="checkbox"/> 사모펀드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되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음</p> <p>○ 수익자총회 개최의무, 신탁회사의 감시의무 규제는 사모펀드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여 규제를 완화함(안 제266조제1항·제4항)</p>
<p><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정도에 따라 좀더 창의적인 이름을 지어 새롭게 만드는 것도 좋을 듯함</p>	<p><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용어는 투자성 있는 금융상품이라는 입법 취지를 표현하고 있음</p> <p>○ 향후 입법과정에서 새롭고 적절한 명칭이 있다면 그 반영 여부를 위한 검토할 것임</p>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회사의 명칭을 투자은행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함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input type="checkbox"/> ELS와 ELF는 결국 동일한 상품이지만 각각 파생결합증권과 수익증권으로 나뉘어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데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제정안」에서는 ELF도 ELS와 동일하게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등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것임(안 제111조, 제112조)
<input type="checkbox"/> 장외해외통화선물, LME 장외금속거래, LBMA 귀금속거래 등도 통합법의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계속 포함시켜야 함	<input type="checkbox"/> 해외파생상품시장 정의를 통해 현행과 동일하게 「제정안」에 반영되어 있음(안 제5조제1항)
<input type="checkbox"/> 자산운용업 관련 vehicle 확대는 바람직하며, 일반 조합중에 유한책임조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조합은 모두 무한책임이고, 몇 개 특수한 조합에서 유한책임으로 하고 있는데 금융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제정안」은 민법, 상법 등 현행법상 설립가능한 모든 Vehicle을 간접투자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9조제17항) <input type="checkbox"/> 이에 따라 주식회사 이외의 유한회사, 합자회사,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등을 간접투자기구로 포섭하였음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한책임조합은 아직 상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확대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며, 상법 개정으로 유한책임조합이 도입되면 「제정안」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음
<p>□ 판매채널이 독립되지 않는 이상 타 금융권으로부터의 자산운용업 독립은 어려움</p>	<p>□ 「제정안」은 판매채널의 확대를 위해 투자권유대행자 제도를 도입하였음(안 제50조)</p> <p>□ 또한 자산운용사 직판시 판매보수·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57조)</p>
<p>□ 국회 전문위원, 판사, 금융감독당국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음. 규범화 되기까지 상당히 왜곡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함께 작동하는 규제가 되기 위해 미리 참가해야 함</p>	<p>□ 「제정안」 작업에는 정부와 금융감독당국,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등이 참여하여 다년간의 심도깊은 연구와 준비작업을 거쳐 추진중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 학계, 법조계, 감독당국이 참여하는 ‘자본시장통합TF’를 구성해 지속적인 자문을 받고 있음
<p>□ 금융투자상품과 그 외 상품과의 구분과 관련해서 모든 분쟁을 법원까지 가져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통합법의 정착을 위해</p>	<p>□ 「제정안」 입법 이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감독규정 제정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이 더욱 명확해 질 것임</p>

제기된 의견	제정(안) 반영 내용
<p>법 시행 초기 법해석 등을 담당할 T/F(금융실명단 전례 참조)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p>	<p>○ 새로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p>

<참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청회 경과

<제1차 공청회>

- ☐ 주제 :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및 투자자보호
- ☐ 일시 : 2006년 4월 26일 15:30
- ☐ 장소 : 대한투자증권 한마음홀
- ☐ 주최 : 서울대 금융법센터
- ☐ 주제발표 : 정순섭 (인천대 법대 교수)

<제2차 공청회>


- ☐ 주제 : 기능별 규율체계 및 업무영역
- ☐ 일시 : 2006년 5월 4일 14:00
- ☐ 장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
- ☐ 주최 : 한국개발연구원(KDI)
- ☐ 주제발표 : 신인석 (KDI연구위원)

<제3차 공청회>

- ☐ 주제 : 은행·보험업법 체계개편 등 금융법 통합방향
- ☐ 일시 : 2006년 5월 10일 (수) 14:00
- ☐ 장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
- ☐ 주최 : 한국금융연구원
- ☐ 주제발표 : 이지언,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제4차 공청회>

- ☐ 주제 : 주요 이슈 분석과 평가
- ☐ 일시 : 2006년 5월 16일 (화) 14:00
- ☐ 장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
- ☐ 주최 : 한국증권연구원
- ☐ 주제발표 : 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

 재정경제부	<h1 style="text-align: center;">보도자료</h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정부
	보도일시	2006.06.30(금) 조간부터	
생 산 일	2006.6.29일	생산부서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담당과장	증권제도과장 최상목	담 당 자	최원진 사무관(2110-2438/9)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시행

- ☐ 재정경제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를 하였음
- ☐ 2006년 2월 17일 동 법 제정을 위한 기본방안을 발표한 이 후,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정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왔음
- 2006년 3~4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 금융업계, 전경련 등 재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 2006년 4~5월, 금융연구원, 서울대금융법센터, KDI, 증권연구원과 공동으로 4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 설명회와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조
- ☐ 동법 제정안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의 신뢰를 높인다’는 당초 기본방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그간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마련되었음

<① 통합법 제정안의 주요내용 - 기 발표내용>

(1)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취급과 설계를 허용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 증권, 선물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을 법령에서 일일이 열거하던 그간의 규율방식을 폐지하고,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
-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의 범위도 '계량화 가능한 모든 위험'으로 확대하여 모든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함

(2)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이 법상 금융투자업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6개로 구분함

* 기존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의 명칭을 국제적 정합성에 맞춰 변경

- 은행, 보험사 등이 집합투자증권, 투자성있는 예금 또는 투자성있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으로 규율하여 투자자를 보호함
-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 법률상 펀드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집합투자업 규제와 펀드 규제를 적용하여 투자자를 보호함
- 집합투자업에 대한 금융감독권한은 금융감독당국이 행사하도록 일원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 (3) 금융투자회사가 6가지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화·겸업화된 투자은행의 출현 기반을 마련함
- 금융투자회사는 각각의 금융투자업별 진입요건을 갖추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 6개 금융투자업을 모두 겸영할 수 있도록 함
 -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파악·평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두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해소한 후 거래하도록 함
 -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업간(예; 투자매매업과 집합투자업 등)에는 일정한 정보의 제공,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 공간 등의 공동 이용 제한 등 규제를 부과함
 - 아울러, 인가단위를 세분화함으로써 집합투자, 채권중개 등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도 허용
- (4)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
- 부수업무(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원칙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영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투자권유대행자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 제도를 투자권유대행자에게 적용하여 투자자를 보호함

- 원화로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무는 모두 외국환으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편함(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사항)
-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위탁매매 계좌에 보유한 현금을 타 계좌로 송금하거나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대표금융기관과 대행은행을 통한 참가방식 채택)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조합, 투자유한회사 등 현행법상 설립 가능한 모든 조합·회사를 집합투자기구(Vehicle)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다양화함
- 집합투자업과 관련하여 펀드 종류별 투자 대상자산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자산에 대하여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 자산펀드를 허용하며 사모펀드에 대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함

(5) 투자권유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선진화 함

- 투자자를 위험 감수능력(전문성, 보유자산 규모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 규제를 집중 적용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함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 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며 원본 결손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도록 함
-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 제도'를 도입

-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 권유를 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여 장외파생상품과 같이 위험이 큰 금융투자 상품을 무분별하게 권유하지 못하도록 함
 - 투자자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 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요청받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제도’를 둠
- (6)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 주식등 대량보유보고제도(5% Rule)의 적용대상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정부, 정부기금, 증권금융 등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장의 정보 효율성을 높임
 -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공모할 경우 제출하는 ‘증권 신고서’의 적용 대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집합투자 증권, 은행채,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발행자에 관한 정보를 투자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7) 기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상장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채널을 거래소로 일원화하여 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함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규제 대상 증권의 범위와 내부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대상 증권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함
 - 현물과 선물간의 시세조종, 파생결합증권과 그 기초자산간의 시세조종 등 연계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함

(8) 기타 법률의 통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에 대하여 법률 시행전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대해 일괄 재인가·등록받도록 함
-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로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중개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채권의 투자중개업'에 한하여 겸영할 수 있도록 함

<②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거나 새롭게 추가된 내용>

- (1)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함에 있어 '원본' 개념과 '회수금액'을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위임근거를 마련
 - (원본) 소비되는 금액(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사업비 등)은 원본에서 제외하고, 특별계정으로 투자되는 금액만을 원본으로 포함하여 전통적 보험상품이 투자성을 갖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회수금액) 해지수수료, 세금 등을 포함하여 회수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전통적 예금 등이 투자성을 갖지 않음을 명확히 함
- (2) 일반적인 신탁업과 달리 원본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연금신탁은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되, 신탁업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동 법에 별도의 업규제를 마련

※ 다만, 2010년까지만 원본보전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므로('05.11월 금융규제 개혁방안) 그 이후에는 금융투자업(신탁업)으로 규율

- (3)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제도(투자자로부터 요청없이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함

※ 보험계약(변액보험 포함)과 증권의 경우 동 규제의 대상이 아님

- (4) 투자자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계속 투자권유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 도입
- (5)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상 단종 펀드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통합법상 집합투자업 규율과 펀드 규율을 받도록 함

※ 현재, 건교부, 산자부, 해수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

- (6) 은행과 보험사 등이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이 법상 금융투자업 규제를 적용
-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영업행위 규제만을 적용하되 진입규제(인가)는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는 적용하지 않음

* 인가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거나, 금감위에 일괄 신고시 효력 인정

- (7) 통합법 시행일은 시장 참가자와 감독당국이 충분한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포일로부터 1년 6월 후로 하고

- 기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괄 재인가·등록은 법 공포일 1년 후부터 법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이루어지도록 함

- (8) 자율규제기관(협회)의 기능별 재편을 위하여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단일의 '금융투자협회'로 통합 하는 방안으로 조문을 마련

※ 다만, 추후 업계간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져 기능별 재편 방안이 마련 되면 이를 법안에 반영할 계획

(9)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소액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 결제대상 금액은 고객예탁금(위탁매매 계좌내의 현금)으로 한정하여 증권 가치변동 리스크의 전이가능성을 차단
-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이 금감위로부터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도록 함

(10) 집합투자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폐지하여 투자자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증권신고서 제출시 투자설명서(기존의 사업설명서)로 일원화함

(11) 실효성이 크게 감소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 직접 투자 제한을 폐지하되 선진국 수준의 내부통제 장치*를 도입

* 자기명의로 1인 1계좌만 허용하고 매매내역을 정기적으로 소속회사에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시 형벌로 제재하는 등 엄격한 통제 장치 부과

(12)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변경시 금융감독 위원회의 사전승인*제도를 투자일임·자문업자·신탁회사에도 적용하여 건전 경영을 유도

* 재무건전성을 충족할 것, 법규위반사실이 없을 것 등을 심사

(13)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명칭을 「한국거래소」로 변경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칭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

(14) 법 위반시 형벌 수준을 은행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자본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벌금형을 높여 징역형과의 균형을 맞춤(예; 5년이하의 징역 & 3천만원이하의 벌금 → 5년이하의 징역 & 2억원이하의 벌금)

□ 동법 제정에 따른 금융법의 체계 변화

- 동법이 제정되면 자본시장은 총 10편 420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일 법률의 규율을 받게 됨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 7개 법률이 폐지되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9개 법률이 일부 개정됨

□ 향후 추진 일정

- 입법 예고(7월 20일까지)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 금년 중 국회에 동법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임

- ※ 붙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축조 설명자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4.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 6.30일부터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5. 최근 5년간 금융위 금감원 퇴직임직원의 관련기관 취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내역

- 퇴직후 재취업자 이름, 나이, 직책, 재취업기관, 취업기관 직책,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내용 등 상세설명자료
- 재취업기관은 산하 금융기관 외에 법률사무소 등도 상세 제출

성명	직위(직급)	퇴직일자	재취업 직장명 직책
○○○	부위원장(차관급)	08.03.13	LS네트웍스 고문
○○○	금융정보분석원장(고위공무원)	08.03.28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	부이사관	09.03.26	한국자금중개 전무
○○○	서기관	09.05.15	신영증권 상무이사
○○○	부이사관	09.09.10	SK C&C 상무

☐ 상세설명자료는 별도제출

6. '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취한 정책

□ 정부는 실물경기 위축,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응하여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병행하여 은행자본확충 펀드 조성 등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책 및 실물경제 침체에 대응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

① (금융시장 안정대책)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원),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원) 조성, 공매도금지, 외화지급보증 등 금융시장 안정대책 추진

② (중소기업지원대책) 보증공급규모 확대(42조원→55.5조원), 09년 만기도래보증 전액연장, Fast Track프로그램, 총액한도대출 한도확대(6.5조원→10조원)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③ (기업구조조정 추진)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설치하고, 업종별(건설·중소조선·해운사), 대기업, 대기업그룹,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 금융회사의 자산건전화 및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안정기금* 및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 설치

* 금융안정기금 설치(금산법 개정 09.4.30), 구조조정기금 설치(자산관리공사법 개정, 09.4.29)

**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은행 PF 부실채권(8,164억원) 및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박(1,912억원) 등을 인수정리

○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적자금 관리를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09.8.31) 되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공적자금을 운용해 나가고 있음

7. ‘금융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문서 작성경위 및 용도 관련

1. 이명박정부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문서 사본 각1부씩
2. ‘금융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문서 사본 1부
3. ‘금융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문서 작성경위 및 실행내역
4. ‘금융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문서에 나오는 추진사업 책임자
5.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금융위원장 및 실무책임자의 선진화회의 참석 내역
6. 금융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관련 금융위 주관 회의 일정 및 참석자

1. 이명박정부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문서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사본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연번	제 목	문서번호	등록일자
1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대졸초임 조정 추진일정 통보	의사운영정보팀-295	2009.3.5
2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점검사항 통보	의사운영정보팀-486	2009.4.3
3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 통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2255	2009.6.30

2~4.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문서 : 별첨

-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공기업의 민영화, 경영효율화 등 선진화 추진상황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 이 과정에서 금융공기업들의 선진화 추진상황이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5~6.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공공기관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 금융위원회가 참석한 회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회의명	금융위 참석자	소관기관 참석자
'08.10.10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사무처장	-
'08.11.30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사무처장	-
'08.12.30	'09년 공공기관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사무처장	기관장, 임원
'09.1.29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사무처장	-
'09.4.18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	위원장	기관장
'09.5.6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사무처장	-
'09.5.19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	부위원장	기관장
'09.6.5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09.6.6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비 점검회의	서기관	부서장

금융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09. 3. 19.

1. 단체협약 개선

☐ 경영권을 침해하는 인사제도¹⁾, 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²⁾, 과도한 노조활동 보장³⁾ 등과 관련된 조항 개선

- 1) 노조간부 임면·이동시 노조 사전동의, 시업·종업시간 노조합의, 시간외 근로 대상·절차 노조합의, 법상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수당, 정리해고시 노조합의 및 별도수당·위로금 지급 등
- 2) 인병휴직기간중 산재보험급여와 임금 차액 보전, 불임직원 1년 유급휴직, 불임시술비 지급, 유급 육아휴직, 법기준 초과 산전후 휴가, 방통대생 수업참여 공가 인정, 퇴직금 누진제 등
- 3) 쟁의기간중 시설 무제한 사용,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시 미지급 임금외 추가로 평균임금 300% 지급, 상급단체 임원 별도 인정, 노조 요구시 재정자립금 적립 지원

⇒ 개선계획을 3월말까지 금융위 보고

2. 선진화 계획 이행

☐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 중 기능조정, 폐지, 경영효율화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반면

-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건변화로 일부 기업 민영화, 신·기보 통합, 출자회사 매각 등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

☐ 민영화, 지분매각, 기관폐지, 인력감축, 출자회사 정리 등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일정 등을 3월말까지 이사회 의결

- * 4월중 산은법 국회통과 목표, 정책금융공사 설립은 차질없이 준비
- * 자산신탁매각은 일정대로 추진, 기업데이타는 경영정상화에 주력
- * 출자회사(54)는 보다 다양한 매각방안 강구

☐ 인력감축 관련 '12년 목표정원(T/O)으로 정원을 일괄 조정(3월말까지 이사회 의결)후 초과현원은 점진적으로 축소

-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기능이 확대되는 경우(예: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 기금)에도 당초 계획대로 인력규모 감축 추진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의 선진화 계획 >

선진화 내용	발표일	대 상 기 관
민영화(9개사)	1차 (‘08.8.11)	산업은행(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기업은행(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IBK시스템) 한국자산신탁, 한국기업데이터
지분매각(14)	1차 (‘08.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우일렉트로닉스, 쌍용건설, 대우인터내셔널(이상 캠프), ■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이상 예보) ■ 대우조선해양, 쌍용양회, 현대건설, 하이닉스, 현대종합상사, 팬택, 팬택엔큐리텔, 한국항공우주, 대우증권(이상 산은)
폐지(1)	2차	정리금융공사
기능조정(2)	(08.8.26)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통합(2)	3차 (‘08.10.10)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경영효율화(6)	4차 (‘08.12.22)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출자회사정리(7)	5차 (‘09.1.15)	예금보험공사(5), 자산관리공사(3), 산업은행(5), 신용보증기금(22), 기술신용보증기금(17), 정리금융공사(1), 산은캐피탈(1) * 매각(52개), 폐지·청산(2)

3. 임금조정 등

- ☐ 대졸초임 삭감, 부서장급 중견간부 급여 반납은 3월중 경영진 방침(필요시 이사회 의결)을 확정 발표, 5월중 보수규정 개정 완료

* 3.19일 현재 4개 기관(기은, 산은, 예보, 자산신탁) 대외발표

- ☐ 금융기관 사용자협의회와 금융산업노조간 임금협상 문제

- ☐ 청년인턴 채용실적을 가급적 3월말 이전에 조기달성 추진

* 9개 공공기관은 '09년중 총 1,149명 채용계획(현재 428명 채용)

4. 공공기관 경영공시(4.1),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제출(~4.15), 경영계약 체결(~4.30) 등

5.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차질없이 추진



금 융 위 원 회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경영혁신과장)
(경유)

제목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 통보

1. 귀 부 경영혁신과-284(2009.5.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200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 임 :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 1부. 끝.

금융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관

남성철

규제개혁법무당 06/30

당관

변영한

협조자

사행 규제개혁법무당관
-2255

접수

우 150-74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빌딩 금융위원회 / <http://www.fsc.go.kr>
전화 02-2156-9634 전송 02-2156-9929 / namsc@fsc.go.kr / 대국민공개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

1. 조사개요

□ (목적) 고객중심 경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공공기관간 서비스 품질 경쟁을 촉진

□ (근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년 실시

* 제13조 ②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

□ (대상기관) 기재부장관이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 ① 기재부 주관 통합조사 대상기관과 ② 주무부처 주관 조사 대상기관 ③ 조사 제외기관으로 구분

금융위 소관 조사 대상기관

주관부처	대 상 기 관
기재부 주관 통합조사(9)	자산관리공사, 기보, 신보,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거래소, 예보, 산은, 기은
금융위 주관 조사(5)	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코스콤, 기업데이터
조사 제외기관*(4)	한국자산신탁, 정리금융공사, 기은신용정보, IBK시스템

* 연내 민영화가 완료되는 기관(한국자산신탁) 및 주고객이 모회사인 기관(정리금융공사, 기은신용정보, IBK시스템)

□ (조사방법) 통합조사 대상기관은 조사결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재부 주관으로 PCSI 모델*을 활용하여 조사

* PCSI(공공서비스 고객만족지수, 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모델 : 만족지수·품질지수·성과지수 측정영역으로 구성되며, 기재부가 능률협회에 의뢰하여 개발

- 주무부처 주관 조사 대상기관은 PCSI모델 적용을 기본으로 하되, 기관의 특성에 따라 주무부처와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조사결과 활용)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한 조사결과는 경영 실적평가에 반영(총 배점의 5%)

- 부처주관 조사 대상기관은 조사 종료 후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하고, 대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금융위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

□ (조사방법) 대상기관들이 기관별로 상이한 특성과 목적을 보유

- 금융위가 통합하여 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내용이 일반적·공통적 사항에 한정되고 조사결과 활용도 제한될 가능성

⇒ '08년과 동일하게 각 기관별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되,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 (추진일정) 기관별로 조사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되 조사계획, 실시업체 선정결과 및 조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

추진일정	기간	비고
조사계획 수립	'09.6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 활용방안을 금융위에 보고
실시업체 선정	'09.7~8	선정결과를 금융위에 보고
고객만족도 조사	'09.8~12	외부 전문기관 조사
조사결과 발표 (경영공시)	'10.1	조사결과 금융위 보고 → 금융위는 기재부에 통보

<참고>

금융위 주관 조사대상 기관별 만족도 조사계획

기관명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항목	대상상품
기은캐피탈	이용고객	표본조사	업무 프로세스 및 고객 응대에 대한 만족도	상품 전반
산은 자산운용	판매사 및 법인투자자	개별복합조사 (방문, 전화, 이메일, 팩스)	고객응대서비스, 인적서비스, 상품관리 및 사후관리	상품 전반
산은캐피탈	이용고객	전문 면접원에 의한 전화조사	고객응대부문, 업무시스템부문	투자, 리스, 대출, 카드
코스콤	이용고객	정량조사 (설문지) 및 정성조사 (심층인터뷰)	종합만족도 및 상품별 채감만족도	증권·파생상품시장 시스템, Powerbase, 트레이딩, 정보데이터 등 10개 상품
기업데이터	신용조사 완료고객, 기업정보 이용고객	온라인 WEB조사(메일)	종합만족도 및 상품별 채감만족도	기업신용조사, 기업정보제공



금 융 위 원 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대졸초임 조정 추진일정 통보

1. 정부에서는 '09.2.19.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마련된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 조정 권고(안)을 확정하여, ' 09.2.25.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권고(안)을 바탕으로 소관 공공기관(18개)의 대졸초임 조정 관련 세부일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니, 각 공공기관은 관련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별 공공기관, 대졸초임 삭감 계획을 금융위에 보고(~3.24)

* 절감된 인건비 사용계획 포함(청년인턴 채용 등에 활용하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정원확대는 제외)

□ 개별 공공기관, 대졸초임 삭감 관련 절차 진행(3~5월)

* 임금표 신설 관련 이사회 의결 등

* 애로사항 파악·해소 등을 위한 T/F 구성 예정

□ 개별 공공기관, 보수규정 변경 후 창의경영시스템에 등록 및 금융위에 실적 보고(~5월말)

□ 금융위, 관련 실적에 대한 실태 점검(6.1~6.15). 끝.

금융위원회위원장

수신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에
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자산신탁(주), (주)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주),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산은캐피탈주식회사, (주)아이비케이시스템, (주)정리금융공사,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행정주사 김동현 의사운영정보팀 전결 03/05
팀장 배준수

협조자

시행 의사운영정보팀-295 접수
우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 / <http://www.fsc.go.kr>
전화 2156-9633 전송 2156-9929 / econokdh@fsc.go.kr / 비공개(5,7)



금 융 위 원 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점검사항 통보

1.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동안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점검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왔습니다.

2. 각 공공기관에서는 동 점검사항을 숙지하셔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및 첨부물 1부. 끝.

금융위원회위원장

수신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은자산운용(주), 산은캐피탈(주), (주)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주), (주)아이비케이시스템, 한국자산신탁(주), (주)정리금융공사,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터(주)

행정주사 김동현 행정사무관 남성철 의사운영정보팀 전결 04/03
팀장 배준수

협조자

시행 의사운영정보팀-486

접수

우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 / <http://www.fsc.go.kr>

전화 2156-9633 전송 2156-9929 / econokdh@fsc.go.kr / 비공개(5)



기 획 재 정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선진화 추진 점검사항 통보

1.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은 그 동안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선진화 방안이 차질없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에 불임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점검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점검사항

기획재정부장관

수신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국방부장관, 중소기업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특허청장, 산림청장, 방위사업청장, 문화재청장, 국무총리실장, 국가보훈처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주무관

이옥주

서기관

김위정

정책총괄과 과 전결 04/01
장 위성백

협조자

시행 정책총괄과-291

접수 의사운영정보팀-476

(2009. 04. 02.)

우 427-725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 / <http://www.mosf.go.kr>

전화 02-2150-5518

전송 02-503-9256

/ okju1327@mosf.go.kr

/ 대국민공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점검사항

I. 점검배경

① 금년은 공공기관 선진화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

- 언론 등에서 5차례 선진화 계획 발표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고 추진속도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
- 선진화 계획이 당초 발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주요 점검사항을 제시할 필요

< 선진화 계획 주요 내용 >

- 1~3차('08.8~10) :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108개 기관)
- 4차('08.12) : 조직 · 인력 · 예산 등 경영효율화(69개 기관)
- 5차('09. 1) : 출자회사 지분매각, 청산 · 폐지, 통폐합(130개 기관)

② 선진화 계획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

- 주간단위로 추진실적 점검,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 선진화 추진상황 점검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선진화 추진실적 점검, 우수사례 확산 및 부진기관 독려 계획

③ 확정된 선진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 및 자율적인 후속 선진화 방안의 수립 및 추진

- 주요 점검사항을 제시하여 자율적인 경영효율화를 통한 상시 선진화 체계를 구축

II. 점검사항

- ◇ 선진화 방안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세부 준비작업 진행
- ◇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

1 민영화 · 자산매각 · 출자회사 지분매각

- 민영화 대상기관은 시장여건상 매각이 가능한 경우 즉시 매각이 가능하도록 주간사 선정, 자산평가 등 사전 준비작업을 조기 완료
- '10년 이후 민영화가 예정된 기관의 경우 '09년 중 준비작업 완료
- 매각방법 용역, 평가법인 선정, 주간사 선정 등 중복절차로 매각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는 병행하여 진행
- 외부 전문기관을 매각주간사로 활용 또는 자문청취 등을 통해 매각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
- * 매각 주간사에 대한 성공보수 제도 활용,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한 적절한 매각예정 가격 산출 등
- 민영화(지분매각), 자산매각 등 선진화 계획 추진과정에서 객관성이 요구되는 자산평가는 제3자에게 평가기관 선정 의뢰

2 기관 통합

- 통합관련 법률 시행 즉시 통합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보수체계 · 조직개편 · 인력 통합 등 사전준비 작업을 병행
-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청취, 제3자에게 자산 평가기관 선정의뢰 등 통합과정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확보

③ 경영효율화

- 기능·정원조정 등에 따른 제 규정은 내부 절차(이사회 의결 등)를 거쳐 조속히 개정
 - 정원은 협의된 목표치에 따라 일괄 조정하고 현원은 자연 퇴직 등을 반영하여 '1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
 -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소요예산을 '12년을 기한으로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 까지 반영
- 예산절감은 예산지침 등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하되 절감재원은 인턴채용, 투자확대 등 국정과제에 우선 활용
-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제도개선사항은 적용직급, 실시시기, 적용방안 등 세부 실천계획을 구체화하여 조속히 추진

④ 대졸 초임 인하

- 권고안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 내부절차를 거쳐 보수규정 (보수 table)을 변경하고 '09. 5월말까지 창의경영시스템에 등록
 - 기관별 보수수준에 따라 보수 삭감율을 차등 적용 (2,000만원 이상, 최고 △30%)

⑤ 주기적인 추진실적 제출

- 공공기관은 매주 추진실적을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필요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 또는 의결

8-1. 황영기의 징계내역

- 징계사유, 징계절차 및 규정, 징계결정내용
- 징계결정문

□ 금융위원회는 2009.9.9(수)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9.3)를 거쳐 조치 건의한 황영기 前은행장에 대한 제재안건을 심의하였음

○ 위원회 심의 결과, 황영기(前 은행장)에 대한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 조치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의 건의대로 원안 의결하였음

○ 한편,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대상자에 대하여 출석하여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심의에 참고하였음

* [참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중 관련 규정

※ [첨부] 황영기 前행장에 대한 제재조치

[참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중 관련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5.8.31. >

③ 금융위가 금융기관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정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별첨] 황영기(前은행장)에 대한 조치

(1) 금융감독원장 조치건의 내용

<제재조치의 사유>

1) IB부문에 CDO·CDS 투자확대를 사실상 지시

- 은행의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사결정 사항이나 2005~2006년 사업본부별 목표설정계약 체결시 전체 자산 증대목표를 이사회가 부여한 목표보다 10.5~17.7% 높게 부여

< 재임기간중 우리은행의 자산증대목표 현황 >

(단위: 조원)

연도	이사회 부여목표(A)	실행계획상 목표(B)	초과율(%)
2005	113.9	134.0	17.7
2006	154.0	170.2	10.5

- 특히 IB본부에 대해 전년대비 자산·수익 증대목표를 은행 전체의 증대 목표보다 과도하게 높게 부여함

	IB부문 목표		은행전체 목표	
	자산	수익	자산	수익
2005	30.6%	17.5%	9.0%	5.4%
2006	98%	63%	12%	6.0%

- 또한 2005~2006년 IB본부와 Credit Linked Products, CDO 등 구조화 상품 투자확대가 포함된 목표설정계약서를 체결하고,
- 별도의 은행장 지시를 통해 일반 회사채에 비해 고수익이나 유동성·안정성이 취약한 비정형 장외파생상품인 CDO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사실상 지시함으로써 IB본부가 CDO·CDS투자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

※ 우리은행이 투자한 CDO·CDS(15.4억불)의 72.5%(11.2억불)은 중순위 (mezzanine tranche) 이하이고 손실을 대신 떠안아줄 후순위비율도 매우 낮아(6.3~12.2%) 위기발생시 전액손실 가능성이 큰 위험상품으로 구성

2) CDO·CDS의 상품특성을 간과한 무모한 투자로 거액손실 초래

□ CDO·CDS는 일반 회사채와 달리 매매계약서상 유동성 부족으로 유통시장 형성이 잘 되지 않아 중도매각이 어렵고, 매각대상도 발행자에 한정*되며,

* 7년 경과 후 발행자에 의해 Auction Call 방식으로 매각 가능

○ 경우에 따라서는 만기시(통상 CDO 30~40년, CDS 7년)까지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유동성, 안정성이 특히 취약함

□ 우리은행은 2005~2006년 IB본부에 목표설정계약 및 은행장 지시 사항을 통해 구조화증권 투자 확대를 지시·실행하는 과정에서,

○ CDO·CDS는 일반채권에 비해 수익률은 높은 반면 유동성·안정성이 취약하고 특히 CDO의 경우 부여되는 신용등급*의 성격이 일반 회사채와 상이함에도 이를 충분히 인식 또는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자함으로써,

* Moody's, S&P, Fitch 등 3개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보유추천이 아니며 금리변수, 유동성리스크를 다루지 않으므로 투자 의사 결정시 신용등급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들의 독자적인 연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명시

○ 재임기간 중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CDO 61건 10.7억불, CDS 13건 4.8억불(총 74건 15.4억불)로부터 총 12.5억불(1.5조원 상당, 귀책 금액 1.2조원)의 손실이 발생('09.6.8 감사착수일 현재)

- 또한, 2007.2.26 감사위원회가 CDO 투자시 안정성을 중시하고 신용등급 하락시 적기에 매각토록 이사회에 보고한 이후에도 7건, 2.2억불의 CDO·CDS 투자가 지속됨

3) CDO·CDS 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불철저

- 2006.3.16 리스크관리심의회(위원장 : 수석부행장)는 종래 운영되던 IB본부의 합성CDO 및 CDS에 대한 건별 투자시 동 심의회의 사전심의절차를 폐지하여 IB본부장으로 하여금 건당 5천만 달러* 까지 전결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CDO보다 위험도가 낮은 일반 외화증권도 '06.3.16 리스크관리심의회 이전 건별 최고거래액이 3천만 달러였다는 점에서 한도설정의 실효성은 없는 기준

- CDS를 제외한 합성CDO에 대해서만 총 투자한도를 5억 달러로 설정기로 결정
- 이에 대해 은행장으로서 보고 받은데 이어 '06.4.26 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장: 은행장)에서 다시 보고 받았음에도 동 결정이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허용토록 하였음
- 구조화상품 투자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04년 이후 수차례 지도공문 발송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지도하였으나,
- IB본부는 적정가격 산출시스템 및 기초자산(또는 차주)의 신용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 리스크총괄팀도 Front Office(IB본부) 견제를 위한 독자적 가격산출시스템 및 리스크분석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등 은행장으로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지 않았음

4) CDO · CDS 투자에 대한 감사조직 등의 내부경고 간과

- ☐ IB본부의 CDO 투자확대에 대한 유동성취약 지적 및 대책마련 요구('05.6.21, 상근감사위원), CDO 투자시 원금보전 등 안정적 투자 지적 및 등급하락시 적기 매각권고('07.2.26,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서면 보고) 등 CDO · CDS 투자에 대한 내부지적 및 대응조치 권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

〈제재조치 수준〉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 금융기관 임원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금융기관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임권고(1호) 또는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2호) 사유에 해당
- ☐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업무집행의 전부정지 3개월 상당의 조치(§18①항제2호)로 양형하여 금융위원회에 건의

2) 금융위원회 심의결과

- ☐ 금융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제재대상자(대리인) 진술을 참고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적시한 제재사유 및 양형근거에 대한 확인을 거쳐,
 - 금융감독원장의 조치 건의를 원안 의결하였음

8. 황영기씨 우리은행장 채직시절 미국 파생상품 투자손실 관련

2) 황영기, 이종휘, 박해춘 3인이 파생상품 투자 검토시 감독당국의 조치내용

- 예금보험공사의 조치내용, 조치시기, 관련 문서 사본 1부

A. 금융구조개선과

□ 예보의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 손실 관련 지적 및 조치내역

- '07.2/4분기 MOU 점검결과 보고서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CDO의 Exposure의 축소검토 등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 <별첨 1> 참조

* 「2007년도 2/4분기 우리지주 및 3개 자회사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통보」('07.10.12, 우리금융지주 통보)

- '07.3/4분기 MOU 점검결과, CDO 투자 손실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CDO 투자에 따른 손실 최소화 방안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예보에 보고하도록 요구 : <별첨 2> 참조

* 「2007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통보」('08.1.24, 우리금융지주 통보)

- '07.4/4분기 MOU 점검결과, 외화구조화증권 투자·관리시스템 미비 등을 사유로 관련 직원 징계요구(3건) 및 기관 주의(1건) 조치 : <별첨 3> 참조

* 「2007년도 4/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및 조치(요구) 통보」('08.4.18, 우리금융지주 통보)

- '08.1/4분기 MOU 점검결과, 구조화증권 투자손실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결권 조정, 손절매제도 개선 등 투자·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포지션 청산 등 손실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 : <별첨 4> 참조

* 「2008년도 1/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통보」('08.6.26, 우리금융지주 통보)

- '08.3/4분기 MOU 점검결과, MOU재무목표 미달에 대하여 박해춘 前행장 및 現행장에 대하여 주의조치

- 목표미달 요인으로 CDO/CDS 투자손실 및 유가증권관련이익 감소 등을 적시

* <별첨 5> '08.3/4분기 MOU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 참조

- '08.4/4분기 MOU 점검결과, MOU 재무비율 대폭 미달*과 관련하여 황영기 前행장(직무정지) 등 관련 임직원에게 대해 엄중조치를 취하고,

* ROA,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 유사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리스크관리체계·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임직원 보상체계 개선 등 구체적인 경영개선 방안 등을 수립·보고토록 조치

* <별첨 6> '08.4/4분기 MOU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 참조

- 금융위의 조치내용, 조치시기, 관련문서 사본 1부

B. 은행과

- ☐ 금융회사 영업실태,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 심사,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상시 감시 및 검사를 통해 감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

수 신 우리금융지주(주) 회장
(경유) 재무기획팀장
제 목 2007년도 2/4분기 우리지주 및 3개 자회사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통보

1. 우리 공사가 귀사 및 귀사의 자회사와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에 따라 실시한 2007년도 2/4분기 MOU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불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귀사 및 자회사의 이사회에 보고하여 경영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사는 불임 자료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자회사와 협의하여 그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2007.11.30(금)까지 공사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	보고사항
우리은행	○ POSCO 취득지분 관련 헛지방안 수립 등 전행적 차원의 관리대책
경남은행	○ 1급 본부장에게 임원보상체계를 적용한 EVA 초과성과급제 운영 개선방안

불 임 : 2007년도 2/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1부 · 끝.

예금보험공사



★조사역 김경동 과장 유형철 팀장 김광남 부장 정광섭
전결 10/12

협조자

시행 · 리스크감시1부-685 (2007.10.12.) 접수 ()

우 100-180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번지 / http://www.kdic.or.kr
전화 02-758-0118 /전송 02-758-0149 /이메일 hscsho@kdic.or.kr /공개

< 별첨 1 >

2007년도 2/4분기 MOU 이행실적 점검결과 통보

□ **우리은행**

- 최근 미국 Subprime Mortgage를 담보로 발행된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가격의 급락으로
- 우리은행의 Mortgage관련 구조화채권 등 외화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이 발생

우리은행 Mortgage 관련 Exposure 현황

(’07.8월말 현재, 단위 : 백만불)

건수	액면금액	장부금액	평가손익(자본조정)		평균수익률
			6월말	8월말	
33	491	422	△29	△69	L+178bp 수준

- Subprime Mortgage 관련 연체율·부도율 증가, 신용등급 추가하락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유 Exposure의 축소검토 등 관리대책 마련 및 신용경색에 따른 기타 외화유가증권*의 평가손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 필요

* 기타 외화유가증권 Exposure : ’07.8월말 현재 1,486백만불(평가손실 40백만불)



예 금 보 험 공 사

수 신 우리금융지주(주) 회장
(경유)

제 목 2007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통보

1. 우리 공사가 귀사 및 귀사의 은행자회사와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에 따라 실시한 2007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귀사 및 은행자회사의 이사회에 보고하여 경영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사 및 은행자회사는 붙임 자료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아래의 사항을 동 문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공사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	보고사항
우리금융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 IB조직 재검토 ○ 자회사 IB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통할 · 조정방안
우리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O 투자손실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자료, CDO 투자에 따른 손실 최소화 방안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신용카드부문 수익성 제고 방안 및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 해외부문 자산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방안

붙 임 : 2007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1부, 끝.

예금보험공사



조사역	김인호	과장	유형철	팀장	김광남	부장	전결 01/24 정광섭
-----	-----	----	-----	----	-----	----	-----------------

협조자

시행 리스크감시1부-53 (2008.01.24.) 접수

우 100-180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번지
전화 758-0363 /전송 758-0400

/ http://www.kdic.or.kr
/for9525@kdic.or.kr / 공개

<별첨 2>

2007년도 3/4분기 MOU 이행실적 점검결과 통보

□ 우리은행

- 최근 미국 Subprime Mortgage 사태의 영향에 따른 CDO 가격의 급락으로
 - 우리은행은 Mortgage 관련 CDO에 대해 감액처리함으로써 1,626억원 손실 발생
 - 향후, 관련 연체율·부도율 증가, 신용등급 추가하락 등으로 손실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i) 손실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ii) CDO 투자에 따른 손실 최소화 방안, (iii)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사에 보고하도록 요청



예금보험공사

수 신 우리금융지주(주) 회장
(경유)

제 목 2007년도 4/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 통보

1. 우리 공사가 귀 사 및 은행 자회사와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에 따라 실시한 2007년도 4/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및 조치(요구)내용을 <붙임1>과 같이 통보하니, 귀 사 및 은행 자회사는 <붙임2>의 보고 요청사항을 동 문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공사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예금보험위원회는 귀 사 前회장 황영기 및 우리은행 前수석부행장 이종휘에 대해 귀 사 및 우리은행의 '07년도 성과급 지급 시 경고상당의 차감률을 적용하여 지급토록 권고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2007년도 4/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및 조치(요구) 1부.
2. 2007년도 4/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요청사항 1부. 끝.

예금보험공사



조사역 박용순

과장 유형철

팀장 김광남

부장

전경 04/18
정광섭

협조자

시행 리스크감시지원부-302 (2008.04.18.) 접수

우 100-180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번지
전화 758-0266 /전송 771-9177

/http://www.kdic.or.kr
/parkys99@kdic.or.kr /공개

<붙임 3>

2007년도 4/4분기 MOU 이행실적 점검결과 조치

□ 조치내용 : 기관주의 1건, 직원징계요구(상당) 3건

○ 기관조치 : 기관주의

- 특정 익스포져 증대 시 리스크요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합당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유의하고, CDO, 신용 파생상품, 펀드투자 등 해외신용연계 구조화증권의 투자한도 설정,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체계 마련, 리스크관리 방법 개선 등 구조화증권 투자·관리시스템을 정비 후 공사에 보고할 것

○ 임·직원 조치

<임·직원 관련자 및 조치내용>

관련자	조치내용	
부행장 홍●● (IB본부장)	징계(정직 이상) 요구	○ 조치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엄중조치 후 동 내용을 공사에 보고할 것
부행장 서●● (前 리스크관리본부장)	징계요구	
前 부행장 이●● (前 리스크관리본부장)	징계요구상당	
기타 관련자	○ 투자 및 사후관리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조치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철저한 자체 조사 실시 후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공사에 보고할 것	

<기 타>

-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에 '07년도 성과급 지급 시 경고상당의 차감률을 적용하여 지급토록 권고



예금보험공사

수 신 우리금융지주(주) 회장

(경유)

제 목 2008년도 1/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통보

우리 공사가 귀사 및 귀사의 은행 자회사와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에 따라 실시한 2008년도 1/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귀사 및 은행 자회사의 이사회에 보고하여 경영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08년도 1/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1부. 끝.

예금보험공사



★조사역 박용순

차장

유형철

팀장

김광남

부장

전결 06/25
정광섭

협조자

시행 리스크감시지원부-520 (2008.06.26.) 접수

우 100-180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번지

/ <http://www.kdic.or.kr>

전화 758-0266

/전송 771-9177

/ parkys99@kdic.or.kr

/공개

<붙임 4>

2008년도 1/4분기 MOU 이행실적 점검결과 통보

□ 우리은행

- 우리은행은 전년도 484백만불(4,547억원)에 이어 CDO투자손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CDO에서 회사형 CDO로 확대*되어 '08.1/4분기 중 132백만불(1,302억원)의 손실 추가 발생
- 구조화증권 투자손실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결권 조정, 손절매 제도 개선 등 투자·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포지션 청산 등 손실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 요구됨

의안번호	제 3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9. 1. 21. (제 2 차)	

2008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

예 금 보 험 위 원 회 의 안

제 출 자	예 금 보 험 공 사 사 장 박 대 동
제출연월일	2009. 1. 21.

1. 의결주문

2008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별지1>과 같이 보고하고, 조치안을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사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제4항 및 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등 6개 금융회사에 대하여 2008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제6항 및 경영정상화이행약정관리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치안을 의결하고자 예금보험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임.

* 서울보증보험은 FY2008.2/4분기('08.7.1~'08.9.30) 기준

3. 주요골자

☐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5개 금융회사 중 우리은행 및 서울보증보험이 일부 MOU 재무비율 목표를 미달하였음.**

* 우리금융지주는 반기별 목표 부여

** 우리은행은 ROA,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등 3개 목표 미달
서울보증보험은 지급여력비율, 운용자산이익률 등 2개 목표 미달

☐ 우리은행의 일부 재무비율 목표 미달 등 4개 금융회사의 이행 부진사항 6건에 대하여 총 17건의 조치를 취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내규(발췌)

(1)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 ①~③생략

④정부등은 제1항의 약정서에 의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생략

⑥정부등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임원에 대한 해임·직무정지·경고·주의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약정서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하는 경우
4. 이 법 또는 약정서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예금보험공사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2) 경영정상화이행약정관리규정

제13조(조치요구대상) 공사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상화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획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의 이행방법이 불합리하거나 도덕적 해이의 사실이 있는 경우
3. 정상화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 업무절차, 방침 등이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이 규정 및 이에 따른 공사의 요구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4조(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공사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시정요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주의 : 정상화계획의 미이행 등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추징, 회수 그 밖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그 실익이 적은 경우
2. 개선 : 정상화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 업무절차, 방침 등이 불합리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정 : 추징, 회수 그 밖의 방법으로 원상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통보 : 기관주의, 개선 또는 시정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금융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5. 현지조치 :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하여 현장에서 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제15조(임원에 대한 조치요구) ① 공사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3조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과 책임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조치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는 공사가 직접 취할 수 있다.

1. 주의 : 책임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책임정도가 크더라도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경고 : 책임정도는 크나 직무수행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직무정지 : 제4호의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해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해임 : 경영정상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책임정도가 중대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금융관련 법령·규정에 명시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안의 중대성” 및 “책임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공사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제 13조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중대성, 책임정도 및 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주의조치 또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임원보수의 제한) ① 공사는 금융기관의 임원(집행임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때 당해 금융기관의 이사회 등에서 결의한 성과급지급률에서 제2항각호의 비율(이하 “차감률”이라 한다)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2회 이상 차감조치를 받은 임원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하여 차감하며, 당해 금융기관이 결정한 성과급지급률에서 차감률을 공제한 지급률이 성과급지급률의 최저지급한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한도를 지급률로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제15조의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 전 임원(상근감사위원 제외)
2. 제5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제15조 또는 제16조의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 담당 임원

② 제1항의 차감률은 조치 1회당 임원별 성과급 최고지급률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의 주의 또는 제16조의 주의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 100분의 3
2.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고 또는 제16조의 징계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 100분의 15
3.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 100분의 30

③ 공사는 금융기관의 각 회계연도말 경영실적이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거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임원별 기본급을 동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점검결과 보고) 공사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약정의 이행실적점검 결과를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예금보험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7 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조치절차) ①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4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는 점검반장이 점검기간 중에 취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이 규정에 따른 의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관계자에 대하여 예금보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가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생략

(3) 예금보험위원회 규정

제5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 영, 정관, 다른 법령 및 공사 내규에서 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2.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기타 참고사항

- (1) 2008. 12. 15. 제34차 약정이행실적점검결과심의위원회 심의
- (2) 2009. 1. 13. 경영협의회 의결
- (3) 2009. 1. 16. 금융감독원과 조치안에 대한 협의(이견없음)

<별지 1>

2008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1. 점검 개요

☐ 대상 금융회사

- 은행권 :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수협
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등 5개 회사
- 비은행권 : 서울보증보험 1개 회사

☐ 점검기간 : '08.11.17~11.26

☐ 점검방식

- 서면점검 : 우리금융지주 등 은행권 5개 회사
- 임점점검 : 서울보증보험

☐ 점검대상

- 재무부문 : '08.3/4분기 MOU 계획 대비 이행실적
(서울보증보험은 FY'08.2/4분기)
- 비재무부문 : MOU 계획 대비 점검종료일까지의 이행실적

2. MOU 재무목표 부문

(1) 우리금융지주

□ '08.9월 현재 당기순이익은 1조1,193억원으로 전년동기(1조 8,276억원) 대비 38.8%(7,083억원) 감소

- 이는 우리은행의 출자전환주식매각이익 감소(5,663억원) 및 CDO/CDS 투자손실 확대(4,776억원)에 주로 기인

□ '08.3/4분기 현재 MOU 재무비율 실적 중 ROA(0.5%)는 '08년 연간 목표 수준(0.7%)을 하회

* ROA 추이 : 0.8%('07.9월) → 0.7%('08.6월) → 0.5%('08.9월)

MOU 재무비율 달성 현황

(단위 : %, 억원)

구 분	'08.3/4분기		
	연간 목표*	실적	연간 목표 대비
연결BIS자기자본비율	9.7	10.5	0.8%p 초과
ROA	0.7	0.5	0.2%p 하회
판매관리비용률	50.5	49.0	1.5%p 초과
1인당조정영업이익	3.7	3.8	0.1억원 초과
순고정이하여신비율	1.0	0.4	0.6%p 초과
지주회사경비율	0.6	0.4	0.2%p 초과

* 우리금융지주는 반기별 목표 부여

□ 재무비율이 악화되지 않도록 수익성 제고 노력 뿐만 아니라,

-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본적정성, 유동성 관리방안 등 그룹차원의 Contingency Plan 정비 필요

- 특히, 시장상황 급변에 따라 자회사 및 지주사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 필요

(2) 우리은행

□ '08.9월 현재 당기순이익은 9,250억원으로 전년동기(1조 5,806억원) 대비 6,556억원 감소

○ 이는 전년동기 대비 순이자이익 증가(2,481억원) 및 세전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2,429억원)에도 불구하고

- 출자전환주식매각이익의 감소(5,663억원), CDO/CDS 투자손실(4,776억원) 증가, 자산 증가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2,234억원)에 주로 기인

□ '08.3/4분기 MOU 재무목표 중 ROA,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 조정영업이익을 미달

MOU 재무비율 현황

(단위 : %, 억원)

구 분	'08.3/4분기			
	목표	실적	목표 대비	'08 연간
BIS자기자본비율*	10.0	10.4(10.6)	0.4%p 초과달성	10.0
ROA	0.8	0.5	△0.3%p 미달	0.8
판매관리비용률	45.8	48.2	2.4%p 미달	45.4
1인당조정영업이익	3.0	2.9	0.1억원 미달	3.1
순고정이하여신비율	1.0	0.4	0.6%p 초과달성	1.0

* ()는 BASELII 기준

□ 부동산PF·건설업 대출 실질연체율 상승*에 따른 부동산 관련 여신과 환율 상승에 따른 엔화대출의 부실화 위험** 및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한 외화유동성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부동산PF 실질연체율 : 0.46%('08.3월말)→0.70%('08.6월말)→0.99%('08.9월말)

건설업 대출 실질연체율 : 1.12%('08.3월말)→1.17%('08.6월말)→2.02%('08.9월말)

** 엔화 강세로 인하여 여신 취급금액 전액이 환차손 상태이며, 차주의 96.4%가 중소기업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해당 대출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며 엔화 강세 지속시 '09년 만기도래 대출(473백만불)의 신용위험이 높아짐

(3) 광주은행

□ '08.9월 현재 당기순이익은 860억원으로 전년동기(1,009억원) 대비 149억원(14.8%) 감소*

- 이는 수출입은행과의 소송 패소에 따른 충당금 적립(1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대손비용이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

□ '08.3/4분기 MOU 목표 모두 달성

MOU 재무비율 달성 현황

(단위 : %, 억원)

구 분	'08.3/4분기			'08 연간
	목표	실적	목표 대비	
BIS자기자본비율*	10.0	11.2(10.6)	1.2%p 초과달성	10.0
ROA	0.7	0.7	달성	0.7
판매관리비용률	49.4	44.4	5.0%p 초과달성	48.7
1인당조정영업이익	2.2	2.7	0.5억원 초과달성	2.3
순고정이하여신비율	1.0	0.4	0.6%p 초과달성	1.0

* ()는 Basel II 기준

□ '08.9월말 건설업 대출 연체율(0.69%) 및 고정이하여신비율(0.58%)은 전년동기(각각 0.30%, 0.21%) 대비 각각 0.39%p, 0.37%p 증가하였으며, 타 지방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

- 건설 경기의 침체 장기화 등에 대비하여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 원·외화 유동성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08.4/4분기 외화 유동성 자금 포지션의 경우 1백만불 부족*이 예상되는 바,

* 예금 및 차입금 만기도래 등 자금소요액은 247백만불인 반면, 신규차입 및 연장(49백만불), 보유자산 만기도래금액(112백만불), 단기운용자산(85백만불) 등 자금확보액이 246백만불로 예상

- 외화 유동성 자금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화유동성 관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

(4) 경남은행

□ '08.9월 현재 당기순이익은 1,816억원으로 전년동기(1,453억원) 대비 25.0%(363억원) 증가

○ 유가증권관련이익의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이자부문의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22.2% 증가**하고, 수수료 및 파생상품관련이익 등으로 인한 비이자부문의이익이 11.1% 증가***한 데 기인

* 유가증권관련이익 : 380억원('07.9월) → 175억원('08.9월, 205억원↓, 53.9%↓)

** 이 자 부 문 이 익 : 2,731억원('07.9월) → 3,337억원('08.9월, 606억원↑, 22.2%↑)

*** 비 이 자 부 문 이 익 : 810억원('07.9월) → 900억원('08.9월, 90억원↑, 11.1%↑)

□ '08.3/4분기 MOU 목표 모두 달성

MOU 재무비율 달성 현황

(단위 : %, 억원)

구 분	'08.3/4분기			
	목표	실적	목표 대비	'08 연간
BIS자기자본비율*	10.0	12.5(11.2)	2.5%p 초과달성	10.0
ROA	0.8	1.2	0.4%p 초과달성	0.7
판매관리비용률	48.9	36.2	12.7%p 초과달성	48.7
1인당조정영업이익	2.6	3.1	0.5억원 초과달성	2.3
순고정이하여신비율	1.0	0.4	0.6%p 초과달성	1.0

* ()는 BaselⅡ 기준

□ '08.9월말 총여신 연체율*은 0.56%로 양호한 수준이나, 최근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로 건전성 및 수익성 등 악화 우려

* 총여신 연체율 : 0.56%('08.9월말) → 0.82%('08.11월말, 0.26%p↑)

○ 부동산PF 대출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포지션 조정, 리스크관리 강화 등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공사 보고)

* 부동산PF 대출 잔액 : 9,450억원('07.9월말) → 15,501억원('08.9월말, 6,051억원↑, 64.0%↑)

(5) 수협 신용사업부문

□ '08.9월 현재 세전당기순이익은 965억원으로 전년동기(999억원) 대비 3.4%(34억원) 감소

- 순이자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관련이익**이 주가 하락 등으로 손실로 전환된데 주로 기인

* 순 이 자 이 익 : 2,316억원('07.9월) → 2,418억원('08.9월, 102억원 ↑, 4.4% ↑)

** 유가증권관련손익 : 279억원('07.9월) → △12억원('08.9월, 291억원 ↓)

□ '08.3/4분기 MOU 목표 모두 달성

MOU 재무비율 달성 현황

(단위 : %, 억원)

구 분	'08.3/4분기			
	목표	실적	목표대비	'08 연간
BIS자기자본비율*	10.0	12.3(11.5)	2.3%p 초과달성	10.0
ROA	0.6	0.7	0.1%p 초과달성	0.6
판매관리비용률	53.6	51.8	1.8%p 초과달성	53.2
1인당조정영업이익	2.2	2.4	0.2억원 초과달성	2.2
순고정이하여신비율	1.1	0.7	0.4%p 초과달성	1.1

* ()는 Basel II 기준

□ 건설업 등 부동산관련 여신 비중*이 높아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총여신 중 건설업, 부동산업 등 비중('08.9월말 기준): 일반은행 12.9%, 수협신용사업부문 22.6%

□ 지속적인 NIM의 하락 등으로 수익성 증대가 제한적이므로, 고비용 자금조달구조 개선, 수수료수입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 향상에 노력할 필요

(6) 서울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의 FY'08.2/4분기 현재 당기순이익은 1,702억원으로 전년동기(2,802억원) 대비 1,100억원(39.3%) 감소

- 이는 발생손해액 증가 등에 따른 보험영업이익 감소(△346억원) 및 증시 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 감소(△1,043억원)에 주로 기인

□ FY'08.2/4분기 MOU재무목표 중 지급여력비율 및 운용자산이익률을 미달

MOU 재무비율 달성 현황

(단위 : %, 억원)

구 분	FY'08.2/4분기			'08년 연간
	목표	실적	목표 대비	
지급여력비율	1,416	1,316	100%p 미달	1,495
경과손해율	60.0	36.4	23.6%p 초과달성	60.0
1인당 영업이익	2.29	3.54	1.25억원 초과달성	5.08
경과지급경비비율	30.2	23.0	7.2%p 초과달성	31.0
운용자산이익률	5.33*	5.22	0.11%p 미달	국고채(1년물)+5bp
위험가중자산비율	67.5	57.2	10.3%p 초과달성	67.5

* 최근 1년('07.10월~'08.9월)간 국고채(1년) 수익률의 월말 평균(5.28%)+5bp

□ '08 하반기 이후 신성건설*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 등 실물 경기 악화로 보험사고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책 마련 등 리스크관리에 유념할 필요(공사 보고)

* 보증잔액은 2,685억원이며, 총 471억원의 손실 예상(기지급보험금 23억원)

3. MOU 비재무목표 부문

(1) 우리금융지주

□ 광주은행의 '07~'08년 단기매매증권의 분기 누적손실한도 초과와 관련,

* 광주은행은 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시 분산투자를 실시하지 않아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손실한도에 도달하고도 사전에 설정한 처리방식을 따르지 않는 등 시장리스크관리가 미흡

○ 자회사 자금운용시 사전설정된 누적 손실한도 범위내에서 운용하고, 한도초과시 해당 포지션 청산 등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처리하여 시장리스크가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

○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회사의 자금운용시 시장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공사 보고)

□ 파워인컴펀드 등 우리금융그룹 판매 및 운용 펀드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투자자와의 분쟁 발생

* 파워인컴펀드 : 소송 제기 11건, 금감원 분쟁조정 접수 154건

** 우리2Star파생상품펀드 : 소송제기 2건('08.12.08 현재)

○ 펀드상품과 관련한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면 불완전판매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때문에

- 우리금융그룹의 Reputation Risk 증대 및 고객이탈로 인한 간접투자상품 판매채널의 약화가 우려됨

- 펀드판매 관련 논란에 대한 지주사 차원의 대책 및 우리CS 자산운용의 상품개발부터 그룹내 채널을 통한 판매까지 일관된 지주사의 통할기능 강화방안 수립 필요(공사 보고)

(2) 우리은행

□ 신용카드부문 리스크관리지표는 우리은행 내부목표 이내로 유지 중이나, 연체율·요주의전이율·신규 Vintage는 악화* 추세

- 특히, '07년 신규 가입한 기업회원 카드 연체율은 '08.3월말 3.0%에서 '08.9월말 현재 4.2%로 악화

* 연체율 : 2.00%('08.6월말)→2.13%('08.7월말)→2.49%('08.8월말)→2.21%('08.9월말)
요주의 전이율 : 0.65%('08.7월말)→0.68%('08.8월말)→0.70%('08.9월말)
신규 Vintage : 1.6%('07.12월말)→1.8%('08.3월말)→2.1%('08.6월말)→2.2%('08.9월말)

-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환경이 악화될 전망이므로 신규 기업카드 발급시 심사기준 강화, 개인사업자 기업카드 한도 및 사후관리 기준 강화, 연체관리 강화를 통한 회수금액 극대화 등 추진 필요

□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워인컴펀드, 우리2Star파생상품펀드 등의 불완전판매 여부로 투자자와의 분쟁 발생

- 향후 펀드 판매인력 역량 강화, 상품 리스크를 고려한 신중한 고객층 선정, 자산운용사와의 업무공조 강화 등 재발방지책 수립 필요

□ 우량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 우량 중소기업 등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여신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공사 보고)

□ 감사원이 지적한 복리후생제도 개선 미흡

- '04년 및 '06년 감사원 감사시의 복리후생제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공사 보고)

*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가 통보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 여부를 결정

(3) 광주은행

☐ 우량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 우량 중소기업 등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여신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공사 보고)

☐ 감사원이 지적한 복리후생제도 개선 미흡

- '04년 및 '06년 감사원 감사시의 복리후생제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공사 보고)

*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가 통보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 여부를 결정

(4) 경남은행

☐ 고객감사 3대 Festival, 기반수신 증대 행사, 한가위 가족사랑 마케팅 등을 통한 예수금 확대*에 따라 '08.9월말 핵심예금비중**은 15.6%로 전분기(15.0%)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년동기(17.8%)에 비해 2.2%p 하락

* 예수금 확대 실적 : 5,107억원('08.3/4분기 중)

** (요구불+자유저축+기업자유+MMDA+어음관리계좌수탁금) / 부채

- 일반은행 평균 : 11.8%, 지방은행 평균 : 17.2% ('08.9월말 기준)

-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이므로 경영 안정화 및 MOU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우량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 우량 중소기업 등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여신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공사 보고)

☐ 감사원이 지적한 복리후생제도 개선 미흡

- '04년 및 '06년 감사원 감사시의 복리후생제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공사 보고)

*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가 통보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 여부를 결정

(5) 수협 신용사업부문

☐ 자금운용 관련 Middle/Back Office의 독립성 제고 필요

- Front office와 Middle/Back office는 엄격히 분리하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나,
- 수협 신용사업부문은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운용과 관련하여 자금부내에 별도의 팀으로만 구분되어 있음
 - 사전 리스크감시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직의 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공사 보고)

☐ 우량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 우량 중소기업 등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여신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공사 보고)

☐ 감사원이 지적한 복리후생제도 개선 미흡

- '04년 및 '06년 감사원 감사시의 복리후생제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공사 보고)

*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가 통보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 여부를 결정

(6) 서울보증보험

- ### ☐ 보증보험의 경우 경기 악화시 보험 인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향후 실물 경기 악화를 대비하여 심사 및 구상 활동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특히 김포지점 보험사고*와 같은 유형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심사 및 감리 제도 개선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공사 보고)

* 영업구역 위배, 현장실사 누락, 보증심사 및 채권확보 소홀 등 전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비롯한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발견됨

- 서울보증보험은 '08.1.1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을 '기본 지급(월 24시간)'에서 '기본 지급(월 12시간)+추가 지급(월 12시간 초과~무한)' 형식으로 산정 방식 변경

- 그러나 시간외근무 시 근무 시간 등을 전산 신청한 후 익일 오전 담당 부서장이 일괄 승인할 뿐, 실제 근무 종료 시간 확인 절차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참고로 FY'08. 상반기 개인별 시간외근무수당 최고 수령액은 14백만원으로 상위 5명 시간외근무수당 수령액은 46백만원임

- 시간외근무수당 산정방식 변경이 급여 인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근무 종료 시기 확인 등 제도 개선 필요(공사 보고)

- 우량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 우량 중소기업 등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보증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공사 보고)

- 감사원이 지적한 복리후생제도 개선 미흡

- '04년 및 '06년 감사원 감사시의 복리후생제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공사 보고)

*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가 통보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 여부를 결정

<별지 2>

2008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조치안

6개 MOU체결 금융회사 중 우리은행 등 4개 금융회사의 이행부진사항 6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우리은행의 이행부진사항 및 조치내용

가. '08.3/4분기 MOU 재무목표 중 ROA,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미달

□ 이행부진사항

○ 우리은행은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정 등에 따른 CDO/CDS 투자 손실 증가, 유가증권관련이익 감소,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 '08.3/4분기 MOU 재무목표 중 ROA,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을 미달

'08.3/4분기 MOU 목표 및 실적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MOU 목표(A)	실 적(B)	달성 여부	차이(B-A)
BIS자기자본비율	10.0	10.4	달성	0.4%p
ROA	0.8	0.5	미달	△0.3%p
판매관리비용률	45.8	48.2	미달	2.4%p
1인당조정영업이익	3.0	2.9	미달	△0.1억원
순고정이하여신비율	1.0	0.4	달성	△0.6%p

< CDO/CDS 투자손실 증대 >

- 우리은행은 '08.9월말 현재 1,702백만불의 CDO/CDS 등을 보유*

* 서브프라임 CDO : 489백만불, 非서브프라임 CDO : 588백만불, 신용파생상품 : 625백만불

- 이 중 '07.12월 현재 회계적 손실(P/L)로 5,815억원(620백만불)*을
기 반영하였으나, '08.9월 현재 6,402억원(411백만불)의 투자손실
추가 발생**

* '07년 중 CDO/CDS 투자손실 발생금액

: 서브프라임 CDO 4,139억원, 非서브프라임 CDO 408억원, 신용파생상품 1,268억원

** '08년 중 CDO/CDS 투자손실 발생금액

: 서브프라임 CDO 475억원, 非서브프라임 CDO 3,617억원, 신용파생상품 2,310억원

< 유가증권관련이익 급감 >

- '08.9월 현재 유가증권관련이익은 866억원으로 MOU 계획
1,957억원 대비 1,091억원 미달

< 대손비용 급증 >

- '08.9월 현재 대손비용은 6,499억원으로 MOU 계획 5,093억원
대비 1,406억원 추가 발생

< NIM 하락 >

- '08.9월 현재 순이자이익은 2조8,702억원으로 MOU 계획(2조
5,606억원) 대비 3,096억원 증가하였으나,

- 이는 이자부자산이 MOU 계획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인데
주로 기인하며, '08.9월 NIM은 2.21%로 MOU 계획(2.48%)을
0.27%p 하회

* '07.12월말 대비 '08.9월말 이자부자산 증가율은 17.5%로 '08년 MOU 계획상의
이자부자산 증가율 연 7%를 상회

나. 조치 내용 : 기관조치 1건, 임원조치 2건

□ 기관조치 : 기관주의 1건

○ '08.3/4분기 MOU 재무목표 중 ROA,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 조정영업이익 미달(기관주의)

- (i) 자산성장 전략의 적정성 재검토, 수익성과 리스크를 고려하는 경영전략 수립 등 경영의 조기안정화 방안, (ii) 엔화대출 환차손 증가 등 신용위험 상승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강화 및 사후관리 방안, (iii) MOU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자구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에 보고할 것
- MOU 재무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총인건비 인상을 포함하여 비용증가를 수반하는 일체의 복리 후생제도 개선을 금지토록 할 것

□ 임원 조치 : 임원주의 2건

관련자		조치	사유
임원	회장 이○○○	주의*	○ 수익성 희생을 전제한 자산 증대 및 이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등 고유요인이 있으나,
	前회장 박○○○	주의 상당*	○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악화된 시장요인도 있음 ⇒ MOU 목표 미달에 대한 포괄적인 경영책임 인정

* 주의조치에 따른 성과급지급률 차감률 : 4.5%p

□ 기 타

- MOU 관리규정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전 임원(집행임원 포함)에 대한 성과급 지급시 주의조치 상당의 차감률(3.0%p~4.5%p)을 적용하여 지급

2. 광주은행의 이행부진사항 및 조치내용

가. 불합리한 투자의사 결정 및 운용 체계 부적정

□ 이행부진사항

- 광주은행은 정 前행장의 지시에 따라, (주)에이스디지털* 주식에 간접투자(사모펀드) 형태로 '07.10.12~'08.6.24 중 155억원을 투자

- '08.7.4~8.27 중 동 주식을 매도하여 총 49억원(△31.6%)의 손실** 발생

* 삼성 계열사로 (주)제일모직이 대주주(23.42%)이며, LCD용 편광필름 생산업체

** 매입평균단가 : 19,646원(797,304주), 매도평균단가 : 13,460원

- 투자대상 주식의 위험 및 수익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 없이 리스크관리협의회 서면결의*만으로 투자금액 배정 및 주식매입

- 형식은 간접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이나 실질은 단일 종목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 형태임

* '07.10.12 및 '07.11.26 개최한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단기매매증권(간접투자증권)에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의 한도 배정

- 투자대상 주식의 주가하락으로 단기매매증권 손실한도의 80% (MAT* 1단계**)에 도달('08.1.16)하자,

- 리스크관리협의회 심의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08.1.18)로 단기매매증권 부문의 손실한도를 확대하고, 손실한도 도달시 포지션 청산 계획 등 MAT를 완화***하였으며,

- MAT 3단계**** 진입 이후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리스크관리 위원회는 리스크관리부의 요청에 따라 매각유보 결의('08.1.31)를 통해 포지션을 청산하는 대신 동 주식의 지속적인 보유가 가능토록 하여 결과적으로 손실이 확대되었음

* Management Action Trigger : 투자자산의 부문별 손실한도 도달시 조치계획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정사항('07.2.6)

** 간접투자자산 중 주식부문 누적손실은 17.6억원으로 분기 손실한도(20억원)의 80%인 16억원을 초과하여 MAT 1단계 진입

*** '07/'08년 단기매매증권 부문 MAT 비교

구분	'07년 MAT('07.2.6)	'08년 MAT('08.1.18)
1단계 (손실한도 80% 초과)	① 포지션 증액금지 ② 한도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리스크 관리 주관본부장 앞 서면보고	좌동
2단계 (손실한도 90% 초과)	① 허용한도의 80% 이내로 유지 되도록 포지션 즉시 조정 ② 한도초과 내용의 리스크관리 협의회 보고 ③ 리스크관리 협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운용 재개	① <삭제> ② 좌동 ③ <삭제>
3단계 (손실한도 100% 초과)	① 한도초과의 원인을 제공한 운용 단위의 모든 포지션 청산 (1영업일 이내) ② 잔여기간 운용 중단 ③ 조치사항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앞 보고 ④ 한도초과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지주회사 리스크관리팀 앞 한도 초과* 통보 * 지주사가 부여한 한도 ⑤ 지주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운용 재개 가능	① 한도초과 내용의 리스크관리 위원회 앞 보고 ② 한도초과의 원인을 제공한 운용 단위에 대하여 리스크관리위원 회의 조건부 매각 유보 결의 및 하기 ③~④항에 대한 실행 여부 승인<신설> ③ '07년도 MAT ①항과 동일 ④ '07년도 MAT ②항과 동일 ⑤ '07년도 MAT ④항과 동일 ⑥ '07년도 MAT ⑤항과 동일

**** '08.1.30 간접투자자산 중 주식부문 누적손실은 39억원으로, '08.1.18 리스크
관리위원회가 확대한 분기 손실한도인 38억원을 초과(MAT 3단계 진입)

나.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 미흡

☐ 이행부진사항

- 광주은행은 전남대학교에 '08.4월~6월 총 4억원의 기부금을 지급하면서 이사회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이사회 부의를 생략
- 광주은행의 기부금 출연('08.6.5), 정 ~~○○~~ 前행장의 퇴임('08.6.26) 및 전남대학교 교수 임용('08.7.1) 시기와 관련하여,
 - 동 기부금 집행 결정을 위한 집행위원회 결의 당시('08.5.30) 前행장이 이미 특수 이해관계자일 개연성이 있었음
- 집행위원회 규정상 회의 소집 및 의사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며, 의사록도 미작성

다. 조치내용 : 기관조치 2건, 임·직원조치 4건

☐ 기관조치 : 개선 1건, 기관주의 1건

○ 불합리한 투자의사 결정 및 운용 체계 부적정(개선)

- 자금운용 의사결정 및 손실한도 관리 시 적절한 리스크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 배정 시 리스크관리협의회 소집 의무화, 손실한도초과시 처리 계획 규정화(또는 수정사 신중한 절차 마련), 간접투자자산 등에 대한 투자시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분산투자할 수 있도록 적정 자산운용 방안 마련 등

○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 미흡(기관주의)

- 이사회와 경영감시 기능 제고 및 기부금의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한 규정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나,

- '08.2/4분기 MOU 점검시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고 기부금 심의협의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필요 개선 사항을 기 이행

* 건당 1억원 이상 기부금 출연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개정('08.10.31)

** 건당 1천만원 이상 기부금 출연에 대해 기부금 심의 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규정 제정('08.8.8)

- 기부금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이 투명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부금 심의협의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공사에 보고

* 이해관계자의 의결제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한 심의 시 협의회 소집 의무화 등

- 집행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회의 소집 시 의사록을 작성 및 보존할 필요

* 집행위원회 규정 제7조 ②집행위원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과 상근감사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임·직원 조치 : 임원직무정지상당 1건, 직원징계요구 3건

관련자	조치내용	사유
임원	前행장 정○○○	직무정지 (6개월) 상당*
		○ 자의적인 판단으로 광주은행에 주식 취득을 지시하여 동 은행에 손실을 초래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손실한도 확대 등 MAT 계획을 완화하여 동 주식의 보유를 지시 ○ 특수 이해관계인의 의결 참여 제한 등 집행 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결의에 참여
직원	부행장보 변○○○	징계요구**
	前부행장보 박○○○	징계요구 상당**
	부행장보 송○○○	징계요구**
		○ 단기매매증권 투자 및 리스크관리 관련 직원에 대해서 자체 조사 실시 후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치 하고 공사에 보고할 것

* 현재 검찰이 배임여부를 수사 중으로 배임여부가 확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직무정지조치에 따른 성과급지급률 차감률은 45%p임

** 징계조치 요구에 따른 성과급지급률 차감률 : 15%p

*** 조치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조치내용을 이행하고 동 내용을 공사에 보고할 것

3. 경남은행

가. 본부장에 대한 초과성과급 과다 지급

□ 감사원은 '08.9월~10월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서('09.1.2)를 통해,

○ 공사가 '07.2/4분기 MOU 이행실적 점검결과 동행의 윤광규 당시 1급 본부장에 대한 초과성과급 과다 지급과 관련하여 제도개선*만을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며,

- 과다 지급된 초과성과급의 회수 및 동행에 대한 주의 등 적절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

* 직원 신분인 1급 본부장에게 임원의 보상 체계를 적용하여 EVA초과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집행임원의 보상과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주사와 협의하여 보상체계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공사에 보고할 것을 경남은행에 요구

나. 조치요구사항 : 기관조치 2건(시정 1건, 기관주의 1건)

□ 부당하게 과다지급한 초과성과급의 회수(시정)

○ 윤○○○ 당시 1급 본부장에게 과다지급한 초과성과급(47,101,113원*)을 회수하고 처리결과를 공사에 보고

* 동 은행은 윤○○○ 본부장에게 임원에 대한 지급보상 기준을 적용하여 초과성과급을 지급(61,685,688원)함으로써, 직원 기준을 적용하여 초과성과급을 산정하였을 경우(14,584,575원)보다 47,101,113원을 과다 지급

□ 부당한 보상체계 적용(기관주의)

○ 직원에게 임원의 보상체계를 적용하여 초과성과급을 과다지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4.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부진사항 및 조치내용

가. FY'08.2/4분기 MOU 재무목표 중 운용자산이익률 및 지급여력비율 미달

□ 이행부진사항

- 서울보증보험은 FY'08.2/4분기 운용자산이익률과 지급여력비율이 MOU 재무목표를 미달

FY'08.2/4분기 운용자산이익률 및 지급여력비율 실적

MOU 재무지표	MOU목표(A)	MOU실적(B)	차이(B-A)
운용자산이익률(C/D)	5.33%*	5.22%	△0.11%p
조정투자영업이익(C)	-	831억원	-
조정경과운용자산(D)	-	32,665억원	-
지급여력비율(E/F)	1,416%	1,316%	△100%p
지급여력금액(E)	21,721억원	20,791억원	△930억원
지급여력기준금액(F)	1,226억원	1,580억원	354억원

* 직전 1년간 국고채(1년물)수익률 + 5bp

- 운용자산이익률의 미달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식운용이익*의 감소에 주로 기인

* 주식운용이익 : 단기매매증권 처분익·평가익, 매도가능증권 처분익, 배당금수익

운용자산 종류별 이익률

(단위 : 억원, %)

종 류	FY'08 상반기		
	조정운용자산(평균)	조정투자영업이익	이익률
유동성자금	2,200	59	5.5
수익증권	3,715	110	6.1
주식	3,364	60	1.8
채권	22,120	595	5.5
기타	1,266	7	1.2
합계	32,665	831	5.22

* 조정운용자산을 기준으로 운용자산이익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조정투자영업이익이 목표 대비 17억원 부족

- 지급여력비율의 미달은 주가하락 및 금리상승으로 인한 매도 가능증권평가손(1,520억원) 발생 등에 기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의 감소에 주로 기인

서울보증보험 지급여력비율 상세 내역

(단위 : 억원, %, %p)

구분	계 획	실 적	차 이
[합산항목](A)	22,124	21,242	△882
1. 납입자본금	13,541	13,541	-
2. 자본잉여금	-	-	-
3. 이익잉여금	4,830	4,870	40
4. 기타포괄손익누계 등	1,277	230	△1,047
5. 비상위험준비금	2,469	2,591	122
6. 후순위차입금 등	7	10	3
[차감항목](B)	230	322	92
1. 무형자산	226	213	△13
2. 선급비용 등	4	109	105
[자회사 자본과부족](C)	△173	△129	44
지급여력금액 (D = A-B+C)	21,721	20,791	△930
지급여력기준금액(E)	1,226	1,580	354
지급여력비율(D÷E×100)	1,416	1,316	△100

- 이익잉여금은 '08.7월의 우선주 상환(3,980억원)에도 불구하고 계획(4,830억원) 대비 40억원 초과 달성

* MOU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급여력금액 약 1,582억원 부족

FY'08 상반기 매도가능증권 평가손 내역

(단위 : 억원)

주식			채권	기타	계
운용	출자전환	소계			
344	893	1,237	375	10	1,622

* 출자전환주식 관련 평가손 중 구상이익 조정분(102억원)의 영향 제외 후 BS상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은 1,520억원임

- 운용자산이익률과 지급여력비율의 미달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의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영향 외에 서울보증보험의 유가증권 투자관리 시스템의 미흡에도 기인함

<주식운용관련 규정 미준수>

- 서울보증보험의 「자산운용규정」 제4조는 대차대조표상의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및 부동산을 운용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 제11조는 매년 운용자산별 운용한도 및 손실한도를 설정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08.3.25 「FY2007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FY2008 유가증권 한도 및 파생금융거래전략」 승인 시 운용주식에 대해서는 510억원의 손실한도를 설정하고 출자전환 주식에 대하여는 미설정
- 서울보증보험은 자산운용규정상 출자전환주식에 대한 한도 설정 적용 배제의 근거가 없음에도 임의로 출자전환주식에 대한 리스크관리 생략
 - FY'08 상반기 동안 처분제한 없는 출자전환주식 이익률은 $\Delta 14.5\%$ (관련 손익 $\Delta 412$ 억원*)로 운용주식 이익률 $\Delta 7.8\%$ 를 대폭 하회하고 있음

* 배당금수익·처분손익(41억원) 및 평가손익($\Delta 453$ 억원)

<주식운용 관련 리스크관리시스템 미흡>

- 서울보증보험은 자산운용지침 제13조에 따라 유가증권의 당일 종가 기준 시가평가액이 장부가액 대비 20%를 초과하여 하락할 경우 손절매토록 하고 있으나,
 - 시장상황 급변, 가격회복이 판단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자산운용기획팀장의 합의를 얻어 자산운용실장의 결재로 손절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하이닉스 등 22건의 손절매 대상은 비슷한 시기에 운용 주체별로 손절매 의사 결정이 상이하여 손실 규모가 확대된 사례가 있음

동일 종목 동일시점 손절매 실시 상이 사례

종목명	손절매 기준일 (주당 장부가액)	손절매 여부	매각일 (매각단가)	주식수	운용 형태
하이닉스	'08.7.15 (27,850원)	실시	'08.7.18 (22,821원)	20,000주	자체
	'08.7.15 (27,850원)	유예	'08.9.4 (18,160원)	25,000주	자체
현대건설	'08.9.1 (67,441원)	실시	'08.9.4 (59,305원)	9,000주	자체
	'08.9.1 (67,875원)	유예	'08.9.3 (57,708원)	8,128주	위임

- 손절매 유예 결정에는 운용 주체(자산운용실장)와 자산운용 Back office(자산운용기획팀장)만이 관여하는 바,

- 손절매 유예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FY2008.2/4분기 중 손절매 대상 178건 중 105건의 손절매를 유예하였으나

- 상기 105건 중 '08.9월말까지 기준가격 회복 1건, 일부 회복 27건에 불과하며, 기준가격을 회복한 1건을 제외한 104건의 손절매 유예에 대한 추정손실은 82억원*임

* (평균 매각단가-기준가격)×수량, 기준가격은 손실을 20%를 초과하여 손절매 대상으로 판단하는 가격

운용주체별 손절매 현황

운용 주체	손절매 대상(A)	유예승인(B)	유예 비율(B/A)
자 체	53건	43건	81.1%
위 임	125건	62건	49.6%
계	178건	105건	59.0%

○ 또한, Back office인 자산운용기획팀의 주요 업무에 '리스크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바,

- 자산운용기획팀의 리스크관리 업무 수행과 회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리스크관리부'의 업무와의 관계가 모호

<손실한도 증액의 합리성 결여>

○ 서울보증보험은 'FY 2008 자산운용전략 및 유가증권 운용한도(안)'에서 운용주식(출자전환주식 제외)에 대하여 연간 510억원의 손실한도를 부여

- 이후 투자 손실('08.10.10 기준 541억원)이 510억원을 초과하자,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08.10.17)을 거쳐 손실한도 초과 (최대 손실 : 700억원)를 회계연도 말까지 예외 승인

- 또한 '08.10.22 투자 손실이 711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08.10.24)을 통해 최대 손실 규모를 960억원으로 확대 재조정

- '08.10.31 기준 투자 손실이 805억원으로 규모 확대되는 결과 초래

나. 부적정 업무처리에 대한 변상조치 미흡 및 신원보증보험의 비합리적 운용

□ 이행부진사항

○ 서울보증보험은 직원에 의한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 5대 범죄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LIG손해보험의 금융기관종합보험(BBB)에 가입하였으나 동 보험은 1억원 이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여

- 직원의 상기 5대 범죄로 인한 1억원 이하 피해보상을 위하여 자사의 판매상품인 신원보증보험에 자신이 가입

서울보증보험의 자사 신원보증보험 가입 현황

직 위	1인당 보험가입금액
회계단위책임자 (부서장)	1억원
회계관계책임자 (차장)	5천만원
회계관계담당자 (과장이하)	3천만원

* 가입기간 : 매 회계연도(1년간)

** FY'07 : 보험료 39백만원, FY'08 : 보험료 50백만원

- 특히, 서울보증보험은 FY'07 및 FY'08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시 「추가위험부담특약 I」을 체결하여 '중대한 과실'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까지 보험사고에 포함시켰고,
 - 「대위권제한특약」을 체결하여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면제 한 바 있음
- 한편, 김포지역영업소장 김○○○ 및 서초지점 부지점장 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하여 '08.2월~7월간 거액의 보험금 지급이 계속 발생하자 특별감사 실시

(’08.11월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증권발급	보험금지급액	추가지급예상액	추정손실액
건 수	27	13	7	20
금 액	4,100	2,028	830	2,858

- 자체 감사에 따른 문책요구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정직 6개월 및 변상 1억원(김○○), 정직 6개월 및 변상 5천만원(이○○)을 결정('08.10.10)
-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신원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자신에게 청구('08.10.10)하여 지급보험금을 자신이 수령함('08.11.12)으로써 변상완료 처리하고
- 보험사고를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로 간주하여 김성태 및 이동현에 대한 구상권을 면제

<변상금액 수준의 적절성>

- 회사의 실현된 손실이 2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서울보증보험이 결정한 변상금액(1.5억원)의 규모가 과소
- 동 변상금액은 규정 등 변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손실 규모, 손실의 원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원보증보험의 보상 한도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회사의 도덕적 해이임

<자사 신원보증보험 가입의 타당성>

- 보험계약의 기본 당사자인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수익자)가 서울보증보험 1인이며 보험료도 동사가 부담함에 따라, 보험가입의 실익이 없음
- 중과실에 대한 구상권 면제 특약 가입으로 인하여 변상결정이 무의미해지고, 사고 직원에게는 경제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다. 조치 내용 : 기관조치 3건, 임·직원조치 3건

□ 기관조치 : 기관주의 1건, 시정 1건, 개선 1건

○ FY'08.2/4분기 MOU 재무목표 중 운용자산이익률 및 지급
여력비율 미달(기관주의)

- 출자전환주식의 리스크관리 체계 마련, 주식운용 관련 리스크
관리 개선, 주식운용 관련 리스크관리 업무분장 체계 개선 등
경영의 조기안정화 및 MOU 재무비율 달성을 위한 자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보고할 것

○ 부적정 업무처리에 대한 변상조치 미흡 및 신원보증보험의
비합리적 운용

- 사고자에 대한 변상금액의 재조정 등(시정)

- 자사 판매 신원보증보험 가입 재검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변상기준 마련 등(개선)

□ 임·직원 조치 : 임원주의 1건, 직원주의요구 2건

관련자		조치내용	사유
임원	사장 방○○	주의*	○ 유가증권 투자관리시스템 미흡으로 인한 MOU 목표 미달에 대하여 포괄적인 경영책임 인정
직원	前전무대우 현○○ (現전무)	주의요구 상당*	○ 신원보증보험제도의 부적절한 운용 및 손실 변상 조치 미흡
	감사실장 김○○	주의요구	○ 불합리한 손실 변상금액 산정
			○ 유가증권 운용·리스크관리 관련 직원 및 변상조치 미흡·신원보증보험 비합리적 운용 관련 직원에 대해서 자체 조사 실시 후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공사에 보고할 것

* 주의조치에 따른 성과급지급률 차감률은 등기임원 4.5%p, 집행임원 3.0%p임. 다만, 前전무대우 현○○은 MOU관리규정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한 차감률 합산·적용

** 조치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조치내용을 이행하고 동 내용을 공사에 보고할 것

□ 기 타

- MOU 관리규정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전 임원(집행임원 포함)에 대한 성과급 지급시 주의조치 상당의 차감률(3.0%p~4.5%p)을 적용하여 지급

8-3.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지원금 관련

- 지원 이유, 지원 금액, 지원 시기, 지원 조건

- 「은행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내 은행권의 자본여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 은행의 자본여력을 확충하면서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성·운영

- 「펀드」참여 14개 은행에 대하여는 자산규모에 따라 총 123조원의 한도(credit line)를 배정(3.10일)하였고, 은행별 신청을 받아 동 한도내에서 지원*토록 운영

* 3.31일 총 4조원 상당의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매입

그룹 I	그룹 II	그룹 III	그룹 IV
국민(2조원) 우리(2조원) 신한(2조원)	하나(1.5조원) 기업(1.5조원) 농협(1.5조원)	외환(0.5조원)*	수협(0.2조원), 대구(0.3조원), 부산(0.3조원), 경남(0.23조원), 광주(0.17조원), 전북(0.07조원), 제주(0.03조원)

* 최초 배정후 외환은행은 신종자본증권 매입(0.25조원) 자진 철회(3.16일)

** 그룹 I(자산 200조원 이상), 그룹II(200~140), 그룹III(140~50), 그룹IV(50조원 이하)

-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총 2조원 한도를 부여받았으며, 1차 지원시(3.31일) 우리은행의 신종자본증권(1조원), 우리지주의 후순위채(3,000억원)를 「펀드」에서 매입

(단위 : 억원)

구 분	우리 지주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합계
신종자본증권	-	10,000	10,000	4,000	7,500	1,000	1,160	870	34,530
후순위채권	3,000	-	-	-	-	-	1,160	870	5,030
합 계	3,000	10,000	10,000	4,000	7,500	1,000	2,320	1,740	39,560

이 사 철 의 원

1. 국내 생보사의 상장 추진현황 및 공익기금 조성 진행상황

<생보사 상장>

- ☐ 생보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이 개정('07.4.27)된 이후 상장을 추진
- ☐ 그러나, 생보사의 상장 여부 및 시기는 개별 생보사가 회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
 - 최근 동양생명은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10월중으로 상장이 완료될 예정
 - 다른 생보사들의 구체적인 상장추진 움직임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음

< 공익기금 조성 >

“붙임 참조”

붙임 : 공익기금 조성 현황

<참고>

공익기금 조성 현황

1. 공익기금 출연기간 및 비율

□ 출연회사 : 18개사 ('사회공헌사업추진을 위한 협약' 가입회사)

□ 출연근거 : 협약 제7조 (출연비율 등)

○ 출연조건

출연기간	2007년~2026년까지 (총1조5천억원 목표)
출연시기	매년 7월말
출연면제	-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0 이하 (세무상 결손) - 지급여력비율 150% 미만인 회사

○ 출연비율

- 16개사 (삼성, 교보 제외) :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의 5/1000

* 단,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증권거래법 및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 등 관련법규에 의해 상장을 한 회사는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10/100

- 삼성, 교보 :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의 30/100

2. 회사별 출연현황

(단위 : 천원)

	FY2007	FY2008	FY2009 (진행중)	합계
대한	993,538	1,515,910	782,380	3,291,828
알리안츠	-	179,479	92,383	271,862
삼성	18,421,354	26,276,668	26,166,162	70,864,184
흥국	363,704	232,327	179,879	775,910
교보	6,360,820	5,664,009	3,351,692	15,376,521
우리아비바	-	7,349	190,984	198,333
미래에셋	-	122,953	28,257	151,210
금호	327,322	186,521	-	513,843
동부	77,749	87,858	30,470	196,077
동양	282,746	309,414	273,079	865,239
푸르덴셜	218,553	143,759	315,625	677,937
신한	417,565	529,971	629,819	1,577,355
SH&C	-	-	73,079	73,079
라이나	-	210,031	202,029	412,060
ING	-	100,000	-	100,000
AIA	-	238,000	-	238,000
합계	27,463,351	35,804,249	32,315,838	95,583,438

* ING, AIA는 협약불참사로서 FY2008 중 생보업계가 설립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출연

* 기타 : 협약가입사로서 출연조건 미달로 재원 미발생회사
(4개사 : PCA, 하나HSBC, 녹십자, KB)

* 자료출처 : 생명보험협회

2-1. 금융회사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현황

□ 금융회사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발생 현황

○ 첨부 참고 (자료출처: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 현재 은행 및 보험회사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7.8.3, 시행 2008.2.4)에 따라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발생분 중 원권리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할 수 있음

<첨부 1>

은행권 휴면예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은행명	2006년		2007년		2008년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산업은행	12	4	14	4	24	3
농협중앙회	1,066	154	1,389	151	1,254	268
신한은행	940	240	550	120	689	102
우리은행	2,018	137	1,184	110	1,124	87
SC제일은행	1,276	98	295	52	557	76
하나은행	646	93	871	114	682	95
기업은행	658	65	768	78	706	69
국민은행	2,057	129	2,122	69	1,772	65
외환은행	638	70	538	76	528	72
한국씨티은행	555	58	190	28	283	25
수협중앙회	55	10	41	10	39	6
대구은행	101	31	75	29	95	11
부산은행	374	45	360	49	330	48
광주은행	235	13	-	-	114	5
제주은행	10	0.4	9	0.4	3	0.2
전북은행	84	12	78	10	73	11
경남은행	105	6	131	9	146	10
총 계	10,830	1,165.4	8,615	909.4	8,419	953.2

<첨부 2>

생명보험사 휴면보험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보험사명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한	84	874	64	1,826	57	447
알리안츠	85	136	48	167	23	129
삼성	200	1,718	176	3,447	146	1,729
흥국	53	197	51	247	41	92
교보	184	1,325	149	5,891	110	456
우리아비바	4	8	5	8	5	11
미래에셋	59	97	66	144	52	65
금호	30	39	39	47	43	55
동부	3	9	6	11	11	19
동양	12	64	91	249	125	82
메트라이프	11	35	12	46	15	33
푸르덴셜	15	19	13	22	13	35
신한	72	79	58	82	50	72
PCA	2	2	6	4	9	5
뉴욕	2	3	1	3	1	3
ING	25	93	26	97	33	75
SH&C	—	1	1	10	1	15
녹십자	4	25	4	21	3	9
라이나	98	36	100	41	81	34
AIG	59	41	66	45	80	56
하나HSBC	2	1	4	2	5	3
KB	1	3	1	7	1	9
총 계	1,005	4,805	987	12,417	905	3,434

<첨부 3>

손해보험사 휴면보험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보 험 사 명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메리츠	8.9	35.4	24.4	71.0	47.2	45.4
한화	5.0	17.1	5.1	18.3	12.4	21.9
롯데	3.0	11.0	2.0	9.5	2.1	5.3
그린	1.8	6.2	1.6	6.0	2.0	5.4
흥국쌍용	9.6	14.6	7.3	12.4	17.2	16.0
제일	20.5	16.4	21.3	23.6	25.9	21.4
삼성	66.2	380	65.8	733	76.8	320.3
현대	18.2	60.5	13.7	31.1	38.0	44.5
LIG	17.9	71.3	22.9	93.0	29.8	88.7
동부	19.9	59.7	25.9	78.2	46.4	61.3
총 계	171.0	672.2	190.0	1,076.1	297.8	630.2

2-2. '08년중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휴면예금 규모와 집행현황

1. 휴면예금 출연

□ 18개 은행, 32개 보험사, 52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704억원을 출연받음

- '08. 1월 체결한 휴면예금 출연협약에 따라 은행권은 2003년부터 2007년에 발생한 휴면예금을, 보험권은 2003년부터 2006년에 발생한 휴면보험금을 각각 출연받음

(단위 : 억원)

구 분	출연금액			비 고
	계 획	실 적	집행률	
은행권	1,400	1,785	127.5%	- 18개 은행 : 1,766 - 52개 저축은행 : 19
보험권	600	919	153.2%	- 32개 보험사
계	2,000	2,704	135.2%	

2. 원권리자 지급

□ '08.5.27부터 '08.12.31까지 10,843명의 원권리자가 지급을 신청하여 총 84억원을 지급함

- * 은행권 : 7,299명에게 44억원
- * 보험권 : 3,544명에게 40억원

- 재단과 출연 금융기관간 원권리자 조회 및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권리자 계좌에 신속히 이체(신청 익일)

3. 복지사업

◇ 복지사업 지원 교부금액 : 271억원

* 소액금융사업 241억원, 소액보험사업 30억원

□ 소액금융사업(창업, 사회적기업,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 등)에는 19개 복지사업자에게 241억원을 교부

* 서울시 14개 자치구(24개 전통시장)에 10억원을 교부

□ 소액보험사업에는 13개 보험사*에 30억원을 교부

* 6개 생보사 23억원, 7개 손보사 7억원

(단위 : 억원)

구분	분야	복지사업자명	지원금 교부			비고
			계획	실적	집행률	
소액 금융 사업	창업·취업	사회연대은행	25	25	100%	
		신나는조합	6	6	100%	
	신용회복	신용회복위원회	120	120	100%	
		한마음금융	60	60	100%	
	사회적기업	함께일하는재단	20	20	100%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	서울시 14개 자치구	10	10	100%	
	예비사업비		9	-	-	
	소 계		250	241	96.4%	
소액보험사업		보험회사	30	30	100%	
합 계			280	271	96.8%	

2-3. 휴면예금사용 점검 결과보고서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200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별도

3. 최근 3년간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현황, 회수계획

①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현황

< 연도별 공적자금 지원/회수 현황 >

(‘09.6월말 현재 단위 : 조원, %)

구 분	1998 ~ 2006(A)	3년간 공적자금 투입 · 회수규모				총 계(A+B)
		2007	2008	2009*	소계(B)	
지 원	168.3	0.14	0.06	0.11	0.3	168.6
회 수	84.5	5.5	3.4	0.49	9.3	93.8
회 수 율 (누 계)	50.2	53.4	55.4	55.7	-	55.7

* 09. 1 ~ 6월까지의 누계금액임

② 회수계획

□ 정부 등은 그간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보유주식 및 자산매각 등을 통해 공적자금 투입회사 민영화를 지속 추진해왔음

○ 현재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등 일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지분을 보유중에 있음

□ 보유중인 주식 및 자산에 대해서는 향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09.8.31 출범)의 의결을 거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각을 추진할 계획

4.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현황(부과일시, 상대방, 부과금액, 사건내용, 납부일시등) 및 과징금 납부 현황

☐ 최근 5년간('05년 ~09.8월말 현재) 부과한 과징금 현황 붙임

붙임 : 최근5년간 금융위 과징금 부과현황

2005년 ~ 2009.8월말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현황

부과일시	상대방	부과금액	사건내용	납부기한	납부일시	부과금 정책	비고
1 2005-01-24	동양파이낸셜	100,000,000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005-02-18	2005-02-17	-	
2 2005-02-07	미담포리	79,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4-13	2005-04-13	-	
3 2005-02-28	동양생명보험	2,935,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5-05-04	2005-05-04	-	
4 2005-03-25	아모	149,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5-29	2005-05-30	-	
5 2005-03-25	대아리드선	51,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5-29	2005-03-25	-	
6 2005-03-25	세신	48,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5-29	2005-05-30	-	
7 2005-03-25	성운전자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5-29	2005-05-30	-	
8 2005-03-25	아이플러스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5-29	2005-05-30	-	
9 2005-03-25	유니캡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5-29	2005-05-30	-	
10 2005-03-25	신협산업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5-29	2005-06-20	-	
11 2005-03-25	왕창악기제조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5-29	2005-05-30	-	
12 2005-04-21	이스턴테크놀로지	169,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6-25	2005-11-14	-	
13 2005-04-21	모니이	114,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6-25	2005-06-27	-	
14 2005-04-21	포이로스	105,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6-25	2005-08-25	-	
15 2005-04-21	제일창업투자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6-25	2005-06-24	-	
16 2005-04-21	영성업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6-25	2005-06-24	-	
17 2005-04-21	네스테크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6-25	2005-06-27	-	
18 2005-05-16	삼양물류스	95,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7-20	2005-07-20	-	
19 2005-05-26	한국통신데이터	250,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7-30	2005-09-06	-	
20 2005-05-26	대한비이오링크	69,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7-30	2005-08-01	-	
21 2005-05-26	와이즈몬트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7-30	2005-09-30	-	
22 2005-05-26	베네스하이텍	21,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7-30	2005-07-29	21,400,000	
23 2005-05-26	한성에코넷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7-30	2005-07-29	-	
24 2005-05-26	현대유틸리티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7-30	2005-08-01	18,000,000	
25 2005-05-26	신원건설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7-30	2005-07-29	-	
26 2005-05-26	백금정보통신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7-30	2005-07-29	-	
27 2005-05-26	피세코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7-30	2005-07-29	-	
28 2005-05-26	한국캐피탈	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7-30	2005-07-29	-	
29 2005-06-22	신광기업	68,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8-26	2005-08-26	68,300,000	
30 2005-06-22	대유디앤씨	24,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8-26	2005-08-26	-	
31 2005-08-25	(주)유링	110,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0-29	2005-11-01	-	
32 2005-08-25	케이디씨정보통신(주)	56,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0-29	2005-10-31	-	
33 2005-08-25	OOO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0-29	2005-10-31	-	
34 2005-08-25	OOO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0-29	2005-10-31	-	
35 2005-08-25	(주)아세아조인트	21,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0-29	2005-11-01	-	
36 2005-08-25	아이메커(주)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0-29	2005-11-01	-	
37 2005-08-25	백산건설(주)	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0-29	2005-10-19	-	
38 2005-08-25	(주)시스네트	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0-29	2005-10-28	-	
39 2005-08-25	(주)에이엠이씨	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0-29	2005-10-28	-	
40 2005-08-25	(주)친일고속	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0-29	2005-10-27	-	
41 2005-09-09	OOO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1-13	2005-11-08	-	

부과일시	상대방	부과금액	사건내용	납부기한	납부일시	부과금 잔액	비고
42 2005-09-09	(주)세일테크	112,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1-13	2005-11-28	-	-
43 2005-09-30	(주)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2-04	2005-12-01	-	-
44 2005-09-30	대정기계기술(주)	14,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2-04	2005-12-02	-	-
45 2005-10-31	OOO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1-04	2005-12-27	-	-
46 2005-12-23	한국농리우레탄공업(주)	3,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2-26	2005-12-29	-	-
47 2005-10-31	벨로정보통신(주)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1-04	2006-01-02	-	-
48 2005-11-14	플레이애플이(주)	600,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1-18	2006-01-19	-	-
49 2005-11-14	그린화재해상보험(주)	302,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6-01-18	2006-01-18	-	-
50 2005-11-24	(주)한신코퍼레이션	181,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1-28		181,800,000	
51 2005-12-23	(주)알앤비아이오	30,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2-26	2006-01-06	-	-
52 2005-12-23	교보생명보험(주)	47,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6-02-26	2006-02-20	-	-
53 2005-12-23	인티비온반도체(주)	5,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2-26	2006-01-10	-	-
54 2005-12-23	(주)엘컴	37,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2-26	2006-02-27	-	-
55 2005-12-23	(주)엘컴이두 [구 (주)인조커뮤니티]	39,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2-26	2006-04-03	-	-
56 2005-12-23	OOO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2-26		30,000,000	
57 2005-12-23	(주)네트콤	130,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2-26	2006-12-29	-	-
58 2005-12-26	(주)세이브존이앤씨	26,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3-01	2006-02-28	-	-
59 2005-12-26	상화회계법인	10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3-01	2006-02-28	-	-
60 2005-12-26	홀트건설(주)	301,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3-01	2006-03-02	-	-
61 2005-12-26	OOO	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3-01	2007-07-03	-	-
62 2005-12-26	(주)우리기들	1,035,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3-01	2007-07-03	-	-
2005년 62건		7,950,700,000				319,500,000	
1 2006-02-09	오트윙테크(주)	54,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4-15	2006-04-14	-	-
2 2006-03-10	세일테크엔터프라이즈(주)	1,222,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5-14		1,222,700,000	
3 2006-05-15	남광토건(주)	7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7-19	2006-07-19	-	-
4 2006-05-15	OOO	1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7-19	2006-07-19	-	-
5 2006-05-15	대성(주)	2,0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7-19	2006-07-19	-	-
6 2006-05-15	(주)세종로트 [구 (주)에프엑스]	4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7-19	2006-07-19	-	-
7 2006-05-15	(주)글린포어임네트웍스	159,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7-19	2006-11-30	-	-
8 2006-06-09	(주)메일비이오(주) (주)통진에코텍	833,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8-13	2007-03-29	-	-
9 2006-06-09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64,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6-08-13	2006-08-09	-	-
10 2006-06-22	(주)상정	268,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8-26	2006-08-25	-	-
11 2006-06-22	(주)코리어인터	76,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8-26	2006-12-22	-	-
12 2006-06-22	(주)시스엠비트웍스	39,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8-26	2006-08-11	-	-
13 2006-06-22	(주)아이브라지	37,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8-26	2006-08-28	-	-
14 2006-06-22	(주)넥스트로드	23,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8-26	2006-08-25	-	-
15 2006-06-22	(주)케이디이컴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8-26	2006-08-25	-	-
16 2006-06-22	(주)우학	10,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8-26	2006-08-28	-	-
17 2006-08-24	(주)진컴이앤이이	21,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10-28	2006-10-30	-	-
18 2006-08-24	(주)넷서플라이크놀러지	11,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10-28	2006-10-30	-	-
19 2006-08-28	LIG손해보험(주)	33,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6-11-01	2006-11-01	-	-
20 2006-09-11	아임미디어(주)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11-15	2007-02-16	-	-

번호	부과일시	상대방	부과금액	시건내용	납부기한	납부일시	부과금 잔액	비고
21	2006-09-28	(주)인투스테크놀로지	98,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12-02	2006-12-04	-	
22	2006-11-09	신용제지(주)	25,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1-13	2007-01-12	-	
23	2006-11-09	(주)티브테크	5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1-13	2007-07-16	-	
24	2006-11-09	한국정보통신(주)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1-13	2007-01-15	-	
25	2006-11-23	(주)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36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1-27	2007-01-26	-	
26	2006-12-08	아이메카(주)	231,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11	2007-02-12	-	
27	2006-12-08	두산산업개발(주)	2,0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11	2007-02-12	-	
28	2006-12-08	백산인터랙티브(주)	1,112,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11	2007-07-02	-	
29	2006-12-22	에이치에스상업투자(주)	64,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24	2007-02-09	-	
30	2006-12-22	(주)유아이에너지(주)서원(이앤비)	52,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24	2007-03-22	-	
31	2006-12-22	신영기술통용(주)(변경 후 상호 영업처투자(주))	3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24	2007-02-23	-	
2006년 31건			10,179,300,000				1,222,700,000	
1	2007-02-02	(주)에스엔이코프(주) (주)넷서엔터테인먼트그룹	247,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08	2007-06-13	-	
2	2007-02-15	(주)큐프(주) (주)하이컨텍	254,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21	2007-04-20	-	
3	2007-02-15	(주)코스모씨엔티(이산) 케이엔케이(주)	252,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21	2007-04-25	-	
4	2007-02-15	(주)세코엔터테인먼트	245,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21	2007-04-23	-	
5	2007-02-15	OOO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21	2007-04-23	-	
6	2007-02-15	(주)티에스엠 홀딩스(주) (주)시스링크트웍스	129,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21	2007-06-12	-	
7	2007-03-16	케이팔린트파이낸스코리아(주)	50,000,000	이시진폭금증입법 위반	2007-04-10	2007-03-27	-	
8	2007-03-19	(주)카이스트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5-23	2007-05-23	-	
9	2007-03-19	(주)케드름	5,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5-23	2007-05-07	-	
10	2007-03-30	(주)세오텍	449,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6-03	2007-06-04	-	
11	2007-04-02	알리안조성생명보험(주)	182,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7-06-06	2007-06-07	-	
12	2007-04-13	큐릭스(주)	250,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6-17	2007-06-15	-	
13	2007-05-15	서울보증보험(주)	645,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7-07-19	2007-07-19	-	
14	2007-05-28	(주)송원텔레콤	174,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01	2007-07-31	-	
15	2007-05-28	(주)포이토토	9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01	2007-11-21	-	
16	2007-05-28	(주)큐엔테크코리아	23,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01	2007-08-01	-	
17	2007-05-28	(주)우리기술포터	23,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01	2007-08-01	-	
18	2007-06-22	롯데관광개발(주)	156,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6	2007-08-24	-	
19	2007-06-22	케이알신용(주)	7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6	2007-08-23	-	
20	2007-06-22	오스텍시스템즈(주)	148,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6	2007-08-27	-	
21	2007-08-27	(주)세안	359,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2007-11-23	-	
22	2007-08-27	(주)삼화네트웍스	2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2007-12-07	-	
23	2007-08-27	OOO	2,0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2007-10-31	2,000,000,000	
24	2007-08-27	(주)나노엔텍	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2007-10-30	-	
25	2007-08-27	(주)도원라인이엔티	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50,000,000	
26	2007-08-27	(주)모리리소스	67,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2007-10-30	-	
27	2007-08-27	(주)티에스엠홀딩스(주) (주)시스링크트웍스	89,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2008-01-09	-	
28	2007-08-27	한국창업투자(주)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2007-10-25	-	
29	2007-08-27	교보생명모형(주)	249,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7-10-31	2007-10-30	-	
30	2007-09-11	(주)디유뱅크	244,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15	2007-11-15	-	

	부과일시	상대방	부과금액	시간내용	납부기한	납부일시	부과금 잔액	비고
31	2007-08-11	(주)솔트웍스	24,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15	2007-11-15	-	
32	2007-08-11	한국기술산업(주)	141,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15	2007-12-14	-	
33	2007-08-11	OOO	26,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15	2007-12-20	-	
34	2007-10-12	(주)코아크로스(주) (주)메카스	4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15	2007-12-17	-	
35	2007-10-12	OOO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15	2007-12-17	-	
36	2007-10-12	(주)유비스타	45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15	2007-12-17	-	
37	2007-10-25	(주)연터빌	23,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9	2007-12-27	-	
38	2007-10-25	(주)나노엔텍	48,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9	2007-12-27	-	
39	2007-10-25	㈜티티세아이(주) (주)엠이엔아이	324,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9	2007-12-27	-	
40	2007-10-25	OOO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9	2008-07-29	-	
41	2007-10-25	OOO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9		16,000,000	
42	2007-11-12	㈜엘제이엔에너지(주) (주)미스타테크	560,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1-16		20,000,000	
43	2007-11-22	(주)키이스트	43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1-26	2008-01-28	560,700,000	
44	2007-11-22	OOO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1-26	2008-01-25	-	
45	2007-11-22	㈜엘제이엔에너지(주) (주)미스타테크	18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1-26		180,000,000	
46	2007-11-22	OOO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1-26		30,000,000	
47	2007-12-24	케이엔케이(주)	145,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145,100,000	
48	2007-12-24	시큐리티코리아(주)	152,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152,400,000	
49	2007-12-24	산양전기(주)	316,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316,700,000	
50	2007-12-24	(주)상화네트웍스	144,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2008-02-27	-	
51	2007-12-24	OOO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30,000,000	
52	2007-12-24	(주)진원	325,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325,300,000	
53	2007-12-24	삼표식품(주)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2008-02-27	-	
54	2007-12-24	(주)한신디앤피	459,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2008-07-09	-	
2007년 54건			10,683,600,000				3,826,200,000	
1	2008-02-22	유리은행	2,992,000,000	은행법 위반	2008-04-27	2008-04-24	-	
2	2008-03-28	㈜모나미	9,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01	2008-05-23	-	
3	2008-03-28	페이퍼코리아㈜	8,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01	2008-05-30	-	
4	2008-03-28	동신건설㈜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01	2008-06-02	-	
5	2008-03-28	대한은행지점연합회	441,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01		441,700,000	
6	2008-03-28	OOO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01		16,000,000	
7	2008-04-24	OOO	4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8		40,000,000	
8	2008-04-24	동아회합관그룹(주, 동이G&L)	407,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8	2008-06-10	-	
9	2008-05-26	㈜신지소프트	6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7-25	2008-10-31	-	
10	2008-06-13	㈜조아토트	318,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12		318,700,000	
11	2008-06-13	조성심(조이토트 대표이사)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12		20,000,000	
12	2008-06-13	오베스㈜	1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12		130,000,000	
13	2008-06-13	㈜셀원	20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12	2008-08-12	-	
14	2008-06-13	(주)네오솔라(주) (주)에이트웍스	48,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12	2008-08-12	-	
15	2008-06-17	영진약품공업㈜	994,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18	2008-08-18	-	
16	2008-06-26	㈜엘피오	72,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72,500,000	
17	2008-06-26	㈜씨엔중공업	115,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115,500,000	

	부과일시	상대방	부과금액	시건내용	납부기한	납부일시	부과금 잔액	비고
18	2008-06-26	㈜유리이스트	102,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2008-08-25	-	
19	2008-06-26	㈜엘에스비(구 ㈜위디즈)	8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2008-08-25	-	
20	2008-06-26	제이에스㈜	77,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2008-08-25	-	
21	2008-06-26	㈜나래원	40,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2008-08-25	-	
22	2008-06-26	㈜피로스이앤아이	15,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2008-08-25	-	
23	2008-06-30	㈜케이씨오에너지	820,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9	2008-08-29	820,800,000	
24	2008-07-24	현대피앤씨㈜	98,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9-29	2008-09-29	-	
25	2008-07-29	한국통신데이터㈜	49,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0-02	2008-10-02	49,400,000	
26	2008-08-21	OOO	17,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0-27	2008-10-27	17,500,000	
27	2008-08-21	OOO	10,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0-27	2008-10-23	-	
28	2008-09-17	메디에스엔피(주)(구, 벡트론)	133,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1-21	2008-11-21	133,800,000	
29	2008-09-17	(주)아이씨코퍼레이션	772,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1-21	2008-11-21	772,900,000	
30	2008-09-17	OOO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1-21	2008-11-21	20,000,000	
31	2008-09-17	한화손해보험㈜	6,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8-11-21	2008-11-20	-	
32	2008-10-23	㈜연흥투어워드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2-29	2009-04-07	-	
33	2008-10-23	㈜사인시스템	48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6-29	2009-06-29	480,000,000	
34	2008-10-23	㈜세라텍	16,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2-29	2009-01-13	-	
35	2008-10-23	㈜로엔케이	6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2-29	2008-12-29	61,900,000	
36	2008-10-27	㈜이플렉(구 미스타테크온, (주)에너지)	382,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2-31	2008-12-31	382,800,000	
37	2008-10-27	넷시큐어테크놀로지㈜	103,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3-12	2009-03-16	-	
38	2008-10-27	네스텍(주)	532,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2-31	2008-12-31	-	
39	2008-11-07	㈜스카이뉴콤	254,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1-13	2009-01-13	-	
40	2008-11-11	㈜포도스	973,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1-15	2009-01-15	973,400,000	
41	2008-11-12	청원회계법인	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1-16	2009-01-16	50,000,000	
42	2008-12-18	㈜피로스이앤아이	4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24	2009-08-24	-	
43	2008-12-18	OOO	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2-23	2009-02-23	50,000,000	
44	2008-12-26	㈜유리시이엔티	49,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3-04	2009-03-20	-	
45	2008-12-26	㈜트루엑스(구, 티티세이아이)	2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3-04	2009-03-04	220,000,000	
2008년 45건			11,801,100,000				5,186,900,000	
1	2009-02-27	㈜뉴젠비아이티	78,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2009-05-04	78,400,000	
2	2009-02-27	㈜에스티엔아이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2009-05-08	-	
3	2009-02-27	㈜을누리에이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2009-05-04	30,000,000	
4	2009-02-27	㈜삼세나	40,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2009-05-04	40,200,000	
5	2009-02-27	오베스(주)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2009-05-04	30,000,000	
6	2009-02-27	티스텍(주)	24,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2009-05-04	24,500,000	
7	2009-02-27	한국수텔제약(주)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2009-05-04	-	
8	2009-02-27	㈜핀티미이크로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2009-05-04	12,000,000	
9	2009-02-27	한국개발금융(주)	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2009-05-01	-	
10	2009-03-20	㈜아이씨엘	121,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25	2009-05-25	121,200,000	
11	2009-04-10	네스텍(주)	355,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6-15	2009-06-15	-	
12	2009-04-10	OOO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6-15	2009-06-15	20,000,000	
13	2009-04-10	OOO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6-15	2009-06-12	-	

	부과일시	상대방	부과금액	사건내용	납부기한	납부일시	부과금 전액	비고
14	2009-05-06	㈜로코네오오기구	4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10	2009-07-10	-	
15	2009-05-06	㈜진네트	598,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10	2009-07-10	598,200,000	
16	2009-05-27	세일피게먼트인	8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31	2009-07-31	-	
17	2009-05-27	㈜서리콤	310,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31	2009-07-31	310,500,000	
18	2009-05-27	㈜휴니드테크놀로지스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31	2009-07-21	-	
19	2009-05-27	㈜모리리소스	15,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31		15,800,000	
20	2009-05-28	㈜휴리프	50,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50,400,000	
21	2009-05-28	㈜비엔엘티프라이즈	4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44,000,000	
22	2009-05-28	㈜웅주	4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44,000,000	
23	2009-05-28	㈜리노셀	41,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2009-07-31	-	
24	2009-05-28	㈜확립영아사	38,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2009-07-31	-	
25	2009-05-28	㈜사이버페스	3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2009-07-31	34,000,000	
26	2009-05-28	㈜에듀인스	30,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2009-08-19	-	
27	2009-05-28	㈜삼에스코리아	2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2009-07-31	-	
28	2009-06-05	창주상호저축은행	4,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09-08-10	2009-08-10	-	
29	2009-06-05	한주상호저축은행	71,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09-08-10	2009-08-11	-	
30	2009-06-18	고보생명(주)	22,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9-08-24	2009-08-18	-	
31	2009-06-24	㈜아이씨엠컴퍼니	4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28		40,000,000	
32	2009-06-25	㈜아이씨포레이션	45,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31		45,500,000	
33	2009-06-25	대우전자부품(주)	141,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31		141,200,000	
34	2009-07-08	㈜세모텍	232,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11		232,200,000	
35	2009-07-08	㈜삼보	97,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11		97,000,000	
36	2009-07-17	동양이엔피(주)	23,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21		23,700,000	
37	2009-07-17	㈜원드스케이	147,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21		147,000,000	
38	2009-07-24	㈜대환은박지	34,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28		34,200,000	
39	2009-07-24	㈜테라리소스	456,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28		456,200,000	
40	2009-07-24	㈜비엔엘티프라이즈	63,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28		63,800,000	
41	2009-07-24	㈜이호커뮤니케이션	66,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28		66,300,000	
42	2009-07-24	㈜셀프(주, 에이치원비이오)	217,8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217,800,000	
43	2009-07-24	㈜서원증권	116,8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116,800,000	
44	2009-07-24	㈜트리이름	79,7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79,700,000	
45	2009-07-24	㈜캐슬다엔지	54,0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54,000,000	
46	2009-07-24	㈜엑스씨이	51,7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51,700,000	
47	2009-07-24	㈜대유	50,2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50,200,000	
48	2009-07-24	㈜블루스온디엔이이	48,1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48,100,000	
49	2009-07-24	㈜포넷	24,4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24,400,000	
50	2009-07-24	㈜이필	20,0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20,000,000	
51	2009-07-24	㈜정원엔시스텍	4,1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4,100,000	
52	2009-07-30	(주)남보채상호저축은행	144,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09-10-05		144,000,000	
2009년 52건			4,406,400,000				3,611,100,000	

5. 국내 금융자격증제도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A. 공정시장과

☐ 공인회계사와 관련하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증 명칭	취득 조건	취득 절차	시험 과목	최종 합격자수	주관 기관	실시 시기	관련법
공인 회계사	일정 학점 이수*	공인회계사 시험(1차, 2차) 합격 후 실무 수습(1년)	· 1차: 회계학, 경영학, 경제 원론, 상법, 세 법 개 론, 영어(토플 등 으로 대체) · 2차: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 감사, 세법, 재무관리	· '09년: 936명 · '08년: 1,040명 · '07년: 830명 · '06년: 1,007명 · '05년: 1,004명	금융위원회 (시험시행: 금융감독원)	매년 1회 (1차: 1월~3월 2차: 6월~7월)	공인 회계사법

*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 12학점, 경영학과목 : 9학점, 경제학과목 : 3학점

B. 금융정책과

☐ 한국 FPSB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

자격명	시행 시작 년도	실시 횟수	접수 인원	응시 인원	합격 인원	합격률	시험 응시 전형료	비고
AFPK (재무 설계사)	2007	9	108,510	84,880	23,931	28.2%	전과목응시 : 5만원 모듈1 응시 : 3만원 모듈2 응시 : 3만원	07년 6월 공 인 후 연 4회 시행중

C. 은행과

☐ 현재 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

한국금융연수원 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

(담당자 : 한국금융연수원 배유나 계장 3700-1645)

지격명	시행 시작년도	실시횟수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시험응시전형료	비고
신용분석사	2002	14	6,933	4,653	991	21.3%	전과목응시 : 5만원 1부 응시: 2만원 2부 응시: 3만원	- 동일시험 2회 접수시 응시전형 료 30% 감면, 3 회 이상 접수시 응시전형료 50% 감면적용
여신심사역	2002	9	322	257	121	47.1%	전과목응시 : 5만원 1부 응시: 2만원 2부 응시: 3만원	
국제금융역	2002	7	940	560	141	25.2%	전과목응시 : 5만원 1부 응시: 2만원 2부 응시: 3만원	
신용위험분석사 (CRA)	1차	7	3,457	1,967	920	46.8%	6만원	
	2차	7	1,170	861	123	14.3%	7만원	
자산관리사 (FP)	2002	16	49,030	31,250	7,375	23.6%	전과목응시 : 4만원 1부 응시: 2만원 2부 응시: 2만원	
계		60	61,852	39,548	9,671	24.5%		

* 신용위험분석사(CRA)자격은 1차시험 합격후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차시험 합격자가 최종합격자임.

신용정보협회 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

(담당자 : 신용정보협회 기경민 국장 3775-2761)

자격명	시행 시작년도	실시횟수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시험응시전형료	비고
신용관리사	2006	6	27,675	15,899	4,556	28.7%	06년 30000원, 07년 35000원, 08년 40000원	06년 공인후 연2회 시행중

D. 자본시장과

(단위 : 명)

자격시험 종류	보유자 ¹⁾	합격자 ²⁾
증권투자상담사	92,425	4,493
파생상품투자상담사	46,572	2,304
일임투자자산운용사	32,018	1,918
집합투자자산운용사	8,789	1,117
재무위험관리사	1,784	386
금융투자분석사	63	63
투자상담관리사	23	23
증권분석사	181	-
증권펀드투자상담사	174,078	15,819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51,328	51,328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59,308	59,308
합계		136,759

1) 09.7월말까지 누적

2) 09.1 ~ 7월까지

6. 국내 신용평가시장 현황, 과점체제로 인한 문제점, 대책

- 국내 신용평가 시장에는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신정 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4개 회사가 영업중
- 현재 상위 3개사가 전체 매출액(731.1억원)의 98%를 차지

국내 신용평가회사 현황

구 분	한신정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자본금	50억원	50억원	245억원	177.5억원
주요 주주	한신정 100%	Moody's(50%+1주) 한신평정(50%-1주)	Fitch 73.5%	SB파트너스 19.2%
'08년 매출액	197억원(27%)	275.1억원(37.6%)	240.9억원(33%)	18.1억원(2.4%)
평가인력	63명	65명	65명	22명
업무제휴	R&I (’00.4.25)	Moody's (’98.8.18)	Fitch (’99.1.20)	JCR (2000.8.29)

- 신용평가 시장의 과점체제가 지속될 경우 신평사 간 경쟁 유인 감소로 인한 등급차별화 노력 미흡,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등을 중심으로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 촉진, 신용평가의 질적수준 제고를 통한 시장의 신뢰회복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바
- 이러한 국제 논의동향 및 각국의 입법내용 등을 감안하여 국내 신용평가 산업의 경쟁 촉진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임

7.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계획

A. 회수관리팀

- 예금보험공사는 '01.3월 우리금융지주 지분 100%를 취득한 이후 공모 및 블록세일 등을 통해 약 3.1조원을 회수하고 '09.8월말 현재 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현황

('09. 8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지원(A)*	회수(B)			차이(A-B)
출 자	94,422	지분 매각**	국내공모('02.6월)	3,672	68,634
			1차 블록세일('04.9월)	3,240	
			2차 블록세일('07.6월)	9,168	
		배 당 금		9,708	
		소 계		25,788	
출 연	33,241	파산배당금 등			27,559
합 계	127,663	31,470			96,193

* 한빛은행(상업+한일), 평화·경남·광주은행, 우리중금(舊 하나로 중금) 투입액

** 공모 주당 6,800원, 1차 블록세일 주당 7,200원, 2차 블록세일 주당 22,750원

- '07.3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가 의결한 지분 매각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중
- 시장상황 등 매각 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금융산업 발전과 공적자금 회수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민영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

B. 산업금융과

- 기업은행 민영화(지분 매각규모, 방식, 시기 등)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 육성, 매각이익으로 인한 재정수입 극대화 등 정책적 측면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임

8. '08.6월말, ' 08년말, '09.6월말 기준 금융위
산하 각종 기금들의 국내외 주식, 간접투자상품,
파생상품 투자 평가손익 내역

A. 산업금융과

□ 신보, 기보, 농신보 관련

- 국내외 주식, 파생상품 투자 평가손익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간접투자상품(연기금투자폴 채권형) 투자평가손익 내역

	구 분	투자손익	수익률(%)
기보	'08.6월말	28억원	7.0
	'08.12월말	53억원	13.3
	'09.6월말	70억원	6.4
신보	'08.6월말	93억원	5.2
	'08.12월말	315억원	8.7
	'09.6월말	166억원	3.8

B. 은행과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투자상품 평가손익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08. 6월말		'08. 12월말		'09. 6월말	
간접투자 상 품	연기금 투자품 (채권형)	잔 액	평가이익	잔 액	평가이익	잔 액	평가이익
		57,745	150	67,745	3,627	72,350	384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 해당사항 없음

C. 운용기획팀

☐ 부실채권정리기금 투자 평가손익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자원금	평가손익		
			'08.6월 말	'08.12월 말	'09.6월 말
국내외 주식		운용사실 없음			
간접투자 상품	혼합형 수익증권	374,000	627	운용잔액 없음	-
	채권형 수익증권	70,000	-	-	130
	MMF	1,659,000	-	운용잔액 없음	-
파생상품투자		운용사실 없음			
합 계		2,103,000	627	0	130

* 간접투자상품 중 MMF는 '08.9.3 ~ '08.12.29까지 기간중 운용

☐ 구조조정기금 투자 평가손익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공적자금상환기금 투자 평가손익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투자 평가손익 내역

- 기금의 여유자금은 국공채 등 정부보증채와 예치금 등으로 운용하며, 관련규정상 주식 및 파생상품 등 실적배당상품은 투자대상 자산에서 제외
- 다만, 초단기 금융상품인 연기금투자폴의 MMF수익증권은 투자대상 자산에 포함하여 운용중

<연기금투자폴 MMF 수익증권 평가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8.6월 말		'08년 말		'09.6월 말	
	평가액	평가손익	평가액	평가손익	평가액	평가손익
예금보험기금	0	0	237,775	951	158,604	14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0	0	58,205	53	90,566	31

9. 혐의거래보고 접수현황 및 법집행기관 제공·처리 현황

□ 혐의거래보고 접수 현황 및 법집행기관 제공·처리현황

○ 연도별 혐의거래보고 접수현황

(단위: 건)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	합계
보고건수	275	1,744	4,660	13,459	24,149	52,474	92,093	85,624	230,091

○ 법집행기관 제공 및 처리 현황(2009. 8. 현재)

기관	제공	종결				처리중
		계	조치*	무혐의	내사중지	
검찰청	3,604	2,280	958	1,088	234	1,324
경찰청	4,391	1,069	217	778	74	3,322
국세청	5,913	1,372	1159	213	-	4,541
관세청	3,564	2,356	876	1,480	-	1,208
금융위	199	83	39	44	-	116
선관위	11	11	1	10	-	0
계	17,682	7,171	3,250	3,613	308	10,511

※ 법집행기관 제공·처리현황은, 법집행기관 마다 수사 및 조사 진행
속도가 상이하여 FIU 출범 이후 누계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0. 헤지펀드, 사모펀드, 국부펀드 등 새로운 상품에 대한 시장전망과 관리대책

□ 헤지펀드, 사모펀드, 국부펀드의 전망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국부펀드의 경우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 우리나라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의 경우 다른 외국에 비해 시장교란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헤지펀드 >

○ 1단계 도입(적격투자자 헤지펀드)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제249조의2 신설, '09.2.3 시행)한 바 있으나, 현재 시행령 미제정으로 펀드는 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정은 헤지펀드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등을 감안하여 09.12말까지 제정할 계획입니다.

○ 한편, 적격투자자 헤지펀드의 경우 여러장치*를 통해 시장 교란요인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 i)펀드설립에 대해 금융위에 사후보고토록 하고, ii)금전 차입현황 및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도 보고토록 의무화

< 사모펀드 >

○ 인가받은 집합투자업자만 사모 펀드 운용이 가능하며, 펀드설정시 의무적으로 감독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 한편,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한도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11.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업무규정 제17조와
18조에 의해 적발한 내역 일체

조치일	회 사 명	위 반 내 용	조치내용
2007.8.28	굿모닝신한 증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	회원경고
2009.2.10	맥쿼리증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1조 및 제18조 위반	회원경고

12. 산은 민영화 계획, 국회 논의시와 변경된 사항

□ 붙임참조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

2008. 7. 28



금융위원회

— < 목 차 > —

I.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II.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현황

III.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IV.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1.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기본방향

2.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3. 추가 검토가 필요한 기업

4. 14개 정부소유 구조조정 기업 매각

I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총 19개사

① 「공기업」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없음

※ 직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비중이 50%이상인 공공기관

② 「준정부기관」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6개사

※ 직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비중이 50%미만인 공공기관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 미약 기업이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업무 수행
- 예금보험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또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등의 업무 수행

③ 「기타공공기관」은 국채은행 및 준정부기관의 자회사에 해당되며, 금융위 소관은 13개사

- 산업은행 · 기업은행 및 동 자회사들은 중소기업자 등 산업자금 공급을 위해 대출, 어음할인, 외화차입 등의 업무 수행

※ 그 외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금융위원회 소관 정부소유 구조조정 기업은 총 14개사

-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거나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중 경영권 매각대상이 되는 우리금융, 서울보증, 하이닉스 등

<참고>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 * “공공기관”은 설립근거, 재정지원(출자·출연·보조), 권한·기능위탁 등의 여부에 따라 지정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 현재 정부관련 공공기관은 총 305개이며, 공공성 등 기관성격에 따라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3개 유형으로 분류

분류	지정요건	전체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	
공기업	자체수입 50% 이상 직원 50인 이상	24	0	-
준정부기관	자체수입 50% 미만 직원 50인 이상	77	6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	204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 (산은)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 (기은)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아이비케이시스템 ▪ (신보)한국기업데이터 ▪ (예보)정리금융공사 ▪ (자산공사)한국자산신탁 ▪ (기타)코스콤, 기보캐피탈
소계		305	19	
정부소유 구조조정기업	공적자금 투입기관, 산은 지분보유 기관	-	14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대우증권, 대우인터내셔널, 대우 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쌍용양회, 쌍용건설, 하이닉스, 한국항공 우주산업, 팬택, 팬택앤큐리텔

II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현황

◇ 공석 중이거나 사의를 표명한 금융위원회 산하 총 8개 금융 공공기관(금감원 제외) 기관장 중

- 예보, 자산공사, 기은 등 3개 기관장은 재신임,
- 나머지 5개 기관은 후임자 선임 추진
- 산은 등 3개 기관은 선임 완료, 2개 기관은 선임절차 진행중

① 선임 완료 : 3개 기관

기관명	직위	성명	임명일자	주요경력
산업은행	총재	민유성	'08.6.11	리먼브라더스 한국지점 대표 우리금융지주 부회장 모건스탠리 증권 서울사무소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안택수	'08.7.18	15, 16, 17대 국회의원 국회 재정위원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정이사
주택금융공사	사장	임주재	'08.7.18	금감원 부원장보 금감원 총무국장 금감원 신용감독국장

② 선임절차 진행중 : 2개 기관

기관명	직위	공모기간	서류심사	면접심사	비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1차 : '08.5.20~6.4	'08.6.9	'08.6.12	
		2차 : '08.7.1~7.15	'08.7.18	'08.7.23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08.5.29~6.11	'08.6.12	'08.6.18	'08.7.25 임명제청

Ⅲ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1 국제 금융시장 동향

◇ 국제금융시장은 실물경제 둔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신용 위험이 재부각 되었으나, 유가하락으로 다소 개선되는 모습

① 금융부실 확산에 따른 신용경색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면서 안전자산 선호, 레버리지 축소 등 시장 불안이 심화

- 신용위험 확대로 대출심사 요건 강화,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 위험 성향의 보수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
- 페니매·프레디맥 등 미 금융회사의 실적 악화로 신용위험이 재확산 되었지만, 유가 하락 등으로 시장 변동성 다소 완화

< 주요 국제금융시장 지표 추이 >

	'06말	'07말	'08.4월말	5월말	6월말	7.24	6월말대비
미국(다우)	12,463	13,265	12,820	12,638	11,350	11,349	△1
영국(FTSE100)	6,221	6,457	6,087	6,054	5,626	5,362	△264
유로/달러	1.3199	1.4580	1.5624	1.5554	1.5755	1.5677	△0.0078
WTI(달러/배럴)	61.05	95.98	113.46	127.35	140.00	125.49	△14.51

②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8월까지 美 어닝시즌 진행 ⇒ 증시 변동성 확대

* S&P500 업체들의 실적발표가 7월 349개(금융 75), 8월 128개(금융 10)가 예정되어 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

○ 미 주택경기 침체가 당분간 지속되고 모기지 관련 주요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 상존 ⇒ 글로벌 신용경색 재발 소지

< 美 금융시장 변동성 지수 동향(%) >

	'06말	'07말	'08.4월말	5월말	6월말	7.24	6월말대비
금융시장변동성 지수(VIX)	11.56	22.50	20.79	17.83	23.95	23.44	△0.51

2 국내 금융시장 동향

◇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경기둔화 국면 진입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폭이 확대

① [시중금리] 장기금리(국고채 3년)는 최근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면서 급등

- 4월중 연중 최저치(4.88%)를 기록한 이후 물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후 최근 상승세가 둔화

* 단기금리(CD 91일물)는 6월중에는 정책금리 동결기조 유지로 안정적이었으나, 7월 들어 장기금리 상승세와 연계되면서 급등세 지속

< 채권시장 동향(%) >

	'07말	'08.2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25	6월말대비
국고 3년	5.74	4.97	4.88	5.46	5.90	5.77	△0.13
국고 5년	5.78	5.08	4.96	5.54	5.98	5.83	△0.15
CD(91일)	5.82	5.18	5.36	5.36	5.37	5.63	+0.26

②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는 美 경기침체 가시화로 인한 글로벌 증시 조정과 유가 급등 등으로 큰 폭 하락

- 5.18일 연중 최고치(1,889p)를 기록한 이후 반락하여 1,500대선까지 조정을 받았으나,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재차 반등하면서 1,500대 후반까지 상승
- 외국인은 33영업일 연속 순매도(△9.0조원)를 기록하는 등 매도 추세 지속(외국인은 08년중 22.0조원, 월평균 3.14조원 매도)

< 주식시장 동향 >

	'07말	08.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25	6월말대비
코스피	1,897.13	1,703.99	1,825.47	1,852.02	1,674.92	1,597.93	△76.99

③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7.4일 1,050까지 상승 후 5일만에 1,000대 초반으로 급락 후 최근 1,000대 후반 유지(7.25일 1,009.2)

- 7.7일 이후 외환당국의 강력한 환율 안정의지 표명 및 매도 개입 등*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되는 모습

* 외환당국 시장안정화 조치(7.14) : 공기업 해외차입 허용, 외은지점 본점 차입금 이자의 손비인정 한도 확대(3→6배), 차액선물환(NDF) 매수 포지션 한도 폐지 등

- 7~8월 2분기 美 어닝 시즌 여파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환율 상승 압력이 잔존하지만,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상승에 제한 요인

< 외환시장 동향 >

	'07말	08.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25*	6월말대비
달러/원	936.10	990.40	1,002.60	1,030.10	1,046.00	1,009.2	△36.8
달러/엔	111.71	99.69	103.91	105.51	106.21	106.79	+0.58
엔/원	828.6	992.9	965.6	978.2	984.8	945.03	△39.77
달러/위안	7.30	7.01	7.00	6.94	6.85	6.8228	△0.0272

* 동경 15시 기준

④ [종합평가] 금융산업 건전성 및 금융시장 충격흡수능력 등을 감안 할 때 현 단계에서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다만, 고유가, 인플레이, 서브프라임 부실 확산 등으로 금융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

- 중기대출 · 가계대출 부실화 문제, 저축은행 PF 대출 등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대내외 여건 추가 악화에 대비한 금융회사 자체의 단계별 대응책 수립 유도

IV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1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기본방향

<공기업 선진화 기본원칙>

◆ 공공성, 경쟁성 등 공공기관 전반의 서비스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 선진화의 기본방향 수립

- ①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전환
- ② 기관별 특성을 고려, 투명하게 추진
- ③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
- ④ 사회적 비용 최소화, 고용승계, 인력조정 최소화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방향>

◆ 상기 원칙을 준수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정책금융 합리화, 공적자금관리기능 효율화 등 금융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추구

- ① 민간과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민영화 추진
- ② 시장안전판으로서의 순수 공적기능 또는 시장보완기능을 하는 기관의 경우 경영효율화 추진
- ③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는 기능조정, 업무가 유사·중복되는 경우는 통폐합 등 검토
- ④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 등 14개 기관은 단계적으로 지분매각
- ⑤ 금융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혁신을 유도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모멘텀 부여

2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가. 민영화 필요성

① 정책금융기능이 축소되고 민간 금융회사와의 시장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산은의 역할재정립은 불가피한 측면

- 정책금융을 저리의 정책성자금으로 엄격하게 평가할 경우 그 규모는 1.4조원, 총자금공급 대비 5.1% 수준 ('07년)

< 산은의 저리 정책자금 공급 현황 >

(억원)

	총공급	저리의 정책자금*			
		정책성자금	재정·기금	계	총공급 대비 비중
'06년	245,097	4,623	7,329	11,952	4.9%
'07년	272,260	8,045	5,712	13,757	5.1%

* 재정·기금 및 별도로 재원을 조성하여 특정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우대금리 자금

② 시장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확립과 산은의 조속한 민영화가 필요

- 현재 산은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소 영업분야에서 시장마찰 소지
- 특히, 회사채 인수·주선 업무*가 대표적

* 다만, 회사채 인수·주선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산은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음(영업이익 대비 비중 : '05년 9% → '07년 1%)

< 회사채* 주선 실적 >

(억원, %)

2005년		2006년		2007년	
금 액	점유율	금 액	점유율	금 액	점유율
85,960	22.3	32,300	9.8	28,810	8.2

* 일반채권 및 ABS

나. 추진방안

◇ 정부는 지난 6.2일,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 육성 발판 마련 및 새로운 시장친화적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위한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 방안」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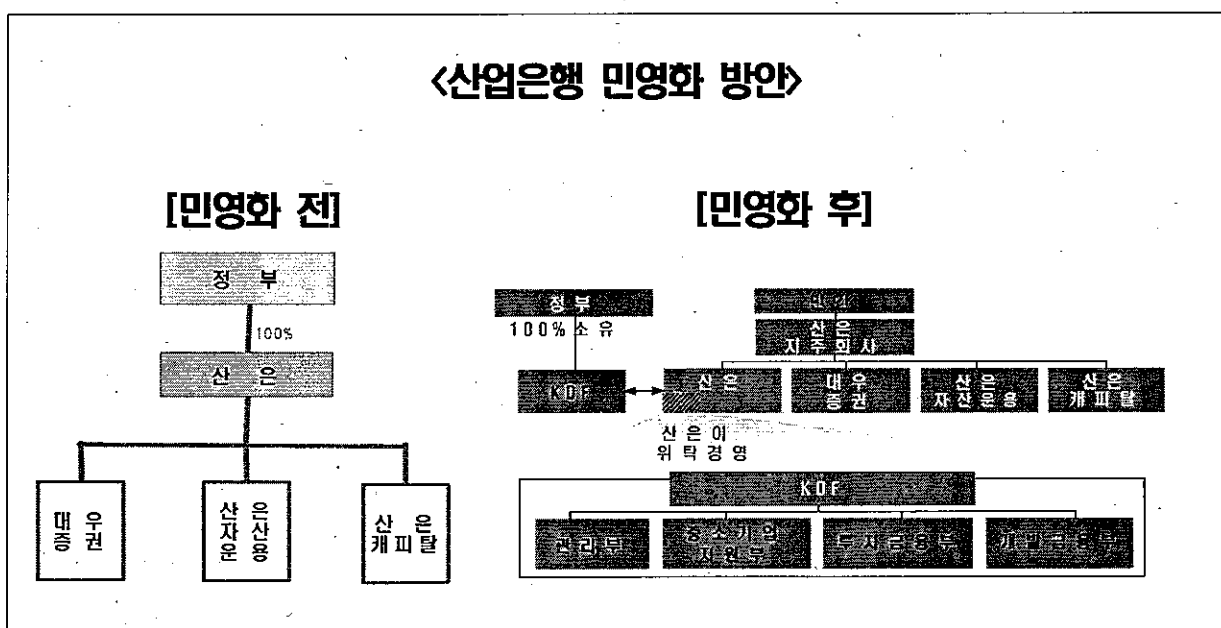
1 산은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 '08년 민영화의 준비단계로 산은을 기업 분할하여 산은 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를 설립

* KDF설립 직후 산은지주사 주식 49%를 KDF에 현물 출자

- '09년 산은지주 매각절차 및 KDF 중소기업 지원 착수
- 2010년까지 KDF에 출자된 정부 지분 49% 매각, 2012년까지 산은지주회사 지배지분 매각 추진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② 산은 민영화에 따른 대외채무 처리

- 기존 대외채무의 경우 해외투자자 채무 조기상환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정부보증 등 추진

* 손실금에 대한 정부의 보상조항(산은법 §44)은 정부의 지배주주 지위 유지기간 동안 존속

- 지배주주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외화조달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될 경우 제한적으로 정부보증채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 등 추진

* 기존채무의 차환 등 일정용도 및 한도내 발행허용(국회동의 요구)

③ 산은지주사의 투자은행화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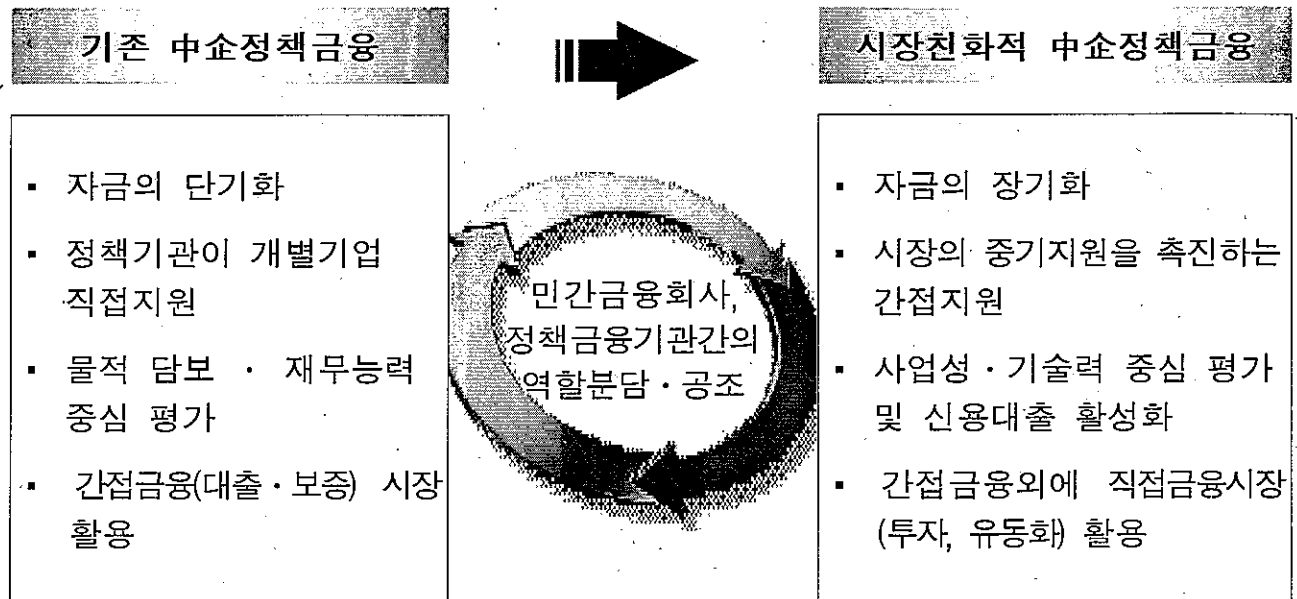
- 산은지주회사의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은행 체제로의 이행을 적극 지원
- 업무계획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요구불예금 수취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업무제한 완화 추진
- 성공적인 민영화에 연계된 인센티브 보상을 활용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정부는 정부자산 관리 차원에서 이사회에 참여하여 민영화 과정을 모니터링

④ 한국개발펀드(KDF) 운영 방안

- 설립 초기에는 산은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여 조직 규모를 최소한으로 운영

- 中企지원은 간접적인 On-lending 방식을 통해 민간금융 회사의 심사·집행·사후관리 기능을 활용

* 운영재원은 산은지주 지분(49%) 매각대금 및 기업분할시 취득한 구조조정기업 주식 매각자금 등을 활용



- 위기시 시장안정 기능, 외자조달 창구 역할 등 종래 산은이 담당하던 여타 정책금융기능 수행

다. 향후 계획

① 관련법 제·개정안 입법 추진

- 마련된 민영화 방안에 따라 산업은행법 개정안 및 한국개발펀드법 제정안을 마련,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 제출('08.9~10) 추진

② 법률안 국회 통과 후 산은을 인적분할하여 산은지주사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08년말~'09년초)

3 추가 검토가 필요한 기업

가. 기업은행

(1) 주요업무 추진실적

① 기업은행은 그간 시중은행과 달리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경기조정자 역할을 수행

○ 경기가 어려웠던 '04~'05년 기간 중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기여

- 기은의 중기대출 순증액(조원) : 4.4(04) → 6.6(05) → 10.2(06) → 9.0(07)
- 4대 시중은행 중기대출 순증액(조원) : 0.9(04) → 0.8(05) → 23.1(06) → 37.9(07)

② '08년에도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목표(24조원)를 차질없이 이행중

<총대출(자금종류별) 공급>

(억원, %)

구 분	2008년도		계획대비 달 성 률
	계 획	실적(6월말)	
- 금융자금	207,000	115,486	55.8
- 재정자금	22,000	12,218	55.5
- 차관외화	11,000	9,280	84.4
총대출	240,000	136,984	57.1

(2) 향후 추진계획

① 그간 추진해온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이행

- 특히 하반기에 제기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영세소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

* 그간 영세소기업에 2.3조원, 혁신형 중소기업에 0.5조원 지원

- 景氣 조정적 금융지원을 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향후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시 탄력적으로 자금공급을 확대
- 고유가 및 고환율 등 경제여건 악화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여신을 줄일 가능성에 대비

② 중소기업은행 민영화 계획

-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승계하여 중소기업 전문 금융회사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민영화 추진
- 다만, 산은 민영화계획 발표에 따라 KDF 설립 등 정책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은 민영화는 시점을 조절할 필요
- 지배지분 매각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KDF 등 정책금융체계의 안정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추진

③ 민영화에 대비한 기은의 경쟁력 제고

- IBK 투자증권('08.7 영업개시)의 조기 정착등 향후 민영화에 대비한 사업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① (목적·기능) 신보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신용보증, 신용보험, 경영지도 등 수행
- 기보는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기술보증, 기술평가, 경영 및 기술지도 등 수행
- ② (업무 현황) 신·기보의 총 보증공급 규모는 '07년 39.8조원이며, '08년 계획은 39조원 수준임
- 그동안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신·기보 통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신용보증잔액 추이(조원) >

	'01	'02	'03	'04	'05	'06	'07	'08(계획)
보증잔액	28.9	39.8	42.8	43.9	40.7	39.6	39.8	39.0
-신용보증기금	17.9	25.7	28.4	30.5	29.2	28.5	28.5	28.0
-기술신용보증기금	11.1	14.1	14.4	13.4	11.5	11.2	11.2	11.0

- ③ (향후 계획) 8월중 통합여부에 대한 공론화 과정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

< 주요 경과 >

일 시	주관부서	주요 대책 및 논의내용
'04.7	재경부	<p><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보증기관 전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 일반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범용 신용보증기관 ▪ 기보 : 기술기업 등 기술평가전문 신용보증기관 (기보 일반보증 지원 중단)
'05.4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기관 통합 여부는 '07년 기금존치평가 시점까지 유보
'05.6	재경부	<p><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기관별 기능 특화 및 연계운용 강화 ▪ 신·기보간 업무협약('0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 일반보증 전담 - 기보 : 벤처·이노비즈 기업 전담
'07.5	예산처	<p><기금존치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 존치 ▪ 기보 : 조건부 존치(이행조건 : 기금의 재정 안정화와 기술평가보증으로의 특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음)

다. 예금보험공사

- ① (목적·기능)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리스크 감시, 기금 관리,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수행

- ② (업무 현황) 통합예금보험기구로서 은행, 증권, 보험, 종금 및
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역 금융회사의 예금을 보호

('08.6월말 현재)

구 분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합 계
금융회사수(개)	56	53	22	21	2	108	262
부보예금(조원) ¹⁾	485.4	15.0	214.6	36.0	0.7	49.4	801.2
예금보험료율(%)	0.1	0.2	0.3	0.3	0.3	0.3	-
예금보험료(억원) ²⁾	5,027	256	3,654	801	22	1,306	11,066

주 : 1) '07년말 현재 잔액 기준 2) '07년도 연간실적

- '97년말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517개 부실금융기관에
총 110.7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40.8조원을 회수

(단위 : 조원, '08.6월말 현재)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등	합 계
지 원	50.8	18.6	30.3	11.0	110.7
회 수	16.3	3.1	14.5	6.9	40.8

- 예금보험 수입이 목표치에 이르면 금융회사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목표기금제의 차질없는 시행 추진

- ③ (향후 계획)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장을 정리할 계획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 ① (목적·기능)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 및 부실
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유재산 관리 등 정부위탁업무를 수행
- ② (업무 현황) IMF 위기 이후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부실채권
105.7조원을 38.6조원에 인수('97~'02)하여, '08.6월 현재 77.1조원을
정리하고 42.0조원을 회수(매입액 대비 3.4조원 초과 회수)

< 인수 및 정리 현황 > (단위 : 조원, '08.6월말)

인 수		정리 및 회수		보 유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회수액	채권액	매입액
105.7	38.6	77.1	42.0	28.6	7.7

- '06.6월말 기준 기금의 잉여금이 약 9조원(잠정)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재정)에 3조원을 배분하고,
금융기관에도 약 1조원을 배분할 계획

* '07.2월 재정에 3조원 기배분

- M&A 대상자산(대우인터내셔널, 쌍용건설 등) 등 기금 보유자산의
효율적 매각으로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노력
- Bad Bank 운영, 자체 채무조정 등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08.6월말까지 90.6만명의 신용회복 지원

- ③ (향후 계획) 자산관리공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장 정리 계획

4 14개 정부소유 구조조정 기업 매각

가. 대상기업

-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거나,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중 경영권 매각 대상이 되는 기업

지분보유정부기관	기업명
예금보험공사(2)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한국자산관리공사(3)	쌍용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한국산업은행(9)	대우증권*,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하이닉스, 현대중합상사, 쌍용양회, 팬택, 팬택앤큐리텔, 한국항공우주

* 대우증권은 산업은행과 함께 민영화

나. 매각원칙

- ① 산은 보유지분의 경우 KDF 출범 전까지 매각되지 않으면 KDF로 넘겨서 정부주관 하에 매각 추진

※ 산업은행이 보유중인 한전, 도로공사 등 공기업 주식은 KDF로 이관하되 매각않음

- ② 경영이 이미 정상화되고 잠재인수자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각대금 극대화 추진

- ③ 산업구조 발전, 국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각추진

※ 매각가치 추가상승이 예상되거나 실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여건을 보아가며 매각 추진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7.28(화) 14:30부터 보도 가능

• 금융산업의
선진화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작성부서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준비위원회			
책 임 자	우상현 과장(2156-9750)	담 당 자	김기한 서기관(2156-9751)	
배 포 일	2009. 7. 28(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6매

제목 : 한국산업은행 분할 방안 확정

1. 추진 경과

- ☐ 관계기관(금융위, 재정부, 지경부 등),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금융공사 설립준비위원회*는 4개월여에 걸친 검토 끝에 산업은행 분할방안을 확정

*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부칙 제4조에 의거, 공사의 설립 준비를 위한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설립

※ 개정 산은법(제50조)이 산업은행을 회사 분할하여 산은지주사 및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토록 규정

2. 분할 기본원칙

- ☐ 산은의 원활한 민영화 및 공사의 정책금융 업무 수행능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어진 재산을 합리적으로 안분하는 데 중점
- 우선, 분할 후에도 산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후 원활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재산을 분할
 - 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 지원(간접지원방식),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정책금융 수행이 가능하도록 재산을 이전

3. 분할 대상 자산(09.8월말 재무제표 추정)

- ☐ '09.8월말 현재 산은 재무상황*은 자산 172.1조원, 부채 155.0조원, 자본 17.1조원, BIS비율 13.1% 수준으로 추정

* 2차(3.16~4.30, 5.22~6.5)에 걸친 회계법인의 실사·검증을 거쳐 확정

- 자산은 대출채권 85.2조원, 유가증권 58.6조원 등 172.1조원 수준
- 부채는 신탁채 73.6조원 차입금 20.5조원 예수금 18.7조원 등 155.0조원 수준
- 자기자본은 자본금 9.6조원, 이익잉여금 6.7조원 등 17.1조원 수준

< 09.8월말 추정 대차대조표(단위: 억원) >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자산	현금 및 예치금	43,621	부채	예수부채	187,744
	유가증권	585,685		차입부채	1,112,595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851,816 (25,142)		기타부채	249,334
				총 계	1,549,673
	유형자산	6,592	자본	자본금	96,419
	기타자산	233,413		자본잉여금	444
	총 계	1,721,12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501
				이익잉여금	67,090
				총 계	171,454

4. 세부 분할 방안

가. 산은지주사 이전 자산

- ☐ 산은지주사는 현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회사* 주식, 현금성 자산(398억원)을 이전하여 설립(1.5조원 수준)

* 대우증권(39.1%, 9,734억원), 산은캐피탈(99.9%, 4,335억원), 산은자산운용사(64.3%, 416억원), 인프라자산운용사(90.1%, 117억원) 등

- ☐ 이전되는 자기자본 및 부채는 각각 1.15조원, 0.35조원 수준

나. 정책금융공사 이전 재산

□ 정책금융공사는 자산 28조원, 자기자본 3조원, 부채 25조원 수준으로 설립할 예정

○ 공기업 주식(약 15.1조원)은 설립 근거법상 정부 등으로의 소유 제한* 등을 감안하여 모두 공사로 이전(상세 별첨 1 참조)

* 한전, 도공, 수공 등은 정부 등이 전액 출자 또는 1/2이상 출자하도록 설립 근거법상 제한 규정 존재

○ 구조조정기업 주식 중 현대건설, 하이닉스, SK네트웍스, 한국항공우주, 대우인터내셔널 주식은 공사로 이전

○ 그밖에 은행자본확충펀드 투입 자산, 현금성 자산 3.0조원, 산은전산센터 건물(현 산은캐피탈 건물) 등도 공사로 이전

○ 부채(2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금채는 '10년 이후 도래 일반 원화산금채 중 액면가 500억원 이상인 산금채를 대상으로 각 연도별 상환비율 만큼 안분하여 이전

□ 또한, 정책금융공사가 안정적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정책금융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 산은이 산은지주사로 편입된 이후 산은지주사 주식을 100% 정책금융공사에 출자기로 함

다. 분할 후 산업은행

□ 공사와 산은지주사가 분할되고 나면, 산은은 자산 142.6조원, 자기자본 129조원, 부채 129.7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대우조선해양, 현대중합상사, 쌍용양회, 팬택 등 구조조정기업 주식과 벤처기업 주식*, 대출채권 등은 산은이 계속 보유

* 벤처기업 주식(686개사, 5,825억원)은 기업규모가 작은 반면 기업수가 많아 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부 산은에 남김

5. 향후 계획

□ '09.10월까지 산은의 분할과정을 거쳐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사를 설립하고, 주식교환을 통해 산은을 산은지주사 자회사로 편입

□ 분할 이후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는 재무구조개선 약정기업 등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필요시 긴밀히 협조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별첨1 >

산은 보유 공기업 주식 현황

(단위 : 억원)

기업명	소관부처	지분율	취득가	장부가
한국전력공사	지식경제부	29.95%	44,914	87,350
한국도로공사	국토해양부	9.28%	19,301	19,302
대한주택공사	국토해양부	10.42%	13,006	13,006
한국토지공사	국토해양부	26.66%	11,619	11,913
한국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9.54%	9,749	9,763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3.88%	2,000	2,000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10.61%	700	1,462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43.58%	355	1,825
한국감정원	국토해양부	30.60%	7	117
한국광물자원공사	지식경제부	0.51%	27	32
서울신문사	-	0.02%	0.2	0.3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9.30%	4,000	4,054
보통주		2.02%	731	807
우선주		47.89%	3,269	3,247
합 계			105,678.2	150,824.3

< 별첨2 >

주요 구조조정기업 주식 분할(안)


(‘08.12월 말 기준)

구 분		종목명	장부가액 (억원)	지분율 (%)
공사 이관	상장	하이닉스반도체	1,998	6.2
		대우인터내셔널	1,033	5.3
		SK네트웍스	1,588	8.2
		현대건설	6,316	11.2
	비상장	한국항공우주	1,419	30.1
소 계			12,354	-
산은 보유*	상장	대우조선해양	6,684	31.3
		대우건설	116	0.4
		쌍용양회공업	701	14.9
		STX 팬오션	3,466	15.5
		KP케미칼	154	4.6
		현대종합상사	892	22.5
	비상장	대우일렉트로닉스	1	2.3
		팬택	61	16.8
		팬택엔큐리텔	41	16.1
소 계			12,116	-

* 그밖에 동해펄프, 일림나노텍, 서진캠, 하이디스테크날로지, 코리아피티지, 에스티앤아이, 연이정보통신 등 주식은 산은이 계속 보유

13-1. 7.30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보고자료

- ☐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대통령 주재 회의로 보고 및 논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임
 - 다만, 일부 자료의 경우 보도 자료 형식으로 외부에 발표하고 있음
- ☐ 요청하신 7.30일자 비상경제대책회의 금융위 보고 자료는 별첨과 같이 보도 자료로 배포되었음

 금융위원회	<h1>보도자료</h1>		
	2009. 7. 30.(목) 10:00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 / 금융위·금감원 기업재무개선지원단 /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		
책 임 자	최준우 과장(2156-9770) 남병호 과장(3145-8270) 김영대 국장(3145-8020) 신응호 국장(3145-8370) 김진수 실장(3145-8410)	담 당 자	남동우 사무관(2156-9772) 송현도 사무관(3145-8262) 최성일 팀 장(3145-8060) 류찬우 팀 장(3145-8413) 홍 길 팀 장(3145-8400)
배 포 일	2009. 7. 30.(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 공보실(3145-5788~1) 총14매

제목 :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

- ☐ 그 동안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 추진, 금융회사 자본확충과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제도정비 등 선제적 대응에 주력해 왔음
- ☐ 최근 우리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므로,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권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해 나갈 필요
- ☐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하에
 - 7.30(목)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논의·확정하였음

※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동 보도자료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별첨 :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별첨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

2009. 7. 30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 < 목 차 > —

I. 추진배경	1
II.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2
1. 추진실적	2
2. 평 가	4
3. 향후계획	6
III. 금융회사 부실채권 현황 및 정리계획	7
1. 부실채권 현황	7
2.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	9

I. 추진배경

□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도 큰 어려움에 직면

- 특히, 건설 등 일부업종의 부실 심화와 신용경색에 따른 기업의 연쇄도산 우려 등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대

□ 이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 추진, 금융회사 자본확충과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제도정비 등 선제적 대응에 주력

- 건설·해운 등 부실우려가 제기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대기업그룹·개별 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별 구조조정도 순차적으로 진행
- 채권금융회사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정부는 금융당국 중심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극 독려
- 이와 함께, 은행자본확충펀드,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 등 위기극복을 위한 여러 선제적인 제도적 장치도 마련

□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이 비교적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금융권 부실채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리계획 수립이 가능

□ 특히, 최근 우리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므로,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권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해 나갈 필요

Ⅱ.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1. 추진실적

가. 업종별 구조조정

- 시장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77개 건설·조선(1차 1월, 2차 3월) 및 해운(1차 4월, 2차 6월)업체를 대상으로 채권은행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46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우선 선정

* 건설(평가대상 162개 → 구조조정대상 29개), 조선(24 → 7), 해운(91 → 10)

- 대부분 업체는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등 구조조정을 정상 추진중, 일부는 워크아웃 졸업 등 경영정상화 조기 완료

* 워크아웃 졸업 5, 워크아웃 진행중 18, 기업회생절차 진행 등 23

나.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 구조조정

*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1%이상인 대기업그룹

- 대기업그룹이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지난해 하반기이후 자금사정 등에 대한 밀착 점검 지속

-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시장평판 악화 및 유동성 우려 업체에 대해 자구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 45개 주채무계열에 대해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9개 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09.6.1)

- 이를 바탕으로 계열사 정리 등 자산매각, 자본확충 등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자구계획을 적극 추진중

다. 개별 대기업(여신 500억원이상) 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개별 대기업에 대해서도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실시
 - 평가대상 433개 업체중 33개(C등급 22, D등급 11) 업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09.6.10)
-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 협의 및 외부전문기관 실사 등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 추진중

라. 중소기업(여신 500억원미만) 구조조정

-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하고 리스크관리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할 예정
 - 여신규모 등을 감안하여 11월말까지 3차에 걸쳐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 1차 평가 완료 : 7.15일, 여신 50억원이상 외감법인 대상

- 861개 1차 평가대상 업체중 113개 업체(C등급 77, D등급 36)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워크아웃 추진 등 구조조정에 착수

*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 은행에 대한 여신 집중도가 높아 대부분 채권은행 공동관리 보다는 단독관리 방식으로 추진

2. 평 가

- 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 정상화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

- 리만브라더스 파산('08.9월) 등으로 자금경색이 심화된 이후 부실업종으로 인식된 건설업종은 채권발행이 거의 불가능했었으나
- 1차(1.20)·2차(3.27) 구조조정으로 '옥석가리기'가 이루어지고 경기회복에 힘입어 비우량 업체를 포함한 건설사 채권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

	건수	BBB+ 이하	금액(조원)
1차 구조조정 이전 ('08.10~'09.1.19)	3	-	0.4
1차~2차 구조조정 ('09.1.20~3.26)	17	1	1.6
2차 구조조정 이후 ('09.3.27~6월말)	22	6	2.0

- 다만, 일부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 구조조정 여건이 외환위기 당시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 외환위기 당시는 다수의 기업과 금융회사가 이미 부실화되었거나 부실이 심화되어 사후적으로 일시에 대규모 구조조정

- 현재는 부실이 현재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적·예방적 차원에서 구조조정 추진

- 기업의 재무상황 및 금융회사 건전성 등이 외환위기시에 비해 양호하여 위기대응 능력이 강화

* 기업부채비율(%) : (97)424.6 (08)130.6 /은행 BIS비율(%) : (97)7.04 (08)12.31

- 또한, 현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 채권단이 주도하는 상시적 구조조정이 진행

〈참고〉 외환위기 시와 현재의 기업구조조정 상황 비교

	외환위기('97년말)	현재('08년말)																
거시 경제 주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외 여건이 매우 불안한 상황 에서 고금리 등 긴축정책 실시 <table><tr><td>주가(KOSPI)</td><td>금리(CD, 회사채)</td></tr><tr><td>376.31</td><td>25.0%, 29.0%</td></tr><tr><td>환율(\$)</td><td>외환보유액</td></tr><tr><td>1,415.2</td><td>204.1억달러</td></tr></table>	주가(KOSPI)	금리(CD, 회사채)	376.31	25.0%, 29.0%	환율(\$)	외환보유액	1,415.2	204.1억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격 흡수능력이 제고되었으며 저금리 등 확장정책 시행 <table><tr><td>주가(KOSPI)</td><td>금리(CD, 회사채)</td></tr><tr><td>1,124.47</td><td>3.9%, 7.7%</td></tr><tr><td>환율(\$)</td><td>외환보유액</td></tr><tr><td>1,257.5</td><td>2,012.2억달러</td></tr></table>	주가(KOSPI)	금리(CD, 회사채)	1,124.47	3.9%, 7.7%	환율(\$)	외환보유액	1,257.5	2,012.2억달러
주가(KOSPI)	금리(CD, 회사채)																	
376.31	25.0%, 29.0%																	
환율(\$)	외환보유액																	
1,415.2	204.1억달러																	
주가(KOSPI)	금리(CD, 회사채)																	
1,124.47	3.9%, 7.7%																	
환율(\$)	외환보유액																	
1,257.5	2,012.2억달러																	
은행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 건전성 매우 취약 <table><tr><td>BIS비율</td><td>무수익여신비율</td></tr><tr><td>7.04%</td><td>6.0%</td></tr></table>	BIS비율	무수익여신비율	7.04%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외 충격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양호 <table><tr><td>BIS비율</td><td>무수익여신비율</td></tr><tr><td>12.31%</td><td>0.86%</td></tr></table>	BIS비율	무수익여신비율	12.31%	0.86%								
BIS비율	무수익여신비율																	
7.04%	6.0%																	
BIS비율	무수익여신비율																	
12.31%	0.86%																	
기업 재무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라 기업 재무상황 크게 취약 <table><tr><td>부채비율</td><td>이자보상배율</td></tr><tr><td>424.6%</td><td>1.2배</td></tr></table>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424.6%	1.2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환위기 시에 비해 기업재무 상황이 크게 호전 <table><tr><td>부채비율</td><td>이자보상배율</td></tr><tr><td>130.6%</td><td>3.2배</td></tr></table>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130.6%	3.2배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424.6%	1.2배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130.6%	3.2배																	
기업 부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그룹 연쇄부도 발생(한보, 삼미, 진로, 기아, 해태, 뉴코아 등) 등 많은 기업이 부실화· 어음부도율(97.12) : 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대기업그룹 유동성 우려 제기· 건설 등 일부 업종 부실화· 어음부도율(08.12) : 0.04%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확한 법적·제도적 근거 미비· '98.6월들어 기업구조조정협약 (금융권 자율협약)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구조조정촉진법(대기업) 및 채권은행협약(중소기업) 등 법적· 제도적 근거 기 마련·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경험 축적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부실화된 다수 기업을 사후적 으로 대규모로 정리· 구조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일부 비판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이 현재화되지 않은 기업을 선제적·예방적 차원에서 구조조정· 사전에 마련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																

3. 향후계획

① 진행중인 구조조정 절차 마무리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일정*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 2차 평가 : 9월말, 여신 30~50억원 외감법인, 3차 평가 : 11월말, 여신 10억원 이상 외감법인 등

-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MOU 체결 등 워크아웃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② 자구계획 이행상황 등에 대한 상시점검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주채무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등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 약정을 체결한 9개 계열외 2개 계열은 상반기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하반기중 약정을 체결할 예정

- MOU 체결이후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신속한 자구계획 이행 등 구조조정 추진을 독려

③ 현장점검 실시

- 하반기 중 채권은행별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책임감 있게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

④ 민간·시장 주도의 상시구조조정 지속 추진

- 앞으로도 채권금융회사를 통한 상시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자본시장도 적극 활용할 예정

Ⅲ. 금융회사 부실채권 현황 및 정리계획

1. 부실채권 현황

은행권

□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은 '08년 2/4분기 이후 계속 증가하여 '09.6월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1.5%(19.6조원) 수준

- 다만, 최근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 (1/4분기:1.47% → 2/4분기:1.50%)

은행 부실채권 현황(잔액)

(연말, 조원, %)

구분	'00	'03	'05	'06	'07	'08	'09.3	'09.6
규모	42.1	18.7	9.7	7.8	7.7	14.7	19.3	19.6
비율*	8.0	2.63	1.22	0.84	0.72	1.14	1.47	1.50

* 고정이하 여신 ÷ 총여신

□ 부실채권 증가세 둔화는 주로 은행 자체의 적극적인 부실채권정리 노력과 경기침체 속도 둔화 등에 따라 추가 부실채권발생이 주춤(1/4분기:9.3조원→2/4분기:7.6조원)해 진데 기인

- 특히, 은행은 '09년 2/4분기 중 최근 2년간 분기 평균 (1.3조원)의 2.5배 수준인 3.4조원의 부실채권을 상각·매각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실적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4	2/4	3/4	4/4	계	1/4	2/4
신규발생액	12.0	3.5	3.4	4.5	9.5	20.9	9.3	7.6
처리현황	12.2	2.3	4.0	2.5	5.2	14.0	4.7	7.3
상각·매각	3.9	0.9	1.3	1.0	2.8	6.0	1.9	3.4
담보처분	3.8	0.8	1.1	0.7	1.2	3.8	1.1	1.4
기타*	4.5	0.6	1.6	0.7	1.3	4.2	1.7	2.5
잔액	7.7	8.9	8.3	10.3	14.7	14.7	19.3	19.6

* ABS 발행, 여신정상화 등

- 또한 최근 경기상황이 다소 개선되면서 연체율이 하락하는 등 신규 부실채권 발생압력도 일부 완화

* '09.6월말 연체율은 기업과 가계 부문 모두 큰 폭 하락하였으며, 반기결산에 따른 부실채권 상각 처리 등을 고려하더라도 연체율 발생상황은 다소 개선되는 모습

국내은행 연체율 추이

(단위 : %)

구 분	'08년			'09년			
	5월말	6월말	1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원 화 대 출	1.04	0.78	1.08	1.45	1.58	1.60	1.19
기 업 대 출	1.33	1.01	1.47	2.05	2.26	2.28	1.69
(중소기업)	1.51	1.14	1.72	2.33	2.59	2.57	1.86
가 계 대 출	0.70	0.52	0.60	0.73	0.75	0.78	0.59

제2금융권

- 제2금융권은 은행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부실채권 비율은 다소 증가하는 모습

제2금융권 부실채권 규모

(단위 : 조원, %)

	'07말	'08말	'09.3말
저축은행	4.1 (8.77%)	5.0 (9.08%)	5.4 (10.01%)
여신전문금융회사	1.8 (2.55%)	2.1 (2.81%)	2.4 (3.19%)
보험회사	1.5 (2.07%)	1.5 (1.85%)	1.5 (1.86%)
증권회사	0.9 (4.98%)	1.3 (9.10%)	1.7 (11.35%)
기타*	0.7 (3.60%)	0.7 (3.46%)	0.9 (4.02%)
합 계	9.0 (3.98%)	10.7 (4.33%)	11.9 (4.84%)

* 신탁, 종금사

- ◇ 최근 부실채권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하반기 중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과 경기회복 속도, 세계 주요국 금융상황 등에 따라 잠재 부실 증가 가능성 상존
- ◇ 따라서 금년 5월에 설치된 구조조정기금 등을 활용하여 금융회사들이 부실채권 정리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함으로써 선제적인 자산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

2.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

- ◇ 구조조정기금과 자본시장 등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처리를 적극 추진
- ◇ 금융회사에 대해 부실채권 감축 목표비율 제시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적극 정리하도록 지도
 - 금융회사들이 회계처리시 잠재부실을 적극 인식토록 건전성 분류 관련 지도도 강화

가. 부실채권 매입확대 추진

① 구조조정기금 등을 활용한 부실채권의 적극적인 매입 추진

- 정부는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산관리 공사법을 개정하여 구조조정기금 설치(5.13일 시행)

*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채권 원리금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국회 통과

- 20조원 규모의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안을 5.22일 국회에 제출한 후 동 기금을 본격적으로 집행 중

- 은행권을 대상으로 PF 부실채권 8,164억원(인수대금 4,622억원)을 매입

- 해운업 구조조정 목적의 선박인수를 위해 해운사와 매입 협상중이며, 7.22일부터 선박 일부*를 인수

* 매입대상선박 62척 중 17척을 우선 인수(기금에서 1,915억원 투자)

- 8월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부실자산 인수 기준 등을 마련한 후 부실채권 정리를 적극 추진

② 민간 자본시장을 활용한 부실채권 정리도 적극 추진

- 기업구조조정 및 부실채권 처리 등에 민간자본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PEF*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중('09.4.7일 국회 상정)

* 법상 주된 투자목적이 경영권 참여로 제한되어 있어, 기업재무안정 지원에 필요한 부실자산(금융회사 부실채권, 미분양 아파트 등)에 대한 투자에 제약

③ 민간 배드뱅크 등 금융회사의 자체 정리 노력 확대

- 금융회사들은 부실자산을 상각하거나 시장매각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리 중

* 매분기 평균 약 3.7조원('08~'09.1/4분기 중 분기평균) 정도의 부실자산을 상각·매각 등을 통해 자체 정리

- 최근 자체 부실채권 처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이 공동으로 총 1.5조원을 투자하여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9월 설립 목표)

④ 금융회사 등이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할 경우 금융회사 BIS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 필요시 기 조성된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원)를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자본확충을 지원

나.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감축 유도

① 은행권에 대해 부실채권 감축 목표비율을 설정·운용

-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년말까지 은행의 부실채권 감축 목표비율을 1%로 부여하여 지도
- 금감원은 은행별 부실채권 감축 목표계획을 협의·확정한 후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관리

② 제2금융권의 경우 PF 부실채권은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여 신속히 정리하고, 기타 부실채권의 경우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자체 처리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

- 다만, 부실채권 처리로 인한 건전성 악화는 대주주 책임하에 자본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유도

③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잠재부실 인식을 유도

-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큰 여신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엄격한 건전성분류를 실시토록 지도
- 금융감독원이 매분기 건전성분류 조정내역을 점검함으로써 잠재 부실여신을 적극 인식토록 하여 자산건전화를 유도

④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부실채권 매입시 새로 도입될 국제 회계기준(IFRS, 2011년)에도 부합하는 사후정산 방식 등으로 추진

- 금융회사의 혈값 매각 우려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속한 부실자산 정리를 유도

* '09.6월 사후정산방식을 활용하여 은행권 PF 부실채권 8,164억원 정리

13-2. 7.13일 금융위원장 및 은행장 간담회 자료

- 7.13일 개최된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6월말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창립총회 결과를 보고하고 주요 국제기준 개편 논의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능동적 대응을 당부하였음

※ 별첨자료 <FSB 창립총회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참고

금융안정위원회(FSB) 창립총회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1. FSB 운영위 진출의 의의
2.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
 - 가. FSB 개요 및 논의체계
 - 나. FSB 총회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
3. 향후 대응방향 및 시사점

금 융 위 원 회

1. FSB 운영위 진출의 의의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자간 협력기구인 G-20, FSB 등에서 기존 국제금융질서의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

- 금년 4월초 G-20 정상회의 결과, 금융안정포럼(FSF)이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 개편* 되어 향후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 및 금융규제 체계 개편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대표기관으로 참여

□ 지난 6.26~6.27일 스위스 바젤에서 FSB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 대표로 금융위원장이 참석

- 동 창립총회에서는 향후 FSB의 운영방향 등을 결정하는 핵심조직으로 「FSB 운영위원회」를 설치
- 우리나라는 BRICs, 멕시코와 함께 동 운영위원회에 멤버로 참여하게 되어 향후 금융규제개혁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됨

□ FSB 운영위에 한국 금융위원회가 진출하게 된 의미는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제도가 국제금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금융당국의 능력을 FSB 회원들이 인정한 것으로,

- 한국 금융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 IMF 이사회에 참여하는 정도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

<운영위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인 금융외교 노력>

- ◇ 총리·금융위원장 명의의 FSB Draghi 의장앞 서한 발송, G-20 기획조정위원장과 Draghi 의장간 전화통화로 운영위 참여 지원 요청
- ◇ Draghi 의장, Turner 영국 금융감독청장, Yam 홍콩통화관리청장 및 류민캉 중국 은감위 주석과 금융위원장간의 면담시 지원 요청
- ◇ 美 L.Summers 의장, O.Blanchard IMF 자문관앞 서한발송을 통한 지원요청 및 FSB 사무국 관계자 면담시 운영위 진출의사 전달 등

2.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

가 FSB 개요 및 논의체계

□ FSB는 6.26-27일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정식 출범

- FSB 조직은 총회, 운영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와 국경간 위기관리 작업반 등으로 구성(붙임 참조)되며, 현재 정관 마련중

- ▷ 운영위원회 구성 : 16개국, 10개 국제기구
- 16개국 : G7, 네델란드, 호주, 스위스, 한국 (금융위), BRICs, 멕시코
 - 10개 국제기구 : IMF, BIS, BCBS, IAIS, IOSCO, IASB, CGFS, CPSS, ECB, EC
- ▷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감독·규제협력 위원회 : FSA J.A. Turner 의장
 - 취약성평가 위원회 : BIS Jaime Caruana 총재
 - 국제기준이행 위원회 : 캐나다 재무부 Tiff Macklem 차관

* G20 국가중 신규회원은 우리나라와 BRICs 및 멕시코임

* 금융위는 감독·규제협력 위원회, 한은은 취약성평가 위원회에 참여 예정

□ FSB는 국제기구의 작업을 총괄하면서 런던 정상회의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츠버그 정상회의(9.24~25)에 보고 예정

- FSB는 금융규제개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접근



나 FSB 총회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

◇ FSB 총회에서는 향후 국제금융질서의 틀을 만들어 갈 중요한 사항들을 의제로 다룸

- 전체적으로 종전의 금융혁신 및 규제완화 기조에서 금융 감독·규제를 상당수준 강화하는 기조로 전환될 전망

□ (거시건전성 규제) 기존의 미시건전성 위주 규제가 기관간 상호작용 및 군집행동(herd·behavior)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관리에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거시건전성 규제의 필요성 대두

- 금융시스템상의 거시건전성 위험을 식별하고 시스템리스크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 개선 논의
- 현재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자기자본규제, 충당금제도, 시가평가제도 등의 개편을 논의중

□ (건전성 규제 개선) 현행 자기자본 규제체계의 경기순응성 문제를 해결하고, 은행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 탄력적인 최저자본수준 운영 등을 통해 호황기에 완충자본을 적립하고 불황기에는 이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
-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위해 보통주 중심으로 자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충당금적립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

□ (헤지펀드 등에 대한 감독 강화) 규제사각지대에서 시스템리스크를 확대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헤지펀드 등 shadow banking 및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규제방안 강구

□ (신용평가사 규제 강화) 신용평가사들의 부적절한 위험 평가와 구조화 상품의 부실위험을 사전에 경고하지 못한 국제신용평가사의 책임론 부각

- 금융당국은 이해상충 문제 관리 및 신용평가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신용평가사의 변화를 요구
- 구조화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상품과 신용등급을 차별화하고 신용평가 관련 과거자료 및 기초정보 등을 공개하는 방안 강구

□ (국제회계기준 개정) FSB 등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금융위기 대응 관련 회계기준 개정을 요구

- 유통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은 공정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정된 가격을 사용토록 허용

□ (긴급현안 논의) 출구전략(Exit Strategy) 관련

- Drahgi 의장의 제의에 따라 당초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출구 전략에 대해 각국 대표들이 개시 시점, 효과 등에 대해 논의
- 한국대표(금융위)는 동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글로벌 금융 시장과 경기의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융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고
- 한국의 경우 금융·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금융·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

□ (한국 정책사례 소개) 한국대표는 LTV·DTI* 및 예금보험 제도** 관련한 우리 금융정책 및 감독경험을 설명

* LTV·DTI 규제는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시 한국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감소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

** 외환위기 이전부터 예금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위기극복시 중요한 역할 수행

3. 향후 대응방향 및 시사점

① 향후 금융당국의 대응방향

- FSB총회,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규범 설정자(rule sette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 [향후 일정] FSB 총회 ; 09.9.21 ~ 22(잠정), 총회 이전에 각 상임위원회의
개최 예정

- 신흥국 관점 이슈제기의 차원을 넘어 선진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제 발굴 및 대안 제시 추진
- 국제 논의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의
입장을 마련하고 국제 논의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

* 금년 하반기 중 연구기관 용역 등을 통해 국제기준 제·개정이 국내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예정

- 합동 T/F를 구성(7월 중순)하여,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분석 및
대안개발 등을 통하여 금융규제개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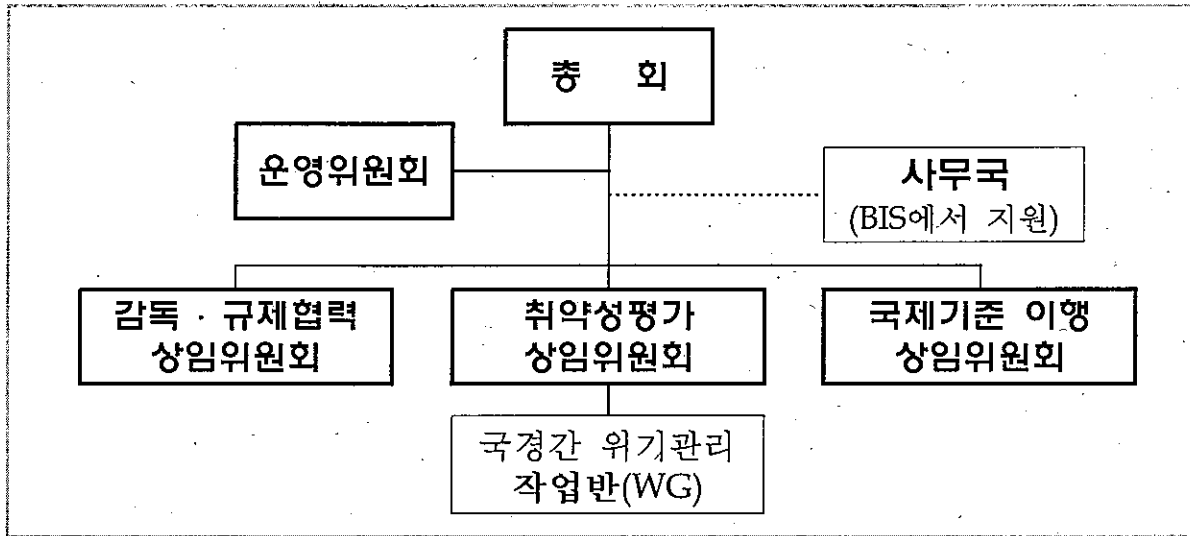
* 금융위·금감원·한은·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회계기준원 등 금융관련 연구원과 외부 전문가 참여

② 국내 금융산업에의 시사점

- FSB 논의를 통해 확정되는 국제기준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부담 발생
- 동시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융회사들간의 새로운 경쟁의
준거틀이 마련되는 것으로 우리 금융산업에 도전이자 기회

⇒ 국제기준과 관련 FSB 논의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대응 필요

붙임 : FSB 조직 체계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 FSB 의장 · (구성) 16개국 및 10개 국제기구가 참여 · (회의) 연 4-6회 개최(필요시 수시개최 가능) · (역할) FSB 운영방향 설정(총회운영 보좌)
-------	---

상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 FSB의장 추천으로 선출 · (구성) 상임위 의장이 20-25명 수준에서 지역별·기관별 안분
-------	---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연 3회 개최(필요시 수시개최 가능) · (역할) 규제당국의 조정과제 공론화 및 정책개발, 공동 감시단의 설립과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제시, 시스템 차원의 추세와 취약성 분석, Best Practice 조사 * 금융회사의 국제적 차원의 위기관리(cross border crisis management)에 대한 연계유지 및 조언
취약성평가 상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연 4회 개최(필요시 수시개최 가능) · (역할)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을 FSB에 보고 * IMF와의 협업중인 조기경보체계(EWE)의 기초자료로 이용
국제기준이행 상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연 3회 개최(필요시 수시개최 가능) · (역할) 회원국 관할의 거시건전성 규제·감독기준 수립에 대한 상호평가 실시, 전체 평가자료를 만들고 총회승인 후 공표 * 국가별 뿐 아니라 주제별 평가도 병행

14. 저축은행 양극화 심화 대책, 구조개선적립금 조성현황 및 구조조정 계획 및 진행상황

① 저축은행 양극화 심화 대책

- 외환위기 이후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해 다양하면서도 상반된 기대가 상존
-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감독으로는 모든 저축은행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건전성을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어 차별화된 감독이 필요하여 대출한도 차등화 등에 일부 적용하고 있음

② 구조개선적립금 조성현황

- 저축은행업계는 정부의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노력에 부응하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개선적립금을 중앙회에 조성하기로 결정(2년간 1,000억원 수준)

* 지준예탁금(2.5조원) 운용수익중 2.5%는 저축은행에 이자로 지급하고 그 잔액을 적립

- 정부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동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특법 개정 완료('09.4.29)

* 적립금에 대한 저축은행의 법인세를 5년간 이연 허용

-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총회를 개최('09.8.20)하여 834억원의 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하였고,

- 내년 총회에서 적립금 규모를 최소 1,000억원으로 확대하여

부실(우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 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임

③ 구조조정 계획 및 진행상황

- 정부는 저축은행의 특성(소규모, 대주주존재 등)과 부실원인(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을 감안하여 정부주도의 구조조정 보다는 부실예방 및 자율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

* 저축은행의 총자산(63.6조원)은 금융권 총자산(2,678조원)의 2.4%

-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 유지·확대를 위해 부실원인별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① 영업기반 확대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② 개별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및 PF대출 부실화 등 자산 건전성 악화에 선제적 대응

③ 제도개선을 통해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를 예방

- 한편,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절감과 시장 충격방지를 위해 M&A 등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되,

- 자율 구조조정이 어려울 경우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계획임

- 이러한 계획에 따라 '08년 3개 저축은행을 계약이전하고 4개 저축은행이 업계 자율적 M&A를 통해 구조조정 되었으며,

- '09년 중에도 1개 저축은행을 계약이전하고 2개 저축은행이 M&A를 추진 중에 있음

15. 보험개발원이 개최한 자동차 보험 할증기준 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료 및 자동차 보험할증 기준 개선에 관한 금융당국의 입장?

- '89년 시행 이후 20년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알고 있음

* 89년부터 08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2.3배 상승

- 다만, 미할증기준 금액의 적정여부는 소비자물가보다는 자동차보험과 직접관련이 있는 차량대당 보험료 또는 사고건당 손해액을 기준으로 비교·판단함이 타당
- 참고로 '89년 이후 차량대당 보험료는 24%, 사고건당 손해액은 43%상승

<참고> 물가 수준과 자동차 보험료 등

구분	CPI	89년대비	대당보험 (천원)	89년대비	차량대당 건당손해액(천원)	89년대비
'89년	47.6	1.00	523	1.00	634	1.00
'08년	109.7	2.30	650	1.24	909	1.43

- 50만원인 현행 미할증 금액을 단순 상향조정할 경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감안, 단순상향조정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음

<별첨> 공청회 관련 자료



보험개발원

보도자료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최고의
보험서비스
전문기관

작성부서	자동차보험본부 상품팀	작성 자	정태윤 팀장(02-368-3277)
배 포 일	2009년 7월 15일(총·1 배)	홍보담당	이재원 책임(02-368-4132)

제목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주제 : 자동차보험 물적사고 할증기준 개선방안

보험개발원(원장 정채웅)은 오는 7월 20일(월)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물적사고 할증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다음과 같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 현재 자동차보험 사고발생시 물적사고(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손해가 50만원이하의 경우는 0.5점 사고로 규정하고 보험료 할인도 할증도 하지 않지만, 50만원초과 1건 또는 0.5점 사고 2건은 1점사고로 할증.

- 다 음 -

- ☐ 일 시: 2009년 7월 20일(월) 오후 2시~ 5시
- ☐ 장 소: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실(2층)
- ☐ 발표자: 성주호 교수(경희대)
- ☐ 주 제: 자동차보험 물적사고 할증기준 개선방안
- ☐ 사회자: 김성태 교수(연세대)
- ☐ 토론자: 류근옥 교수(서울산업대), 신종원 부장(YMCA),
이득로 상무(손보협회), 장영채 센터장(도로교통공단),
정규재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허 역 사무처장(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 참석대상: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 임직원, 감독당국 관계자,
보험 및 금융학계 교수, 소비자단체, 언론계,
교통 및 자동차 관련 전문가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di.or.kr>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물적사고 할증기준 개선

□ 일 시 : 2009년 7월 20일 (월) 14:00 ~ 17:00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

주 관 : 보 험 개 발 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 일 시 : 2009. 7. 20 (월) 14:00 ~ 17:00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

□ 주 관 : 보 험 개 발 원

□ 축 사 : 최 경 환 의원 (한나라당)

□ 사 회 : 김 성 태 교수 (연세대)

□ 주제발표 : 성 주 호 교수 (경희대)

□ 토 론 자 (가나다 순)

류근옥 교수 (서울산업대)

신종원 부장 (YMCA)

이득로 상무 (손해보험협회)

장영채 센터장 (도로교통공단)

정규재 논설위원 (한국경제신문)

허 역 사무처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진행일정

14:00 ~ 14:10 개회인사 및 축사

14:10 ~ 14:50 주제발표

14:50 ~ 15:00 휴 식

15:00 ~ 16:40 토 론

16:40 ~ 17:00 질의응답

17:00 폐 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물적사고 할증기준 개선

2009. 7. 20

성 주 호
(경희대 교수)

[목 차]

I. 논의배경

II. 할인할증제도 현황

III. 쟁점사항

IV. 개선방안

V. 결 론

< 별 첨 > 주요국의 할인할증제도

I

논의배경

- 현행 물적사고* 할증기준 50만원**은 '89년 사고점수별 할인할증체계 도입시 마련된 기준

* 물적사고 :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 1년간 50만원이하 물적사고 1건은 0.5점 사고로 3년간 할인도 할증도 하지 않으며, 50만원초과 물적사고 1건은 1점사고로 할증대상

- '89.7월 이전에는 사고건수에 따른 할인할증체계로 1건당 10%씩 할증하는 사고건수별 할증체도를 운영했으며, '89.7월 이후부터 사고크기(점수)에 따라 할증규모를 달리 적용하는 현행 체계로 변경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및 일부 소비자단체에서 물적사고의 할증기준금액 50만원에 대한 상향조정 필요성 제기

- 최의원은 지난 20년간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명목GNP 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 5년마다 물가상승률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정기적인 기준금액 조정이 필요함을 주장

- 보험소비자연맹은 할증기준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보험을 가입하고도 사고시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할증기준금액을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

- 그 간 보험업계는 할증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일반 무사고자를 포

함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증가가 불가피하며 일부 계약자 및 정비
업체의 Moral Risk 증가 우려가 있어 현행 제도를 유지해 왔음

□ 금번 공청회를 통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수준 및 할증체계에 대한 개
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 할인할증제도 본래의 목적인 사고예방기능 및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의 형평성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할인할증제도 현황

1. 제도 운영취지

☐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사고가 없는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실제 위험도에 부합한 수준의 보험료를 할증

☐ 교통사고 예방·감소 기능

- 전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 또는 인상요인을 억제

2. 제도 변천

가. '89년 사고점수제 및 50만원이하 물적사고 미할증제도 도입

《 '89.7 이전 》 : 사고건수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운영

☐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평가 적용

- 통상 사고가 없는 경우 10%씩 할인되며, 사고가 있는 경우 1건당 10%씩 적용률이 추가되어 할증
- 적용률 60%~200%, 기본 100%

《 '89.7 이후 》 : 사고점수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운영 (현행)

□ 사고유무 및 사고점수에 따라 평가 적용

- 통상 연간 사고가 없는 경우 5~10%씩 할인되며, 사고가 있는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사고점수를 평가하여 할증
- 과거 3년 및 평가대상기간 내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가 할인되며, 평가대상기간 내 사고는 없으나 과거 3년간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할인이 유예
- 40%~200% 이내에서 할인할증 적용
- 물적사고의 경우 손해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점수 1점으로 5~10% 할증되며, 손해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사고점수 0.5점으로 3년간 할인도 할증도 되지 않음

사고내용별 점수

구 분		사 고 내 용		점 수
인 적 사 고	대 인 사 고	사 망 사 고		4점
		부 상 사 고	1급	
			2급~7급	
			8급~12급	
			13급, 14급	1점
	자손사고	모든 자손사고		1점
물적사고		50만원 초과 사고		1점
		50만원 이하 사고		0.5점

나. 자기과실없는 사고의 할인할증 평가기준

□ 자기과실없는 사고가 정상사고처럼 할증되지 않음에 따라 자기과실이 없는 자차사고 급증으로 손해율이 악화되었고,

- 가입자의 도덕적 위험*도 증가함에 따라 대다수 선의의 가입자의 불공정한 보험료 인상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

* 과실사고를 무과실사고로 위장

[위장청구 사례]

- 정비업체에서 차량 전체 도색비용 청구를 목적으로 고의 훼손
 - 정비업체 직원이 대물사고로 입고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 일부 도색시 색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차량 전체 도장을 권유하며 도장비용은 보유불명사고로 처리토록 유도한 후,
 - 입고차량을 전체적으로 긁고 피해사진을 촬영한 후 보유불명사고로 수리비 81만원을 부당청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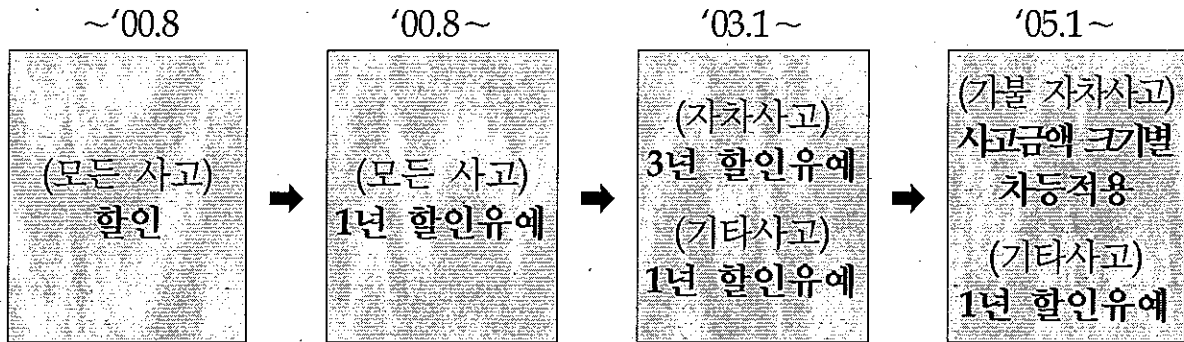
(금감원 보도자료 2003.10.24 中)

□ 과거 자기과실없는 모든 사고는 할인대상이었으나, '00.8월부터 1년간 보험료 할인유예로 변경되었으며,

- '03.1월부터 자기과실없는 자기차량손해사고에 한하여 3년간 할인유예로 변경

- '05.1월부터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에 대해 사고금액 크기에 따라 할인할증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현재까지 적용 중

자기과실없는 사고의 할인할증 평가기준 변천



자기과실없는 사고의 할인할증 평가기준 (현행)

구 분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의 할인할증기준
1년간 할인유예사고	① 가해자불명 자차사고를 제외한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② 가해자불명 자차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사고
3년간 할인유예사고	가해자불명 자차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사고
할증사고 (가해자불명 1점사고)	① 가해자불명 자차사고로서 손해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 ② 평가대상기간 중 가해자불명 자차사고가 2건이상인 경우

- 주) 1. 가해자불명 자차사고 : 주차 중 누군가가 차를 손상(예 : 스크래치 등)시킨 사고
2. 가해자불명 자차사고 이외 자기과실없는 사고 : 날아온 물체 등에 의해 차가 파손된 경우,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등

Ⅲ

쟁점사항

1. 관련 전문가 및 보험업계 의견

《 최경환 의원 》

□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 지난 20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3배, 명목GNP는 5.9배 상승되어 120만원~295만원 수준의 인상이 필요한 바 대략 200만원 수준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할 필요

* 소비자물가지수 : 48.6('89.12) → 110.6('08.6), 명목GNP 154조('89) → 901조('07)

- 또한, 5년마다 물가상승률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할증기준금액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보험소비자연맹 》

□ 할증기준금액을 15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 '89년 도입 이후 소비자물가지수는 2.3배, 보험정비수가는 4.35배 상승되어 120만원~210만원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나,

* 보험정비수가 4,600원('89) → 20,000원(현재)

- 소액사고 240만원 이하 사고건수가 84.7%임을 감안할 때 사고건수의 약 70% 수준인 150만원 수준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할 필요

《 보험업계 》

□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역차별 발생

- 현행 할증기준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무사고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
- 할증기준금액 상향조정으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소액사고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보험료할증 감소분이 발생되며, 이는 무사고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것임

할증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효과 추정

구 분	7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보험료 인상효과	0.92%	1.44%	1.71%	1.98%

□ Moral Risk 증가 우려

- 할증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따라 보험료 미할증을 악용하여 자동차 수리시 과잉 또는 편승수리 등 Moral Risk 증가 우려
- 현재도 50만원까지는 보험료 할증없이 수리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과잉수리(판금·도색→신부품교환), 사고와 무관한 편승수리 등 사례가 다수 발생

IV 개선방안

1안 : 할증기준금액의 상향조정

2안 :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체계 도입

3안 : 다양한 할증기준금액 운영

1안

할증기준금액의 상향조정

가. 주요내용

□ 현행 할증기준금액 50만원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조정

- 할증기준금액을 제정 당시와 현재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명목GNP를 고려하면 120만원~320만원 수준이나,

* 소비자물가지수 : 47.6('89.7월) → 112.7('09.5월), 약 137% ↑

명목GNP : 154조('89년) → 989조('08년), 약 541% ↑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건당손해액 및 사고규모별 사고건수 비중 등과 관련이 높으므로 그 간의 변동추이를 감안하면 할증기준금액을 60~7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합리적

- 자기차량손해의 건당손해액 증가율은 42.8%로 이를 기준으로 할증기준금액을 산출할 경우 71만원($=50\text{만원} \times 142.8\%$) 수준

* 건당손해액 : FY'89 66만원 → FY'08 95만원, 42.8% ↑

- 기준금액 50만원 마련 당시 전체 물적사고의 약 62%가 50만원 이하 사고였으며, 현재는 대략 64만원이 물적사고의 62% 수준에 해당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변경에 따라 가해자불명 자차사고 평가기준도 함께 변경할 필요가 있음

- 1년간 할인유예 : 30 → 40만원, 3년간 할인유예 : 50 → 70만원

나. 장·단점

《 장 점 》

□ 할증기준금액의 합리적 현실화

○ 건당손해액 및 사고규모별 사고건수 변동추이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0.5점 할증기준금액을 현실화

□ 소액사고자의 보험료 부담 감소

○ 소액사고자는 할증기준금액 상향으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이 감소

《 단 점 》

☐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대

- 가입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사고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일부 증대

☐ Moral Risk 증가 우려

- 할증기준금액 인상으로 과잉·편승수리 폭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악용한 Moral Risk 증가 우려

가. 주요내용

□ 사고건수에 따른 할인할증체계 도입

- 사고크기(내용 또는 금액)가 아닌 가입자의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것이 보험수리적 할인할증 원리에 부합
 - 사고크기는 사고자의 의지가 아니라 우연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고위험도는 사고크기 보다는 사고건수와 상관관계가 높음
 - * 현재 선진외국의 경우 모두 사고건수에 따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만이 사고빈도 외에 사고크기를 고려하고 있음
- 사고크기가 아닌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체제로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사고도 보통사고와 같이 할증처리
 - 단, 한 등급이 아닌 반 등급만 할증하여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가능
- 물적사고 뿐만 아니라 인적사고까지 모두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체제로 외국의 할인할증제도와 동일하게 사고위험도에 부합한 제도 운영 가능
- 사고건수에 따른 할인할증체계에 맞게 가해자불명 자차사고 평가기준도 함께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장 · 단점

《 장 점 》

□ 가입자간 보험료 형평부담 도모

- 사고크기에 관계없이 사고야기자에 대해 실제위험도에 부합하는 보험료 할증으로 가입자간 보험료 형평부담 도모

□ 사고발생 억제효과 기대

- 소액 물적사고도 할증됨에 따라 가입자에게 안전운전 경각심을 유발시켜 사고예방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

□ 할인할증체계 단순화로 가입자 이해 및 제도운영 용이

- 차기 할인할증등급은 가입자나 보험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나 현 체계는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에 따른 점수제로 운영되어 체계가 매우 복잡
 - 사고내용과 원인이 중복될 경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어 사고시 차기 할인할증등급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그러므로 사고건수에 따른 할인할증체계를 도입하여 등급표를 보고 사고건수에 따라 차기 갱신계약 적용등급을 바로 알 수 있음

《 단 점 》

□ 소액 물적사고자 불만 제기

- 소액 물적사고도 할증됨에 따라 소액사고 야기자의 불만 제기

□ 제도변경에 따른 가입자 혼란 우려

- 사고크기에 따른 할인할증체계는 지난 20년 간 지속되어 가입자에게 당연시되고 상식화된 제도인 바, 제도 변경에 따른 가입자의 이해 부족 및 상당한 혼란 예상

가. 주요내용

□ 할증기준금액 다양화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다양화하여 가입자로 하여금 본인이 선호하는 할증기준금액 선택이 가능토록하고 이에 대응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가입자선택권을 확대

할증기준금액 운영 예시

구 분	A사	B사	C사	D사
할증기준금액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또한, 할증기준금액 1가지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적용하여 가입자가 본인이 선호하는 할증기준금액을 적용하는 회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 회사별 자율로 할 경우 과당경쟁으로 기준금액이 경쟁적으로 인상되는 등의 부작용과 궁극적으로 물적사고 전부가 0.5점으로 확대되어 사고예방효과가 반감되는 문제 발생소지가 있는 바 자율보다 할증기준금액 다양화가 보다 합리적임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다양화에 따라 가해자불명 자차사고 평가기준도 함께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다양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불명 자차기준은 유지할 필요가 있음

나. 장 · 단점

《 장 점 》

□ 소비자 선택 폭 확대

- 가입자에게 할증기준금액 선택권이 부여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 기대

□ 가입자의 선택에 따른 보험료 부담

- 가입자의 소비형태(할증기준금액 선택)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결정되므로 단일기준금액으로 상향조정시 발생하는 전체 가입자의 일률적인 보험료 인상 문제 해소

《 단 점 》

□ 제도운영의 혼란 우려

-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할증기준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제도도입 초기에 대한 혼란 우려

□ 사회적 비용 발생

- 기준금액 다양화에 따른 보험사 전산개발 등 할인할증제도 운영 및 대국민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회적 비용 발생

- 본 연구에서 발표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관련 제도개선은 보험가입자간 합리적인 보험료 적용과 건전한 보험산업 발전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 현행 할증기준금액 마련 당시와 지금의 보험환경·경제여건 변화, Moral risk 방지를 통한 선의의 계약자 보호, 가입자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 무사고자의 보험료 인상, 급격한 제도변경시 가입자 혼란으로 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필요
- 보험원리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선진외국과 동일하게 사고건수에 의한 할인할증체계 도입이 필요하나
 - 사고점수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인지도와 소액사고 할증에 대한 거부감 등을 감안할 때 사고건수제 도입은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현행 할증기준금액을 일부 현실화하는 1안이 무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인 바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3안도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됨

< 별 첨 > 주요국의 할인할증제도

- ➔ 할인할증제도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할인할증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나라의 경우(미국 및 영국)에도 보험료 결정요소로 과거 사고건수를 감안하고 있음

가. 미 국

-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무사고에 따른 할인제도는 없으며, 운전기록 및 사고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안전운전자보험제도(Safe Driver Insurance Plan)가 있음

나. 영 국

- NCD(No Claims Discount)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무사고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지만 사고시 할증하되 100%를 초과하지 않는 제도
- 1987년까지는 자료집적기관이 존재하였으나 폐지된 이후 다시 사고 및 가입경력 등의 자료를 교환하기 위해 최근에 Insurance Data Service Limited를 설립하여 운영

※ No Claims Discount 제도 : 증권상에 보험기간 중 무사고를 조건으로 갱신 계약시 보험료 할인

영국의 무사고 할인율

구 분	무사고년수			
	1년	2년연속	3년연속	4년이상 연속
할인폭	30%	40%	50%	60%

- 이에 추가하여 사고시에는 "step-back" 제도가 있어 두 계단씩 하향 조정(할증)하나 100%를 초과하지 않음
- 최고할인율 도달자가 추가보험료 납입시 일정 조건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등급을 유예해 주는 할인보호제도(protected discount제도)를 운영

다. 독 일

- 과거 1년간의 사고건수에 따라 평가하며 배상책임과 차량손해 담보 별로 각각 할인할증 체계를 운영
 - 최초 100%에서 시작하여 무사고시 1등급 상향조정하며, 1건 사고시 적용을 대비 약 50~60% 할증된 수준의 등급으로 하향조정(배상책임 29등급, 차량전부손해 28등급)
 - 적용률 : 배상책임 30%~245%, 차량손해 30%~160%
 - 최고할인율 도달기간 : 배상책임 22년, 차량전부손해 23년
(차량일부손해담보는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독일의 등급간 이동규칙표 : 승용차 기준

등급	요약 기호	적용률		갱신등급							
				사고1건		사고2건		사고3건		사고4건	
		책임	차량	책임	차량	책임	차량	책임	차량	책임	차량
사고등급2	S 2	245	-	-	-	-	-	-	-	-	-
사고등급1	S 1	155	160	S 2	-	S 2	-	S 2	-	S 2	-
기본등급	0	230	125	S 2	S 1	S 2	S 1	S 2	S 1	S 2	S 1
무사고 등급	SF1/2	140	115	S 1	0	S 2	S 1	S 2	S 1	S 2	S 1
	SF 1	100	100	S 1	SF1/2	S 2	S 1	S 2	S 1	S 2	S 1
	SF 2	85	85	SF1/2	SF 1	S 1	S 1	S 2	S 1	S 2	S 1
	SF 3	70	80	SF 1	SF 1	S 1	0	S 2	S 1	S 2	S 1
	SF 4	60	70	SF 2	SF 2	SF1/2	0	S 1	S 1	S 2	S 1
	SF 5	55	65	SF 2	SF 2	SF1/2	SF1/2	S 1	0	S 2	S 1
	SF 6	55	60	SF 3	SF 3	SF1/2	SF1/2	S 1	0	S 2	S 1
	SF 7	50	60	SF 3	SF 4	SF1/2	SF 1	S 1	0	S 2	S 1
	SF 8	50	55	SF 4	SF 4	SF 1	SF 1	S 1	SF1/2	S 2	S 1
	SF 9	45	50	SF 4	SF 5	SF 1	SF 2	S 1	SF1/2	S 2	S 1
	SF 10	45	50	SF 4	SF 6	SF 1	SF 2	S 1	SF1/2	S 2	S 1
	SF 11	45	45	SF 5	SF 6	SF 1	SF 2	S 1	SF1/2	S 2	S 1
	SF 12	40	45	SF 5	SF 7	SF 1	SF 3	S 1	SF 1	S 2	S 1
	SF 13	40	45	SF 5	SF 8	SF 2	SF 3	SF1/2	SF 1	S 2	S 1
	SF 14	40	40	SF 6	SF 8	SF 2	SF 4	SF1/2	SF 1	S 2	S 1
	SF 15	40	40	SF 6	SF 9	SF 2	SF 4	SF1/2	SF 2	S 2	S 1
	SF 16	35	40	SF 6	SF 9	SF 2	SF 4	SF1/2	SF 2	S 2	S 1
	SF 17	35	40	SF 7	SF 9	SF 2	SF 5	SF1/2	SF 2	S 2	S 1
	SF 18	35	40	SF 7	SF 10	SF 3	SF 5	SF 1	SF 3	S 2	S 1
	SF 19	35	35	SF 9	SF 11	SF 3	SF 5	SF 1	SF 3	S 2	S 1
	SF 20	35	35	SF 9	SF 12	SF 3	SF 6	SF 1	SF 3	S 2	S 1
	SF 21	35	35	SF 10	SF 13	SF 4	SF 7	SF 2	SF 3	S 2	S 1
	SF 22	30	35	SF 10	SF 14	SF 4	SF 8	SF 2	SF 3	S 2	S 1
	SF 23	30	30	SF 10	SF 15	SF 4	SF 8	SF 2	SF 3	S 2	S 1
	SF 24	30	30	SF 11	SF 15	SF 4	SF 8	SF 2	SF 3	S 2	S 1
	SF 25	30	30	SF 22	SF 23	SF 4	SF 10	SF 2	SF 3	S 2	S 1

라. 프랑스

-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고시 할증하고 무사고시 할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할인율은 50%(50%할인)로서 13년간의 무사고기간이 소요되며, 최고할증률은 350%(250%할증)임
- 할인할증률의 최초는 100%이며 사고가 없을 경우 매년 5%씩 할인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때 사고마다 25%씩 할증
 - 사고에 대한 책임이 분담되는 경우 할증분은 절반(12.5%)으로 감소
 - 첫번째 사고로 보험료가 100%에서 125%로 올랐다면 두번째 사고시 보험료는 $156\%(=125\% \times 1.25)$ 가 되고 세번째 사고시 보험료수준은 $195\%(=156\% \times 1.25)$ 로 상승
- 가장 높은 보험료 수준은 350%이고 무사고년수가 연속 2년이 되면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수준인 100%로 돌아감

프랑스의 무사고할인 · 사고할증률

무사고년수	요율계수	연간사고건수	요율계수
1	0.95	1	1.25
2	0.90	2	1.56
3	0.85	3	1.90
4	0.80	4	2.43
5	0.76	5	3.04
6	0.72	6	3.50
7	0.68	7	3.50
8	0.64		
9	0.60		
10	0.57		
11	0.54		
12	0.51		
13	0.50		

마. 일 본

- 2000년도에 최고할인적용률 도달기간을 연장한 바 있고 해당등급별 할인율을 각 보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표준적인 제도는 할인의 경우 1년간 무사고시 1등급씩 상향조정하며, 최고할인율(40%, 20등급) 도달기간은 12년임
- 최초 시작등급은 6등급(90%)이며, 사고 1건당 3등급씩 하향조정하고 최고할증률(1등급)은 160%임

일본의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

(단위 : %)

등 급	적용률	등 급	적용률
1등급	160	11등급	55
2등급	130	12등급	50
3등급	120	13등급	50
4등급	100	14등급	45
5등급	90	15등급	45
6등급	90	16등급	42
7등급	80	17등급	42
8등급	70	18등급	40
9등급	60	19등급	40
10등급	60	20등급	40

16. M&A시 풋백옵션 개선 계획

☐ 동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7. 마이크로 크레딧 관련

-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추진내용
- 소관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수행기관별 사업 실적(최근 3년간 대출현황)
- 마이크로 크레딧의 발전을 저해하는 애로사항 및 문제점, 개선 계획

1.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추진 내용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08.3월)하여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의 휴면예금 및 보험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시행중(출연금 : '08년 2,701억원, '09년 869억원)

○ '08년, 빈곤아동 2천명 · 저신용자 4천명 등 1만여명과, 서울시 24개 전통시장 등 13개 단체에 총 271억원 지원

○ '09년, 그 규모를 60%이상 확대하여 440억원 지원

< 소액서민금융재단 현황 >

	출 연	지 출
'08년	▪ 2,704억원 - 은행 1,767억원 - 보험 917억원 - 저축은행 18억원	▪ 271억원 - 소액대출 241억원 - 소액보험 30억원
'09년	▪ 1,129억원 - 은행 894억원 - 보험 232억원 - 저축은행 3억원	▪ 440억원 - 소액대출 400억원 - 소액보험 40억원

2. 소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수행기관별 사업실적(최근3년간 대출현황)내용

☐ 2008년도 사업

2009년 6월 25일 기준

구분	부지사업자	지원금		대출현황		비고
		배정	교부	인원	금액	
소액 금융 사업	사회연대은행	25억원	25억원	141명	23.7억원	
	신나는조합	6억원	6억원	공동체 2개 개인 26명	6억원	
	함께일하는재단	20억원	20억원	11개 기업	15.6억원	
	신용회복위원회	120억원	120억원	4,093명*	120억원	
	한마음금융	60억원	60억원	2,463명	56.7억원	
	전통시장소액대출 (서울시 14개 자치구 24개 전통시장)	10억원	10억원	325명	8.4억원	
	소계	241억원	241억원	공동체 2개 개인 7,048명 사회적기업 11개	230.4억원	
소액 보험 사업	13개 보험사	30억원	30억원	총 수혜자 3,323명(빈곤아동 2,005명, 부양자 1,318명 포함)		

구분	복지사업자	지원금		대출 현황		비고
		배정	교부	인원	금액	
소액 금융 사업	해피월드복지재단	5억원	5억원	12명	2.3억원	
	소상공인진흥원	40억원	20억원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10억원	5억원	3명	0.9억원	
	신용회복위원회	90억원	90억원	2,015명	60.0억원	
	열매나눔재단	5억원	2.5억원			
	민생경제정책 연구소	10억원	5억원			
	민생포럼	10억원	5억원			
	전통시장소액대출	90억원	-	전국사업 확대 위해 각 지자체와 협의 중		
	소계	260억원	132.5억원	2,030명	63.2억원	
	보험사	40억원	-	전국사업 확대 위해 각 지자체와 협의 중		
소액 보험 사업						

3. 마이크로크레딧의 발전을 저해하는 애로 사항 및 문제점

□ 현재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다수 기관에 산재되 운영되어 중복지원 및 사각지대 발생 소지가 있어,

- 미소금융사업은 기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중복 또는 과소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단체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예정
- 미소금융신청자가 타단체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하여 미소금융사업 대출 한도에 따라 지원여부 및 규모를 결정

18. 고위험 파생상품(FX 마진거래, ELW 등) 관련
- 각 상품별 특징 및 위험성 설명
 - 각 상품별 08.1.1부터 09.6.30까지 반기별 거래규모, 손익
 - 각 상품별 증거금율
 - 각 상품별 불법행위 신고건수(08.1.1 이후)
 - 금융당국의 고위험 파생상품 손실위험 대비 계획
 - 파생상품 시장의 비대화와 실물경제회복과의 상관관계와 이유

1 FX마진거래

□ 특징 및 위험성

- (특징) 투자자가 장외에서 이종통화간 환율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
- (위험성) 작은 환율변동에도 투자자의 손익 변동이 큰 고위험 상품

□ 거래규모, 손익 현황(08.1.1일~09.5.30일)

< FX마진거래 거래·손익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08년	09.5월
합계	거래대금	4,538,244	3,614,604
	손익	▽467	▽455

* 반기별 자료는 없음

☐ 증거금률

- 5%(기존에는 2%였으나, 09.9.7일부터 5%로 상향)

☐ 불법행위 신고건수(08.1.1일 이후)

- 없음

(단, 감독당국(금감원)은 자체조사 등을 통해 '08년 24건, 09.5월말 까지 4건의 유사수신행위를 경찰통보)

2 ELW

☐ 특징

- (특정) 기초자산(주식, 주가지수 등)을 사전에 정한 미래 시점(만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파생결합증권
- (위험성) 상품의 구조, 기초자산의 실적·변동성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손실 위험, 동일한 금액 투자시 주식투자에 비해 손실폭이 확대될 위험 등

☐ 거래규모, 손익 현황(08.1.1일~09.6.30일)

< ELW시장 거래·손익 현황 >

기간		거래대금(억원)		손익
		합계	일평균	
'08년	상반기	408,558	3,377	▽1,997
	하반기	545,219	4,293	
'09년 상반기		803,551	6,480	17,960

☐ 증거금률

- 100%

☐ 불법행위 신고건수(08.1.1일 이후)

- 없음

(단, 한국거래소에 08년 월평균 10.4건, 09년 상반기 월평균 6.2건의 민원 접수)

3 파생상품 손실위험 관련 대책

- ①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 대책) 파생감독방안(08.12월) 및 자본시장법령 개정(09.2월/7월) 등을 통해 마련

<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대책 주요 내용 >

- ① 투자자 보호 규제를 단일화·명확화하고, 투자자를 전문/일반으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 보호규제 강화
- ② 복잡한 파생구조화 증권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 수리거부 근거 마련, 신규 장외파생상품 취급시 준법감시조직 확인 등
- ③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 위험 고지의무, 투자권유 대행 위탁 불허, 일반투자자의 범위 확대 및 투기목적 거래 금지, 판매 인력 자격제 강화 등
- ④ 불확실한 사항(ex. 환율 변동)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등

② (FX마진거래 투자자 보호대책)

- ① 불법 FX거래 신고센터 운영(금감원·금투협회)(09.6월~)
 - 금감원-금투협회 합동조사(09.6월~7월)
- ② 해외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조 강화
 - 美 선물감독당국(CFTC)에 미국규정 위반사항 점검 및 내국인과의 직접 거래 차단 요청(09.7월)
- ③ 불법광고(미심의 광고 및 개인카페 통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금투협회 광고심의규제 엄격 적용 및 규제내용 정비(09.9월~)
- ④ 증거금률 상향 조정(2% → 5%)(09.9월~)
- ⑤ 투자 위험도 및 수익구조 등 FX거래의 핵심 사항만 중점적으로 설명한 핵심설명서 제도 도입(09.10월~)
- ⑥ 우리나라 선물회사의 복수 FDM(Forex Dealer Member: 해외 선물업자)과의 계약체결·복수 호가정보 제공 의무화(10년 예정)

③ (ELW 투자자 보호 대책)

- ① ELW시장 종합제도개선 방안 마련(07.12월)
 - LP 자격요건 강화, LP 평가제도 전면 개편, 공시 강화 등
- ② 투자자의 희망에 따른 거래시에도 투자자 성향 진단·위험고지 의무 부과(☞ 걱정성의 원칙)(08.12월)
- ③ ELW LP 제도 개선 (☞ 제3자 LP의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등)(09.4월)
- ④ ELW 투자자 교육 강화(ex : 한국거래소 전국 순회 투자자 교육 2009년 중 총 10회)(상시)

4 파생상품 시장과 실물경제회복과의 관계

□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는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

-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는 주식시장 규모 확대,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 신상품 개발 증가, 신규 고용창출 등의 효과 발생

19. 2007년 이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혐의거래 내역 목록

□ 금융정보분석원이 접수한 혐의거래보고현황은 다음과 같음

○ 연도별 혐의거래보고현황

(단위: 건, 억원)

연도	2007	2008	2009.8. 말	합계
보고건수	52,474	92,093	85,624	230,091

□ 다만, 혐의거래 내역(일자, 금액, 보고사유)은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및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의 범위에 비추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률 규정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3조제4항(별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④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수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등에 제공한 건수
3.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20-1. 설비투자펀드의 조성이유, 총규모, 2009년 사용계획

A. 산업금융과

□ 조성이유

- 설비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할 당시 기업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08.4/4분기에 감소세로 전환된 후 '09.1/4분기중 감소폭이 확대*되던 상황이었으며,

* '98년 외환위기 당시 4분기 감소폭('98.1/4 $\Delta 41.1 \rightarrow \Delta 48.4 \rightarrow \Delta 45.0 \rightarrow \Delta 33.1\%$) 이후 최대폭의 감소($\Delta 23.5\%$)를 기록

- 주요 기관의 전망, 기업의 투자계획 및 투자선행지표 등을 감안할 때, 금년중 설비투자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래 대출위주의 설비자금 공급 이외에 투자방식(주식, 회사채 등 인수)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조성 및 지원규모

- 산업은행 1.4조원*, 기업은행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각각 조성하여 총 2조원의 자금을 기업 설비투자 자금으로 지원

* 우선 산업은행이 6,000억원 범위에서 공급하되, 정책금융공사 설립(10월 예정) 후 공사가 8,000억원 자금 추가 공급

□ 2009년 사용계획

- 설비투자자금 신청 기업의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

* 8월중 포스코파워의 발전소 증설사업에 대해 장기 회사채(6~10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 기 지원

20-2. 구조조정기금의 조성이유, 총 규모, 2009년 사용 계획 및 2009.8월말까지 집행세부내역, 집행을

B. 운용기획팀

□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설치('09.5.13)

□ 구조조정기금은 40조원 한도(09-10)의 정부보증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할 계획

* 실제 구조조정기금채권 발행 규모는 부실채권 매입소요 등을 고려하여 발행

□ 기금운용계획 상 09년도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지원 한도는 20조원이며 09.8월말 현재 집행실적은 0.66조원(한도대비 약 3.3% 수준)

○ 기 발표한 정부 정책에 따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금융권 PF채권 및 해운사 선박매입에 한하여 기금을 우선 투입

○ 향후 금융기관 부실채권 등의 인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기금 집행계획 및 실적 ('09.8월말 현재) >

구 분	집행계획	집행실적	집행률
금융구조조정지원	150,000억원	4,622억원	3.1%
기업구조조정지원	50,000억원	1,982억원	4.0%
계	200,000억원	6,604억원	3.3%

※ 집행 세부내역

□ 해운업계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17척의 선박을 매입하는데 1,912억원 투입(09.7.22~24)

* 매입한 선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운용회사를 설립하고 70억원 출자(09.6.23)

□ 또한, 은행권 PF 대출채권을 대상으로 1차로 8,164억원을 인수하는데 4,622억원 투입('09.6.29)

20-3. 자본확충펀드의 조성이유, 총규모, 2009년 사용 계획 및 2009.8월말까지 집행세부내역, 집행을

C. 은행과

□ 한국은행(10조원) 및 산업은행(2조원) 대출금, 기관 및 일반 투자자(8조원)로부터 20조원을 조달하여 조성(1차분 12조원 2차분 8조원)

○ 동 재원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을 인수함으로써 은행권 스스로 실물경제 지원과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자본여력의 후선 보강

□ 은행자산 규모에 따라 「펀드」 참여 14개 은행에 대해 12.3조원 한도(credit line) 배정(3.10일)

그룹 I	그룹 II	그룹 III	그룹 IV
국민(2조원) 우리(2조원) 신한(2조원)	하나(1.5조원) 기업(1.5조원) 농협(1.5조원)	외환(0.5조원)*	수협(0.2조원), 대구(0.3조원), 부산(0.3조원), 경남(0.23조원), 광주(0.17조원), 전북(0.07조원), 제주(0.03조원)

* 최초 배정후 외환은행은 신종자본증권 매입(0.25조원) 자진 철회(3.16일)

** 그룹 I (자산 200조원 이상), 그룹 II (200~140), 그룹 III (140~50), 그룹 IV (50조원 이하)

□ 8개 금융기관이 발행한 4조원 상당의 신종자본증권(3.5조원) 및 후순위채권(0.5조원) 매입 완료(3.31일)

(단위 : 억원)

구 분	우리 지주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합계
신종자본증권	-	10,000	10,000	4,000	7,500	1,000	1,160	870	34,530
후순위채권	3,000	-	-	-	-	-	1,160	870	5,030
합 계	3,000	10,000	10,000	4,000	7,500	1,000	2,320	1,740	39,560

□ 차기 지원 시기는 은행권 신청 등을 보아가며 결정할 예정

○ 다만,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 개선으로 은행들이 자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어 추가 지원신청은 없는 상황

20-4.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이유, 총규모, 사용계획 및 집행세부내역, 집행률

D. 금융정책과

□ 채안펀드 집행 세부내역 및 집행률

<채권별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9. 7일 기준)

구 분	회사채	PF-ABCP	여전채	중소·중견 P-CBO	은행채	총계
투자 현황 (집행률)	15,273	1,400	4,329	11,275	5,500	37,777 (75.4%)

□ 채안펀드 조성 이유, 총규모, 사용 계획은 별첨자료 참고

(별첨) 채안펀드 조성 관련 당정협의(08.12.12일) 자료

채권시장안정펀드 현황 및 운용방향

2008. 12. 17



금융위원회

1. 채권시장안정펀드 현황

가. 필요성 및 정책 목표

□ 채권시장의 마찰적 신용 경색 해소

- 거래상대방 위험 증가로 인한 일시적·마찰적 불안요인을 해소하여 실물부문으로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유도

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추진 현황

(1) 펀드 재원 및 조성 현황

□ (펀드 총액) 총 10조원*을 민간 금융회사가 전액 출자하고 한은이 기관별 출자금의 50%를 대출 지원

- 은행권(8조), 보험업권(1.5조), 증권업권(0.5조)

□ (1차 조성 규모) 12.17일 1차 5조원 규모로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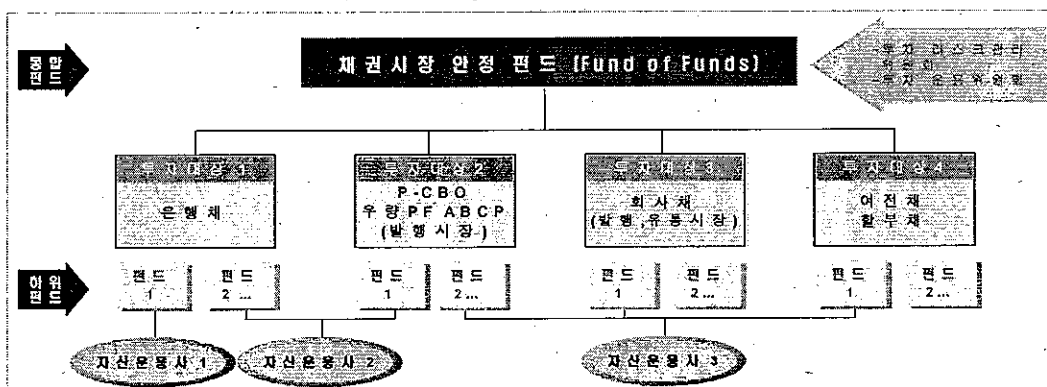
(2) 펀드 성격 및 구조

□ 사모펀드로 3년 만기 Fund of Funds 구조로 운영

- (상위 펀드) 전체 투자자산의 배분을 담당하며 산은자산 운용이 운용
- (하위 펀드) 투자분야별(예: P-CBO, 회사채, 은행채 펀드 등) 하위펀드는 출자상위 기관이 선정한 자산운용사*가 운용

* SH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등 8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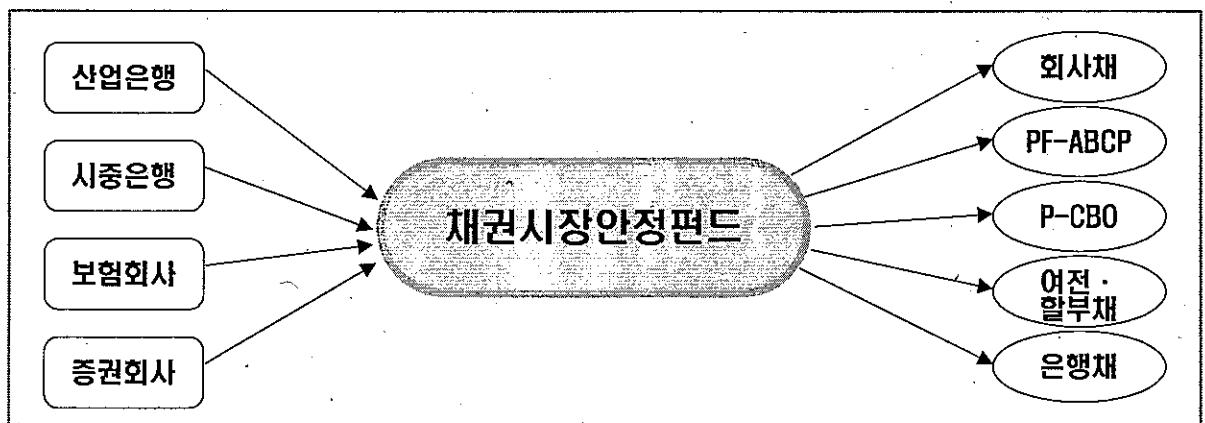
〈채권시장안정펀드 구조〉



2.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운용 방향

가. 운용 방향

- (투자 대상) 회사채, PF ABCP, 여전·할부금융채 등 만기
도래 채권에 투자
 - (신용 등급)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회사의
일정등급 이상 채권
 - 등급 미만 채권의 경우 신보의 신용보강을 통해 투자



나. 투자 현황 및 향후 계획

- (투자 현황) 회사채, 여전채 등 만기도래채권의 차환발행물
중 시장소화가 어려운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
- (향후 계획) 시장소화가 가능한 우량 채권에 대한 투자는 지양
하고, 신용보강을 통해 저신용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 * 펀드 1차분(5조원) 자금 소진 추이를 보아 2차분(잔여 5조원) 조성 추진

21. 황영기 KB회장 징계사유 및 형평성 논란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9월3일 징계결정 후)

□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09.6.8~7.8일) 결과,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9.3일)를 거쳐 황영기 前우리은행장에 대해

- (i)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과도한 외형확대 목표부여
- (ii) CDO·CDS 등 유동성 및 안정성이 취약한 고위험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사실상 투자지시
- (iii) CDO·CDS 투자관련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불철저하여,
 - 제임기간 중 투자의사결정이 이루어진 CDO·CDS로부터 총 12.5억불(1.5조원 상당, 귀책금액 1.2조원)의 거액 손실 발생을 초래한 데 따른 지시·행위·감독책임*을 물어 '업무집행의 전부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건의

* (i) 은행법 §23(이사회에 권한), (ii) 은행법 §45(건전경영의 지도)
(iii) 은행법 §23조의3(내부통제기준등) 등 위반

□ 금융감독원장의 제재 건의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제재대상자(대리인) 진술을 참고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적시한 제재 사유 및 양형근거에 대한 확인을 거쳐 금융감독원장의 건의대로 조치*키로 하였음(9.9일)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8① : 금융기관 임원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금융기관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임권고(1호) 또는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2호) 사유에 해당

□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인 황 前행장에 대한 제재건 이외에도 CDO·CDS 등 무분별한 고위험 상품투자 등과 연관된 46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면직 상당', '견책 상당', 또는 '주의적 경고' 등 다수의 경영진과 실무진에 대해 징계조치하였음

이 석 현 의원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청와대, 국무총리실 보
고용 포함)

□ 별도제출

2. 2008년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지적사항, 조치내역, 향후 계획

☐ 별도제출

3. 2009년 상임위 현안보고 자료

☐ 별도제출

4. 가장 최근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

☐ 해당사항 없음.

5. 최근 3년간 감사원, 자체감사결과보고서

- ☐ 우리위원회 설립(08.3월) 이후 외부(감사원)감사결과는 '해당 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이 09.5.28 ~ 7.17까지 금융위원회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는 감사원이 내부절차를 거쳐 처리중에 있음
- ☐ 자체감사결과는 별도첨부(2008년)

* 2009년은 아직 미실시

2008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08. 9.

감사담당관실

- 목 차 -

I. 감사개요

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청사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나. 물품관리 실태

다. 비정규직 운영실태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마.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신용보증 제도)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5. 감사결과 처리요령

I 감사 개요

◇ 청사 이전비용 집행, 외부기관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업무처리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

- 감사실시 기간 : 2008.6.23(월)~6.27(금) (5일간)
- 감사대상 기간 : '07.1. ~ '08.5. (단, 예산집행은 08.1~5.)
- 감사대상 부서 : 혁신행정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산업금융과
- 감사반 :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 (과장, 5급3, 6급2)
- 감사방법 : 표본감사, 서류감사
- 감사대상업무 : 청사이전 비용 등 예산집행, 물품관리, 정책 연구용역, 보증제도
 - ①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 관련 제비용 집행 실태 (혁신행정과)
 - ② '07년 이후 물품 관리 현황 (혁신행정과)
 - ③ '07년 이후 비정규직 운영현황 (혁신행정과)
 - ④ '07년 결산국회 지적사항(정책연구과제) 처리실태 (기획재정, 혁신행정과)
 - ⑤ '0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보증제도) 처리실태 (산업금융과)

* 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한하고, 정책내용의 판단은 제외

1. 총 평

- 금번 감사는 구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과 구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폐합되어 새로이 출범한 우리 위원회가 업무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대상 업무를 조직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청사이전 경비 등 각종 예산집행실태와 물품관리 실태, 구 재경부 및 구 금감위에서 각각 채용하여 운영중에 있던 비정규직 공무원의 금융위 출범 후 통합운영 실태
- 또한, 결산국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적정성 여부, '07년 감사원의 중소기업 보증제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태 등으로 선정하였음
- 감사실시 전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대상 업무 및 선정이유, 감사 착안사항을 사전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점검·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음
- 감사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담당자 변경 등으로 업무처리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예산집행·차량 및 물품관리, 비정규직 급여, 연구용역 현황관리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금번 감사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소홀·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 잡는 등 금융위 업무시스템이 조기 정착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부문별 총평]

① 청사이전 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이전 및 사무실 재배치 업무를 큰 문제점 없이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 다만
 - 일반업무용 차량의 중형위주 임차·운영, 국외출장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숙박비 초과 수령,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 미서명 등의 사례가 있었음

② 물품관리 실태

- 재물조사의 부적정으로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관리되고 있는 현물과 일치하지 않음

③ 비정규직 운영실태

- 금융위 본부와 FIU 근무자간의 보수체계가 상이하고 보수 수준도 일관성이 없는 등 문제점이 발견됨

④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등으로 용역결과물(보고서)의 관리 및 활용 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⑤ 보증제도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조치 계획을 회신한바,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 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음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청사 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I]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조직규모와 기능면에서 구 금융감독위원회보다 확대되어 구 금감위사무실(금융감독원 건물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금융위 사무실을 현재 청사(서초구 반포로)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작업은 짧은 기간내에 신속하게 실시해야 하는 반면,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의 예산집행은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청사 이전과정에서의 예산집행 실태」를 표본 감사대상으로 선정
- 아울러, 평소 공무원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국외출장 경비집행,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 대한 '08.1~5월 기간중 실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함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금번 감사는 별도의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 짧은 감사기간(5일)에 선정된 감사대상업무(청사이전 및 국외출장 경비 등)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청사이전과 관련된 경비의 경우 청사이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여부, 관련업체 선정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으며

- 업무용차량 운영의 경우 조직개편 후 신규추가 수량 및 차종 운영의 적정성 등을 감사했으며, 국외출장 경비 집행실태 및 정부구매카드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 혁신행정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관련서류(청사이전계획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차량운행일지, 지출관련 영수증 등)를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지출관(지출관 보조 포함)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III] 감사 결과

□ 금융위 '08년 총예산은 1,037억31백만원으로서, 금융위 본부(160억78백만원), 금융정책사업비*(792억52백만원), FIU사업비(53억60만원), IBRD차관 원리금상환금(30억41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금융정책 사업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669억4백만원), 역모기지론 출연(70억원), 금융전문대학출연(20억원), 모기지론 이차보전(16억39백만원), 금융시스템 시스템선진화(10억78백만원), 정책연구개발(6억3천만원)등으로 구성

- 금번 청사이전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는 총 14억25백만원으로서 주로 금융위 본부예산을 집행하였는바, 주요 지출내역은

- 이사비용 및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 356백만원, 사무실 등 임차료 297백만원, 집기 등 구입비 133백만원, 통신시설 관련 경비 500백만원 등임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경비 소요 부문	집행액	총집행액 대비비율	비 고
계	1,425	100	
이사비용	31	2.2	
사무실재배치공사 등	325	22.8	
사무실 임차료 등	297	20.8	사무실(281), 차량(16)
집기 등 구입비	133	9.3	책상, 의자, PC 등
통신시설 관련	500	35.1	전화시설, 전산실 이전, 전자회의시스템, 메신저 도입 등
기 타	139	9.8	인건비, 무인경비시스템 등

* 세부집행내역 : <별표 1>

- ☐ 감사결과,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관련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업무용 차량 운영, 국외출장비(숙박비),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음

① 업무용 차량운영의 불합리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신설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인원수가 대폭 증가하고 (80→155명, FIU제외), 업무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업무용차량 소요가 증가
 - 금감원장을 겸직했던 구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의 차량을 사용했었으나, 금융위 출범에 따라 금감원장 직위가 분리되어 금융위원장 전용차량 소요가 신규로 발생하였음

- 또한, 금융위는 소관법률은 많아서(45개) 관련부처 및 국회 등과의 잦은 업무협약이 발생하는데, 단독청사에 입주해 있는 관계로 차량소요가 증가
- 그러나, 구 금감위는 업무용차량을 2대(부위원장, 일반업무용)만 운영했고, 구 재경부(금융정책국)는 업무용 차량이 없었으므로 증가된 차량 소요에 비하여 운영차량 수는 적었음
- 이런 관계로 금융위는 조직개편 직후 업무용차량 6대를 신규로 추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

업무용차량 운영현황

(단위 : 대)

종 전(구 금감위)				변 경(금융위)			
대형	중형	소형	계	대형*	중형	소형	계
1		1	2	3	4	1	8

* 대형(3대)는 위원장 · 부위원장 · 외빈의전용

- 한편,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5조는 차종 및 차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면서, 일반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1,600cc 이하로 운영(동규정 별표1)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금융위는 특수업무용(외빈의전 등)으로 중형차량 4대를 신규로 임차했으나 실제운영의 대부분을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업무용차량은 1,600cc 이하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규정과 배치됨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② 기타 예산집행의 불합리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o 공무 국외출장 경비지급 부적정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제16조④항은 국외 공무출장을 함에 있어서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한·캐나다 FTA 협상(3.25~29)을 위한 국외출장시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그 숙박비(\$95)를 지급하였고, 한·인도 CEPA협상(4.1~4)을 위한 국외출장시에도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숙박비(\$95)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

o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관련지침 이행 불철저

-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고('08년부터 시행),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영수증에 실명서명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소속부서명' 또는 '금융위' 등으로 서명을 하고 있었음
-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대부분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었으나, 1.1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관련 업무추진비를 집행(995,000원)함에 있어서는 주된 상대방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라고만 기재한 사실이 있었음

○ 예산 지출과목의 부적정

- 일과 전·후 직무수행으로 인한 식사비용은 특근매식비(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함이 타당한데도 혁신행정과는 211일 아침 학습동아리(외 부강사 초빙 모닝클래스 : 김&장 정성구 변호사)를 마친 후 조찬비용(76,000원)과 5.13일 저녁 직원친절 교육 후 석식비용(73,000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수당지급의 부적정

- 5급에서 4급으로 승진('07.10.24)하면서 대우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산오류로 '07.12월부터 '08.5월까지 대우수당이 매월 지급(6회, 703,640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음
- '07.12~'08.2월분은 구 재정경제부에서, '08.3~5월분은 금융위에서 지급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별표1〉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예산과목	'08예산 현액 (A)	집행액(B)*		집행률 (B/A×100)(%)
계		2,693,330	1,424,557		52
소계		2,137,330	1,091,779		51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950,900	이사비용	31,359	15
			사무실 파티션 작업 등	78,000	
			전산실 이전 인건비 등	22,062	
			네트워크 공사 인건비 등	8,984	
			전자메일 라이선스 구입	2,200	
			소계	142,605	
	임차료	475,986	사무실 임차료	280,786	62.5
			차량 임차료(3~5월)	16,547	
			소계	297,333	
	시설장비유지비	211,823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등	223,305	105
	시설비	339,325	사무실 이전 재배치 공사	246,699	87
			사무실 이전 전기공사	33,000	
			금융위회의실 음향설비	10,230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5,868	
			소계	295,797	
	자산취득비	159,296	사무용 집기, pc 등 구입	132,739	83
	소계	556,000	332,778		60
정보화 지원사업	일반수용비	9,650	-	-	
	연구개발비	193,000	메신저시스템 신규 도입 등	55,800	29
	자산취득비	353,350	전산실 이전	195,938	78
			정책고객관리서버 도입	15,967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49,060	
			메신저시스템 신규 도입	16,013	
			소계	276,978	

*집행액은 청사이전과 관련된 비용만 기재

〈별표2〉

공용차량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차종 (차량번호)	기사	임대 (구입)일	임대료 (월)	연료	유류비(월)						용 도	월평균 주행 (km)
					1월	2월	3월	4월	5월	계		
에쿠스 35히7871		08.03.06	1,485	휘발유			843	776	778	2,397		2,324
체어맨 47히2026		08.04.04	1,058	휘발유			642	900	658	2,200		1,885
그랜저 35히7929		08.03.11	677	LPG			161	139	68	368		845
SM5 35히7972		08.03.19	580	LPG			116	195	200	511		1,062
SM5 35히7959		08.03.14	580	LPG			115	196	200	511		1,257
SM5 35히5560		08.03.14	580	LPG			10	194	230	434		1,112
SM5 35히7958		08.03.14	580	LPG			199	202	235	636		1,385
아반떼 01모7285		04.04.20	14,040	휘발유			192	163	277	632		1,013
계							2,278	2,765	2,646	7,698		

나. 물품 관리 실태

[1]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조직 규모가 확대되어 보유물품 수량 및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
 - 이에 따라 새로 보유·운용하게 되는 물품의 관리상태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으로 선정
- 감사 범위는 소수의 감사인력으로 물품관리 업무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 물품의 재고관리, 관리기관 설치,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법상의 기본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범위로 한정함

<2008년도 금융위원회 수시재물 조사 현황>

(’08.5월 현재, 단위 : 원)

합계	관리대장계	실사계	활용대상	불용대상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
수량	1,482	1,482	1,218	193	71
금액	801,607,532	801,607,532	701,274,952	94,947,780	5,384,800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07년~'08년 물품수급계획서, 수시재물조사결과표, 물품관리대장을 제출받아 물품수급계획의 수립여부 및 내용, 정기재물조사의 실시 및 결과 등을 서면으로 먼저 감사하고
-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관리대장과 대조하며 실지 감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음
- 실지감사는 재물조사표상 1,482개 물품을 전수조사 하기에는 시간과 감사인력 등의 여건이 충분치 않아
 - 식별이 용이하고 비교적 고가의 사무기기인 복사기와 노트북을 선별하여 시행하였음

[III] 감사 결과

- 서면감사 결과 물품수립 계획 및 정기 재물조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연1회 수립·집행되었고
 - 조달청의 「정부조직 통폐합 기관의 재물조사 실시」 요청('08.4.28)에 따라 수시재물조사를 실시, 재물조사표가 조달청에 통보('08.5.22)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현재 금융위는 총 28대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대장에는 7대만 기재되어 있고

- 조직개편 이후 추가 구입한 노트북 19대와 구 재경부에서 이관된 노트북 5대 중 2대가 미기재 되어 있는 등 총 21대가 미기재 되어 있음

<물품관리대장 미기재 노트북 현황>

구 분	대 수	실지 관리과
금융위 회의용	19	의사운영정보팀
구 재경부 이관	1	시장분석과
	1	글로벌금융과
미기재 총계	21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다. 비정규직 운영 실태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FIU)와 구 금융감독위원회는 비정규직을 각각 11명, 14명 등 총 25명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 두 기관의 통폐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처우는 없었는지, 두 기관의 비정규직 운영(근무조건, 급여, 4대보험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 조직개편 직후 신규채용(8명)의 필요성·절차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 필요가 있었음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비정규직 운영 기본계획 수립여부, 채용절차 및 방법, 예산 현황 및 보수체계 등을 감사대상으로 하면서,
 - 특히, 비정규직(총 31명)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보조원(21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
- 감사방법은 근로계약서·관련 예산서 및 급여지급서·4대보험료 납부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인사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Ⅲ】 감사 결과

□ 비정규직 관련 서류를 점검한 결과, 금융위 본부는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07.9.27, 금감위 제정)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 FIU는 본부와 달리 근로계약서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비정규직은 총 31명으로서, 속기사·YP·에디터·사무보조원·운전원 등으로 구성

○ 조직개편 이후 2명* 퇴직, 8명 신규채용으로 6명이 순증 되었음

* 1명은 금감원 취업, 1명은 건강상 이유로 퇴직

- 이는 조직규모 및 업무범위 확대로 사무보조원 2명, 공용차량 증설에 따른 운전원 4명 등 신규 추가소요가 발생한 것에 기인

구 분	인원 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속기사	2	의사운영팀, 위원회 속기업무
YP	1	금융정책과, 규제개혁 업무
에디터	3	금융정책과, FIU(2명), 영문 교열
운전원	4	업무용차량 운전
사무보조원	21	각과 및 비서실, 사무보조
계	31명	

□ 비정규직 신규채용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후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는바, 신규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4대보험의 경우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

○ 다만, 금융위 본부와 FIU와의 보수체계 상이 및 보수수준의 불균형이 있었음

□ 본부와 FIU의 사무보조원의 보수체계를 비교해 보면

- 본부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금융위 훈령)에 근거하여 근속연수별 연봉표에 근거한 기본연봉에 더하여 정근수당·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지급비율이 상향(월봉의 100%까지)되며, 성과급은 최대 80만원까지 지급

- FIU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명시하고 매년초 연봉 재계약을 하며, 정근수당과 성과급은 없음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소속이었다가 금융위 본부로 소속이 바뀐 직원은 본부 보수체제로 운영

- 시간외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본부는 시간외 근무를 월간 최대 15시간(시간당 8,092~8,680원* 최대 13만원)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 근로기준법에 의한 비정규직 시간당 보수 산출근거에 따름

- FIU는 월간 최대 20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인정 (시간당 5,000원, 최대 10만원)

□ 본부와 FIU 사무보조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해 보면

- 본부 신규직원('08년 채용)의 경우 연봉이 13.5백만원 수준에 이르는데 반하여, FIU의 '05년 채용자는 12.9백만원에 불과함

본부와 FIU 보수체계 및 수준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보수 체계				연간보수 수준(채용연도별)				
	기본 연봉	정근 수당	성과 금	시간외 수당	'01	'04	'05	'06~7	'08
본 부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월 봉 의 10~100%)	32~38	월 한도: 15시간 단가: 8,092~8,680원 최대지급: 월13만원	1,525	1,488	-	1,414	1,353
FIU		없음	없음	월 한도: 20시간 단가: 5,000원 최대지급: 월10만원	1,588	1,436	1,285	-	1,224

* 연간 보수수준은 시간외 수당,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임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FIU가 소속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어느정도 보장한다 할지라도, FIU소속 비정규자의 근무환경·업무량·업무난이도·전문성 등이 본부 소속 비정규직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보수체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함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별표1>

비정규직(사무보조원) 연봉현황

(금액단위 : 천원)

연도	본 부				F I U		
	채용월	성 명	근무부서	연 봉*	채용월	성 명	연 봉
2001	7월		의사운영팀	15,248	5월		15,876
	11월		대 변 인 실	15,248	7월		15,876
2002	-		-	-	6월		15,876
2003	6월		중소서민과	14,998	-		-
	7월		혁신행정과	14,998			
	11월		구조개선과	14,998			
2004	12월		사무처장실	14,877	12월		14,364
	12월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14,877			
2005	-		-	-	5월		12,852
2006	7월		보 험 과	14,139	-		-
	11월		정책홍보팀	14,139			
	12월		공정시장과	14,139			
2007	3월		법무담당관	14,139	-		-
	4월		자산운용과	14,139			
2008	4월		위 원 장 실	13,530	7월		12,240
	4월		운전원	23,400			
	4월		운전원	23,400			
	4월		운전원	23,400			
	5월		중선위원실	13,530			
	5월		혁신행정과	13,530			
	5월		글로벌금융	13,530			
	5월		운전원	23,400			

* 본부 비정규직 연봉은 성과상여금이 미반영된 금액임

** 속기사 2명, 에디터:3명, YP 1명 등 6명은 제외함

<별표2>

2008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연봉표

☐ 사무보조원

(단위 : 원)

본 부				FIU
근무기간	기본급	정근수당	연봉액	연봉액
1년미만	1,127,500	미지급	13,530,000	연봉계약서에 따름
1년~2년	1,168,500	58,425 × 2회	14,138,850	
2년이상	1,209,500	120,950 × 2회 ~	14,755,900~	

* 1) 정근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 지급기준 준용

근무년수	월봉금액의 해당 지급률(연2회)	근무년수	월봉금액의 해당 지급률(연2회)
1년미만	미지급	6년이상 7년미만	30%
1년이상 2년미만	5%	7년이상 8년미만	35%
2년이상 3년미만	10%	8년이상 9년미만	40%
3년이상 4년미만	15%	9년이상 10년미만	45%
4년이상 5년미만	20%	10년이상	50%
5년이상 6년미만	25%		

2)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연봉의 급여로 성과급(별표 6) 지급 가능

3)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48시간 이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2008년은 최대 월 15시간 지급)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 실태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정책연구용역은 국회 예·결산 심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 ☐ 금융위 발족에 따라 기존에 수행한 용역결과물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 향후 유사정책 수립이나 용역과제 선정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 '07년 이후 정책연구용역(구 재경부와 구 금감위에서 수행)의 「관리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

< 200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연구용역 현황 >

(백만원)

구 재경부 금융정책국		구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구 금감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	553	4	133	3	88	24	774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적 충실성 보다는, 관리실태 및 활용실태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 ☐ 감사방법은 먼저 정책연구용역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 '07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및 정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파악한 후 담당과를 방문하여 확인·점검하고

- 정책연구용역심의회철, 연구용역관리현황, 연구용역결과물 관련철을 제출받아 그 관리·활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 점검했으며
- 현황(리스트)에서 과제 누락 및 PRISM 미등록과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면하여 확인했음

[Ⅲ] 감사 결과

- 용역과제선정은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과제의 중복여부, 계약방법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 '07.6월 국회 결산 심사시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용역사업은 문제가 있으므로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차년도 용역과제를 선정하여 용역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담당과에서 '09년 예산 확정전에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용역과제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음
- 용역대금결제 부분을 점검한 결과 납기를 준수하고 있고, 하자 검수부분을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정책연구용역예산의 이·불용을 점검한 결과 '07년 용역과제 24건중 2건만 이월되었으며, '08년 용역예정과제 약 20건도 이월 또는 불용 비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위가 신설된 관계 등으로 현황관리 및 PRISM 미등록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각 과로 부터 받아본 결과, 2개부서(△△△과, △△△과)가 '07년 수행과제 24과제 중 3과제를 리스트에서 누락했으며
- '08.6.24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등록 현황을 점검한 결과, 24과제 중 13과제만 등록되어 있고 △△△과, △△△과, △△△과, △△△과, △△△과 등에서 11과제를 등록하고 있지 않았음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2007년도 금융위원회소관(재정부 및 금감위) 정책연구용역 현황

과 명	과 제 명	계약자	계약 방식	기간	계약금 (천원)	현황	특 등 여부
구 금 안 정 책	어음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의	07. 2. 9 - 5. 8	14,250	×	○
	금융산업 선진화에 대한 의견 조사		수의	07. 7.25 - 8.24	28,500		×
	소비자금융현황 및 제도화 방안		수의	07. 8. 3 - 11. 2	23,750		×
	금융법령 · 법규 영문화		수의	06.12.11 - 5.10	150,000		×
	금융시장 현황지표 산출과정 자동화프로그램 개발		수의	07. 6.26 - 8.25	19,000		×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방안 연구		수의	07. 9.21 - 12.20	28,500		○
	국민소득 2만불시대 금융의 역할		수의	07.10.19 - 12.18	28,500		×
	해외단기 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연구		수의	07.10.12 - 12.11	28,500		×
	홍콩사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바림직한 해외진출 전략 모색		경쟁	07.10.26 - 12.11	38,000		×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은행지배구조 개선방안		경쟁	07.10.29 - 12.13	28,500	×	○
	금융업의 직무와 업무수행 역량 분석		경쟁	07.11.2 - 12.17	19,000		×
	뉴욕 런던시 등의 금융클러스터 조성사례의 정책적 시사적 연구		수의	07.11.5 - 12.20	33,000		○
	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수의	07.11.15 - 12.20	25,000		×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정의 국제화 방안 연구		수의	07.11.19 - 12.24	29,000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경쟁	07.11. 7 - 12. 7	7,800		○
	주요선진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제도현황 연구		수의	07.10.25 - 12.14	21,800		○
	아시아 전자금융시장 분석과 한국 기업의 진출 전략		수의	07.12.20 - 08.2.19	30,000	×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경쟁	07. 7.30 - 12.14	33,200		○
	역외금융기관, 역외 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경쟁	07. 9. 5 - 12.20	38,000		○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금세탁 방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경쟁	07.10. 5 - 12.20	28,500		○
금 감 위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쟁	07.10. 5 - 12.20	33,000		○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수의	07.10.19 - 08.3.4	45,000		○
	펀드판매망(채널) 선진화 방안		수의	07. 9. 7 - 12.20	21,000		○
계	기업상장제도의 국제적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수의	07. 7.24 - 10. 8	22,000		○
					773,800		

라.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는 향후 감사원의 기관감사, 특별감사* 등에서 주요 점검대상이 되므로 사전 자체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영역임

* '07.3월 감사원은 「재정·금융분야 감사결과조치 이행실태」 감사실시

- ☐ '07년 이후 우리 위원회(舊 금감위, 재경부 금융정책국 포함)에 대한 감사원 감사 대상은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등 5개 부문*

*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특정업무 경비집행, 문서보안 실태, 공무국외여행 경비집행, 금융법규 영문화사업 사후관리

- 이중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가 가장 많았던(8건) 산업금융과 소관의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부문에 대하여 표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 부서에 전파하여 참고토록 함

(Ⅱ) 감사방향 및 방법

- ☐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내용보다는 조치여부 및 조치 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하도록 함

- 조치계획을 수립한 경우 동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를 점검

- ☐ 감사 방법으로는 우선 감사대상부서(산업금융과)로부터 조치 결과·계획 및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자 면담 및 유관기관(신·기보 등)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보완

(Ⅲ) 감사 결과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6개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1개사항) 및 조치 계획(5개 사항)을 회신

○ (조치 결과) 보증부 대출금의 용도와 유용(부동산 매입 등)
방지를 위한 신·기보 업무 지도·감독 강화 요구에 대하여

- 신·기보가 보증금을 회수토록 하고 금감원 등 지시로 은행이
보증부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음을 조치결과로 회신

○ (조치계획) '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등 5개 사항*에 대하여

* ①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②장기보증이용기업 보증축소 ③중복보증 해소
④기술평가보증제도 합리적 운용 ⑤보증연계투자 폐지 등 방안마련

- 신·기보 공동발주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금년 중 정부
정책에 반영 예정임을 조치계획으로 회신

□ 이밖에도 조치결과 및 계획 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였거나
추진예정임

○ 신·기보 보증부 약정서 개정(신·기보 사후관리 업무 감독강화),
보증업무 선진화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예정
(조치계획에 따른 정책수립 절차상 객관성 확보) 등

□ 따라서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일련 번호	지 적 내 용	조치구분
1	업무용 차량 운영의 불합리	시정
2	국외출장시 숙박비 과다 수령	현지조치
3	정부구매카드 실명서명 미이행 및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초과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불철저	현지조치
4	직원교육 전·후 식비 지출과목의 부적정	현지조치
5	대우수당 지급의 부적정	현지조치
6	재물조사 실시 불철저	시정
7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미흡	현지조치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소관부서에 통보
하여 적의 조치토록 요구

6.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평가결과서, 경영평가보고서 및 자체 심사분석보고서

A. 행정인사과

- ☐ 금융위원회 주요 정책과제 '08년 자체평가보고서를 별첨(파일)과 같이 제출 합니다.

B. 기획재정담당관실

- ☐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업무평가결과서
: 붙임1 참조('0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0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09. 1

금융위원회

1. 자체평가 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 '08년 정부업무평가는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서열화는 폐지하되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부처 내 상대평가 실시
- 자체평가위원회가 주요정책 대상과제 전체에 대해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실시
- 계획 수립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충실성, 정책효과성, 성과달성도 등 주요정책과제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자체평가위원회)

- 자체평가위원회는 민간위원 14인(위촉직)과 당연직 위원 4인을 포함한 총 18인으로 구성
 - 새정부의 국정철학 공유, 정책기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높은 식견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 주요정책 이외의 기관역량,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구성
- 금융정책소위(7명), 금융서비스 소위(7명), 기관역량* 소위(4명)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적 점검과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

*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6.16), 그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안 마련(06.24)

* 기관역량 : 조직, 인사, 변화관리, 정보화, 정보공개(재정성과포함)

(평가지원조직)

○ 평가 총괄 담당 : 혁신행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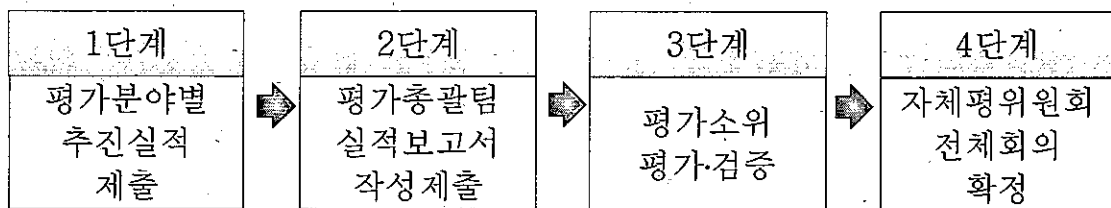
- 성과달성도 등 평가지표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등 부문별 자체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지원

○ 소위원회별 평가지원 T/F

- 소위별로 금융위 소관부서를 중심으로 평가지원 T/F를 구성
- 평가지원 T/F는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평가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자료 준비 등 위원회의 평가활동을 지원

□ 평가방법

○ (단계적 평가) 내부 평가지원과 함께 소위위원회, 자체평가 위원회로의 단계적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



- * 증빙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소위원회에서 적절한 평가 및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체회의에서는 과제 전체에 대한 균형적인 평가를 도모하는데 중점

○ (상대평가)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상대평가 실시

- 평가지표 중에서도 정성적 평가 성격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병행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

※ 상대평가 대상 평가지표

1.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3.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0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전략목표는 5개, 성과목표는 14개이며, 전체 관리과제 31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

○ 평가지표

평가지표	측정항목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 해당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2. 평가결과 총평

(1) 평가결과 개요

- ☐ '08년도 14개 성과목표, 31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우수 5개(15%), 다소우수 8개(25%), 보통 13개(40%), 다소미흡 4개(15%), 미흡 1개(5%)로 나타남
 - 우수한 과제는 금융규제 전수조사,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 산업은행 민영화, 회계·공시제도 개선, 헤지펀드 도입이며, 미흡한 과제는 자산유동화(ABS)제도 개선인 것으로 평가됨
- ☐ 전체 44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6.4%로
 - 34개 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0개 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성과목표 미달성은 국회 일정지연으로 인한 법안 통과 지연 및 금융위기로 인한 정책 환경변화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 금융규제 전수조사,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 산업은행 민영화, 회계·공시제도 개선, 헤지펀드 도입은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 금융규제 전수조사는 현존하는 모든 금융규제에 대해 존치·완화·폐지 여부를 '수요자(민간) 주도'로 심사·결정 함에 따라 상위 성과목표인 “규제개혁 효과의 전략적 추진”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음

-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은 은행업과 보험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은행법과 보험업법 개정을 적기에 추진하였으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규제대상인 시장참여자의 needs를 반영한 입법을 추진하였음
- 산업은행 민영화는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단기간내 민영화 방안 및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그룹 육성 기반 조성으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회계·공시제도 개선은 국제회계기준 수용 등과 함께 우리나라 공시제도를 글로벌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공시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 헤지펀드 도입은 리스크 대비 고수익 상품 설계, 위험관리 수단 제공 등을 통해 자본시장 효율성과 유동성을 증진 시키고,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됨

(3) 개선·보완 사항

□ 자산유동화(ABS)제도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 자산유동화(ABS) 제도 개선을 위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 유동화 관련 공시 및 등록제도 개선, 합성CDO 발행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 하였으나,
- 전세계적으로 유동화증권의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와 유동화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당분간 유보키로 함

- 상황이 호전될 경우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재추진 할 것이며,
- 법 개정 전이라도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은행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화 커버드본드(Structured Covered Bond) 등 새로운 유형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원(08.5월~)하였음

< 평가결과 종합 >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금융규제 전수조사	우수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	우수
금산분리 완화의 단계적 추진	다소우수
산업은행 민영화의 단계적 추진	우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다소우수
금융회사 해외 진출 규제완화	보통
금융중심지 육성	보통
신BIS 도입을 통한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	다소우수
증권사리스크 평가 시스템 구축	다소우수
RBC 제도 도입	보통
현장 밀착형 신속 대응체제 마련	다소우수
국내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보통
회계·공시 제도 개선	우수
예금보험 제도 개편	보통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보통
자산유동화제도(ABS) 개선	미흡
회사채 정보시스템 구축	보통
헤지펀드 도입	우수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선진화, 국제공조 강화	다소우수
심사분석 등 제도 운영의 내실화	보통
금융회사의 자금 세탁방지 업무 이행수준 제고	보통
국제수준의 투자권유·판매제도 도입 및 고객자산운용의 책임성 확대	다소우수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수익자 편익 중심의 공시, 감독 강화	보통
시장 투명성 제고	다소미흡
소액서민 금융재단을 통한 금융소외자 지원	보통
신용회복기금 설치를 통한 금융소외자 지원	보통
신용회복지원 기록 말소	다소우수
불공정 채권추심 방지법 제정	다소미흡
(가칭)KIF 설립 추진	보통
<선택과 집중>에 의한 보증지원체계 구축	다소미흡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윤리의식 확립 및 효율적 감사체계 구축	다소미흡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	금융규제 전수조사	우수
---	-----------	----

(1) 평가결과 종합

□ 현존하는 모든 금융규제에 대해 존치·완화·폐지 여부를 ‘수요자(민간) 주도’로 심사·결정

○ 150여개의 금융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 등을 대상으로 기능별로 4차례에 걸쳐 1,444건의 금융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상위 성과목표인 “규제혁파의 전략적 추진”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반을 마련

- 총 316건(전수조사 1,444건의 21.8%)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08년 중에 182개 과제를 개선완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어느 부처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규제를 전수조사한 사례가 없는 과제로서 지표가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평가됨
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금융규제 전수조사 계획 및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운영계획’을 수립('08.4)하고, 분야별로 10차례에 걸쳐 규제개선사항을 발표하는 등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
3.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금융규제 현황, 규제수준, 과거 규제개혁추진방법, 해외사례 등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금융업계·협회·연구원 등 수요자로부터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취합하였으며, 민간중심의 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
4.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금융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기능별 금융법령정비의 기반을 마련

(1) 평가결과 종합

□ 시장참여자의 needs를 반영한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

- 은행업과 보험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은행법과 보험업법 개정을 적기에 추진하였으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규제대상인 시장참여자의 needs를 반영한 입법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정책내용과 성과지표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대표성이 있음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은행법·보험업법개정안 국회제출 목표 달성 및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제정완료
3.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금융규제 전수조사·연구 용역·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 하였으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 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규제전수조사 등 그간 규제개혁과제를 모두 포함하여 금융산업 규제혁파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및 각 시행령 개정·시행 등 금산분리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은행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의 범위에서 BTO·BTL 관련회사 등을 제외함으로써 공적 연기금 등이 BTO·BTL 관련회사 투자로 인하여 산업자본에 해당되어 은행주식 보유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소

- 관련법안 연내 국회제출 및 동 안의 취지·기대효과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설득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제도개선 완료라는 목표치 설정은 적절함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제도개선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다소 우수	해외사례 조사 및 정책세미나 개최 등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시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자본 확충을 통해 우리 은행산업의 경쟁력과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제고 · 정부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한 장애요인 해소 · 국내 은행 경영지배구조 개선의 기반 마련 · 금산분리 완화·산업은행 민영화 등의 단계적 추진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산은 민영화 방안의 확정·발표, 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 산업은행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산업은행 민영화는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단기간 내 민영화 방안 및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그룹 육성 기반 조성으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민영화 목표를 시장마찰 해소에만 두지 않고 국정목표와 금융정책의 비전 달성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비전하에 추진하였으므로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인정됨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산은 민영화 방안 확정, 산은법 개정안 국회 제출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해외 정책금융기관 역할 변천 및 선진금융기관의 발전 사례를 조사하고 유관기관과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전문가의 의견 수시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지주사 설립이 지연되었으나, 외부적 요인 및 업무 난이도를 고려하여 점수 부여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그룹 육성 기반 조성으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등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금융그룹 육성의 계기 마련

- 관련법안 연내 국회제출 및 동 법안의 취지·기대효과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설득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제도개선 완료라는 목표치 설정은 적절함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제도개선 관련 법안의 국회제출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다소 우수	지주회사 관련 해외사례 조사 및 정책세미나개최 등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외환위기와 같이 그룹 단위로 일어날 수 있는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킴 ·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기 마련 ·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그룹을 육성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와 직장을 제공 ·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로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기반 마련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우리 금융회사의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은행의 해외진출시 감독당국에 원칙적으로 사후보고, 예외 사전협의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국회제출 및 보험사의 해외자회사 주식소유에 대해 자회사 주식소유 총액 한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완료

- 향후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의 과정에 성실히 대응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은행 및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완화 중 사전협의 완화와 지분취득 제한 철폐가 중요하므로 지표 적절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은행 해외진출을 위한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및 보험사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취득 제한 철폐를 위한 시행령 개정 완료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수요 분석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보험사 해외진출을 위한 기회 증대 · 개방 및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금융 가속화

(1) 평가결과 종합

□ 국내외 금융회사와 금융전문인력이 모여 금융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

- 관계부처, 금융협회 및 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개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09.1월 금융중심지 지정
- 국내외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및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개소
 -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및 금융중심지 조성발진 기본계획 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과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중심지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서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됨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다소 우수	위원회 개최실적 등은 목표가 달성되었으나, 금융중심지 지정시기는 지자체 심사자료 보완 등의 사유로 다소 지연('09.1월 지정)
3.계획수립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금융산업선진화 의견조사, 위원회 구성,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금융중심지 지정이 다소 지연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금융산업 성장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1) 평가결과 종합

□ 금년부터 시행되는 신 BIS기준에 의한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

- 은행 자체적인 평가 모형에 의한 기업등급 평가를 인정하는 내부 등급법의 승인으로 은행의 최저자기자본 비율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은행 대출여력을 늘리는 효과
- 내부 등급법 승인신청을 한 9개 은행에 대하여 8개 은행에 대해 심사에 착수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신 BIS 협약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은행 자체적인 기업 신용도 평가가 중요하므로 지표 적절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75% 이상인 성과목표치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은행 자본 확충 효과 및 은행 수요 분석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금융회사의 건전성강화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방지

(1) 평가결과 종합

□ 제도개선을 통해 '08.7월부터 리스크평가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

- 증권회사의 리스크평가시스템 시험운영(Pilot test) 및 보완작업 완료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및 리스크 중심감독(RBS)체제 구축 기반 마련
- 시스템 구축 이후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리스크관리 인프라가 크게 향상되는 등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시스템 구축 여부가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목표치이며, 성과지표가 시스템 구축 여부 확인으로 규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리스크평가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여 성과 목표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다소 우수	증권업계 리스크관리실태 조사 및 설명회, 공청회, T/F 구성 등을 통한 외부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인프라가 확대 및 능력 제고를 통해 잠재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음

(1) 평가결과 종합

☐ RBC제도 종합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회사의 제도시행 준비 지원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 및 자본충실화 유도방안을 마련·추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 제고

- 특히, 국제적 정합성과 우리 금융환경의 특수성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감독제도 구축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성과지표인 감독규정개정 및 방안마련 등의 감독제도 개선은 비계량지표로서 추진 시 의견수렴 절차, 환경분석 등을 거치므로 목표달성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적절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성과지표인 감독제도 정비 및 도입방안 마련하여 당초 설정한 목표를 모두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다소 우수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를 개최한 후 결과 분석을 통해 도입안 마련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감독기구 주도로 개별 회사의 리스크 수준을 일일이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험회사 스스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1) 평가결과 종합

□ 주요 이슈 및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분석, 해외 동향 분석 및 보고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진행상황 및 한국시장에 대한 해외시각 수시 점검

-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리스크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조기 발굴 및 선제적 대응에 기여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시장별 동향 파악 및 위험 징후 발견 등은 시장분석 및 모니터링의 대표적 업무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다소 우수	성과지표인 미시·거시·금융산업 모니터링 체제 운영 및 가동은 목표치인 12번 점검 및 보고 등을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한은·KDI등의 시장분석 자료 및 각종 민간연구기관의 분석자료 등 외부자료와 그간 진행해왔던 정부내부의 시장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사례조시 실시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리스크 요인 조기 발굴 및 선제적 대응에 기여 ·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해외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분석, 대응논리 마련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해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대내외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 · 글로벌 위기 진화에 따른 시장 급변동 상황에서 시장 상황에 대한 즉각적 followup 가능

(1) 평가결과 종합

□ 관계기관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합동 포럼 개최를 통해 민간과 정부의 의사소통 활성화

- 일일 상황점검회의 및 매주 거시감독포럼 등을 개최하여, 정책당국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금융정책, 거시정책, 통화정책 등의 유기적 연계 등에 기여
- 연구기관, 신용평가기관 및 애널리스트 등 민간연구기관 등과 민관합동포럼을 개최하여 민간과 정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시장상황의 정확하고 빠른 업데이트 및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도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가동하기로 한 목표치는 적절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다소 우수	관계기관간 협의채널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매주 거시감독 포럼 개최 등 민관합동포럼 등으로 민관합동포럼 10회 이상 목표 초과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타부처의 협조체제 구축 사례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해 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협의채널구축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시급한 정책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 및 시장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 및 정보 수시 업데이트

(1) 평가결과 종합

□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도록 회계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과도한 회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

- 회계·공시제도 개선은 국제회계기준 수용 등과 함께 우리나라 공시제도를 글로벌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공시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국제회계기준 및 연결중심 공시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관련법령 정비를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으며, 공시제도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목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추진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외감법, 자본시장법 국회제출을 완료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관련 제도의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회계제도 선진화 추진단, IFRS 조기도입 자문 TF, 공시제도 개선 T/F등을 통해 기업 및 전문가 의견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기업 등의 과도한 회계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금융인프라 서비스 선진화 구축

(1) 평가결과 종합

☐ 예금보험제도 개편방안을 바탕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제출

- 예금보험제도 개편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예보제도 개편방안을 5월중에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1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과제추진 계획을 달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성과 지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목표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예금보험제도 관련 해외사례 수집·분석 및 예금보험제도 개편 T/F 운영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 달성

(1) 평가결과 종합

□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및 부처합의안 마련

-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안 및 계획을 마련하고, 시장 전문가,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F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추진 방안을 구체화
- 콜 시장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단기금융시장 제도개편에 따른 시장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제도개편 방안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점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최초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인정됨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다소 우수	제도개선안 마련이라는 목표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다소 우수	단기금융시장 통계 및 단기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추진하였으나 제도개선을 일부 실시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기관간 RP거래 비중 확대 등 자금중개기능의 다양화라는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자산유동화(ABS) 제도 개선을 위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 유동화 관련 공시 및 등록제도 개선, 합성CDO 발행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마련

-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유동화증권의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와 유동화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법 개정을 당분간 유보
- 법 개정 전이라도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은행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화 커버드본드(Structured Covered Bond) 등 새로운 유형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원

- 상황이 호전될 경우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재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ABS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므로 성과 지표는 적절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보통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였음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금감원, 업계, 학계, 법률전문가 등으로 「자산유동화법 개정 T/F」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미흡	ABS법 개정안 국회제출 지연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현행 제도를 활용한 새로운 유동화제도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자금중개기능 다양화”라는 상위목표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고수익채권의
부도율·회수율 정보시스템 구축

- 부도율·회수율 정보시스템 구축은 채권시장의 오랜 과제였으나 관련 정보가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보유 기관간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하여 시스템구축에 애로
- T/F를 구성하여 20여차례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부도율·회수율 정보 시스템 구축작업을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부도율·회수율 시스템 구축은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채권시장의 오랜 과제였으므로 적절한 지표임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다소 우수	'09.1월중 회사채 정보시스템 구축 예정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다소 우수	관련 통계, 보고서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채권 가격결정 및 모델 구축이 다소 지연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함에 따라 고수익채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

(1) 평가결과 종합

□ 헤지펀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마련

- 헤지펀드 도입은 리스크 대비 고수익 상품 설계, 위험관리 수단 제공 등을 통해 자본시장 효율성과 유동성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됨

- 1단계로 기존 사모펀드의 진입규제·펀드 설립규제 및 차입금지 등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여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헤지펀드를 허용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금번 헤지펀드 도입이 가능하므로 성과지표 적절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자본시장법 국회제출 완료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선진국 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였고, 학계·변호사·업계 등의 전문가로 T/F 구성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 활용, AIMA회의 참석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 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하는 효과 발생

(1) 평가결과 종합

□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춰 선진화 달성

- 시행령 제·개정, 테러자금조달 방지체제 구축, 카지노의 자금 세탁방지제도,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등을 시행
 - 이를 통해 우리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됨
- 활발한 국제활동과 국제공조 강화로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 성공리에 개최하고 주요 3국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국가간 정보교환/상호협력의 기반을 확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08년 FIU의 대표업무로 성과지표가 대표성을 충실히 확보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성과 목표를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다소 우수	외국의 FATF 상호평가 수검사례 분석 및 경험 청취,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와 국제공조 강화의 충실한 달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글로벌화의 기반을 제공

(1) 평가결과 종합

□ 심사분석의 효율화를 통한 소요기간 단축

- 다양한 교육을 통한 분석자의 역량강화 및 분석시스템 효율화를 통하여 심사분석 소요기간 단축
 - 전산시스템(Kofis)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기초분석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기제공된 사건에 대한 분석시간 단축
- 행정정보 입수 온라인화 작업
 - 출입국정보 온라인화 완료 및 가족관계부 온라인화 협의
 - 행정자료 협조기관 및 법집행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지표가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평가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심사분석소요기간 평균 32.4일(45일 목표), 주요 행정정보의 75% 온라인화(70% 목표) 등 목표 초과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06, '07년 심사분석소요기간을 산출하여 추이를 분석한 후, '08년의 성과목표를 설정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심사분석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행정정보 입수 온라인화 목표 달성

(1) 평가결과 종합

□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제도(AML) 이행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AML 업무지침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하고 전국적 순회교육·홍보 활동 등을 통해 적극 지원

- 지속적인 AML교육과 제도이행 점검·지도활동을 펼친 결과 혐의거래보고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AML이행수준 개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제도이행을 위한 기본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절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금융회사의 업무지침개정 100%(목표 67%), AML모니터링 시스템구축 금융회사수 24개(목표16개), 금융회사 AML 담당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79%(목표70%) 등 목표 초과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다소 우수	금융회사의 AML모니터링 구축사례와 혐의거래보고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체계 개선 및 혐의거래 보고실적 증가 ⇒ 「금융거래의 투명성」 및 「건전한 금융시스템 구축」에 기여 · 금융회사의 AML 적극이행이 FATF 가입을 위한 상호평가시 긍정적인 효과 거양 ⇒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글로벌화」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국제수준의 투자권유·판매제도 도입 및 고객자산운용의 책임성 확대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정 및 보험업법 개정 추진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등 선진 투자권유규제를 도입
 - 적합성원칙, 불초청 투자권유 금지,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 등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고려 가능한 모든 형태의 보호장치를 도입
-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보험업법 개정을 적기에 추진
 - 적합성 원칙 도입, 상품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 강화, 기초서류 준수 의무 신설 및 허위·과장광고 규제근거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투자권유규제는 금융소비자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규제 중의 하나이므로 지표 적절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정 및 보험업법개정안 국회제출 목표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선진국의 투자권유규제 관련 입법례를 조사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학계, 투자자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실제 시행시점에서 구체적인 정책효과 발생 가능

(1) 평가결과 종합

□ 보수수수료비교공시 제도 도입 및 미스터리쇼핑제도 도입

- 비교·공시시스템제도 도입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공시·감독을 강화 하였으며, 이는 자산운용사 자율적으로 판매보수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거둠
- 미스터리 쇼핑제도 시행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 시범실시 및 선진 외국사례 집중 검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수익자 편익 중심의 공시·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판매보수 수수료에 대한 투자자의 감독체제 및 불완전판매 방지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성과지표는 적절함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성과지표 100%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관련 현황 자료 및 영국 사례를 분석하고 TF 구성 등을 통해 업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 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불완전 판매 사전 방지 등 금융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조사업무 절차 및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시장 투명성 제고

- 우선사건 처리기준 마련, 공동조사 처리기준 마련, 증선위원장 긴급조치 기준 마련 등을 통하여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처리 절차를 효율화하여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함
- 불공정거래 시장정보시스템 개선, 불건전거래자 정보 공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선 및 거래소의 증권사 감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조사대상건수는 증가추세인 반면 조사인원은 감축되는 것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목표설정으로 판단됨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다소 우수	조사업무 절차 및 관행 개선은 달성되었으나, 조직개편 및 불공정거래 수법의 조직화·지능화·대형화 등으로 불공정거래조사처리율은 미달성(59.8%, 목표 : 66%)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분기 단위의 조사통계 및 불공정거래 사례 연구 등을 분석하고, T/F 구성·실무작업반 회의·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기관 및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 거래의 신속성·효율성 강화 및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 금융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을 통해 '08년말 현재 7개 복지사업자에게 총 271억 지원

-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에서 출연된 휴면예금을 통합 관리·운영하여 원권리자를 보호
- 휴면예금의 원권리자 지급준비금 이외의 재원으로 복지사업자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 구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08년.5월 누계 기준으로 파악된 국내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건수가 약 2,800건임을 감안할 때 목표치는 적극적으로 설정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현재 대략4,700건 지원하여 목표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관련자료 분석 및 수치례의 회의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각종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금융소외자에 대한 권익 향상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여 1천만원이하 채무재조정 및 환승론 사업 본격 시행

○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금융기관 배분금을 재원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여

-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채무를 재조정해 주는 한편 고금리(연 30%이상)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층에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론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사금융 실태조사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 및 환승론 사업을 본격 시행하였으므로 목표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08.3월~5월 금융소외자의 사금융 이용 현황 및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우수	금융소외자에 대한 권익 향상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자율적인 민간 협약에 의한 신용회복프로그램을 2년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

-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정보는 사실상 신용회복지원중인 저신용층의 신용등급 한계선(7등급)으로 작용하고 있었는 바,
 - 동 정보 삭제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의 신용등급 한계선을 제거함으로써 저신용층에 대해 기간경과에 따라 제도권 대출이 가능한 등급에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총 30.7만명에 대해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6.2일, 6.12일)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는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완료됨을 감안할 때 적절하게 설정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 근거 및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목표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저신용층 신용등급분포의 변화 추정 및 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업체와 업무협의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는 신용회복증인자의 신용등급 상향요인으로 작용하여 금융소외자에 대한 권익 향상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 금지되는 채권추심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민사상, 행정상 제재를 가하거나,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 공정한 채권추심의 풍토를 조성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성과지표는 적절하게 설정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법률안이 법사위 제출은 되었으나, 국회통과가 지연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다소 미흡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협의를 거침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가 다소 지연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미흡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고 있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권익 향상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한국정책금융공사(KPBC) 설립을 위한 정부 입법절차 완료

- 산은 민영화 추진에 따라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춘 시장친화적인 새로운 정책금융기관(KPBC)을 설립
- KPBC 설립을 통해 금융회사를 통한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하여 시장의 기업선별 기능을 활용한 선진형 정책금융 방향을 제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KPBC 법제정은 KPBC 설립의 가장 중요한 척도이므로 지표 선정은 적절함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선진국의 중소기업 지원방식 사례분석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 현황 분석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정부 입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국회 법안 심의일정 차질로 KPBC 설립 지연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KPBC 설립은 효율적인 정책금융지원체계 도입으로 공기업 선진화라는 국정목표와 산은 민영화를 통한 글로벌 플레이어 기반마련 등의 정책목표 달성에 초석을 제공

(1) 평가결과 종합

□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등 방안을 검토중이나, 금융위기 상황등 외부요인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추진시기는 연기

○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 등 외부요인이 안정될 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중기 정책금융 개편방안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신·기보 등 보증지원체계 개선은 중기금융지원체계 개선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중기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은 성과지표로 적절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구체적 방안 확정과 개편안 추진(법안 마련 등)은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일정이 연기된 상황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다소 미흡	다른 국가들의 보증기관 운영현황 사례를 검토하고 각종 통합방안의 장단점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금융위기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추진 일정 연기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다소 미흡	신보·기보 등 보증지원체제의 업무중복과 비효율성을 해소하여 효율적 정책금융체제 구축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금융위 공무원의 윤리의식 확립 및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청렴교육 및 결의대회 개최 등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전개하고, 금융위 감사규정(금융위 고시)과 보안업무시행세칙(금융위 훈령)을 제정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업무감사 실시, 예금보험공사 등 19개 금융기관에 대한 보안지도점검을 실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성과지표의 적절성	다소 미흡	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이 필요했음
2.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성과 목표를 달성
3.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구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타부처의 규정을 참고 하였고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법률 등)의 의견 수렴
4.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08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으며, 효율적 감사체계 구축을 통해 자체감사 및 산하 기관 감사를 차질 없이 시행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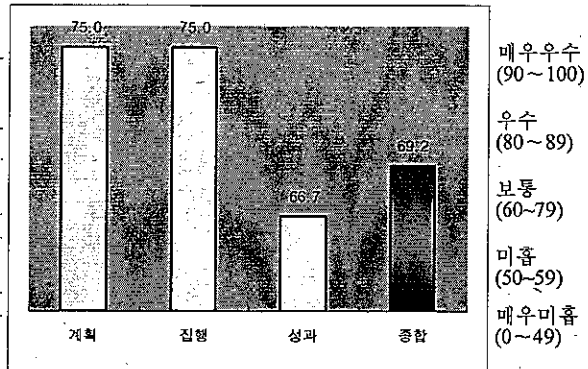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상황이 호전될 경우 자산유동화 법 개정을 재추진	상황이 호전될 경우 자산유동화 법 개정을 재추진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현황 파악 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붙임1. '0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자금세탁방지 추진 (일반회계, 기타운영비성 경비, 평가결과: 보통)

①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요
□ 종합	11	7	1	-	3
○ 계획	4	3	-	-	1
○ 집행	4	3	-	-	1
○ 성과	3	1	1	-	1



② 예산현황 (단위 : 억원)

2007(결산)	2008(결산)	2009(예산)
8.8	17	11

③ 성과계획

□ 성과목표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영 효율화 및 선진화를 통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행위의 효율적 방지

□ 성과지표

	'04	'05	'06	'07	'08	'09	'10
○ 심사분석 소요기간 (일)							
▪ 계획	52	50	48	46	44	42	40
▪ 달성	54	46	46	49	32		
○ 상세분석 대비 제공률(%)							
▪ 계획	22	26	30	32	34	36	38
▪ 달성	23	31	34	32	46		
○ 제도 선진화율(%)*							
▪ 계획	30	33	38	45	55	60	70
▪ 달성	33	34	40	49	60		

* FATF 6대 핵심권고사항의 평균 이행률(%)

4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금융정보분석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제도의 선진화를 통하여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제공조를 강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1년 ~ 계속
- 총사업비 : 11억원 ('08년까지 기 투자액* : 68억원)
- 사업규모 : 금융정보분석원 운영, 에그몽 총회 등 사업별로 상이
- 지원대상 : 금융정보분석원,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
- 사업시행 주체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 세부내역

구 분	'07예산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
□ 자금세탁방지추진	1,009	1,823	1,101		
○ FIU운영	1,009	1,123	1,101	△22	△2
■ FIU운영	1,009	1,123	1,101	△22	△2
○ 비정규직 보수(110)	94	93	88	△5	
○ 관서운영경비(210)	414	479	454	△25	
○ 여비(220)	208	216	210	△6	
○ 업무추진비(240)	70	70	62	△8	
○ 직무수행경비(250)	148	166	155	△11	
○ 포상금(310)	1	1	1	-	
○ 연금지급금(320)			13	13	
○ 국제분담금(340)	67	91	113	22	
○ 자산취득비(430)	7	7	5	△2	
■ 에그몽 총회		700		순감	
○ 관서운영경비(210)		688			
○ 여비(220)		1			
○ 업무추진비(24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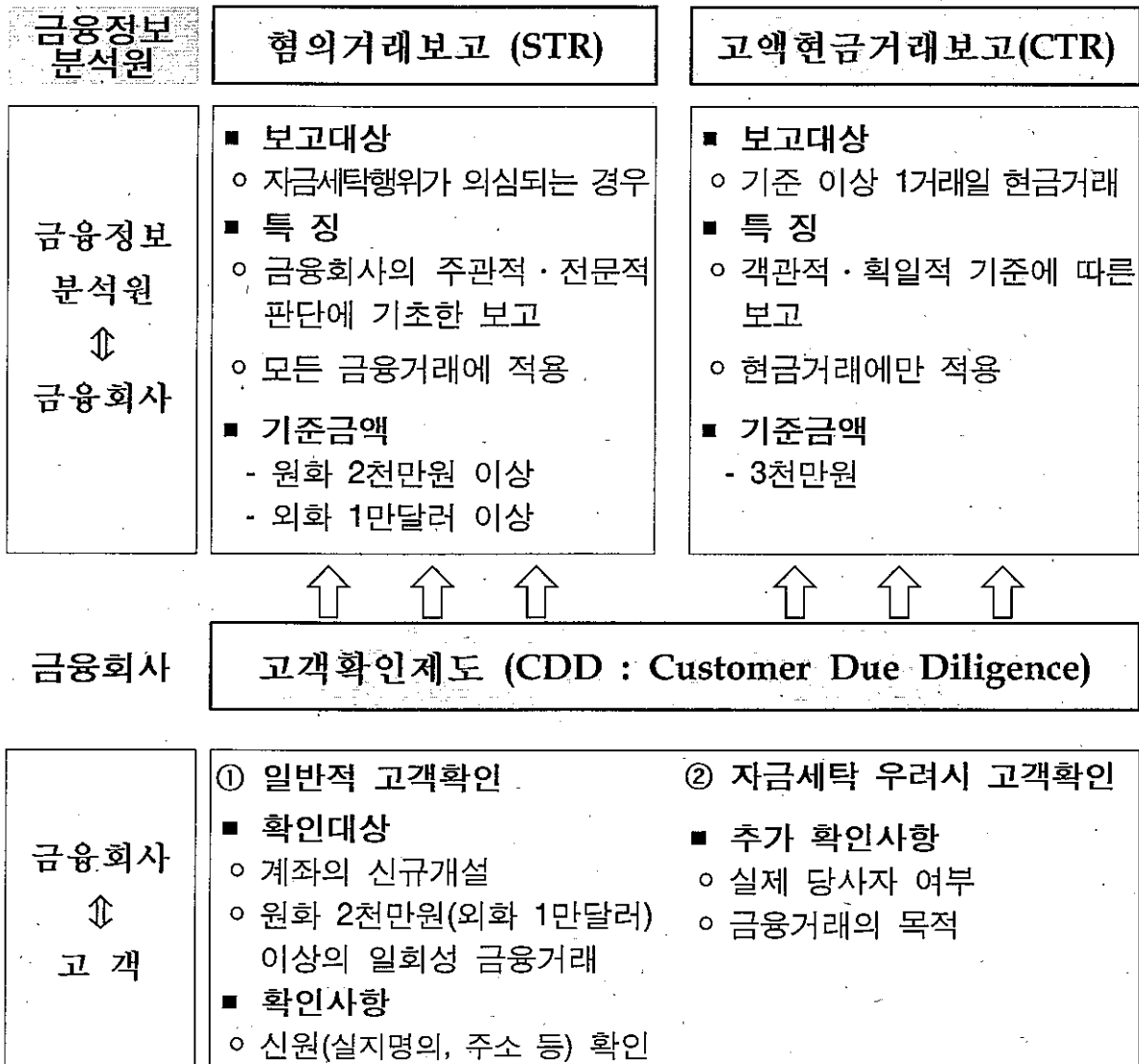
□ 사업추진 절차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회사(보고기관)로부터 혐의거래 등을 보고받아 심사분석 후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역할

* 금융정보분석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세탁·테러자금 관련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 국가기관(Egmont Group 정의,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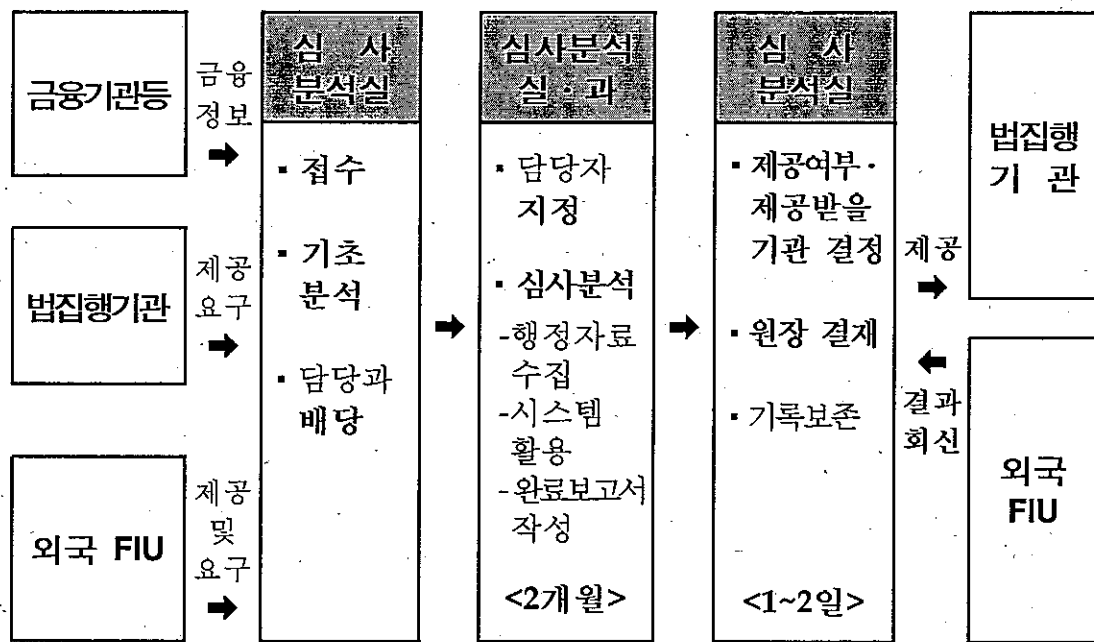


- 3대 제도 : 혐의거래보고 · 고액현금거래보고 · 고객확인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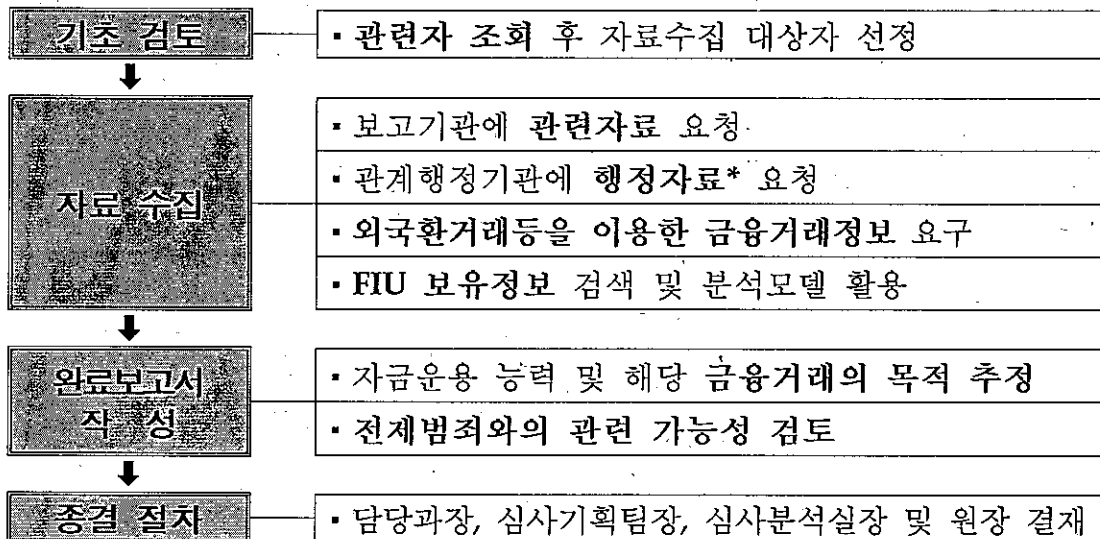


- 혐의거래보고에 대한 심사분석 업무

< 심사분석 업무흐름도 >



< 심사분석 절차 >



□ '08~'12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8년까지	'09년	'10년	'11년	'12년	'13이후
	68	11	13	17	19	21

7. 결산서

A. 행정인사과

- 별도제출

B. 기획재정담당관실

- ☐ 최근 3년간 예산서

- 별도제출

8. 영업실적, 재무현황 및 부채현황

☐ 영업실적, 재무현황 및 부채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환관리 현황 및 환차손 평가액

☐ 최근 환관리 현황 및 환차손 평가액

- 해당사항 없음

10.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07.1.1일부터 '08.2월말까지 舊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는 총 1,461건, 舊 금융감독위원회는 총 223건의 민원 접수·처리
- '08.3월 금융위원회 출범이후 '09.8월말까지 민원 접수·처리 건수는 총 5,798건

(2007.1.1 ~ 2009.8.31 접수기준)

		해결*	자체종결**	상담·안내	정책제안	합계
'07	재경부	37건	106건	1,143건	2건	1,288건
	금감위	18건	41건	133건	0건	192건
'08.1 ~ '08.2	재경부	0건	0건	172건	1건	173건
	금감위	7건	2건	22건	0건	31건
'08.3 ~ '08.12	금융위	548건	337건	1,872건	34건	2,791건
	금융위	443건	602건	1,953건	9건	3,007건
합계		1,053건	1,088건	5,295건	46건	7,482건

* 해결 : 민원요지충족, 절충안 합의, 기관간 조정사안, 법제도상 수용불가, 법제도상 수용근거 부재 및 상충, 수사·소송·사인간의 분쟁, 민원인 주장이 사실과 다름

** 자체종결 : 민원취하 / 착수전 해결, 민원인 불명, 민원요지 불명, 동일민원 기처리, 선정기원 및 단순의견 개진

11. 민원처리결과 통보 현황

□ 민원처리결과 통보 현황

- 인터넷 민원은 인터넷으로, 우편·방문·기타(팩스) 민원은 서신으로 민원처리결과를 통보
- 舊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 舊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민원처리결과 통보 건수는 총 6,178건, 서신 민원처리결과 통보 건수는 총 1,304건

(2007.1.1 ~ 2009.8.31 접수기준)

		인터넷	서신	합계
'07	재경부	1,076건	212건	1,288건
	금감위	91건	101건	192건
'08.1 ~ '08.2	재경부	133건	40건	173건
	금감위	13건	18건	31건
'08.3 ~ '08.12	금융위	2,313건	478건	2,791건
'09.1 ~ '09.8	금융위	2,552건	455건	3,007건
합계		6,178건	1,304건	7,482건

12. 각종 계약 발주현황

□ 각종 계약 발주현황

- 별첨 1 참조

(별첨 1)

□ 각종 계약 현황(08.3월 - 09.8월)

(단위 : 천원)

과 제 명	용 역 비	기 간
케이블 TV 서비스 이용 계약	월589	08.4.1. - 11.3.31.
한국증권전산 CHECK단말 서비스 이용 계약	월3,696	08.4.1. - 09.3.31.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	49,060	08.4.2. - 09.3.31.
온라인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47,000	08.5.9. - 08.7.9.
메신저시스템 도입 계약	24,813	08.6.4.- 08.6.17.
전자서명(인증) 솔루션 도입 계약	9,500	08.7.9.
홈페이지 부분개편 용역	9,000	08.8.1.- 08.8.15.
PR 자문 서비스 계약	월 8,000	08.11.01.-09.1.31.
홈페이지 개편 연구개발	29,500	08.11.5-12.26
홈페이지 연계 홍보 블로그 구축 용역	26,600	08.11.07.-08.12.26.
금융민원센터 홍보 및 안내 동영상 제작 용역 계약	9,950	08.11.19.-08.11.28.
네트워크 및 PC 유지보수 계약	33,000	09.1.1.-09.12.31.
통신망 구축 용역 계약	35,113	09.1.16.-09.2.24.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	10,000	계약일 - 09.12.31.
뉴스모니터링 대행 계약	월 2,000	'09.4.1.-10.3.31
금융위원회 위기극복 포털 사이트 구축	25,000	09.5.11.-09.6.26.

13.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건별 계약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등 포함), 용역결과보고서, 용역별 계약서 사본

□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건별 계약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등), 용역결과보고서, 용역별 계약서 사본

○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 붙임2 참조

○ 용역결과보고서, 용역별 계약서 사본 : 별도제출

【붙임2.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 정책연구용역 현황(2005~2009.현재)

단위 : 백만원

연도	과제명	계약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05년	생명보험회사 장래손익 전망	박상래	수의	20
06년	금융규제 인식에 대한 실태 조사	박창균	수의	30
06년	금융집적지역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박동규	수의	29.5
06년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제도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도종진	수의 (유찰)	60
06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국균	수의	28.5
06년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연구	정규업	수의 (유찰)	43
06년	비영리단체를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안형도	수의 (유찰)	31
06년	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이병윤	수의	22.5
06년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연구	강동수	수의	25.5
06년	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요인과 대응방안	김동환	수의	28
06년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수의	20
06년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개선 방안	이상제	수의	30
06년	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수의	25
06년	갈등사례분석-금융실명제를 중심으로	홍범교	수의	9.5
06년	서민금융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정찬우	수의	25
06년	성과관리 시스템 확대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고승현	수의	26
06년	신용정보인프라 종합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수의	40
07년	기업 상장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엄경식	경쟁	22
07년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이병윤	수의 (유찰)	33
07년	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안형도	수의 (유찰)	38
07년	펀드판매 경로 개선 방안 연구	신인석	수의	21

연도	과제명	계약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07년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 체계의 선진화방안 연구	박찬호	수의	28.5
07년	주요 선진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제도 현황 조사	박준	수의	23
07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강동원	수의 (유찰)	28.5
07년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상일	수의 (유찰)	33
07년	홍콩사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현황분석과 바람직한 해외진출 전략 모색	박재하	경쟁	38
07년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은행 지배구조 개선방안	이병윤	경쟁	30
07년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	노희진	수의	45
07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위명숙	경쟁	10
07년	뉴욕, 런던시 등의 금융클러스터 조성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연구	한국회	수의	33
07년	금융업 직무와 업무수행 역량분석	김병연	경쟁	19
07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정의 국제화 방안	이성제	수의	29
07년	아시아 전자금융시장의 분석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이충열	수의	30
07년	어음제도 개선방안	김동환	수의	14.3
08년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정찬우	수의	30
08년	외환시장 발전방향	윤덕룡	수의	19
08년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연구	이진국	수의 (유찰)	40
08년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이동걸	경쟁	30
08년	FTA, 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연구용역	정의종	수의	40
08년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이동걸	수의	20

연도	과제명	계약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08년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 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오창석	경쟁	46
08년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감사 효율화 방안	정태수	경쟁	40
08년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경쟁	22.1
08년	홈페이지 개편 연구개발	박철휘	수의	29.5
08년	바명시적규제 개혁 외부평가	이관제	경쟁	25.1
08년	금융중심지 선정에 관한 금융전문가 의견 조사	이용수	수의	19
09년	금융상품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방지방안	신보성	수의	30
09년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이상제	경쟁	45
09년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효과 분석	이인형	수의	20.5
09년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최흥식	수의	40
09년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채욱	수의	30
09년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태준	수의 (유찰)	28.8
09년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김대일	경쟁	30
09년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장민	수의	35
09년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신보성	수의 (유찰)	32
09년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	이윤제	수의 (유찰)	35
09년	금융위기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시스템 설계 방향	김필규	수의	20

14. 최근 2년간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일자	홍보수단	홍보내용	홍보비용	홍보효과
2008.11.19 광고기간 (11.1일부터 11.30일까지)	지하철광고	글로벌금융위기극복관 련(생생정보플러스 금융위원회편)	3,300,000원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상황 등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국민 불안을 진정시킴
2009.7.27 광고기간 (7.3일부터 7.6일까지)	종합지, 경제지, 우가지 등 26개 매체 지면 광고	서민금융지원 등 (하반기 주요서민 정책홍보)	21,395,000원 (9개 부처 공동 부담 총액 192,555,000원)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 대국민 홍보 관련, 서민생활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 합동 광고

※ 홍보 관련 규정 : 없음

15. 정보통신 보안 관련

- 최근 3년간 보안사건 발생현황
(연도별, 유형별, 건별발생사유, 피해액, 재발방지 대응 방법 등)
- 2009년 07월 발생한 일명 디도스(DDos)공격 피해 내역
- 보안사고 발생시 유관기관에 통보 및 업무협조 내역
- 보안담당조직 및 인력, 예산 운용 현황

① 최근 3년간 보안사건 발생 현황

- 금융위 자체 보안사건 발생 사실 없음

② 2009년 07월 발생한 일명 디도스(DDos)공격 피해 내역

- 금번 디도스 공격을 받은 7개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지연

* 외환,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국민

- 금융정보 유출·불법이체 등의 금융사고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③ 보안사고 발생시 유관기관에 통보 및 업무협조 내역

- 보안사고 미발생으로 해당사항 없음

④ 보안담당조직 및 인력, 예산 운용 현황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정보통신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정보화 업무와 병행하여 2명이 수행
- '09년도 정보통신보안 예산은 5,760만원으로 백신S/W 구입 및 홈페이지 보안 등으로 활용

16. 최근 5년간 퇴직 직원의 유관 단체, 기관, 기업 의 재취업 현황

☐ 첨부 참조

□ 최근 5년간 재취업 현황

성명	직위(직급)	퇴직일자	재취업기관
000	부위원장(차관급)	08.03.13	LS네트웍스 고문
000	금융정보분석원장(고위공무원)	08.03.28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000	부이사관	09.03.26	한국자금중개 전무
000	서기관	09.05.15	신영증권 상무이사

17.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 파견 현황

□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

<금융위에서 파견 보낸 공무원>

직 급	파견일	파견기관
고공단 1명, 4급 2명	08.04.07~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4급 1명, 5급 1명	08.04.21~	미래기획위원회
4급 1명	08.10.02~	국무총리실
4급 1명	08.04.18~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고공단 1명, 4급 1명 5급 2명	08.12.01~	기업재무개선지원단
4급 1명, 5급 2명	09.02.12~	G-20 기획단

<금융위로 파견 온 민간전문가 : 별첨>

18. 임직원 인건비 지급현황

1) 임직원 인건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지 급 금 액
2008년	8,245,095
2009년(9월말 현재)	8,076,811

19. 최근 5년간 퇴직 직원의 유관 단체, 기관, 기업 의 재취업 현황

□. 최근 5년간 재취업 현황

성명	직위(직급)	퇴직일자	재취업기관
000	부위원장(차관급)	08.03.13	LS네트웍스 고문
000	금융정보분석원장(고위공무원)	08.03.28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000	부이사관	09.03.26	한국자금중개 전무
000	서기관	09.05.15	신영증권 상무이사

20.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실제운영 내역

- 복지지원금 지급 현황
- 호텔, 콘도, 골프 등 각종 사회편의시설 회원권 및 이용권 보유현황, 실제 이용실적

□.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최근 5년간 실제운영 내역

- 복지지원금 지급 현황

08년 맞춤형 복지지원금 : 87,155천원

09년 맞춤형 복지지원금(9월까지) : 77,788천원

- 호텔, 콘도, 골프 등 각종 사회편의시설 회원권 및 이용권 보유현황, 실제 이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21. 최근 5년간 임직원의 국내외 교육 및 연수 현황
(연도별, 종류별)

- 참석 대상자 및 인원, 기간, 장소, 교육 및 연수 내용, 비용(세부항목별 구분), 결과 및 실재업무 반영내역
- 교육 및 연수 관련 규정

□ 별도제출

1. 교육 및 연수 현황
2. 교육 및 연수 관련 규정

**금융위원회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규정**

2008

**금융위원회
혁신행정과**

금융위원회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규정

I. 목 적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우리위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II.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 [별표 1], 부칙(2006. 7. 21 대통령령19621)

2. 적용대상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 단,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기능직 공무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단, 운전원에 대해서는 연 10시간으로 함

III. 기본방향

□ 교육훈련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우리 위원회는 교육훈련 내용의 질적수준을 확보하고자 2010년까지 70시간을 교육훈련 기준시간으로 설정함

* '07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재경부 이체자 70시간(단, 운전원 10시간), 금감위 이체자 100시간

IV. 운영지침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시행령 별표 1)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

◇ 필요 교육훈련시간

: 「해당계급 근무연수×중앙행정기관별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근무연수 : “근무월(15일 이상 1월) ÷ 12”로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70시간
-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전직자의 경우 전보 또는 전직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단서)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 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위임은 부위원장까지만 가능함

3.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교육훈련여건, 업무특성, 인력 구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연 단위로 설정함 (2010년까지 60시간 이상으로 설정 가능)
- * 승진임용 자격여부 판단기준: 기준일 현재 해당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계급 근무연수×당해부처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 이상은 교육훈련 부서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게 한 교육훈련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4. 교육훈련의 내용(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되, 소속 직원의 역량개발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역량개발이 균형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별표 1>과 같이 설정함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인정시간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6.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시행령 제11조의4)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은 매년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연간 자기개발계획(<별표 3>)을 수립하여야 함
-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실적(<별표3>)을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 단, '08년 상반기의 경우 부처통합으로 1/4분기 실적확인에 어려움이 있는바, 2/4분기부터 분기별로 확인함

7. 교육훈련 실적 관리 등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직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교육·학습실적을 수시로 확인 및 독려하여야 하며, 혁신행정과에서는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하고 실적을 관리해야 함
- 혁신행정과에서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하고 실적을 관리함에 있어 부정확한 방법에 의하여 학습시간을 부여받은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당해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삭감하고, 3회 이상 적발시에는 당해연도 학습시간 전체를 불인정함

과장급 보조·보좌기관	인사·교육 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직원 교육·학습 실적 종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확인 - 교육·학습 실적 수시 확인 독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훈련의 추천·실적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실적은 'e-사람>교육훈련>교육실적관리(상시학습)'에 개인별로 직접 입력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 ■ 부서주관 교육 또는 개인학습시간 확인·인정

8.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9.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 혁신행정과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표3>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 시간을 확정함
- 확정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 2008년 12월31일까지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31일까지는 변경 전 소속부처에서의 근무기간과 교육훈련실적을 적용하고 2008년 1월1일부터는 동 규정을 적용한다.
3. 2009년 이후의 승진대상자는 2008년 이후부터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산정하고, 2008년 이후의 교육훈련실적을 합산한다.

<별표 1>

금융위원회 교육훈련 기준시간

구 분	시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70시간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14시간)

* 교육훈련 기준시간 중 20%(14시간) 이상을 교육훈련 부서주관으로 실시하는
민·관 교육기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대상 및 요건: 참고(p.10) 참조

<별표 2>

교육훈련 인정시간 기준표

구 분		교육·학습 내용	인정시간	비고 (확인자료)
기 관 주 관	교육기관 교육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 (기본·전문교육 포함)	교육시간 (최대100시간)	수료증 등
		민·관 교육훈련기관 사이버교육	교육시간 (연100시간 이내)	수료증 등
	국내외 위탁교육	학위취득과정 외	교육시간 (연100시간 이내)	수료증 등
		학위취득과정	과 목 당 : 10시간 학사취득 : 30시간 석박사취득:50시간 (연100시간 이내)	성적표 학위증명서
	직장교육	전문교육, 소양강의, 정부정책 전파교육 등	참석시간, 1일 8시간 이내	주관부서 참가확인
	워크숍	기관 또는 부서주관 워크숍·세미나 등	참석시간, 1일 8시간 이내 (주제발표: 발표시간3배가산)	주관부서 참가확인
	T/F 등	주요과제 추진을 위한 T/F 참여 등	참석시간, 1일 8시간 이내	부서장 확인
	멘토·코치활동	직장내 멘토/코치활동 (1월 이상)	6월미만 30시간 6월이상 50시간	사전결재, 결과보고 등
	정책현장 방문	출장명령에 의한 정책현장 방문·연수 (정책연수, 팀제훈련 등 단기 국외훈련 포함)	참석시간, 1일8시간 이내 (연 50시간 이내)	출장명령, 결과보고 등
개 인 학 습	연구·경진대회 입상	기관주최 연구, 경진대회 등 입상	(개인) 30시간/1회 (공동) 50시간/1팀	결과확인
	민간학원 등 교육이수	직무관련(금융·회계 등) 수강 전산·어학 등 수강	교육시간, 1일8시간 이내 (연100시간 이내)	수료증, 수강증 등
	학위 취득	학위취득과정	과 목 당 : 10시간 학사취득 : 30시간 석박사취득:50시간 (연100시간 이내)	성적표 학위증명서

구 분		교육·학습 내용	인정시간	비고 (확인자료)
개 인 학 습	자격증 취득	직무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국가자격증 기사 이상: 50시간 금융자격증, 산업기사: 30시간 사무관리자격증 : 10시간	자격증 사본
	저술	직무관련 전문서적 저술·출간 (최초만 인정)	(개인) 30시간/편당 (공동) 20시간/편당	책자
	연구모임, 세미나, 학술대회 등 참여	직무관련 세미나, 학술회의, 연구모임 회의 등 참여	참석시간, 1일 8시간 이내 (주제발표: 3시간 가산)	학습동아리 간사확인, 부서장 확인
	논문 및 칼럼 게재	각종 간행물에 직무관련 게재	논문 : 30시간/편당 칼럼 : 20시간/편당	논문, 칼럼등
	기타 학습활동	기타 학습활동으로 혁신행정과에서 인정하는 교육	교육시간, 1일8시간 이내 (연 50시간 이내)	혁신행정과 협의후 부서장확인

※ 주의사항

- 1)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당해계급 필요교육시간의 20%이상은 교육훈련
부서 주관으로 실시하는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은 이수연도의 민·관 교육훈련 기관
필수의무이수시간 범위내에서만 인정됨(총 교육훈련시간에는 포함)
- 2)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의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3)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것으로 봄(신규·승진 임용된 연도의 인정기준을 따름)
- 4)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
- 5) 중복적용되는 것은 교육시간이 많은 것으로 하나만 적용

※ (참고) 행안부예규 제161호('08.6.30)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 대상 및 요건

- 교육 기관 : 교육훈련기관 · 행정기관 · 민간기관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대상 교육훈련
 -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교육과정
 -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다수부처 전문교육과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직장훈련을 통한 전문교육과정 포함
 - 시행령 제30조, 시행령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 중앙인사위원회 주관 민간위탁교육 및 사이버 외국어 교육과정 포함
- ※ 민간교육기관의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판단
- 교육시간 요건
 - 1일 7시간 이상 운영되는 교육과정
 - 단일 교육과정으로서 1일 7시간 미만인 경우는 2일 이상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7시간 이상이면 인정
- 학사관리 요건
 -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기준 마련
 - * 출석 · 과제물 · 필기시험 · 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 실시
- 절차적 요건
 - 교육훈련부서의 교육명령(사전협의)을 득하여 교육 이수
- 장기 교육 등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
 - 대상 :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 학위 과정 등
 - 제한 : 이수 연도 부처의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이내로 제한(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
 - * 교육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까지 인정 가능

[예 시]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100시간,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이 20%인 부처
 - 기본교육을 150시간 이수하였을 경우
 - ☞ 총 교육훈련시간은 150시간을 인정하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으로는 20시간 내에서 인정
 - 국외훈련을 2년 6월 이수하였을 경우
 - ☞ 총 교육훈련시간은 부처 기준에 따라 인정하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으로는 20시간 × 3배인 60시간 내에서 인정

<별표 3>

[]년도 자기개발계획서 및 실적확인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	--	-----	--	-----	--

2.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구 분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연도		
	실적교육시간	기준교육시간	필요교육시간*	계획교육시간
총 교육시간		70		
교육훈련기관 교육시간		14 (=70시간×20%)		

* 해당계급 근무연수¹⁾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²⁾ (* 소수점 이하는 버림)

주1) “근무월÷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주2) '07년도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재경부 이체자 70시간(단, 운전원 10시간)

금감위 이체자 100시간

'08년도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70시간(단, 운전원 10시간)

3. 자기개발계획 면담

면담일시		면담장소		면담자	
부서장 제시 필요 교육분야 및 일정			합의 반영사항		

4. 분기별 계획 및 실적관리

구분	총 교육시간		교육훈련기관 교육시간		점검 일시 및 점검 의견
	목표	실적	목표	실적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연도말 계					

* 교육 종류, 내용, 인정시간 등 교육훈련 이수실적 세부내역 별첨 가능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최근 임직원의 국내외 교육 및 연수 현황

연도	종류	과정명	참석대상자	인원	기간	장소	비용 총비용	결과	
2008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기타)	제6기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과장급	2	20080529	20080724	중앙공무원교육원	164,000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기타)	제7기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과장급	3	20080908	20081014	중앙공무원교육원	246,000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기타)	제3기 6급리더후보자과정	건설직	2	20080218	20080314	중앙공무원교육원	-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기타)	5급승진과정	승진예정자	2	20080602	20080620	중앙공무원교육원	1,160,000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기타)	제21기 7급신규자과정 교육훈련	신규직원	1	20081020	20081114	중앙공무원교육원	455,000	역량향상
2009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기타)	제23기 7급신규자과정 교육훈련	신규직원	2	20090119	20090213	중앙공무원교육원	910,000	역량향상
2009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기타)	제4기 6급리더후보자과정	건설직	1	20090223	20090320	중앙공무원교육원	-	역량향상
2009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기타)	제8기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과장급	2	20090519	20090522	중앙공무원교육원	164,000	역량향상
2009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기타)	제9기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과장급	2	20090623	20090626	중앙공무원교육원	164,000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기타)	고위공무원 정기국내훈련	고위공무원	1	20080211	20081231	중앙공무원교육원	10,319,000	역량향상
2009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기타)	고위공무원 정기국내훈련	고위공무원	1	20090211	20100210	중앙공무원교육원	4,461,000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기타)	2008 국외훈련자 영어심화과정	국외훈련	1	20080324	20080418	중앙공무원교육원	1,390,000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기타)	2008 국외훈련자 영어심화과정	국외훈련	1	20080428	20080523	중앙공무원교육원	1,390,000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기타)	제1기 COTI 토요영어교실	전직원	1	20080503	20080719	중앙공무원교육원	-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기타)	제1기 COTI 토요외국어교실(중국어)	전직원	1	20080503	20080719	중앙공무원교육원	-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기타)	제2기 COTI 토요외국어교실	전직원	3	20080920	20081122	중앙공무원교육원	600,000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기타)	제2기 COTI 외국어교실(일본어)	전직원	1	20080920	20081122	중앙공무원교육원	200,000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기타)	및정보고서무미기	전직원	1	20081201	20081205	정부정보화교육센터	220,000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기타)	및정보고서무미기	업무담당	1	20081208	20081212	정부정보화교육센터	220,000	업무활용
2009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기타)	제1기 전화영어	전직원	2	20090311	20090605	행정안전부	-	역량향상
2009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기타)	2009 국외훈련자 영어심화과정	국외훈련	3	20090427	20090522	중앙공무원교육원	4,170,000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전문)	제2기 공직윤리 전문과정 교육	업무담당	1	20080414	20080418	한국지역정보개발원	70,000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전문)	감사원 감사기초과정	업무담당	1	20080526	20080530	감사교육원	187,500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전문)	ITIL Foundation과정	업무담당	1	20080616	20080620	정부정보화교육센터	470,000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전문)	의회정책전문가과정(CSP)	업무담당	1	20080627	20080925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전문)	VB 엑셀 매크로 프로그래밍	업무담당	1	20080825	20080829	통계교육원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전문)	규제개혁과정	업무담당	5	20080828	20080829	중앙공무원교육원	630,000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전문)	e-사람인사사무	업무담당	1	20081110	20081113	중앙공무원교육원	232,000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전문)	2008년 e-사람 연말정산교육	업무담당	2	20081218	20081218	행정안전부	-	업무활용
2009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전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업무담당	1	20090310	2009031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업무활용
2009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전문)	디지털탈세방지시스템(나라발) 교육	업무담당	1	20090413	20090413	기획재정부	-	업무활용
2009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전문)	dBRAIN 사용자교육(지출/관세운영경비)	업무담당	1	20090420	20090422	행정안전부	-	업무활용
2009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전문)	부처 정책홍보 사이트 운영교육	업무담당	1	20090521	20090521	문화체육관광부	-	업무활용
2009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전문)	제2차 홍보전문교육과정	업무담당	1	20090708	20090710	문화체육관광부	50,000	업무활용
2009	기관주관 공무원 교육기관교육(전문)	제3차 홍보전문교육과정	업무담당	1	20090902	20090904	문화체육관광부	50,000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국내위탁교육 위탁교육	Global Capital Market Analysis 과정 수료	업무담당	1	20080617	20080905	한국증권업협회 증권연	3,147,000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국내위탁교육 위탁교육	IB과정 수료	업무담당	1	20080820	20081217	한국증권업협회 증권연	3,857,000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국내위탁교육 위탁교육	Global Asset Management 과정 수료	업무담당	1	20081009	20081121	한국증권업협회 증권연	4,057,000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국내위탁교육 위탁교육	2008년도 정보화 핵심역량강화교육	업무담당	1	20081124	20081124	생산성본부	20,000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국내위탁교육 위탁교육	공공부문 정보화투자 성과분석	업무담당	1	20081203	20081205	생산성본부	40,000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국내위탁교육 위탁교육	IT투자분석 교육	업무담당	1	20081203	20081205	뉴호라이즌코리아	50,000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국내위탁교육 위탁교육	브리핑을 위한 멀티프레젠테이션 작성기	업무담당	1	20081204	20081205	한국생산성본부	40,000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국내위탁교육 위탁교육	프로젝트 사물관리자를 위한 프로젝트 관	업무담당	1	20081208	20081210	한국생산성본부	50,000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국내위탁교육 위탁교육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업무담당	1	20081210	2008121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사	50,000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국내위탁교육 위탁교육	전자정부 IT핵심 솔루션	업무담당	1	20081210	20081212	행정안전부	50,000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국내위탁교육 위탁교육	커뮤니케이션 스킬업	전직원	1	20081210	20081212	뉴호라이즌	50,000	업무활용
2009	기관주관 국내위탁교육 위탁교육	직무전문화연수(자본시장법 해설)	업무담당	2	20090427	20090430	금융감독원	-	업무활용
2009	기관주관 국내위탁교육 위탁교육	직무전문화연수(투자은행업무의 이해)	업무담당	1	20090427	20090430	금융감독원	-	업무활용
2009	기관주관 국내위탁교육 위탁교육	직무전문화연수(주요 경제지표 해설)	업무담당	1	20090601	20090603	금융감독원	-	업무활용
2009	기관주관 국내위탁교육 위탁교육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과정	업무담당	1	20090715	20090716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재	40,000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국외위탁 직무훈련	직무훈련(과장급)	과장급	1	20080625	20091224	시카고상업거래소	-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국외위탁 직무훈련	직무훈련	과장급	1	20080901	20100228	연방예금보통공사	-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국외위탁 직무훈련	교육파견(협프리/직무)	4급~7급	1	20080618	20100617	보스턴대	-	역량향상
2009	기관주관 국외위탁 직무훈련	직무훈련	과장급	1	20090318	20100317	Simpson Thacher & Ba	-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국외위탁 학위과정	교육파견(KDI)	4급~7급	1	20080103	20091231	K D I/미시간주립대	-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국외위탁 학위과정	교육파견(학위/석사)	4급~7급	1	20080623	20100622	조지워싱턴대	-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국외위탁 학위과정	교육파견(학위/석사)	4급~7급	1	20080703	20100102	상트갈렌대	-	역량향상
2009	기관주관 국외위탁 학위과정	교육파견(KDI)	4급~7급	1	20090103	20100102	K D I 국제정책대학원	-	역량향상
2009	기관주관 국외위탁 학위과정	교육파견(KAIST)	4급~7급	1	20090103	20100102	KAIST 금융전문대학원	-	역량향상
2009	기관주관 국외위탁 학위과정	교육파견(학위/MA)	4급~7급	1	20090802	20100801	Univ. of California, San	-	역량향상
2009	기관주관 국외위탁 학위과정	교육파견(학위/D)	4급~7급	1	20090627	20110624	Univ. of Kansas	-	역량향상
2009	기관주관 국외위탁 학위과정	교육파견(학위/박사)	4급~7급	1	20090713	20110712	Univ. of Washington	-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국외위탁교육 위탁교육	FATF 상호평가 MEQ 작성 워크숍	업무담당	1	20080317	20080322	FATF, 싱가포르 IMF, APG	-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국외위탁교육 위탁교육	통계작성기관 해외연수	업무담당	1	20080824	20080902	스페인 등	4,205,000	역량향상
2009	기관주관 국내위탁교육 위탁교육	제4차 고위공무원정책과정	고위공무원	1	20090115	20090117	K O I 국제정책대학원	143,000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국외위탁교육 위탁교육	중앙행정기관 별제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업무담당	1	20080825	20080901	핀란드, 스웨덴	3,059,000	역량향상
2009	기관주관 국외위탁교육 위탁교육	영국대사관 주관 런던실용연수	업무담당	2	20090426	20090503	런던 영국대사관	8,096,000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국외위탁교육 위탁교육	일본 인사원 과정	업무담당	1	20080928	20081005	일본 인사원	141,000	역량향상
2009	기관주관 국외위탁교육 위탁교육	APG 주관 상호평가자 교육 워크숍	업무담당	1	20090815	20090823	APG	-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소양	세종대왕의 정치리더십	전직원	31	20080604	20080604	금융위원회	-	역량향상
2009	기관주관 직장교육 소양	조직소속 활성화를 위한 신규,재직직원	신규직원	39	20090903	20090904	금융위원회	-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시책	국정 철학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직원 교육	전직원	121	20080418	20080418	금융위원회	-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시책	2008년도 성희롱 예방교육	전직원	16	20081209	20081209	금융위원회	-	역량향상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시책	2008년도 성희롱예방교육	전직원	1	20081209	20081209	금융위원회	-	역량향상

2009	기관주관 직장교육 사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위 직장교육	전직원	154	20090327	20090327	금융위원회	-	업무활용
2009	기관주관 직장교육 사책	4대강 살리기 사업 직장교육	전직원	106	20090727	20090727	금융위원회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보안강화 교육	전직원	1	20080115	20080115	정부통합전산센터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2008년 인사 및 보수업무담당자 교육 참석	전직원	1	20080117	20080117	중앙인사위원회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기록관리시스템 교육	전직원	1	20080117	20080117	국가기록원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2007년도 기록물 정리교육	전직원	5	20080121	20080121	금융감독위원회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고객만족 교육	전직원	1	20080125	20080125	정부통합전산센터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2008년도 보안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보안	전직원	1	20080211	20080211	금융위원회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08년자원조사교육	전직원	1	20080212	20080212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2008년도 자원조사 교육(비상위 주관) 참석	전직원	2	20080212	20080212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조치사항 교육 참석	전직원	1	20080218	20080218	행정자치부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금융위원회 공무원" 청렴 및 보안 교육	전직원	6	20080403	20080403	금융위원회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금융산업에 대해 거는 새정부의 기대와 욕구	전직원	120	20080403	20080403	금융위원회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국정관리시스템 교육	전직원	2	20080416	20080416	행정안전부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원활한 업무를 위한 비서 교육	전직원	9	20080417	20080417	금융위원회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보안감사관교육 참석	전직원	1	20080418	20080418	국가정보원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2008년도 공무원 서비스관련 유관기관 인	전직원	1	20080424	20080424	행정안전부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08 을지연습 중앙 계획/통제단 교육 참석	전직원	2	20080429	20080429	행정안전부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정부통합전산센터 2차 친절교육	전직원	1	20080501	20080501	행정안전부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데이터스트림 사용법 교육	전직원	1	20080507	20080507	-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2008년도 상반기 e-나라지표 교육 참석	전직원	1	20080513	20080513	통계청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사용자 교육	전직원	3	20080519	20080519	기획재정부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정보공개 교육	전직원	1	20080527	20080527	행정안전부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업 및 예산요구	전직원	1	20080603	20080603	기획재정부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기록관리시스템 이관교육	전직원	1	20080620	20080620	국가기록원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생활기초법률(민대차)	전직원	1	20080626	20080626	금융위원회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정보공개업무 교육참석	전직원	1	20080626	20080626	행정안전부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통합 온나라 사용자 교육(7.10)	전직원	1	20080710	20080710	정부통합전산센터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을지연습 비상 종합시스템 운용 교육	전직원	1	20080711	20080711	행정안전부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2008년 을지연습 기본계획 설명회 참석	전직원	1	20080718	20080718	행정안전부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정부통합전산센터 분야별 보안 교육	전직원	1	20080718	20080718	정부통합전산센터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국가지도통신망 교육	전직원	1	20080725	20080725	-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심사분석관 역설특강	전직원	3	20080910	20080910	금융위원회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2008 상반기 고령의 소리 결과발표 및 친	전직원	1	20080911	20080911	행정안전부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2008년 3분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평가	전직원	2	20080924	2008092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회사채 전문가 간담회 실시	전직원	1	20080925	20080925	금융위원회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국가정보원 주관 정보보안 교육	전직원	15	20080926	20080926	국가정보원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조달관리업무처리 프로그램 전면개편에	전직원	2	20080929	20080929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dBrain 고도화 회계분야(계약) 교육	전직원	1	20080929	20080929	기획재정부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제1기 재정전문교육	전직원	11	20081010	20081010	기획재정부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통합온나라시스템 교육	전직원	1	20081021	20081021	행정안전부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제2기 재정교육	전직원	6	20081118	20081118	기획재정부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뷰로반다익 사용법 교육	전직원	1	20081126	20081126	금융위원회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정보화 교육(엑셀, 파워포인트)	전직원	9	20081127	20081128	금융위원회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기록관리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전직원	12	20081128	20081128	금융위원회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신전자문서시스템 교육	전직원	1	20081202	20081202	행정안전부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자금세탁방지관련 조세교육 1차	전직원	4	20081203	20081203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세교육 2차	전직원	4	20081210	20081210	금융정보분석원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최근 기업 업종별 현황 및 전망	전직원	1	20081210	20081210	금융위원회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2008회계연도 정부 결산 대비 워크샵	전직원	1	20081217	20081217	기획재정부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공직자윤리시스템 고도화 작업 관련 윤리	전직원	1	20081222	20081222	행정안전부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자 교육 참석	전직원	1	20081222	20081222	기획재정부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복식부기 회계제도 교육	전직원	1	20081222	20081222	기획재정부	-	업무활용
2008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09년 주요 산업별 전망	전직원	1	20081230	20081230	금융위원회	-	업무활용
2009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정책고객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PIMS) 교	전직원	1	20090219	20090219	문화체육관광부	-	업무활용
2009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사용자 교육	전직원	1	20090303	20090303	국무총리실	-	업무활용
2009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정보공개교육	전직원	1	20090415	20090415	행정안전부	-	업무활용
2009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제1차 회계책임관 교육	전직원	1	20090514	20090514	기획재정부	-	업무활용
2009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금융위 정책홍보의 현황과 과제	전직원	63	20090518	20090518	금융위원회	-	업무활용
2009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을지연습 계획통제부 교육	전직원	1	20090609	20090609	금융위원회	-	업무활용
2009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공공 I-PIN 도입 절차」 등 교육	전직원	1	20090611	20090611	행정안전부	-	업무활용
2009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을지연습 상황전파 교육	전직원	2	20090708	20090708	행정안전부	-	업무활용
2009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온-나라 이관	전직원	1	20090723	20090723	국가기록원	-	업무활용
2009	기관주관 직장교육 직무	CP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	전직원	1	20081002	20081002	금융위원회	-	업무활용

22. 임직원 해외 출장 현황

□ 임직원 해외 출장 현황

- 별첨 2 참조

(별첨 2)

□ 2008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성명	기간	목적지	출장사유	지출비용
정완규	1.13~19	뉴욕, LA	Global Public Policy Symposium 참가	3,511
이승우 변영한	2.7~14	뉴욕, 워싱턴	'Emerged Market 증권감독자 최고회의(미국 워싱턴)' 참석 및 FRB, OCC등 참석	11,569
이종화	3.25~29	캐나다	'제 13차 한-캐나다 FTA 금융협상' 참석	2,682
이종화	4.1~4.4	인도 뉴델리	제10차 한-인도 CEPA 협상 참석	1,768
김경률	4.7~13	노르웨이	제4차 국제회계감독기구회의 참석	3,126
전광우 김주현 이현철 오화세	4.15~4.21	뉴욕, 워싱턴	VIP 미국 순방 수행출장	16,874
윤상기	4.23~26	싱가포르	3차 아주지역보험감독자회의참석	1,331
이종화	5.5~5.15	제네바, 브뤼셀	WTO DDA 및 제7차 한-EU FTA 협상 참석	3,949
전광우 홍영만 이현철 이명순 이수영 빈현준 장인선	5.25~5.30	프랑스 파리, 영국런던,	제33차 IOSCO 연차총회 참석 및 APRC 의 장 출마	42,615
임승태	5.26~29	북경	ADB 워크샵 참석	1,453
이명호	5.27~30	베이징, 칭다오	방중 정상회담 지원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1,457
김용환 손성은	6.1~5	영국 런던	한·영 미래포럼 참석	8,547

(단위 : 천원)

성명	기간	목적지	출장사유	집행액
전광우 유재훈 이현철 고상범 오화세 김태훈	6.12~13	베이징, 상하이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중 국 금융당국과의 회담	8,293
임승태	6.17~6.22	뉴욕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투자설명회 참석	2,447
박재훈	6.17~22	샌프란 시스코	Asian Banking and Finance Conference 참석	3,268
이종구	6.18~6.22	런던, 프랑크 푸르트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투자설명회 참석여비 지급	1,988
유재훈	6.25~29	파리	OECD 보험 및 사적연금회의 참석	3,142
이중화	6.27~6.29	홍콩	한-EU FTA 서비스분과 회의참석	2,994
오화세	7.29~7.31	뉴델리	제11차 한.인도 CEPA 협상 참여	1,768
김건영	8.23~8.30	호주, 싱가폴, 홍콩	주요국 금융산업육성 및 금융산업 선진화노력 현지조사	4,116
김현수	8.24~9.2	룩셈부르 크,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통계작성기관 해외연수	4,205
전태원	8.25~9.1	핀란드, 스웨덴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3,059
오유정	8.28~9.5	홍콩	증권연수원의 GCMA 프로그램 해외연수 참 가	3,147
김선문	8.30~9.7	영국	영국 ICMA Centre의 Investment Banking Program 참석	3,857
홍영만 최유삼	9.15~19	스페인	IOSCO 전문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참석	9,495
김성조	9.20~27	남아공	제5차 국제회계감독기구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 출장	1,177
권혁세	9.24~26	홍콩	CLSA 홍콩 Investors'forum에 참석	935
최윤정	9.28~10.5	일본	2008년도 일본 인사원 훈련기관 과정 참가	141
이종구 주홍민	10.13~19	헝가리	IAIS 제15차 연차총회 참석	13,883

(단위 : 천원)

성명	기간	목적지	출장사유	지출비용
진웅섭	10.13~25	이집트, 그리스, 터키 스페인	고위정책과정 국외연수	10,319
박재훈	10.20~22	동경, 홍콩	한국경제설명을 위한 국외 출장	2,843
유재훈 조충행 이명호	10.21~22	북경	한국자본시장에 대한 북경 IR 참가	3,703
전광우 이현철 고상범 신재형	10.22	중국 베이징	한국시장 IR 참석 및 CBRC 등 주요 당국 자간 회담	6,293
이창용 이동훈 오화세	10.23~25	싱가폴	‘한국 금융-경제 현황 설명회’ 개최 참석	7,549
전광우 홍영만 최유삼 고상범	10.31~11.1	발리	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 회의 참석	8,220
이창용 최훈 오화세	11.2~6	뉴욕, 보스톤	한국 금융시장 및 경제현황 설명회 참석	13,668
김동환	11.10~13	북경	제2차 한·중 경제통상협력 공동작업반 회 의 참석	1,581
이호형	11.10~15	파리	OECD한국 경제검토회의 참석	3,533
목정민	11.13~21	런던	Golbal Asset Management Program’ 교육 참석	4,057
전광우 최훈 이명순 이수영 오화세 신재형	11.16~20	뉴욕	한국시장 IR 참석 및 FRB NY 총재, FSA 의장 등 주요 당국자간 회담	20,508
이종구 이현철	11.16~19	런던	한국경제 IR 참석	11,194
김주현	11.25~26	동경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화를 위한 한중일 위 크숍 참석	1,779
이종구 박영춘 오화세	12.1~3	홍콩	한국 금융시장 및 경제현황 설명회 참석	7,021
이현철	12.14~16	홍콩	제5차 금융안정화 포럼(FSF) 참석	1,506
김동환	12.15~19	비엔나	한-EU FTA 확대수석대표회담 참석	2,994

□ 2009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성명	기간	목적지	출장사유	지출비용
조인강	1.15~17	동경	제4차 고위공무원정책과정 참석	143
이창용	1.28~2.1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Davos포럼) 참석	6,692
김동환	2.16 부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대사관 부임에 따른 여비	4,933
박진애	2.27~3.2	도쿄	제10차 동경 라운드테이블 참가	2,073
이종구, 신재형	3.11~21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한국경제바로알리기 설명회 참석	14,547
이창용, 신현준, 오화세	3.11~15	런던	영국 IR 참석	10,739
전수환	3.10~11	동경	FTSE 선진지수 편입관련 Roundtable 참석	552
이창용 신현준 류근하	3.24~26	홍콩	아시아투자컨퍼런스 참가	5,673
이종석	4.26~5.3	런던	런던집합연수 참석	4,054
임승태, 서재홍	4.27~5.4	산티아고	세계저축은행 총회 참석	16,283
김선문	4.25~5.1	바젤	국제회계감독기구 6차 정기회의	3,503
김종훈	4.26~5.3	런던	영국대사관 주관 런던집합연수	4,048
김승민	5.6~8	싱가폴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 연차총회참석	1,769
김건영	5.10~16	페루	한-페루 FTA 협상	3,259
신현준	5.17~21	호주	한-호주 FTA 협상	2,505
김광수 유영준	5.17~5.21	런던	글로벌금융 시스템개혁 상호협력방안 논의	4,459
진선영	5.17~23	파리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 세미나	3,467
이종구 신현준 김승민	5.25~29	스위스 프랑스 홍콩	FSB 오리엔테이션 및 관계자 면담	16,598
진동수 김홍식	6.24~27	스위스 프랑스	매경포럼 및 FSB 창립총회 참가	30,717

성명	기간	목적지	출장사유	지출비용
신현준 김승민 오화세		홍콩		
추경호 김태훈	6.29~7.4	프랑크푸르트 파리	선진국 정책금융공사 방문 및 글로벌 금융 위기 대응 현황 파악	10,979
류근하	6.30~7.02	상하이	한·중·일 거시경제 워크숍 참가	903
송현도	7.6~9	싱가폴	해운시장 동향 파악, 국외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 홍보 관련 참가	1,335
이한진	7.7~7.12	브리스번	제12차 APG 연차총회 참석	2,436

23. 최근 5년간 경찰 및 검찰에 의한 임직원의 사 법처리 현황

직급	성명	통보일시	통보내용	처리결과
서기관	OOO	'08.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구약식
사무관	OOO	'08.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구약식

24. 최근 5년간 임직원에 대한 자체 징계 현황

□ 최근 5년간 임직원에 대한 자체 징계 내역

성명	직급	처분결과
○○○	서기관	견책
○○○	서기관	감봉2월
○○○	사무관	견책

25. 은행들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 MOU 체결현황 및 내용, 은행별 대외채무 현황,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현황, MOU 이행상황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

□ 요청하신 자료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은행외화채무 지급보증 운용 현황 및 MOU 이행상황
점검 보고

은행외화채무 지급보증 운용 현황 및 MOU 이행상황 점검 보고

2009. 08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1. 은행 외화표시채무 지급보증 후속조치 추진 경과

① 지급보증 동의안 국회 의결('08.10) 및 금감원과 각 은행간 (총18개)간 MOU 체결 ('08.11)

* 외화채무 지급보증과 관련된 'MOU 1'과 실물경제 유동성 지원 등에 관한 'MOU2'로 구분하여 체결하였으며, SC제일과 한국씨티는 'MOU2'만 체결

- 그동안 재정부·금융위·금감원·한은 합동으로 MOU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매2개월마다 국회에 제출('09.2, 4, 6월)

② 외화채무 국가보증 동의안 개정('09.4)시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에 근거하여 금감원-은행간 MOU를 재체결('09.5)

- 5~6월 이행실적은 재체결한 MOU 내용을 바탕으로 점검

주요 부대 의견	MOU 반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자산매각 등 은행의 지구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조달 및 비핵심외화자산 축소를 통한 외화유동성 확보 목표(총51.3억\$) 이행의무 ▪ 중장기 차입비율 목표(52.4%) 이행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은 가계 및 기업의 금융부담 최소화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대출비율 목표(50.4%) 이행의무 ▪ 수출기업 지원(매입외환 증가) 목표(34억\$) 이행의무 ▪ 가계대출 만기연장, 분할상환 유예, 고정금리부 대출로의 전환지원 등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은 보수체계 합리적 조정 등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보수 및 스톡옵션 조정(10~30% 삭감) ▪ 성과지표 및 보상체계를 장기업적 평가 위주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은행의 건전성 등 경영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자기자본 확충 노력 (BIS비율 1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대지급발생 방지노력 및 발행시장에서 거주자 참여가 최소 규모로 이루어지도록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대지급발생 우려시 은행 보유 외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보증대상채무 최우선 상환 ▪ 외화표시 채권발행시 발행시장에서 거주자 참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

2.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운용현황

□ '09.8월말 현재까지 총 2건, 12.8억불 발행 (하나은행)

< 채권 발행 내역 >

발행일자	발행규모	만 기	금 리	발행지
'09.4.9	10억불	3년	USD Libor + 4.90%	미국, 유럽, 아시아
'09.6.19	2.8억불	2.5년/2.99년	USD Libor + 2.99%	말레이시아

3. MOU 이행상황 점검 결과('09년 5~6월 실적)

□ 평가 결과 은행들의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일부은행이 목표에 미달

평가 항목		점검 내용																						
M O U 1	지급보증부 외화차입금 용도제한	▪ 지급보증 신청에 대비하여 은행들은 내부통제방안을 마련 * 보증차입금 용도제한 등을 담은 운용지침, 한도관리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외화조달 지구노력 강화	▪ (외화유동성 확보) '09.1~6월중 총 121.2억달러를 확보하여 계획치인 33.8억달러를 초과달성 - 단, 하나, 전북 및 광주은행은 목표 미달 ▪ (중장기차입비율) 평균 74.8%로 전체은행 평균목표(55.9%)를 초과달성																						
M O U 2	실물부문 유동성 지원	▪ (중기대출) 중기대출비율은 평균 65.4%로서 목표(48.9%)를 초과달성 - 단, 외환 및 SC제일은행은 목표 미달 ▪ (무역금융) 매입외화평잔은 5~6월 △1.5억달러 감소하였으나 계획 (△3.3억달러) 초과달성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 부담 완화	▪ 5~6월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부담경감 규모는 총 28조원 (단위 : 조원) <table border="1"><thead><tr><th colspan="2">일시상환대출</th><th colspan="2">분할상환대출</th><th>기타</th><th>합계</th></tr><tr><th>만기연장</th><th></th><th>만기조정</th><th>거치기간 연장</th><th></th><th></th></tr></thead><tbody><tr><td>25.2</td><td></td><td>0.3</td><td>2.0</td><td>0.4</td><td>28.0</td></tr></tbody></table> * 고정금리부대출로의 전환액 등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만기조정	거치기간 연장			25.2		0.3	2.0	0.4	28.0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만기조정	거치기간 연장																					
25.2		0.3	2.0	0.4	28.0																			
경영합리화 추진	▪ 은행장·임원 등의 보수수준을 목표(10~30%)대로 삭감하였고 스톡옵션도 10~30% 반납 * 외환은행의 신입행장에 대한 스톡옵션 중 20% 반납완료(5.8일)																							
	적정자기 자본 확충	▪ BIS자기자본비율은 13.1%로 각 은행별 목표수준 달성(3월말기준) ▪ 기본자기자본비율은 9.3%로 각 은행별 목표수준 달성(3월말기준)																						

4. MOU 실적에 따른 후속조치

□ 지급보증을 받은 하나은행 등의 MOU 1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 촉구 및 개선조치 공문 발송

* 외화 유동성 확보 금액이 당초 목표치에 미달

○ 최초 위반, 위반사항이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인상 등의 조치보다는 주의촉구가 바람직

* 외화자산 감소로 인한 차입규모 축소에 기인한 일시적인 것으로 외화 예수금을 통한 추가 외화유동성 확보 등으로 7월말 현재 외화유동성 목표 초과 달성

○ 향후 동일사항의 MOU 이행위반이 누적되는 경우 보증한도 축소 및 보증수수료 인상 등의 제재조치 계획임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통보

□ MOU2 목표 달성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주의 촉구 및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MOU 이행을 담보

① MOU상 중소기업대출 미흡 은행에 대해 금감원에서 경영진 면담 실시

② MOU 목표미달 은행에 대해 주의 재촉구 공문 발송

③ 금감원 「은행 경영실태평가」 시 MOU 이행실적을 반영

④ 하반기 중 목표미달 은행들을 중심으로 MOU 이행실태 점검 실시 예정

참 고

국회제시 부대의견별 이행상황

부대 의견	이행 상황															
가. 정부지급보증은 만기도래채무 상환과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며, 이번지원을 바탕으로 가계 및 기업의 금융부담 최소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들은 보증차입금 용도제한 등을 담은 운용지침 등 내부통제방안 마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실적 <table border="1"> <tr> <th></th><th>중기대출 증가액</th><th>평균 중기대출비율</th></tr> <tr> <td>08.11~12</td><td>4.6조원</td><td>67.5%</td></tr> <tr> <td>09.1~6</td><td>21.7조원</td><td>65.4%</td></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대출 차주 부담완화실적 <table border="1"> <tr> <th></th><th>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th></tr> <tr> <td>08.11~12</td><td>22.7조원</td></tr> <tr> <td>09.1~6</td><td>76.4조원</td></tr> </table>		중기대출 증가액	평균 중기대출비율	08.11~12	4.6조원	67.5%	09.1~6	21.7조원	65.4%		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	08.11~12	22.7조원	09.1~6	76.4조원
	중기대출 증가액	평균 중기대출비율														
08.11~12	4.6조원	67.5%														
09.1~6	21.7조원	65.4%														
	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															
08.11~12	22.7조원															
09.1~6	76.4조원															
나. 자구노력(외화자산 매각 등) 및 신용도 등에 따른 보증수수료율과 보증한도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화 조달 자구노력 실적 <table border="1"> <tr> <th></th><th>외화유동성확보*</th><th>증장기차입비율</th></tr> <tr> <td>08.11~12</td><td>50.7억\$</td><td>58.4%</td></tr> <tr> <td>09.1~6</td><td>121.2억\$</td><td>74.8%</td></tr> </table> <p>* 외화예수금 증대, Credit Line 확대, 비핵심 외화자산 매각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상황·주채무자의 재무현황 등에 따라 수수료 차등 가능(운영지침반영) 		외화유동성확보*	증장기차입비율	08.11~12	50.7억\$	58.4%	09.1~6	121.2억\$	74.8%						
	외화유동성확보*	증장기차입비율														
08.11~12	50.7억\$	58.4%														
09.1~6	121.2억\$	74.8%														
다. 은행의 보수체계 합리적 조정 등 경영합리화방안을 마련하고 MOU 위반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합리화방안 실적 - 은행 임원 등 보수수준 삭감(10~30%) 및 스톡옵션 반납(10~30%) MOU 위반에 대한 제재실적 ① 자본확충펀드 매입금리 차등적용 * (09.3) 신종자본증권 30bp, 후순위채 10bp ② 금감원 '은행경영실태평가' 항목에 MOU 이행실적 추가 															
라. 대지급 발생 우려시 총당금을 적립, 대지급 발생시 구상권 행사 및 경영진 책임 추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급 발생방지를 위해 은행들은 Contingency Plan 등 자체 대책 마련 정부지급보증 최소화를 위해 외화유동성 확보노력 강화 유도 															
마. 정부는 선진국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일·중과 통화스왑체결(900억\$)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G20 논의에 적극 참여 															
바. 은행별 MOU 추진상황 지속 점검 및 국회보고(격월 또는 국회요청시 즉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기관 합동 '사후조치평가회의' 개최 (09.24, 415, 58)를 통해 MOU 추진상황 점검 1·2·3차 점검결과 국회 기보고(09.218, 416, 629) 															

26. 1997년 IMF 이후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현황

- 저축은행별, 연도별, 종류별, 투입방법별
- 회수금액

□ 저축은행별 공적자금 지원현황

○ 예금보험공사 지원현황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예보채상환기금 지원					
	출자	출연	예금 대지급	대출	자산 매입	소계
한 아 름 →정리금융공사	1		60,775	263		61,039
• 한 아 름(합)	1					1
•경 남			744			744
•경 북			1,791			1,791
•경 일(경산)			380			380
•경 일(안산)			438			438
•경 주			371			371
•광 주			1,147			1,147
•구 리			645			645
•국 일			566			566
•금 정			2,721			2,721
•기 산			50			50
•대 구			581			581
•대 신			432			432
•대 전			1,941			1,941
•대 청			536			536
•대 한(서울)			1,402			1,402
•대 한(인천)			749			749
•대 화			699			699
•동 방(목포)			1,687			1,687
•동 방(서울)			1,503			1,503
•동 아(부산)			279			279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예보채상환기금 지원					
	출자	출연	예금 대지급	대출	자산 매입	소계
•동 아(서울)			6,560			6,560
•동 화			29			29
•부 민(광주)			701			701
•삼 원			362			362
•성 원			363			363
•수 원			746			746
•신 경 기			1,479			1,479
•신 세 계			530			530
•신 양			298			298
•신 일			638			638
•신 중 양			1,304			1,304
•신 총 은			674			674
•쌍 인			567			567
•아 주			1,415			1,415
•열 린(대구)			627			627
•열 린(서울)			1,224			1,224
•영 주			931			931
•영 천			395			395
•오 렌 지			4,023			4,023
•올 리 브			1,469			1,469
•우 신			492			492
•우 양			1,928			1,928
•울 산			466			466
•유 남			436			436
•일 신			327			327
•장 향			346			346
•정 우			1,149			1,149
•조 치 원			421			421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예보채상환기금 지원					
	출자	출연	예금 대지급	대출	자산 매입	소계
•증 양			1,408			1,408
•창 녕			238			238
•충 남			1,060			1,060
•해 동(경기)			897	263		1,160
•해 동(서울)			5,106			5,106
•호 남			407			407
•화 신			704			704
•흥 성			846			846
경 기(코미트)		254				254
경 <구. 북 한우리>		81				81
경 인			795			795
국 민(제주)			768			768
금 강		28		709		737
대 양(경기)			4,870			4,870
대 천				102		102
대 한(충남)			83			83
동 아(경기)			11			11
등 원		63		783		846
문 경			563			563
미 래			1,377			1,377
부 민(부산)		243				243
부 산 2				271		271
삼 화(전북)			172			172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예보채상환기금 지원					
			출자	출연	예금 대지급	대출	자산 매입	소계
상 〈구. 현 대〉		업		701				701
새	누	리		13		21		33
새	온	양				45		45
석		진			619			619
솔 〈구. 로 끝 몬 드〉		몬 드		663				663
신	총	북				161		161
아		림				615		615
유	니	온		39		518		557
제	이	원		325				325
조		일		29		738		767
총		일			2,747	89		2,836
코	미	트				1,654		1,654
텔		슨		775				775
하	나	로		422				422
한		남(경기)			110			110
한	마	음		521				521
저축은행계			1	4,157	72,892	5,969	0	83,019

○ 자산관리공사 지원현황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지속은행명	지 원	
	채권액	매입액
한 → 정 리 아 금 융 공 립 사	861.8	131.1
-한 아 립(합)	552.1	14.1
-구 리	6.8	4.5
-대 전<구충은>	165.4	27.2
-울 산	0.2	0.1
-장 항	5.8	1.7
-한국(서울 소재)	52.8	38.8
-한 신	78.7	44.7
경 기 (코 미 트)	37.2	21.6
경 은	0.1	
경 인	8.1	3.6
고 려	7.0	5.8
교 원 나 라 < 구 새 한 >	10.1	0.3
국 제	5.5	2.8
기 은	490.1	60.7
대 양 (경 기 소 재)	215.4	155.1
대 영 < 구 협 신 >	205.2	91.9
대 한 (광 주 소 재)	35.4	27.4
등 방	1.0	0.5
동 부	69.7	53.3
동 양	4.1	4.1
동 원 (안 흥)	87.3	27.8
동 인	21.4	7.6
문 경	2.6	0.1
민 국	75.4	42.2
부 국	461.6	227.7
부 산 국 민	44.6	20.9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지 원	
		채권액	매입액
부	일	22.4	17.1
삼	신	25.3	15.3
삼	정	0.1	
삼 화 (서 을 소 재)		55.5	26.5
삼	환	29.4	22.1
새 누 리 (한 보)		64.3	43.4
서	인	2.2	0.5
석	진	15.2	11.0
신 (신 서 < 구 을 코 소 미 트 >)		56.7	37.1
신	우	10.4	1.8
신	한	4.1	2.0
안	동	36.0	22.3
영	풍	73.9	2.5
오	성	0.8	0.1
인	천	25.2	1.2
전 남 국	민	56.3	15.6
전 북 고	려	25.3	7.8
전 북 한	일	66.7	49.0
전	일	200.9	161.2
전	주	17.0	2.4
제	은	1.6	1.6
제	일	33.6	13.0
조	흥	18.6	9.7
주	은	15.3	0.5
주 은 영	동	65.4	25.6
중	양	12.0	11.5
진	주	115.2	42.7
진	흥	66.0	58.1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지 원	
		채권액	매입액
창	업	217.0	194.3
춘	천	5.5	5.3
평	택	9.7	9.7
푸	른	178.0	24.9
푸	른 2	72.9	9.7
프	라 임	89.8	33.5
하	나	4.5	2.0
하	나 로 (신 충 북)	29.1	21.2
한	마 음 (한 일 , 부 일)	207.0	130.0
한	서	154.8	81.3
한	솔	207.8	8.3
한	일	4.9	4.0
한	중	6.3	0.2
한	진	2.3	0.3
해	동	9.5	0.3
현	대 스 위 스	627.6	79.3
현	대 스 위 스 2	2.7	0.4
저	축 은 행 계	5,588	2,091

□ 저축은행 연도별 공적자금 지원현황

○ 예금보험공사 지원현황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투입방법	규 모	시 기	지원내용	비 고
신 일	예금대지급	638	1998. 9.28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 제1항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경 일 (경 북)		380	1998. 9.28		
삼 원		362	1998. 9.28		
일 신		327	1998. 9.28		
금 정		2,721	1998.10.26		
신 경 기		1,479	1998.10.26		
충 남		1,060	1998.10.26		
우 양		1,928	1998.10.26		
대 청		536	1998.10.26		
영 주		931	1998.11.30		
부 민 (광 주)		701	1998.11.30		
호 남		407	1998.11.30		
기 산		50	1998.11.30		
중 양		1,408	1998.12.16		
등 화		29	1998.12.16		
동 아		279	1998.12.16		
올 리 브		1,469	1998.12.22		
1998년 소계		14,705			
유 남	예금대지급	436	1999. 1.23		
우 신		492	1999. 1.23		
경 북		1,791	1999. 1.23		
화 신		704	1999. 3.25		
조 치 원		421	1999. 3.25		
아 주		1,415	1999. 4. 9		
대 화		699	1999. 5. 4		
경 주		371	1999. 5.27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투입방법	규 모	시 기	지원내용	비 고
경 일 (안 산)		438	1999. 8. 9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 제1항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대 한		1,402	1999. 9.20		
국 일		566	1999. 9.20		
신 양		298	1999. 9.20		
영 천		395	1999. 9.20		
신 세 계		530	1999. 9.20		
쌍 인		567	1999.10. 4		
성 원		363	1999.10.28		
한 국		816	1999.12.17		
대 전		1,941	1999.12.17		
열 린		627	1999.12.17		
1999년 소계		14,272			
광 주	예금대지급	1,147	2000.12.22		
신 충 은		674	2000.12.26		
신 중 앙		1,304	2000.12.26		
2000년 소계		3,125			
해 동 (서 울)	예금대지급	5,106	2001. 2.18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 제1항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해 동 (경 기)		897	2001. 2.18		
흥 성		846	2001. 3.12		
한 양		608	2001. 3.12		
동 방 (서 울)		1,503	2001. 3.23		
정 우		1,149	2001. 3.23		
대 신		432	2001. 3.30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투입방법	규 모	시 기	지원내용	비 고
한 은		124	2001. 3.30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 제1항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대 한		749	2001. 4.12		
열 린		1,224	2001. 4.12		
대 구		581	2001. 4.12		
동 방 (목 포)		1,687	2001. 4.13		
장 향		346	2001. 5. 3		
동 아 (서 울)		6,560	2001. 5. 3		
울 산		466	2001. 5. 3		
창 녕		238	2001. 5. 3		
수 원		746	2001. 5.10		
경 남		744	2001. 5.16		
구 리		645	2001. 5.21		
오 렌 지		4,023	2001. 6.29		
충 일		2,747	2001. 7.20		
석 진		619	2001. 7.20		
미 래		1,377	2001. 8.27		
2001년 소계		33,417			
국 민 (제 주)	예금대지급	769	2002.3.12		
대 양 (경 기)		4,870	2002.3.12		
대 한 (충 남)		83	2002.3.12		
문 경 (경 북)		563	2002.3.12		
삼 화 (전 북)		172	2002.3.12		
한 남 (경 기)		110	2002.3.12		
경 인		795	2002. 9.17		
2002년 소계		7,362			
동 아(경기)		11	2004.12.09		
2004년 소계		11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투입방법	규 모	시 기	지원내용	비 고
신 중 복	대 출	161	1998. 7. 9	부실금고 계약이전관련	예금자보호법 제38조
충 일		89	1998.11.20		
대 천		102	1999. 1.15		
해 동 (경 기)		263	1999. 3.19		
새 누 리		21	1999. 4.12		
새 온 양		45	1999. 5.18		
부 산 2		271	1999. 7. 5		
유 니 온		518	1999.11.24		
아 름		615	1999.11.24		
동 원		783	2001. 2. 9		
조 일		738	2001. 2. 9		
금 강		709	2001. 2. 9		
코 미 트 (경 기)		1,654	2001. 3.30		
소 계		5,969			
한 아 름	출 자	1	1998. 9.15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
소 계		1			
부 민 (부 산)	출 연	243	2000. 6.10	부실금고 계약이전관련	예금자보호법 제37조 및 제38조
새 누 리		13	2000. 9.20		
경북(구한우리)		81	2000. 9.20		
한 마 음		521	2000. 9.30		
텔 슨 (신 한 국)		775	2000.10.20		
하 나 로		422	2000.10.20		
솔로몬(구골드)		663	2000.12.26		
제 이 원		325	2001. 2. 9		
상 업 (구 현 대)		701	2001. 2.21		
경 기(구경기코미트)		254	2004. 1.30		
유 니 온		39	2005. 8.31		
조 일		29	2005. 9.15		
동 원		63	2005. 9.15		
춘 천 (금 강)		28	2005. 9.15		
소 계		4,157			
합 계		83,019			

○ 자산관리공사 지원현황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투입방법	규 모	시 기	지원내용	비 고
경 은 상 호	부실채권매입	0.03	1999. 6.30	부실채권 매 입	자산관리 공사법 제26조
		—	정산증감		
	소 계	0.03			
경 인 상 호	부실채권매입	3.6	1999. 6.30		
		—	정산증감		
	소 계	3.6			
코미트(경기)	부실채권매입	21.6	2001. 1. 5		
		—	정산증감		
	소 계	21.6			
고 려 상 호	부실채권매입	5.8	1999. 6.30		
		—	정산증감		
	소 계	5.8			
새 한 상 호 (교원나라)	부실채권매입	0.3	2001. 6.28		
		—	정산증감		
	소 계	0.3			
구 리 상 호	부실채권매입	4.5	1999. 6.30		
		—	정산증감		
	소 계	4.5			
국 제 상 호	부실채권매입	2.8	1999. 6.30		
		—	정산증감		
	소 계	2.8			
기 은 상 호	부실채권매입	57.7	2001. 1. 5		
		0.4	2001. 2.16		
		2.6	2001. 6.28		
		—	정산증감		
	소 계	60.7			
대 한 상 호	부실채권매입	16.6	1999.6.30		
		10.7	2001. 1. 5		
		0.1	2002.10.28		
		—	정산증감		
	소 계	27.4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투입방법	규 모	시 기	지원내용	비 고
대 양 상 호	부실채권매입	43.9	2001. 1. 5	부실채권 매 입	자산관리 공사법 제26조
		43.5	2001. 2.16		
		67.9	2001.12.24		
		△0.2	정산증감		
	소 계	155.1			
동 방 상 호	부실채권매입	0.6	1999. 6.30		
		△0.1	정산증감		
	소 계	0.5			
동 원 상 호	부실채권매입	18.6	1999. 6.30		
		0.9	2002.10.28		
		8.3	정산증감		
	소 계	27.8			
동 부 상 호	부실채권매입	52.1	2001. 1. 5		
		1.2	2002.10.28		
		—	정산증감		
	소 계	53.3			
문 경 상 호	부실채권매입	0.1	2001. 1. 5		
		—	정산증감		
	소 계	0.1			
민 국 상 호	부실채권매입	39.8	1999. 6.30		
		2.4	정산증감		
	소 계	42.2			
부 국 상 호	부실채권매입	227.7	1999. 6.30		
		—	정산증감		
	소 계	227.7			
부산부일상호	부실채권매입	17.3	1999. 6.30		
		△0.2	정산증감		
	소 계	17.1			
부산국민상호	부실채권매입	20.9	1999. 6.30		
		—	정산증감		
	소 계	20.9			
한마음상호	부실채권매입	32.0	1999. 6.30		
		42.7	2000. 6.20		
		55.3	2001. 1. 5		
		0.6	2002.10.28		
		△0.6	정산증감		
	소 계	130.0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투입방법	규 모	시 기	지원내용	비 고
삼 신 상 호	부실채권매입	1.0	1999. 6.30	부실채권 매 입	자산관리 공사법 제26조
		14.5	2001. 1. 5		
		△0.2	정산증감		
	소 계	15.3			
삼 화 상 호	부실채권매입	21.5	1999. 6.30		
		0.9	2000. 6.20		
		4.1	2001. 6.28		
		—	정산증감		
	소 계	26.5			
삼 환 상 호	부실채권매입	20.3	1999. 6.30		
		2.6	2001. 1. 5		
		△0.8	정산증감		
	소 계	22.1			
새누리상호	부실채권매입	31.5	1999. 6.30		
		12.3	2000. 6.20		
		△0.4	정산증감		
	소 계	43.4			
서 인 상 호	부실채권매입	0.7	1999. 6.30		
		△0.2	정산증감		
	소 계	0.5			
석 진 상 호	부실채권매입	5.3	2001. 1. 5		
		5.7	2001. 2.16		
		—	정산증감		
	소 계	11.0			
코미트(서울) (신신상호)	부실채권매입	24.3	1999. 6.30		
		12.9	2000. 6.20		
		△0.1	정산증감		
	소 계	37.1			
신 우 상 호	부실채권매입	1.9	1999. 6.30		
		△0.1	정산증감		
	소 계	1.8			
신 한 상 호	부실채권매입	1.9	1999. 6.30		
		0.1	2001. 2.16		
		—	정산증감		
	소 계	2.0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투입방법	규 모	시 기	지원내용	비 고
안 등 상 호	부실채권매입	22.3 —	2001. 6.28 정산증감	부실채권 매 입	자산관리 공사법 제26조
	소 계	22.3			
영 풍 상 호	부실채권매입	0.4	1999. 6.30		
		1.9	2001. 1. 5		
		0.2	2001. 6.28		
		0.1	2002.10.28		
		△0.1	정산증감		
	소 계	2.5			
울 산 상 호	부실채권매입	0.1 —	1999. 6.30 정산증감		
	소 계	0.1			
인 천 상 호	부실채권매입	1.2 —	1999. 6.30 정산증감		
	소 계	1.2			
장 항 상 호	부실채권매입	1.7 —	1999. 6.30 정산증감		
	소 계	1.7			
전 일 상 호	부실채권매입	166.8 △5.6	1999. 6.30 정산증감		
	소 계	161.2			
전남국민상호	부실채권매입	15.6 —	1999. 6.30 정산증감		
	소 계	15.6			
전북고려상호	부실채권매입	5.0 2.8	1999. 6.30 2002. 10.28		
	소 계	7.8			
전북한일상호	부실채권매입	43.8	1999. 6.30		
		6.2	2000. 6.20		
		2.3	2001. 1. 5		
		△1.0	정산증감		
	소 계	51.3			
제 은 상 호	부실채권매입	1.6 —	1999. 6.30 정산증감		
	소 계	1.6			
인천제일상호	부실채권매입	15.1 △2.1	1999. 6.30 정산증감		
	소 계	13.0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투입방법	규 모	시 기	지원내용	비 고
조 흥 상 호	부실채권매입	9.7	1999. 6.30	부실채권 매 입	자산관리 공사법 제26조
		—	정산증감		
	소 계	9.7			
주 은 상 호	부실채권매입	0.5	1999. 6.30		
		—	정산증감		
	소 계	0.5			
주은영동상호	부실채권매입	26.6	1999. 6.30		
		△1.0	정산증감		
	소 계	25.6			
중 앙 상 호	부실채권매입	-11.5	2001. 6.28		
		—	정산증감		
	소 계	11.5			
진 흥 상 호	부실채권매입	58.1	1999. 6.30		
		—	정산증감		
	소 계	58.1			
진 주 상 호	부실채권매입	3.3	1999. 6.30		
		11.5	2000. 6.20		
		28.4	2001. 1. 5		
		0.5	2001.12.24		
		△1.0	정산증감		
	소 계	42.7			
창 업 상 호	부실채권매입	76.5	1999. 6.30		
		81.2	2000. 6.20		
		42.6	2001. 1. 5		
		△6.0	정산증감		
	소 계	194.3			
춘 천 상 호	부실채권매입	5.4	1999. 6.30		
		△0.1	정산증감		
	소 계	5.3			
총 은 상 호	부실채권매입	18.0	1999. 6.30		
		0.8	2001. 2.16		
		8.5	2002.10.28		
		△0.1	정산증감		
	소 계	27.2			
평 택 상 호	부실채권매입	9.7	1999. 6.30		
		—	정산증감		
	소 계	9.7			

(2009.6월 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투입방법	규 모	시 기	지원내용	비 고
동 인 상 호	부실채권매입	7.6	1999. 6.30	부실채권 매 입	자산관리 공사법 제26조
		—	정산증감		
	소 계	7.6			
프라임상호	부실채권매입	33.5	1999. 6.30		
		—	정산증감		
	소 계	33.5			
하 나 상 호	부실채권매입	2.0	1999. 6.30		
		—	정산증감		
	소 계	2.0			
하나로상호	부실채권매입	2.0	2001. 6.28		
		19.2	2001.12.24		
		—	정산증감		
	소 계	21.2			
한 국 상 호	부실채권매입	38.9	1999. 6.30		
		△0.1	정산증감		
	소 계	38.8			
한 솔 상 호	부실채권매입	0.4	1999. 6.30		
		5.3	2001. 6.28		
		2.6	2002.10.28		
	소 계	8.3			
한 서 상 호	부실채권매입	70.2	2001. 1. 5		
		2.9	2001. 2.16		
		8.2	2002.10.28		
	소 계	81.3			
한 신 상 호	부실채권매입	3.4	1999. 6.30		
		41.6	2001. 1. 5		
	소 계	△0.3	정산증감		
한아름상호	부실채권매입	14.1	2000.12.29		
		—	정산증감		
	소 계	14.1			
한 일 상 호	부실채권매입	1.7	1999. 6.30		
		—	정산증감		
	소 계	1.7			
한 중 상 호	부실채권매입	0.2	1999. 6.30		
		0.03	2001. 1. 5		
	소 계	△0.03	정산증감		
해 동 상 호	부실채권매입	0.3	1999. 6.30		
		—	정산증감		
	소 계	0.3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투입방법	규 모	시 기	지원내용	비 고
협 신 상 호	부실채권매입	10.6	1999. 6.30	부실채권 매 입	자산관리 공사법 제26조
		29.8	2000. 6.20		
		27.9	2001. 1. 5		
		14.7	2001.12.24		
		9.0	2002.10.28		
		△0.1	정산증감		
	소 계	91.9			
동 양 상 호	부실채권매입	4.1	2001.12.24		
		—	정산증감		
	소 계	4.1			
삼 성 상 호	부실채권매입	0.05	2002.10.28		
		△0.05	정산증감		
	소 계	—			
삼 정 상 호	부실채권매입	0.02	2002.10.28		
		—	정산증감		
	소 계	0.02			
오 성 상 호	부실채권매입	0.1	2002.10.28		
		—	정산증감		
	소 계	0.1			
전 주 상 호	부실채권매입	2.4	2002.10.28		
		—	정산증감		
	소 계	2.4			
푸 른 상 호	부실채권매입	24.9	2002.10.28		
		—	정산증감		
	소 계	24.9			
푸 른 2 상 호	부실채권매입	11.4	2002.10.28		
		△1.7	정산증감		
	소 계	9.7			
한 진 상 호	부실채권매입	0.3	2002.10.28		
		—	정산증감		
	소 계	0.3			
현대스위스	부실채권매입	79.3	2002.10.28		
		—	정산증감		
	소 계	79.3			
현대스위스2	부실채권매입	0.4	2002.10.28		
		—	정산증감		
	소 계	0.4			
합 계	부실채권매입	2,102	계약액		
		△11	정산증감		
	합 계	2,091			

□ 저축은행별 공적자금 회수현황

○ 예금보험공사 회수현황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예보채상환기금 회수				
	출자금 회 수	대출금 회 수	파산 배당 등	자산 매각	소계
한 아 름 →정리금융공사		263	37,994		0
• 한 아 름(합)					
•경 남			688		0
•경 북			805		0
•경 일(경산)			148		0
•경 일(안산)			114		0
•경 주			252		0
•광 주			924		0
•구 리			576		0
•국 일			461		0
•금 정			575		0
•기 산			21		0
•대 구			549		0
•대 신			259		0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예보채상환기금 회수				
	출자금 회 수	대출금 회 수	파산 배당 등	자산 매각	소계
•대 전			969		0
•대 청			306		0
•대 한(서울)			1,009		0
•대 한(인천)			603		0
•대 화			510		0
•동 방(목포)			863		0
•동 방(서울)			839		0
•동 아(부산)			132		0
•동 아(서울)			5,371		0
•동 화			13		0
•부 민(광주)			372		0
•삼 원			116		0
•성 원			281		0
•수 원			582		0
•신 경 기			532		0
•신 세 계			309		0
•신 양			241		0
•신 일			309		0
•신 중 앙			1,252		0
•신 총 은			383		0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예보채상환기금 회수				
	출자금 회 수	대출금 회 수	파산 배당 등	자산 매각	소계
•쌍 인			451		0
•아 주			547		0
•열 린(대구)			477		0
•열 린(서울)			949		0
•영 주			252		0
•영 천			164		0
•오 렌 지			3,338		0
•을 리 브			546		0
•우 신			380		0
•우 양			286		0
•을 산			413		0
•유 남			78		0
•일 신			147		0
•창 향			281		0
•정 우			856		0
•조 치 원			163		0
•중 앙			703		0
•창 녕			139		0
•총 남			915		0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예보채상환기금 회수				
	출자금 회 수	대출금 회 수	파산 배당 등	자산 매각	소계
•한 국			637		0
•한 양(제주)			179		0
•한 은			130		0
•해 동(경기)		263	886		0
•해 동(서울)			3,596		0
•호 남			170		0
•화 신			340		0
•흥 성			612		0
경 기(코미트)			40		0
경 (구. 북 한우리)					0
경 인			591		0
국 민(제주)			524		0
금 강		709	14		0
대 양(경기)			3,747		0
대 천		102			0
대 한(충남)			83		0
동 아(경기)			1		0
동 원		783	3		0
문 경			490		0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예보채상환기금 회수				
	출자금 회 수	대출금 회 수	파산 배당 등	자산 매각	소계
미래			1,118		1,118
부민(부산)					0
부산2		271			271
삼화(전북)			102		102
상구.현업대			3		3
세누리		21			21
세온양		45			45
석진			314		314
솔로몬드			7		7
신충북		161			161
아림		615			615
유니온		518			518
제이원			41		41
조일		738	9		747
충일		89	2,372		0
코미트		1,654	9		1,663
텔슨					0
하나로					0
한남(경기)			110		110
한마음			2		2
합계	0	5,969	47,574	0	53,543

○ 자산관리공사 회수현황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지속은행명	회 수		
	환매해제	매각	소계
한정리금융공사	70.6	46.9	117.5
-한아름(합)	2.0	12.7	14.7
-구리	4.5		4.5
-대전<구충은>	17.1	6.8	23.9
-울산	0.1		0.1
-장항	1.6	0.1	1.7
-한국(서울소재)	36.8	1.3	38.1
-한신	8.5	26.0	34.5
경기 (코미트)	10.7	12.6	23.3
경인	3.6		3.6
고려	1.7	4.7	6.4
교원나라<구새한>			
국제	2.8		2.8
기은	22.3	41.4	63.7
대양 (경기소재)	2.7	142.4	145.1
대영 <구협신>	0.3	80.8	81.1
대한 (광주소재)	16.6	10.3	26.9
동방		0.5	0.5
동부		42.2	42.2
동양	4.1		4.1
동원 (안흥)	5.8	10.1	15.9
동인	7.6		7.6
문경			
민국	41.7	0.5	42.2
부국	74.4	167.9	242.3
부산국민	7.1	13.9	21.0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회 수		
		환매해제	매각	소계
부 일		15.4	1.4	16.8
삼 신			17.7	17.7
삼 정				
삼 화 (서 울 소 재)		5.3	21.6	26.9
삼 환			19.2	19.2
새 누 리 (한 보)		11.1	37.1	48.2
서 인			0.6	0.6
석 진			11.7	11.7
신 신 < 구 코 미 트 > (서 울 소 재)		4.9	36.4	41.3
신 우		0.1	1.6	1.7
신 한			2.1	2.1
안 동			19.8	19.8
영 풍		0.3	0.9	1.2
오 성			0.4	0.4
인 천		0.3	1.0	1.3
전 남 국 민		10.5	5.4	15.9
전 북 고 려		4.5	1.1	5.6
전 북 한 일		32.6	16.7	49.3
전 일		24.0	121.8	145.8
전 주			1.1	1.1
제 은		1.6		1.6
제 일		0.2	5.5	5.7
조 흥		7.9	2.1	10.0
주 은		0.2	0.2	0.4
주 은 영 동		13.4	14.2	27.6
중 앙			12.0	12.0
진 주			36.1	36.1
진 흥		58.1		58.1

(20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회 수		
		환매해제	매각	소계
창	업	50.4	98.8	149.2
춘	천		1.9	1.9
평	택	9.7		9.7
푸	른	1.8	5.3	7.1
푸	른 2	0.1	3.7	3.8
프	라 임	32.3	0.7	33.0
하	나	2.0		2.0
하	나 로 (신 총 북)	19.2	2.1	21.3
한	마 음 (한 일 , 부 일)	17.8	89.6	107.4
한	서	10.3	48.1	58.4
한	솔	0.4	7.8	8.2
한	일	1.7		1.7
한	중		0.1	0.1
한	진	0.1	0.2	0.3
해	동		0.2	0.2
현	대 스 위 스	1.2	40.9	42.1
현	대 스 위 스 2		0.2	0.2
합	계	609	1,262	1,871

이 성 남 의원

1. 외부위탁 정책연구용역 현황 및 결과보고서
(2008. 9월~2009. 9월 현재) : 과제명, 위탁부서
및 수탁기관, 용역비, 결과보고서 등

□ 외부위탁 정책연구용역 현황 및 결과보고서(2008.9월~2009.9월 현재)

- 외부위탁 정책연구용역 현황 : 붙임 참조
- 외부위탁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별도제출

<붙임>

외부위탁 정책연구용역 현황[2008.9월~2009.9월]

(단위 : 천원)

과 제 명	위탁부서	수탁기관	기 간	용역비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구용역	자본시장과	연세대 학교 산학협력단	08.9.2~11.21	22,000
홈페이지 개편 연구개발	정책홍보팀	(주)사이버 이미지네이션	08.11.5~12.26	29,500
비명시적규제 개혁 외부평가 연구용역	감사담당관실	동국대 학교 산학협력단	08.11.27~12.26	25,000
금융중심지 선정에 관한 금융 전문가 의견조사	글로벌금융과	한국개발연구원	08.12.12~12.29	19,000
금융상품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방지방안	금융정책과	자본시장연구원	09.4.13 ~ 7.12	30,000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기획협력팀	한국금융연구원	09.3.16 ~ 9.15	45,000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효과 분석	금융시장 분석과	자본시장연구원	09.6.1 ~ 8.31	20,500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금융정책과	연세대 학교 산학협력단	09.6.10 ~ 8.15	40,000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국제협력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09.5.13 ~ 6.19	30,000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산업금융과	한국금융연구원	09.6.1 ~ 8.3	28,800
자본시장 등 금융부분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자본시장과	서울대 학교 산학협력단	09.4.21 ~ 9.30	30,000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금융정책과	한국금융연구원	09.7.16 ~ 10.15	35,000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자본시장과	자본시장연구원	09.8.5~12.2	32,000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	기획행정실	아주대 산학협력단	09.8.28~12.31	35,000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시스템 설계 방향	자본시장과	자본시장연구원	09.9.16~11.15	30,000

2. 금융위서관 각종 위원회

- 위원회 인적사항 : 성명, 나이, 주요학력 및 경력 등
- 운영현황 : 회의 개최현황 및 위원별 출석현황
- 회의록사본 및 회의에 제출된 각종 보고서 사본
- 2009년도 예산 및 2010년도 예산안
- 2008년 2월 이후 위원 교체현황 및 사유

A. 공자위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황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포함 위원8인(당연직 6인, 민간위촉 2인)

구 분	성 명	나이	소속 및 직위	주요학력	주요경력
당연	이창용	50	금융위 부위원장	서울대경제 하버드대 경제학(박사)	'08.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07.12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04.7 국민경제지문화의 위원
"	추경호	50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고려대 경영학 오리건대 경제학(석사)	'09.2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05.10 재경부 금융정책과장
"	김용환	51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서울대 무역학	'09.2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	이광준	58	한국은행 부총재보	연세대 경영학	'09.4 한국은행 부총재보 '07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장
"	조인제	60	예금보험공사 이사	건국대 경영학과	'08.8~ 예금보험공사 이사
"	권경성	55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	성균관대 법대	'03 자산관리공사 기업매각부장 '08.6~ 자산관리공사 이사
위촉 (민간)	안수현 (08.8.6~ 10.8.5)	41	외국어대 법대 교수	이화여대 법대 서울대 법대(박사)	'04~'07.10 충북대 법대교수 '07.10~외국어대 법대교수 '05~증권선물거래소시장감시위원
"	이용모 (09.2.4~ 11.2.3)	46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미)조지워싱턴대 통계학과, 뉴욕대 행정대학원(박사)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現)

[참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8조 (기금운용심의회)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1. 금융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
2.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4. 한국은행 부총재보로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
5.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으로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
6.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으로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

□ 기금운용심의회 운영현황

○ 기금운용심의회 개최현황

차수	일자	안건
1	03.2.5	· 2003회계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 운용규정
2	03.5.30	· 2004회계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3	04.5.20	· 2005회계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4	05.5.30	· 2004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결산 · 2006회계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 공적자금상환기금자산운용지침 제정
5	06.5.30	· 2005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결산 · 2007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6	06.12.5	· 2006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
7	07.2.27	· 2006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결산
8	07.6.28	· 2008회계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9	08.2.15	· 2007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결산
10	08.6.30	· 2009회계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11	08.7.5	· 2009회계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12	08.9.29	· 2008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
13	09.2.13	· 2008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 결산 심의
14	09.3.17	· 2009회계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
15	09.6.23	· 2010회계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 계획

○ 참석자수(율)

- 매년 약 2~3회 정도 서면회의를 통해 심의하기 때문에 별도 참석자수 통계는 없음

□ 회의록 사본 및 각종 보고서 사본

○ 보고서 사본은 별도송부

* 기금운용심의회는 서면회의로 개최하고 있어 별도 회의록은 없음

□ 2009년도 예산 및 2010년도 예산안

○ 별도 예산 없음

* 기금운용심의회 민간위원(2명) 안전검토수당(15만원/1회 지급)에 대한 예산이 기금운영비에 60만원/년 씩 편성됨

□ 2008년 2월 이후 위원 교체현황 및 사유

○ 별도 연임제한 규정은 없음

○ 2008년 2월 이후 교체사유

1) 당연직의 경우 : 직의 교체에 따름

2) 위촉직의 경우 :

- '08.8 임기만료된 안수현위원의 경우 '10.8 까지 연임

- '09.2 임기만료된 이용모위원의 경우 '11.2 까지 연임

B. 공정시장과

1. 각 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 성명, 나이, 주요 학력 및 경력 등

위원회	위 원 (임기)	생년	현 직	학 력	경 력
감리 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58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워싱턴대 경영학	감독정책2국장 금융정책국장
	홍영만	'58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연세대 정치학과 서울대 대학원 워싱턴대 대학원 (경제학박사)	재경부 금융협력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금감위 혁신행정과장 금감위 홍보관리관
	김호중	'57	건국대 경영대학장	서울대 경영학 Georgia State 대학 경영학 석·박사	감사원 자문위원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위원
	원정연	'46	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자율 감리위원장	한양대 경영학 한양대 대학원 (경영학박사)	CPA 증권감독원 전문심의위원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박재환	'60	중앙대 상경대 교수	고려대 경영학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 석·박사)	CPA 공무원연금운영위 위원 한공회 윤리기준위 윤리위원
	오승돈	'60	한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경제대학원 샌디에고 법과대학원	안건회계법인 공정위 심판관리 2 담당관 방통위 분쟁조정위 위원
	전영순	'61	중앙대 회계학과 교수	중앙대 경영학 조지아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경부 세제발전심의 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선임연구위원
	박순철	'64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서울대 법학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검사

위원회	위 원 (임기)	생년	현 직	학 력	경 력
회계제 도심의 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58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워싱턴대 경영학	감독정책2국장 금융정책국장
	홍영만	'58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연세대 정치학과 서울대 대학원 워싱턴대 대학원 (경제학박사)	재경부 금융협력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금감위 혁신행정과장 금감위 홍보관리관
	주영섭	'57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서울대 사대 일반사학과 코네티컷대학원(석사)	재경부 조세정책과장 재경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세무대학교 교수위원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김호중	'57	건국대 경영대학장	서울대 경영학 Georgia State 대학 경영학 석·박사	감사원 자문위원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위원
	윤경식	'58	한영회계법인 부대표/감사본 부장	연세대 경영학	공정위 경제정책자문위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병우	'58	대한생명보험 상무	한국외대 무역학과 성균관대 경영학 (박사)	現 기준원 자문위원회 위원 前 한화그룹 구조본 근무 미국 공인회계사
	최외홍	'52	삼성벤처투자 사장	경북대 경영학 성균관대 경영학 박사	前 삼성전자 부사장 前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조현연	'52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수도여고 숙명여대 경영학사 고려대 회계학 박사	現 기획재정부 국가회계기준심의위원 前 금감위 비상임위원
	백복현	'68	서울대 교수	서울대(경영학) 캘리포니아대학원(박사)	現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前 플로리다주립대학 교육과정위원회 위원
	정도진	'69	중앙대 교수	서강대학교(경제학) 켄터키 대학원(박사)	現 한국회계학회 이사 前 감독원 회계제도실 팀장
	안영균	'59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 대학원(석사) 국민대 대학원(박사)	前 규제개혁추진위원회 위원 前 회계산업경쟁력강화 위원회 위원

2. 각 위원회 운영현황 : 회의 개최 현황 및 위원별 출석현황

☐ 감리위원회

연도	2008	2009.8
회의개최 횟수	7회	6회
참석자 수(참석율)	7.3명(81%)	8명(89%)

☐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연도	2008	2009.8
회의개최 횟수	4회	2회
참석자 수(참석률)	8.7명(79%)	8명(73%)

3. 각 위원회 회의록 사본 및 회의에 제출된 각종 보고서 사본

-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감리위원회 회의 내용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될 수 없는 관계로 요청하신 회의록 사본은 부득이 제 공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회의에 제출된 각종 보고서는 없습니다.

4. 각 위원회의 2009년도 예산 및 2010년도 예산안

☐ 감리위원회

- 2009년 예산으로 4,200,000원이 외부위원 회의참석수당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2010년 예산안에는 3,400,000원이 외부위원 회의 안전검토 및 참석수당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회계제도심의위원회

- 2009년 예산으로 5,880,000원이 외부위원 회의참석수당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2010년 예산안에는 3,400,000원이 외부위원 회의 안전검토 및 참석수당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5. 2008.2월 이후 위원 교체현황 및 사유 : 해촉, 사임 등 모두 포함. 교체된 위원의 신상 및 구체적인 교체 사유

☐ 감리위원회

교 체 일	전 임 자	후 임 자	변 경 사 유
'08.5.29	이 명 곤 교수	김 호 중 교수	임기 만료
"	양 호 승 변호사	오 승 돈 변호사	"
'08.10.30	안 속 찬 교수	전 영 순 교수	"
'09.2.2.26	조 재 연 교수	박 순 철 검사	"
'09.5.4	이 만 우 교수	박 재 환 교수	"
'09.9.14	김 호 중 교수	미 정 ('09.9.29 현재)	금강원 전문심의위원으로 선임되면서 감리위 당연직 위원이 됨

* 당연직 위원 교체는 생략하였습니다.

□ 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교 체 일	전 임 자	후 임 자	변 경 사 유
'08.7.10		윤 경 식	임기 만료
"		최 외 흥	"
"		조 현 연	"
'09.3.3	우 병 루 상무	이 병 우	"
'09.7.20	박 상 임 교수	백 복 현	"
"	한 봉 희 교수	정 도 진	"
"	전 괄 부대표	안 영 균	"

* 당연직 위원 교체는 생략하였습니다.

<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

□ 위원의 인적사항 : 성명, 나이 주요학력 및 경력 등

- 당연직 위원(4인) : 증선위 상임위원(위원장),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위 법률자문관, 감독원 조사담당부원장보
- 위촉직 위원(3인) : 금융관련법령 또는 증권·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 3인
- 위원의 실명 등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운영현황 : 회의 개최현황 및 위원별 출석현황

연도	2007	2008	2009.8
회의개최 횟수	11회	13회(서면 포함)	8회
참석위원 수(참석율)	6.7명(96%)	6명(86%)	5.6명(80%)

* 각 위원별 출석현황은 상기 이유에 의거하여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위원회 회의록 사본 및 회의에 제출된 각종 보고서 사본

-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증선위 자문기구로서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 회의에 제출된 안건은 공개될 경우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관련 기업의 주가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 또한, 개인의 명예·사생활 및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 등으로 관련자 및 해당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 기타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개인 정보 보호차원에서 부득이 이를 제공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위원회의 2009년도 예산 및 2010년도 예산안

- 2009년도는 회의참석수당 및 안전검토 사례금으로 6,120,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동일한 금액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 2008.2월 이후 위원 교체현황 및 사유 : 해촉, 사임 등 모두 포함. 교체된 위원의 신상 및 구체적인 교체사유

일자	위원	교체사유
2008.4.7	외부위원	전직 위원 사임
2008.5.23	내부위원(당연직)	금융위 출범에 따른 규정개정
2008.6.11	내부위원(당연직)	인사발령(해당직위자 교체)
2009.1.30	내부위원(당연직)	인사발령(해당직위자 교체)
2009.2.10	내부위원(당연직)	인사발령(해당직위자 교체)
2009.4.1	외부위원 2인	전직 위원 2인 임기만료

* 내부위원(당연직)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기간 동안임

C. 국제협력팀

□ 명 칭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위원회 현황

- (법적근거)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능)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추진 상황 점검 등을 심의
- (위원) 불임1 참조
- (개최실적)

연번	개최일	회의명	구분	참석율
1	2008. 6. 30	제1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	80%
2	2008. 7. 30	제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서면	92%
3	2008. 12. 3	제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서면	84%
4	2009. 1. 21	제4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	100%
5	2009. 5. 14	제5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서면	92%

- (위원회 관련예산) 2009년도 34,650천원, 2010년도(안) 25,200천원
- (위원 교체현황) - 불임2 참조
- (회의록 사본 등) - 불임3 참조

[붙임 1]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현황 >

구분	성명	현 직위	주요경력
민간 위원 (10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동원금융지주 사장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은행 이사회 의장
	민상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금융학회 회장
	양호철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증권 한국지점 대표	동서증권 영업총괄본부장
	윤영각	삼성KPMG그룹 대표	삼성컨설팅 대표
	이수창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삼성화재 대표이사
	전성빈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금감위 비상임위원
	정계성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R.클렘코스키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학장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한미은행장
당연직 (정부 6인)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수출입은행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
당연직 (유관 기관 9인)	김동수	수출입은행장	기획재정부 차관
	민유성	산업은행총재	우리금융지주 부회장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수출입은행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한국은행 감사
	이성태	한국은행총재	한국은행 부총재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정환	한국거래소이사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
	진영욱	한국투자공사장	한화손해보험 부회장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붙임2]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교체 현황>

소속	교체전	교체후(현재)	교체사유
금융위원회	전광우	진동수	금융위원회 장관 교체
교육과학기술부	우형식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교체
보건복지부	이봉화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
기획재정부	김동수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 교체
한국수출입은행	진동수	김동수	수출입은행장 교체
은행연합회	유지창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교체
생명보험협회	남궁훈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교체
자산운용협회	윤태순	-	자산운용협회·한국증권업협회 통합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08.6.30) 회의록

I. 회의 개요

- ☐ 일시 : '08. 6. 30(월) 15:00~17:20
- ☐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 참석 위원 : 22명
- ☐ 회의 안건 : 총 3건
 - 【심의 안건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
 - 【심의 안건 2】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 【보고 안건】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안)

II. 회의 주요 내용

가.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 관련

- ☐ 금융중심지 조성계획,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치계획 등 기본계획안의 추진사항은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구체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바람직하나

- 중국 등 관련 국가와 금융중심지 경쟁을 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며
- 외국인의 생활여건 및 법령·행정체제 등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환경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나.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관련

- 금감원에 설치하는 “금융중심지 지원센터”가 타 기관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고 중심지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의 업무·성격을 명확히 해야 하며
- 기업에 대한 경영지원기능 및 연구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다.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안) 관련

-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안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은 적절성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평가위원도 신속, 공정하게 구성되어 평가가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임
- 또한 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 각부처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금융중심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논의되었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09.1.21) 회의록

I. 회의 개요

- ☐ 일시 : '09. 1. 21(수) 14:00~15:50
- ☐ 장소 : 사학연금회관 회의실
- ☐ 참석 위원 : 25명
- ☐ 회의 안건 : 【심의안건】 금융중심지 지정(안)

II. 주요 발언 요지

1. 평가단의 평가결과 보고

- ☐ 금융중심지 신청지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3개의 금융중심지 대상지역 지정안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 제출함
 - o 제1안 : 서울 여의도 1곳을 지정(평점 1위 지역)
 - 『서울 여의도』를 '종합금융중심지'로 집중 육성
 - 현재 금융기관 집적 및 경영인프라 등 수준이 높아 국제금융중심지로 성장가능성이 가장 큰 대표지역에 역량 집중

- 제2안 : 서울 여의도 · 부산 문현 2곳을 지정(평점 1·2위 지역)
 - 『부산 문현』을 '특화(지역)금융중심지'로 추가 육성
 - 서울의 1개 지역을 특화(지역)금융중심지로 육성하여 서울과 경쟁 · 보완하며 상호 발전 기대
- 제3안 : 서울 여의도 · 부산 문현 · 인천 송도 3곳 지정
(평점 1·2·3위 지역)
 - 제2안 + 『인천 송도』를 추가 지정
 - 금융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온 선도지역들의 개발사업 추진실적을 기반으로 금융중심지 조성

2. 금융중심지 지정(안) 심의 결과

◇ 제2안 : 서울 여의도 · 부산 문현 2곳 지정(평가점수 상위 2곳)

- ① '서울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종합금융중심지'와
- ② '부산 문현'을 특화금융중심지'로 육성

- 서울 여의도 : 현재 금융기관이 집적되어 있고 높은 수준의 경영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로 의견을 모음
- 부산 문현 :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미 증권선물거래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치하고 있고 향후 다수의 금융공기업이 이전되어 집적될 예정이며, 현재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한 혁신 단지가 개발되는 등 금융중심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로 심의함

□ 경기 고양 및 인천 송도 : 현 시점에서 이들도 별도의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서울(여의도)과 연계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

○ 경기 고양 : 향후 서울 여의도의 배후지역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으로서, 금융기관의 전산센터, 콜센터 등 후선업무와 금융인력양성기지 등,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는 서울 여의도와 연계하여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앞으로 고양시와 적절한 발전방안을 계속 논의

○ 인천(송도) : 사실상 서울과 인접한 단일경제권으로 경기 고양과 마찬가지로 서울 여의도와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별도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동반 발전될 수 있다는 점, 같은 수도권이라는 점 등이 논의됨. 인천(송도)지역도 고양시와 같이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적절한 발전방안을 계속 논의

□ 중장기적으로 서울 여의도,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기 고양을 잇는 광역금융벨트가 형성되어 우리나라의 대표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음

□ 제주의 역외금융모델은 국제기준(국가간 과도한 조세특례 경쟁 금지)과 상충문제 등의 논란이 있어 계속 논의하기로 함

(향후 추진방안 관련)

- 금융중심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세부개발계획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09년 상반기중 확정되어 추진될 계획
- 이를 위해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조성분과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실무지원반을 운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세부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임

D.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위원회 현황

- (법적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행정기관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위 심사를 받아야 함
- (기능)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규제범위, 대상, 존속기한 등에 대한 부처 심사의견 결정
- (위원) 민간위원 7인, 내부위원 2인(사무처장, 기획조정관)
 - * 위원장 : 민관공동위원장(박재하 금융연구원 부원장, 사무처장)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현황 >

구분	성명	현직책	주요경력	연령
외부 (7인)	박재하	금융연구원 부원장	· 재경부장관 자문관	53세
	홍우선	KIS 채권평가 사장	· 한신평 평가팀장	49세
	이태열	보험개발원 연구조정실장	· 현대경제연구원	45세
	김성용	성대 법대 교수	· 법무법인 우현·지산 대표 변호사	44세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KDI 연구원	44세
	이갑재	삼일회계법인 전무	· 한국, 미국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회 자문위원	47세
	전병준	매일경제 금융부장	· 매경 뉴욕특파원 · 매경 정치부장	50세
내부 (2인)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54세
	조인강	금융위 기획조정관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심의관	52세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최 현황

-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21차례('08년 11차례*, '09년 10차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최

* 대면심의 3회, 서면심의 8회 ** 대면심의 2회, 서면심의 8회

- 위원별 대면심의 참석 현황

구 분	손상호	조성훈	오영수	김승열	윤창현	이갑재	
'08년 제3차 회의	○	○	○	○		○	
위원 변경	박재하	홍우선	이태열	김성용	김현숙	이갑재	전병준
'08년 제6차 회의	○	○	○	○	○	○	○
'08년 제8차 회의	○	○	○	○	×	○	×
'09년 제1차 회의	○	○	×	○	○	○	×
'09년 제7차 회의	○	○	○	○	○	○	○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보고서 사본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안건 : 별첨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예산

- (2009년도 예산) 총 5,100천원(외부위원 회의참석수당 2,100천원, 안전사례검토금 3,000천원)
- (2010년도 예산) 총 5,100천원(외부위원 회의참석수당 2,100천원, 안전사례검토금 3,000천원)

□ 자체규제심사위원 교체현황 및 사유

전임 위원		현 위원		교체사유
성명	소속(당시)	성명	위촉일	
손상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박재하	'08.8.19.	임기만료
조성훈	증권연구원 부원장	홍우선	'08.8.19.	임기만료
오영수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태열	'08.8.19.	임기만료
김승열	법무법인삼영 변호사	김성용	'08.8.19.	임기만료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김현숙	'08.8.19.	임기만료
		전병준	'08.8.19.	신규위촉

E. 산업금융과

□ 대부업정책협의회는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금융위원회 위원장(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

《 대부업정책협의회 위원 현황 》

성명(나이)	현 직	주 요 학 력	주 요 경 력
위원장	1명		
진동수(60)	금융위원회 위원장	○경복고 ○서울대 법대 ○미국 보스턴대 대학원 경제학과	○'08 한국수출입은행장 ○'06 재정경제부 제2차관
당연직	4명		
이용걸(52)	기획재정부 차관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同행정대학원 ○미국 밴더빌트대 대학원 경제학과	○'08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07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
황희철(52)	법무부 차관	○경동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미시간대 법학과 수료	○'09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08 광주지검 검사장
강병규(55)	행정안전부 차관	○경기고 ○고려대 법학과 ○미국 캔자스대 대학원 정책학과	○'08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장 ○'07 행정안전부 지방행정본부장
손인옥(57)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광주고 ○서울대 경영학과 ○독일 콘스탄츠대 대학원 경제학과 수료	○'07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06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F. 중소기업금융과

☐ 대부업 정책협의회의 개최현황 및 출석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부업정책협의회 참석 현황 》

* 제1차 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06.12.27) : 경제부총리(주재), 금감위원장,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참석

* 제2차 대부업정책협의회('07.6.5) : 경제부총리(주재), 금감위원장, 법무부장관, 행자부 제2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국조실 기획차장 참석

	회의일자	재경부장관	금감위원장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공정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제3차	'07.11.5	○	부위원장	○	제2차관	부위원장	x
제4차	'08.1.29	○	부위원장	차관	균형발전지원본부장	사무처장	x

	회의일자	금융위원장	재정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안부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제5차	'08.6.3	부위원장	담당과장	x	담당과장	담당과장
제6차	'08.9.9	부위원장	경제정책국장	x	지역발전정책국장	x
제7차	'08.12.15	부위원장	차관보	x	지역경제발전과장	x
제8차	'09.3.30	부위원장	자금시장과장	x	x	약관제도과장
제9차	'09.4.24	○	기획조정실장	형사기획과장	지역경제과장	사무처장

☐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대부업정책협의회 운영을 위해 별도로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 '08.2월 이후 대부업 정책협의회 위원 교체현황 및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명	교체전	교체후(현재)	교체일자	교체사유
	위원장			
금융위원회	전광우	진동수(60)	'09.1.20	금융위원회 장관 교체
	당연직			
기획재정부	배국환	이용걸(52)	'09.2.09	기획재정부 차관 교체
법무부	문성우 ('09.1.19 교체) 이귀남	황희철(52)	'09.8.12	법무부 차관 교체
행정안전부	정남준	강병규(55)	'09.1.20	행정안전부 차관 교체
공정거래위원회	서동원	손인옥(57)	'09.8.31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교체

제4차 대부업정책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회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8.1.29(화) 16:00~17:00, 장소 : 재경부 7층 대회의실

1. 주요 논의결과

① 대부업체 관리·감독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 강화 필요

- 지방의 행정력, 경찰력, 세무서 등을 통해 대부업체를 관리·감독·단속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
- 현재 시·도별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

②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행사를 마련

③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

- 다음 실태조사시에는 대부업체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대부 시장 이용자들에 대한 분석도 포함
- 대부업체 이용자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신용도, 연체정도, 사금융 이용 용도 등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
-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 대안금융을 제공할 대상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금융에도 발굴

4] 관계법령 개정 노력

- 대부업법, 유사수신규제법 등 대부업 및 유사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2. 향후 추진계획

- 대부업자와 사금융이용자 대상 실태조사 실시 ('08.2~3월)
- 상반기중 지자체 인력충원을 마무리
- 상반기중 대부업법·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제5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개최 결과

-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8.6.3(화)

1. 주요 논의결과

① 등록 대부업체와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 그 동안 사금융 시장 규모는 각 연구소 등에서 18~45조원으로 추산
- 그러나 동 추정치는 90년대 통계치, 등록 대부업체 조사 등 일부 제한적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정책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
- ➡ 이에 전국민과 사금융 이용자,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실태조사를 시행
- 사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성 있는 현황 자료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조사결과 전체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전 국민(20세 이상 3,500만명)의 5.4%인 약 189만명인 것으로 추정
 - 이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사금융 이용액은 873만원으로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는 약 16.5조원으로 추정됨

- 사금융 대출의 이자율 평균은 연 72.2%*이고, 사금융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2곳에서 사금융을 이용

* 사금융 이자율이 법상 이자율보다 크게 높은 것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법 개정후 이자가 낮아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금리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등록 대부업체 조사결과 신용대출 금리는 약 37~44%로 조사됨)

- 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중 금융소외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및 재원조성 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

② 경찰과 검찰은 작년에 이어 금년 3~4월중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

* '08.1~4월중 1,185명을 단속

- 하반기에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추가하여 실시하되
 - 금감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
- 또한,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를 적발해 등록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공정위에서는 그 동안 대부업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조사('07.6~12)하여 시정권고·명령하고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의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

③ (지자체 대부업 관리강화) 대부업체 DB구축, 지자체 대부업 전담인력 보강*, 시·도관계기관협의회 운영** 등을 지속 추진중

* 지자체의 대부업 전담인력을 '07~'08.5월중 26명까지 확보

** 16개 시도중 12개 시도 개최

-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 정보의 DB화를 완료('08.2)
- 향후 관계부처가 단속·조사를 실시하거나, 일반국민이 대부업체 여부 확인시 동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④ 대부업법 개정('08.3 시행)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하게 되었음

* 2개 이상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경우,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인 경우

- 이에따라, 금감원의 관련조직을 확대개편하고, 현재 지자체를 통해 검사대상 대부업자 현황을 파악중이며, 직권검사 대상 업체에게 설명회를 통해 검사내용 등을 안내
- 금년 하반기부터는 직권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할 계획임

⑤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금융소외자의 자활을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추진

- ① 국민연금 기납부액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② 소액서민 금융재단을 통한 창업·취업지원, 신용대출, ③ 신용회복기금 설치를 통한 연체채무 재조정 및 고금리 채무 환승 지원, ④ '신용회복지원중' 기록말소, ⑤ 불공정 채권추심방지법 제정
- 이를 위해 대부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도 논의

2. 향후 추진계획

- ①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후 6~7월중 최종방안 발표)
- ② 대부업체DB를 활용한 상시관리시스템 및 사이트 운영에 대한 실무자 회의 개최 ('08.6~7월중)
- ③ 단속기관은 서로간 협조하여 상시적으로 단속을 추진

제6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8.9.9(화) 15:00~16:00, 장소 : 금융위 5층 회의실(513호)

1. 주요 논의결과

- ① 대부업 관리·감독 및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 추진
 - 대부업법 입법예고 기간 중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필요
- ② 제4차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 추진 계획 및 지자체 파견 전문검사역 활동성과
 - 금감원의 지자체 파견 전문검사역 활동성과 보고
- ③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 검·경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및 단속실적, 국세청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적정비·세무조사 실시 및 실적
- ④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 지자체 인력 확대가 어렵고 아직까지 대부업에 대한 시도의 관심이 미흡한 상황
 - 대부업 상시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실무협의

⑤ 대부업 정책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방안

- 대부업 정책 협의회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협의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
-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법정기구화하는 만큼 연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할 필요
- 우선, 실무단계에서 지자체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건을 선정한 후 정책 협의회에 상정할 필요

2. 향후 추진계획

- 사회적으로 사금융에 의한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으므로 각 부처가 서로 협조하여 상시적으로 단속을 추진
- 대부업체 DB를 활용한 상시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실무자 회의 개최('08.9월중)

제8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9.3.30(월) 17:00~17:40, 장소 : 금융위 부위원장실

1. 주요 논의결과

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 대부업법에서 위임한 사항(대부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대부계약시 제출받는 소득증명서류의 범위 등)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② 대부거래 표준약관 등의 제·개정 계획

- 대부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추진실적 및 대부거래 표준약관 등의 제·개정 계획

③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 검·경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및 단속실적, 국세청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적정비·세무조사 실시 및 실적

④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 자산 규모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⑤ 제5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계획

- 대부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

⑥ 사이버금융감시반 운영 현황

- 사이버금융감시반의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2. 향후 추진계획

- ☐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주기적 개최를 통해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 ☐ 제5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제9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회의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9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9.4.24(금) 08:00~09:40, 장소 : 금융위 20층 식당 별실

1. 주요 내용

① 금융권을 활용한 서민금융 지원강화 대책

- ① 저신용자에게 생활자금 대출 지원
- ② 보유재산 담보부 생계비 저리융자
- ③ 은행 「저신용자 전용대출 상품」 활성화

② 불법 사금융 단속강화 및 사후구제 확대

가. 유관기관 합동의 불법 사금융행위 총력 단속 실시

- ① 불법 대부업 상시 집중단속 강화
- ②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지급제도 신설
- ③ 금융감독기관과 수사기관간 공조강화(금감원·경찰청 협약식 체결)
- ④ 불법 혐의정보 수사기관 즉각 제보
- ⑤ 세금탈루 대부업자 세무조사 및 연중 사업자 등록정비
- ⑥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 개설

나.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강화

- ① 등록 대부업 DB 인터넷 공개
- ② 무등록업체 광고활동 모니터링 및 수사기관 정기 통보
- ③ 금감원 직권검사 강화 및 지자체에 현장점검 및 상담 지원
- ④ 대부거래 및 보증 표준약관 제정·보급
- ⑤ 업계 자율규제 강화

다.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 ① 개인회생·파산절차 무료지원
- ② 고리사채 피해자에 대한 무료소송지원

③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8.7)전 홍보

나. 서민금융정책 및 피해예방 홍보

- ① 서민금융안내 책자 및 리플렛 발간
- ② 서민금융포털사이트 활용도 제고
- ③ 방송광고 실시

2. 주요 논의결과

□ 법무부

-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
- 불법 대부행위를 수사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체계의 강화가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 (On-line 홍보) 사채 등에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면 즉각 검색 되도록 하는 등 인터넷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피해구제 방법도 인터넷 포털에서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약관) 대부거래 및 대부거래 표준약관 인터넷 계약의 경우 대부이용자에게 계약서 송부를 의무화하여 채무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함

□ 경찰청

-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작전을 통해 사회안정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불법대부행위가 내밀하게 이루어져 단속이 어려움
-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해 신고활성화를 기할 것임
- 별도의 신고피해전화를 개설하기 보다는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기존의 신고전화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국세청

- 세금탈루 혐의 대부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홈페이지의 탈세 신고방에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별도로 구분 신설할 것임

□ 금융감독원

-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고리사채를 치면 바로 「서민금융 119」로 연결되도록 조치하고, Cyber 홍보 등을 지속추진할 것임

□ 금융위

- 신설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를 통해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향후 지자체와 연결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할 것임
-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막기 위해 각 부처는
 - 올 8월 시행예정인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 대부업 관리·감독, 엄정한 단속과 처벌, 피해자 사후구제 등 일련의 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처간 상호공조를 공고히 하여 주시기 바람

3. 향후 추진계획

- 금일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국무회의('09.4.28)에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보고

G. 자본시장과

□ 시장효율화위원회 인적사항

- 성명, 나이, 주요 학력 및 경력 등

성명	나이	주요 학력	주요 경력
조재호	55	서울대 경영학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 서울대대학원 경영학 석사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박사	1995~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08~현재 SK텔레콤 사외이사 2007~현재 경희학원 재단이사 1988~1994 뉴욕시립 대학교 바루크대학 교수 1977~1980 한국개발금융 (장기신용은행 전신) 심사부
서동우	47	서울대 법대 하바드 Law School	2007~현재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 위원 2005~2007 연기금 투자폴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006~2007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 위원회 위원
서지희	48	제주 신성여고 이대 경영학과 이대 경영대학원	2001~현재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재 상무이사) 2007~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심리위원회 위원 2006~현재 여성공인회계사회 회장 2004~2005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04~2006 금융감독위원회 회계제도자문위원회 위원
정태명	53	연세대 전기공학 일리노이주립대 전자계산학 퍼듀대학교 컴퓨터공학	1995~현재 성균관대 교수 2008~현재 부의장, OECD 정보보호분과 2007~현재 한국CPO 협의회 의장 2001~현재 기술검토인증위원회(국가정보원) 자문위원
신성환	47	서울대 경제학 매사추세츠대 경영대학원 매사추세츠대 경영학 박사	1995~현재 홍익대 교수 2008~현재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객원연구원 2001 한국선물학회 이사 1993~1995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제인	54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 볼링그린주립대 경영대학원 휴스턴대 경영학 박사	1992~현재 단국대 교수 2005~현재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 2005~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보화자문위원 2002~현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
김명직	51	한양대 워싱턴대 대학원 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 2002~현재 한국선물학회 편집위원장

□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영 현황

- 회의 개최 현황 및 위원별 출석 현황

연도	개최 횟수	회차	참석 인원	참석율
2009년	1회	1차	8명	100%(8/8)

□ 각 위원회 회의록 사본 및 회의에 제출된 각종 보고서 사본

※ 첨부 참조

□ 위원회의 2009년도 예산 및 2010년도 예산안

- 별도의 예산을 정하고 있지 않음

□ 2008.2월 이후 위원 교체 현황 및 사유

- 위원 교체 현황

전임	증권선물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보(이사)	최홍식
	증권예탁결제원 상무이사	오왕식
	(주)코스콤 전무이사	이규성
	증권업협회 상무이사	김동연
	선물협회 전문이사	홍재관
현임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신성환
	단국대 경영정보학 교수	오재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명직

□ 교체 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2.4)에 따라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은 민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기존 9인)의 위원으로 구성

- 종전의 증권거래소법에 따라 위촉된 유관기관 위원을 민간전문가로 교체

<p>증권거래소법시행령 제13조(시장효율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효율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소의 임원 1인 2. 「증권거래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의 임원 1인 3. 「선물거래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선물협회의 임원 1인 4.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임원 1인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임원 1인 6. 금융·법률·회계 및 전산분야의 민간전문가 4인 이내 	<p>자통법시행령 제368조(시장효율화위원회) ③ 법 제414조제1항에 따른 시장효율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법률·회계 및 전산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	--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관련

- 동 법률 제58조(자료의 제출)에 의해 금융위와 증선위가 요구한 자료 현황
- 동 법률 제61조(금융위원회등의 명령권등) 제2항에 의해 금융위가 증선위, 금감원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집행 정지한 현황
- 동 법률 제61조 제3항에 의해 증선위가 금감원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집행 정지한 현황
- 동 법률 제65조(자료협조)에 의해 기획재정부, 금융통화위원회와 상호 자료 요청한 현황
- 동 법률 제65조의2(관계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1항에 의해 금융위원장의 조사 의뢰 및 자료요청 현황
- 동 법률 제65조의2 제2항에 의한 금융위의 협조 의뢰 현황

□ 동 건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외주의

2009년도 제1차
시장효율화위원회 회의 안건

□ 일 시 : 2009. 3. 31(화) 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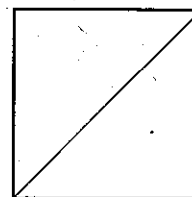
□ 장 소 : 한국금융투자협회 22층 회의실

시 장 효 율 화 위 원 회

목 차

심 의 안 건

1.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2. 통화선물 거래수수료 등 변경 심의(안)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년 월 일	2009. 3. 31 (2009년 제1차)

심
의
사
항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시장효율화위원회
회의안건

제 안 자	위원장 조재호
제출년월일	2009. 3. 31

I. 의결 주문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영규정 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II. 심의 취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09.2.4)에 따라 근거법령, 대상기관 명칭, 위원회 구성 등이 변경

○ 이에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III. 심의 사항

① 시장효율화위원회 근거 법률 변경 (규정§1)

○ 한국선물거래소법 시행령 제13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8조

② 심의 대상기관 명칭 변경 (규정§2②)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한국거래소
- 한국증권업협회, 선물협회 ⇨ 한국금융투자협회
- 증권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③ 시장효율화위원회 구성 기준 변경 (규정§4①)

○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시장효율화위원회 구성이 대상기관 임원 5인을 포함한 9인 이내에서, 순수 민간전문가 7인* 이내로 변경

* 수수료등 변경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상기관 임원을 배제
[08.7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정시 변경(영 제368조)]

- 이에 상기 제정사항을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09.2.4)과 함께 대상기관 임원 5인은 자동 해촉되었으며,
금융위원장은 '09.2.18일 3인의 위원을 신규 위촉하였음.

④ 대상기관 임원에 진술권 및 자료 제출권 부여 (규정§6⑤)

- 민간전문가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수수료 등 변경
심의시 당해 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대상기관 임원에 진술권 및 자료 제출권 부여

VI. 참고 사항

가.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나. 관련 규정 : <붙임 2>

(별 지)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영규정중 개정(안)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제13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8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증권·선물거래”를 “증권·장내파생상품 거래”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선물협회”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2조제5항의 “위원장 또는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3조의 “증권·선물시장의”를 “증권·파생상품시장의”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호를 삭제한다.

①위원회는 금융·법률·회계 및 전산 분야의 민간전문가 7인 이내의 자로 구성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제2항의 “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의 “제4조제1항제6호의 위원 중에서 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의안과 관련한 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의 “제4조제1항제6호의”를 삭제한다.

부 칙 (2009. 3.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효율화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심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8조의----- ----- ----- -----	근거 법률 변경
제2조(심의대상) ① (생 략) 1. 수수료(회원회비, 증권·선물거래의 체결·청산·결제 및 예탁과 관련한 수수료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수수료 및 이용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또는 수수료의 신규설정 ②제1항에서 "대상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2. 한국증권업협회 3. 선물협회 4. 증권예탁결제원 5. 주식회사 코스콤 ③~④ (생 략) ⑤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민간 위원의 발의로 시장운영의 효율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하여 대상 기관에게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조(심의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수수료(회원회비, 증권·장내외 생상품거래의 ----- ----- ----- ----- ② ----- ----- ----- 1. 한국거래소 2. 한국금융투자협회 3. < 삭 제 > 4 한국예탁결제원 5 주식회사 코스콤 ③~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는 <u>위원의</u> ----- ----- ----- -----	용어변경 명칭 변경 및 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조(직무수행의 원칙)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u>증권·선물시장의</u>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 등 시장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수행의 원칙) ----- ----- <u>증권·파생</u> <u>상품시장의</u> ----- ----- -----	용어 변경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임원 1인 2. 한국증권업협회의 임원 1인 3. 선물협회의 임원 1인 4. 증권예탁결제원의 임원 1인 5. 주식회사 코스콤 임원 1인 6. 금융·법률·회계 및 전산분야의 전문가 4인 이내 ②제1항제6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금융·법률·회계 및 전산 분야의 민간전문가 7인 이내의 자로 구성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구성 변경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제6호의 위원 중에서 그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생 략)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제6호의 위원 중에서 그 위원간 호선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간 호선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용어 변경
제6조(회의) ①~④ (생 략) < 신 설 >	제6조(회의) ①~④ (현행과 같음) ⑤의안과 관련한 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대상기관에 진술권, 자료 제출권 부여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1조(경비지급 등) ①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6호의 위원에 대하여 교통비, 의안검토비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③ (생 략)</p>	<p>제11조(경비지급 등) ①위원회는 위원에 대하여 교통비, 의안검토비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③ (생 략)</p>	<p>용어 변경</p>

<붙임 2>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8조 (시장효율화위원회) ① 법 제4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등을 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으로서 거래소가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② (생략)

③ 법 제414조제1항에 따른 시장효율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법률·회계 및 전산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생략)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시장효율화위원회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효율화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심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① (생략)

1. 수수료(회원회비, 증권·선물거래의 체결·청산·결제 및 예탁과 관련한 수수료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수수료 및 이용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또는 수수료의 신규설정

2. (생략)

3. 그 밖에 수수료 또는 전산투자자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대상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2. 한국증권업협회
3. 선물협회
4. 증권예탁결제원
5. 주식회사 코스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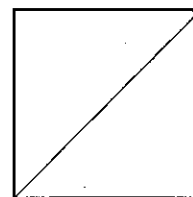
⑤(생략)

제3조(직무수행의 원칙)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증권·선물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 등 시장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5.2)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임원 1인
2. 한국증권업협회의 임원 1인
3. 선물협회의 임원 1인
4. 증권예탁결제원의 임원 1인
5. 주식회사 코스콤 임원 1인
6. 금융·법률·회계 및 전산분야의 전문가 4인 이내

②~④ (생략)



의안번호	제 2 호
심 의 년 월 일	2009. 3. 31 (2009년 제1차)

심
의
사
항

통화선물 거래수수료 등 변경 심의(안)

시장효율화위원회
회의안건

제 안 자	위원장 조재호
제출년월일	2009. 3. 31

I. 심의 취지

- ☐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된 통화선물 시장 제도 개정 내용*과 관련, 통화선물의 거래단위 변경에 연동한 계약당 거래수수료 변경을 심의하고자 함

* 최근 환율 급변 및 KIKO 피해 등으로 외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장내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통화상품의 거래단위 인하 등을 시행함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개정일 : '09. 3. 4]

II. 심의 근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4조 및 시장효율화 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III. 심의 사항

- ☐ 통화선물의 거래단위 인하폭(1/5)을 반영하여 계약당 거래 수수료 등을 1/5로 인하

- 통화선물의 신규 제도인 미국 달러 맞춤형 선물 거래 (FLEX)도 동일 적용하되, 최종결제방식이 현금결제인 경우 최종결제 수수료 등을 거래체결시와 동일 적용

1. 수수료율 등

- ☐ 한국거래소 : 거래수수료

시장구분	징수기준	징수대상	수수료(변경전)	수수료(변경후)
통화선물 (달러,엔,유로)	계약당	거래체결	304원(자기265원)	60원(자기53원)
		최종결제	608원(자기532원)	121원(자기106원)

주) 원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자 배려차원에서 절사

□ 한국에탁결제원 : 대용증권관리수수료

시장구분	징수기준	수수료(변경전)	수수료(변경 후)
통화선물 (달러,엔,유로)	계약당	79원(자기60원)	15원(자기12원)

주) 원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자 배려차원에서 절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 회원 회비

시장구분	징수기준	징수대상	회비(변경전)	회비(변경 후)
통화선물 (달러,엔,유로)	계약당	거래체결	50원(자기44원)	10원(자기8원)
		최종결제	100원(자기88원)	20원(자기17원)

주) 원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자 배려차원에서 절사

2. 시행일

□ 통화선물의 거래단위 인하 시행일(4.27 예정)에 맞추어 시행

VI. 참고 사항

□ 통화선물 거래제도 개선방안 : <붙임>

<붙임> 통화선물 거래제도 개선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상장·거래되고 있는 통화선물(달러·유로·엔)은 거래 단위, 만기 및 결제방법 등이 정형화된 상품구조로 수출 기업 등의 다양한 환헤지 수요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현행 통화선물시장 거래단위를 개선하여 수출입기업 등 환관리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 환위험 관리 수단 제공 필요
- 기업의 실수요에 맞춘 만기 및 결제방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미국 달러 맞춤형 선물 거래(FLEX) 도입

※ FLEX 거래제도의 개념

- 만기일(1일 ~ 6개월), 결제방식(실물결제/현금결제) 등 중요 거래조건을 거래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거래제도

2. 개선방안

- 장내 통화선물의 거래단위 인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실수요자의 환위험 관리 기회 확대

【 거래단위 및 거래승수 인하(안) 】

구 분	현 행		변 경	
	거래단위	거래승수	거래단위	거래승수
미국달러선물	5만달러	5만	1만달러	1만
유로선물	5만유로	5만	1만유로	1만
엔선물	5백만엔	5만	1백만엔	1만

*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개정일 : '09. 3. 4

이성현의원 요구자료(문서목록)
(은행과)

구분	문서등록일자	문서번호	제목	수신/발신부처명	제출여부	비고
접수	20090803	은행과-1955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	금융감독원장	X	개인정보보호
접수	20090804	은행과-1958	금융기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통보	금융감독원장	X	개인(법인)정보보호
접수	20090804	은행과-1963	금융실명거래 위반관련 사실 조회	제주지방병무청장	X	개인정보보호
접수	20090804	은행과-1968	금융감독원과의 정보공유에 관한 의견 조회	한국은행	○	
접수	20090804	은행과-1970	2009년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결과 제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접수	20090806	은행과-2027	(중요) 행정규칙 개선 추진실적 제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접수	20090810	은행과-2032	'09.5월~6월중 MOU 이행실적 관련 주의환기 공문 발송사실 통지	금융감독원장	○	
접수	20090810	은행과-2033	영국 금융감독 개편방안 관련 하원 재무위원회 보고서(공유)	주영국대사	○	
접수	20090811	은행과-2049	금융기관 검사서 송부	금융감독원장	X	개인(법인)정보보호
접수	20090811	은행과-2059	대한상공회의소의 2009년 상반기 금융업 애로조사 건의서 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접수	20090812	은행과-2062	2009년도 2분기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 제출	우정사업정보센터장	○	
접수	20090813	은행과-2078	비밀취급인가 현황 통보	행정인사과장	X	행정인사과 제출
접수	20090814	은행과-2082	금융실명제 위반 관련 조사결과 통보	농협중앙회	X	개인정보보호
접수	20090817	은행과-2086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	금융감독원장	X	개인정보보호
접수	20090818	은행과-209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접수	20090825	은행과-2158	금융기관 출자요건 충족 보고	중앙신용정보㈜	○	
접수	20090828	은행과-2190	금융기관 검사보고서 송부	금융감독원장	X	개인(법인)정보보호
접수	20090828	은행과-2192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사실 조회결과 통보	공정거래위원회	○	
등록	20090828	은행과-2193	[이송] 금융기관 검사보고서 송부	은행과장	○	
등록	20090828	은행과-2197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리스크관리 종합대책 마련·시행 등에 대한 점검 위탁	금융위원회위원장	○	
접수	20090828	은행과-2198	범죄경력 조회결과 통보(정부포상)	경찰청장	○	
접수	20090828	은행과-2204	신한은행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	금융감독원장	X	개인정보보호
접수	20090831	은행과-2209	결제대금에치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협조 및 서면실태점검 결과 통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접수	20090831	은행과-2212	2009년 2/4분기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 송부	금융감독원장	○	

3. 2010년도 예산안 설명서 및 2009년 예산 대비표

□ 2010년도 예산안 설명서 및 2009년 예산 대비표

○ 별도제출(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요구안 개요)

4. 2009년 증선위 안전 제출

- 15호, 20호, 21호, 76호, 106호, 보고 17호, 보고 22호, 보고 23호, 173호, 219호

A. 공정시장과

- ☐ 동 안전들은 확정되지 않은 혐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관련 기업의 주가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 o 또한, 개인의 명예·사생활 및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 등으로 관련자 및 해당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 o 기타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부득이 이를 제공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자본시장과

4.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관련

- 동 법률 제58조(자료의 제출)에 의해 금융위와 증선위가 요구한 자료 현황
- 동 법률 제61조(금융위원회등의 명령권등) 제2항에 의해 금융위가 증선위, 금감원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집행 정지한 현황
- 동 법률 제61조 제3항에 의해 증선위가 금감원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집행 정지한 현황
- 동 법률 제65조(자료협조)에 의해 기획재정부, 금융통화 위원회와 상호 자료 요청한 현황
- 동 법률 제65조의2(관계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1항에 의해 금융위원장의 조사 의뢰 및 자료요청 현황
- 동 법률 제65조의2 제2항에 의한 금융위의 협조 의뢰 현황

☐ 동 건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2005년 이후 금융위 직원들의 불법행위(구체적인 행위 표기) 및 처리현황(사법처리 현황도 표기할 것)

직급	성명	통보일시	통보내용	처리결과
서기관	남00	'08.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구약식
사무관	이00	'08.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구약식

6. 2005년 이후 금융위 직원 징계 현황

□ 2005년 이후 금융위 직원 징계 현황

성명	직급	징계사유	처분결과	처분일시
○○○	서기관	음주운전	견책	09.01.16
○○○	서기관	청렴의무위반	감봉2월	09.02.27
○○○	사무관	음주운전	견책	09.02.27

